



6

독일통일 총서

정당분야

통합 관련 정책문서



통일부





6

독일통일 총서

정당분야

통합 관련 정책문서



독일통일 총서 6

정당분야 통합 관련 정책문서

발행일 2014년 12월

발행처 통일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전화 02)2100-5757

디자인·제작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전화 02-2272-0307

CONTENTS



통일과정에서의 동서독 정당체계의 변모와 정책적 시사점

| | |
|-------------------------------|----|
| 제1장 서론 | 12 |
| 제2장 통일 전 동서독 정당체제 | 15 |
| 제1절 동독의 정당체제 | 15 |
| 1. 사회주의통일당 | 15 |
| 2. 위성정당 | 17 |
| 3. 위성정당의 역할 | 25 |
| 4. 동독의 대중단체 | 27 |
| 제2절 서독의 정당체제 | 29 |
| 1. 전후 서독의 정당 설립 | 29 |
| 2. 서독 정당체계의 특징 | 31 |
| 제3장 통일과정에서 동서독 정당체제의 변모 | 33 |
| 제1절 베를린 장벽 붕괴 전 동독의 정치지형 | 33 |
| 제2절 베를린 장벽 붕괴 후 동독의 정치지형-원탁회의 | 36 |
| 제3절 신정치세력의 등장 | 38 |
| 제4절 동독정당의 개편 | 42 |

| | |
|---------------------------------|-----|
| 제5절 통일과정에서 동서독 정당의 통합 | 48 |
| 1. 정당연합과 인민의회 선거 | 48 |
| 2. 동서독 정당의 통합 | 56 |
| 3. 사회주의통일당의 변화 | 64 |
| 4. 동서독 정당 통합의 특징 | 66 |
| | |
| 제4장 통일 후 동서독 정당지형 | 70 |
| 제1절 통일 후 동서독 정당지형 변모과정 | 70 |
| 1. 정당 지형의 변화: 연방하원 선거 결과 | 71 |
| 2. 민사당의 형성과 발전 | 73 |
| 3. 정당지형의 변화 요인 | 83 |
| 제2절 정당통합 이후 정당체제의 변화 | 88 |
| 1. 신생 정당(민사당)의 정치적 기반 확보 성공 | 88 |
| 2. 기성 정당체계의 불안정성 증가 | 89 |
| 제3절 정당통합에 대한 평가 | 91 |
| 1. 총평: 민주적 정당체계의 안정적 유지 | 91 |
| 2. 긍정적인 측면: 성공적인 정당통합 | 92 |
| 3. 부정적인 측면: 서독 주도의 통합방식으로 인한 문제 | 94 |
| | |
| 제5장 한국에의 시사점 | 108 |
| 제1절 통일과정에서 정당체계의 변화와 정당 간 통합 | 108 |
| 제2절 통일 후 정당체계 변모 | 110 |

CONTENTS



문서를 통해서 본 통일과 정당

| | |
|-------------------------------------|-----|
| 들어가며 | 118 |
| 제1장 1989년 격변기 동독 정당의 변화 | 121 |
| 제1절 동독의 정당구조 | 121 |
| 제2절 1989년 사회적 변화에 대한 사통당의 대응 | 122 |
| 제3절 신생 정당의 등장 | 130 |
| 제4절 동독 사회민주당(SDP)의 창당 | 133 |
| 제5절 개혁기 정당과 시민단체의 재정 | 136 |
| 제2장 사통당의 개혁과 민주적 정당으로서의 재탄생? | 140 |
| 제3장 민주사회당의 부활과 좌파당으로의 변신 | 148 |
| 제1절 선거를 통한 복권 | 148 |
| 제2절 좌파당의 창당 | 152 |
| 제3절 민사당-좌파당의 과제와 목표 | 153 |
| 제4절 민주사회당과 새로운 좌파당 내의 당파와 계파 | 156 |
| 제5절 민사당/좌파당의 전략과 전술 | 158 |
| 제6절 좌파당과 2009년 이후 변화된 환경 | 160 |



정당분야 통합 관련 정책문서

| | |
|------------------|-----|
| 문서 목록 | 166 |
| 문서 요약 | 180 |
| 문서요약(문서번호 1~84) | 180 |
| 독일어 원문 자료(CD 수록) | |

표 목차

| | |
|---|-----|
| 표 1-1) 동독 위성정당의 당원 수 변동 추이(1949-1987년) | 26 |
| 표 1-2) 1989년 12월 31일 기준 동독 정당의 재정 공개 | 27 |
| 표 1-3) 동독의 정당, 대중단체 | 29 |
| 표 1-4) 1989년 시위 대중들의 정당정치성향(전체 응답자 2,000명에 대한 백분율) | 33 |
| 표 1-5) 통일시기 동독주민 이주와 시위 전개 내용 | 37 |
| 표 1-6) 동독 내 신정치세력 | 41 |
| 표 1-7)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동독 정당체제의 변화 | 48 |
| 표 1-8) 1990년 3월 18일 동독 인민의회 선거 득표율 및 통일관련 공약 | 55 |
| 표 1-9) 각 정당별 인민의회 선거결과(51-52) | 55 |
| 표 1-10) 통일독일 연방의회 선거결과(단위: %) | 71 |
| 표 1-11) 2009년 총선에 나타난 좌파당의 주별 득표율 및 증가율(2005년 대비) | 79 |
| 표 1-12) 각 정당의 동독지역 당원수(1990-1998) | 87 |
| 표 1-13) 민사당의 역대 선거 득표율 및 원내의석수(% , 석) | 88 |
| 표 1-14) 최초로 임명된 장관/의원 비율(단위: %) | 98 |
| 표 1-15) 동독에서의 정치적 소속(단위: %) | 99 |
| 표 1-16) 의원의 평균 연령(단위: %) | 100 |
| 표 1-17) 1987-2002년 동독지역 청소년의 정치참여 평가(단위: %) | 103 |
| 표 1-18) 1990년-2005년 연방의회 선거 시 극우정당들 지지율 | 104 |
| | |
| 표 2-1) 동독 위성정당 당원 수의 대략적 변화 추이(1949년~1987년) | 121 |
| 표 2-2) 1946년부터 2009년까지의 사통당/사통당-민사당/민사당/ Die Linkspartei(좌파당), 민사당/Die Linke(좌파당) 당원 수 변화 추이 | 129 |
| 표 2-3) 1989년 12월 13일 기준 동독 정당의 재정 공개 | 138 |
| 표 2-4) 1990년 선거 민사당 득표율 | 146 |
| 표 2-5) 연방의회선거 민사당 득표율, 연방 전체 지역 및 구 동독지역(%) | 149 |
| 표 2-6) 1994-2002년 연방의회 민사당 제2투표 결과, 구 서독 및 구 동독지역의 사회계층별(%) | 149 |

| | |
|--|-----|
| 표 2-7) 2005년 연방의회 선거 좌파당 민주사회당(제2투표) 득표율 | 150 |
| 표 2-8) 민사당 유권자 사회계층별 구성(2005년 제2투표, %) 및 전체대비 | 150 |
| 표 2-9) 민사당의 직접적인 연정 참여 및 참여하지 않은 경우 연립 정부 활동에 대한 지원 | 151 |
| 표 2-10) 사통당-민사당-좌파당의 명칭 변경 | 152 |
| 표 2-11) 교육 수준에 따른 전체 국민 및 민사당 유권자 분포(1993-2005) | 162 |

통일과정에서의 동서독 정당체계의 변모와 정책적 시사점

김경래(국민대)
허준영(한국행정연구원)



서론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서로 다른 견해와 이해로 인한 갈등은 기본적인 요소이며 주지의 사실이다. 문제는 서로 다른 견해와 이해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이 갖는 의미 중 하나는 바로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를 해결하는 공간, 주체로서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비록 후기 산업사회로 진행되면서 정당의 역할에 대한 회의론적 시각이 존재하는 측면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러한 회의론적 시각은 정당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당 개혁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전개되지만 정당을 해체하자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 하겠다. 이는 또한 그 누구도 정당의 중요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고 있으며 어떻게 정당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현재 우리 인류가 생각해 낸 최고의 가치 중 하나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의 실현에 있어 핵심은 바로 정당이다. 따라서 분단된 대한민국이 통일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고 가꾸어가야 할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같은 분단을 경험한 독일에서의 동서독간의 정당통합은 통일 후 우리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이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와 관련해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특히나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 제기 이후 통일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실질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단국가로서 독일통일 과정 특히 정당 관련 정치적 통합은 여전히 분단국 상태의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비록 독일통일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주로 분단시기에서 통일을 성취해 가는 과정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춰 왔을 뿐 통일 과정과 이후 등 통일 전(全) 과정의 다이내믹한 변화상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는 못했다. 본 연구는 기존의 다양하게 산재된 연구 성과들과 독일 측 문서자료들을 바탕으로 통일과정을 전체적으로 조감하면서 정당체계의 변모 상황과 그 동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통일과정에서 각 정당들의 이합집산 양태의 배경과 그 근저에 깔려있는 정강 및 정치행위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어떻게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 내고 권력화 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향후 한국의 통일과정에 있어 정당차원에서의 통합방안을 고민해 보고, 특히 북한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어 낼 수 있는 방안마련을 위한 시도를 하고자 한다. 더불어 정당적 차원에서 북한에 민주주의 확립, 공고화를 위해 어떤 정책들을 제시하고 추진해야 할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군의 점령부터 시작해 동서독의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과정에서 동독과 서독에 각각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당들이 생성되었는지 그리고 동독과 서독 정당체계의 특징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3장에서는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전후부터 시작해 1990년 12월 통일 이후 첫 연방선거가 치러진 시기 동안 동서독 정당의 통합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전후 동독의 평화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세력, 사회주의통일당의 독점적인 권력이 붕괴된 이후 위성정당들이 어떤 변화를 거쳐 서독의 정당들과 통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통일 후 구 동서독지역에서의 정당구도



가 과거 분단 전과 비교하여 어떤 양태를 띠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아울러 변화양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동서독 정당 통합에 대한 평가적 시각들을 크게 세 가지 즉, 민주적 정당체계의 안정적 유지 기조 하에 긍정적으로는 성공적인 정당통합을 이루었으나 서독 주도의 통합방식으로 인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음을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통일 후 동서독 정당지형 이해에 대한 다면적 접근을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통해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정당체계의 변화와 정당 간 통합했던 경험이 주는 한국에서의 시사점과 독일통일 후 정당체계 변모에서 도출되는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을 이끌어냈다.

통일 전 동서독 정당체제

제1절 동독의 정당체제

1. 사회주의통일당

1933년 나치(Nazi) 집권 이후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탄압받았던 사람들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이전 자신의 정치적 동료들과 함께 정당 및 대중조직의 재조직화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의 동부지역에 주둔한 소련군정부는 1945년 6월 10일 독일 내 소련군 점령지역에서 파시즘의 최종적 종말과 민주주의와 시민의 자유 공고화를 위해 반파시스트 정당들의 조직과 활동을 광범위하게 허용하였다.

이러한 발표에 첫 번째로 반응한 정치세력은 바로 울브리히트(W. Ulbricht)를 중심으로 한 독일 공산당이였다. 나치 치하에서 모스크바에 머물렀던 그는 독일에서 행정부 설립 시 소련을 지원하기 위해 독일로 왔는데 철저히 소련 공산당의 의도를 따르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당시 나치 청산과 관련해 민주적 개혁이 무엇보다 필요한 독일의 상황에서 소련의 제도를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었다. 이로 인해 친소 정당인 독일 공산당은 반파시스트적이고 민주적인 정권, 국민을 위한 민주적 권리와 자유를 추구하며 다른 정당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추구하는 의회주의적-민주

주의적 공화국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¹

그러나 기본적으로 소련의 군정당국은 자신들이 점령한 독일 영토의 공산화를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를 위해 전략적 차원에서 정당의 통합을 도모하였다. 그 첫 번째 대상은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의 통합이었다. 무엇보다도 헝가리와 오스트리아에서 실시된 전후 첫 선거에서 공산당의 패배로 인해 소련군정당국과 독일 공산당은 사민당과의 경쟁을 피하고 후보명단을 공동으로 작성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으며, 나아가 공산당과 사회민주당과의 통합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조직과 이념에서 유사성이 있고 우세한 조직을 갖추고 있어, 통합의 의의가 큰 독일사회민주당을 공산당에 강제로 통합시킬 필요가 있었다.

나치의 집권과 함께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사회민주당의 경우 전후 오토 그로테블(Otto Grotewohl)을 중심으로 베를린에서 1945년 6월 중앙위원회를 만듦으로써 소련군 점령 지역 내에서 사회민주당을 재창당하였다. 당시 이들을 중심으로 동독의 사민당이 발표한 성명을 보면, 민주주의 경제와 사회에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그 어떤 인류, 정당과도 협력할 각오와 결의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² 더불어 새로운 반파시스트적, 민주주의적 공화국 국가사상의 지지자가 되는 것을 독일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과업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토 그로테블(Otto Grotewohl)을 중심으로 한 동독의 중앙위원회는 공산당과의 통합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는 쿠르트 슈마허(Kurt Schumacher)를 중심으로 미국, 영국 그리고 프랑스가 점령한 서독지역에서 재창당한 서독의 사회민주당의 견해와는 반대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소련군정청이 계획한 공산당과 동독 사회민주당의 통합에 있어

¹ 박청평, 2004, “독일 군정시기의 정치적 발전 추이” 경주사학 제23편, p.190.

² American Association for a Democratic Germany, Der neue Kampf um Freiheit. Briefe und Dokument Berliner Sozialisten, New York, 1946, pp.45-46.

가장 큰 문제는 쿠르트 슈마허를 중심으로 하는 사민당 내 반공산주의적 정서였다. 이처럼 강한 반공주의적 성향의 쿠르트 슈마허는 1945년 10월 전 독일 당 대회를 통해 오토 그로테블의 활동범위를 소련 점령지역 내에 국한 시켰다. 그러나 그로테블은 공산당과의 통합만이 사민당을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판단하였고 이러한 사민당 내의 이견을 이용하여 소련군정과 독일 공산당은 1945년 12월 사민당과 동수 대표가 참석 두 정당의 통합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에 대해 서베를린의 사회민주당은 1946년 3월 31일 당원들의 82.2%가 반대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군 점령 지역 내 사회민주당은 1946년 4월 통합되었다.³

이 두 정당의 통합으로 동독에 사회주의통일당(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 SED)이 성립되게 되었다. 통일 이전 동독 의회인 인민의회는 다양한 정당단체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동독 정당의 역사는 곧 사회주의통일당의 역사라는 슈테판 볼레(Stefan Wolle)⁴의 지적과 같이 동독 인민의회가 실질적으로 사회주의통일당에 의해 주도되는 일당체제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독의 의회는 형식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기구였으며 실질적으로 동독사회는 사회주의통일당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 사회주의통일당에 대한 반대는 결국 동독에 대한 반대로 인식되어 처벌되었다.

2. 위성정당

동독의 위성정당은 기본적으로 국민전선을 구성하는 동독 기민당(Ost CDU), 동독자유민주당(LDPD), 민주농민당(DBD) 그리고 민족민주당(NDPD)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위성정당 중 동독 기민당(Ost CDU), 동독자

³ 유지훈, 2001, “독일사회민주당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18(2), pp.208-209.

⁴ Stefan Wolle, 1998, Die heile Welt der Diktatur. Alltag und Herrschaftin der DDR 1971-1989, Bonn, p.97.



유민주당(LDPD)은 창당 이후 사회주의통일당의 억압적인 통치에 의해 위성 정당으로 변모되어 간 정당인 반면 민주농민당(DBD)과 민족민주당(NDPD)은 소련군정청과 사회주의통일당의 주도 하에 만들어진 정당으로 창당 당시 부터 위성정당으로 활동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당이라는 특징이 있다.

① 동독 기민당

동독 기민당에서는 안드레아스 헤르메스(Andreas Hermes)가 1945년 6월 26일 당 총재로 선출되었다. 이후 7월 10일 동독 기민당은 소련군정청에 의해 허가된 당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동독에서 공산당과 사민당 이후 세 번째 당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동독 기민당은 동독지역의 농민, 수공업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지지층으로 성립되었다. 정당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초종파주의적 기독교주의를 기초로 설립된 정당으로 독실한 기독교인들 역시 동독 기민당의 주요한 지지층을 형성하였다.

초기 동독 기민당은 서독의 기민당과 같이 의회민주주의와 독일의 통일을 주장하며 많은 점에서 사회주의통일당과 반대 노선을 걸었다. 이러한 측면은 첫 번째 동독 기민당 총재였던 헤르메스에게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그는 1945년 7월 14일 반파시스트 민주주의 정당 연합에 반대한다고 명확하게 선언하였는데 헤르메스와 그의 동료들이 생각하기에 어느 특정 노선에만 집착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성립에 반하는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1945년 소련군정청에 의해 기획된 토지개혁안으로 인해 소련군정청은 동독 기민당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였다. 동독 기민당은 소련군정청에 의해서 수행되는 토지개혁안이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일지 모르지만 그러한 개혁이 실은 파시스트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당시 소련군정청은 동독 기민당을 대표하는 헤르메스와 발터 슈라이버(Walter Schreiber)를 불러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 정당은 언제든지 해산할 수 있다는 협박을 하였다. 이러한 협박에 발터 슈라이버는 토지개혁 그 자체를 반대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토지개혁의 방법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라는 타협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공산당에 의해 제안된 토지개혁안에 동독 기민당이 서명하지 않음으로 인해 소련군정청은 동독 기민당의 당 수뇌부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였다. 또한 소련군정청의 퇴임 종용에 이들이 거부하자 해임시켜 버렸다. 이후 소련군정청은 야콥 카이저(Jacob Kaiser)와 에른스트 레머(Ernst Lemmer)를 그 후임으로 추천하였다. 이러한 소련군정청의 모습은 기본적으로 동독에 있는 정당들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1946년 1월 4일 야콥 카이저가 당 총재로 취임하면서 에른스트 레머와 함께 이전에 헤르메스와 발터 슈라이버가 당에서 수행했던 역할을 맡게 되었다. 야콥 카이저는 취임 전 기독교적 사회주의를 당 강령으로 만들고자 하는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하였고 자신의 정당은 동서 간의 교량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데올로기로서의 사회주의의 가능성은 사실 민족사회주의(나치)의 경험으로 인해 낡은 것이었다. 때문에 카이저는 동독에서 기민당 설립을 주도하였던 사람들 중 노조와 관련된 사람들을 통해 사회주의를 적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카이저는 경제 분야에서 사회주의적 조치와 계획들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동서독 기민당은 이러한 필요성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황들은 동독 기민당이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의 합당으로 만들어진 사회주의통일당의 가장 강력한 대항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는데 1947년 말까지 동독 기민당의 당원 수는 218,000명으로 이는 동독 기민당의 역사에서 최고의 수치이다.

1947년 6월 12일 카이저는 당 확대 수뇌부 회의에서 동독 내에 있는 정당들과의 연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고 이후 9월 두 번째 정당대회에서 기민당을 전통 마르크시즘의 수호자로서 지지할 것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카이저와 소련군정청과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소련군정청은 카이저와 레머의 재선을 막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였지만 실패하였

다. 이러한 이유로 이후 동독 기민당원들에 대해 탄압은 더욱 강력해졌다. 또한 이러한 탄압으로 인해 1950년대까지 동독 기민당의 당원 1/4이 서독으로 망명을 하였다. 이에 1947년 당 대회에 참석하였던 대표자들의 절반 이상이 1950년 서독에서 개최된 망명자 당 대회에 참석하게 되었다.⁵

소련군정청은 6월 12일 카이저의 연설이 인쇄물로 나오는 것을 저지하였고 이후 다양한 방법으로 카이저에 대항하는 세력을 규합하였다. 또한 동독 기민당의 수뇌부는 10월혁명 30주년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사회주의통일당은 동독 기민당의 카이저와 레머가 아데나워의 반동적인 정치의 추종자들이라는 허무맹랑한 비난을 퍼뜨렸다.

1947년 말 영국의 런던에서 연합군 외무장관회담이 개최되기 직전인 11월 26일 사회주의통일당은 통일과 정의로운 평화를 위한 인민의회의 설립을 호소하였다. 이 인민의회는 임시적으로 소련점령지역에서 선출된 의회를 대신하는 것이었다. 동독 기민당의 수뇌부는 이러한 호소를 사회주의통일당의 책략으로 파악해 이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카이저의 견해와 달리 동독 각 주의 기민당 간부들은 인민의회에 참석하였다. 그러나 독일 전체 기민당은 사회주의통일당에 의한 인민의회는 독일 전체를 대표하는 의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사회주의통일당은 이에 레머가 인민의회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승낙하는 연설을 하였다는 거짓정보를 흘렸고 또한 소련군정청은 인민의회에 참석에 대해 부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레머를 카이저의 후임으로 앉힐 것이라는 이야기를 퍼뜨렸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1947년 12월 19일 소련군정청은 카이저와 레머를 퇴임시킨 후 같은 날 6개 동독 주 의회 의장들을 모두 공산당 지도부로 교체하였다. 이후 소련군정청에 의해 오토 누쉬케(Otto Nuschke)가 새롭게 기민당의 당

⁵ Christoph Wunnicke, 2014, Die Blockparteien der DDR. Kontinuitäten und Transformation 1945-1990. Schriftenreihe des Berliner Landesbeauftragten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DR Band 34, p.18-19.

수로 임명되었다.

비록 소련군에 의해 점령된 지역의 경우 미국, 영국, 프랑스군이 점령한 지역보다 빨리 자유로운 정당의 설립이 가능했지만 소련군정청이 동독 기민당을 위성정당화하는 과정은 동독 기민당 내에 의회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1948년 이후 서독의 기민당은 더 이상 오토 누쉬케를 중심으로 한 동독 기민당을 자매정당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들과의 접촉을 끊었다.

② 동독자유민주당(LDPD)

공인회계사이며 1912년부터 1914년까지 아에게(AEG)사 영국 책임자였던 발데마르 코흐(Waldemar Koch)는 1930년부터 베를린 공과대학의 강사로 활동하면서 전쟁이 끝나기 직전 자유주의 정당의 건설을 생각하였고 이후 1945년 6월 16일 베를린에서 7명의 사람들과 논의를 통해 사회민주주의에서 우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모든 독일 사람들을 모으는 정당을 건설하고자 하였다. 창립회원들은 당명을 독일민주당(Deutsche Demokratische Partei, DDP)으로 결정하였고 코흐를 당의장으로 선출하였다. 또한 이후 자유주의 정당을 위한 호소를 내용으로 하는 정당 강령을 발표하기로 결의하였고 당명을 다시 한 번 독일자유민주당(Liberal 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LDP, 일년 후 LDPD)으로 확정하였다.

또한 1945년 7월 1일 소련 점령군은 이들과 대화를 하는 동안 전체 독일을 중심으로 자유주의 세력들에게 영향력 있는 정당의 건설이라는 코흐의 견해에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동독자유민주당을 건설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동독 기민당이 1945년 6월 26일 당 건설을 명백히 밝힘으로 해서 소련군정청과 대화할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당시 안드레아스 헤르메스와 발터 슈라이버가 다른 시민정당의 창당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았다. 이들 동독 기민당과 동독자유민주당 각 세력

들은 6월 29일 연합에 대한 논의를 하였지만 실패하였다. 왜냐하면 동독 자유민주당의 코흐는 기민당의 건설은 1918년에 있었던 가톨릭 중앙당이 임시적으로 기독교 사회당으로 불리는 것의 반복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동독자유민주당은 7월 5일 최종적으로 건설되었고 발데마르 코흐를 당 의장으로 빌헬름 쿨즈(Wilhelm Külz)를 그의 대리인으로 선출하였다. 베를린과 소련이 점령한 다른 지역에서 이 자유주의 정당의 건설은 전체 독일에서 처음 있는 것으로 고유한 내적인 동기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유주의 정당의 건설에 소련군정청은 그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고 오히려 동독자유민주당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왜냐하면 소련군정청은 향후 독일 내에서 기민당이 그 어떤 경쟁자 없이 존재하는 것을 결코 달가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련군정청의 이러한 태도는 분할통치의 일환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1945년 7월 14일 건설된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는 반파시트 민주주의 전선(Einheitsfront der antifaschistisch-demokratischen Parteien)의 건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동독 자유민주당과 동독 기민당은 처음에는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에 대항하는 연합을 건설하였다.⁶

동독자유민주당의 첫 번째 당수인 코흐는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의 지배적이었던 자유주의 전통을 집착하는 사람으로 소련군정청의 정책에 항상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또 7월 14일 베를린에서 소련군정청 하에 있는 정당들의 대표자들의 모임이 처음으로 개최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코흐는 미군점령지역에서 지방선거가 준비되는 것과 같이 소련점령지구에서도 동일한 준비를 요구하였다. 토지개혁은 코흐가 대표적으로 부딪치는 내용 중 하나로 1945년 11월 22일 공산당에 의해 제안된 토지개혁안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 이에 소

⁶ 그러나 이러한 연합은 이후 성공하지 못했다. Christoph Wunnicke, 위의 책, p.68.

련군정청은 1945년 11월 29일 처음으로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 내에서 코흐를 따르는 당 수뇌부들에 대한 위협을 가하였다. 이후 동독자유민주당의 빌헬름 쾰츠(Wilhelm Külz)가 코흐의 자리를 넘겨받았는데 그는 기본적으로 소련군정청과 화해를 위해 노력한 사람이었다.

코흐와 마찬가지로 쾰츠에게도 소련이 점령한 지역 내에서 드레스덴 또는 바이마르와 같은 도시에서 건설된 자유주적인 정당단체를 베를린을 중심으로 모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이들과의 모임을 통해 쾰츠는 드레스덴과 바이마르에서 활동하는 자유주의 정당 대표들에게 베를린의 동독자유민주당의 중책을 맡겼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46년 5월 점령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자유주의 정당을 건설한 대표자들과 모임을 가질 수 있었고 이 모임을 통해 전체 독일의 자유주의 정당으로 모이기로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정당으로서 중요한 강령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것에 대해 많은 비판들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비판은 1947년 12월 초 사회주의통일당에 의해 소집된 동 베를린의 독일 인민의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이후 쾰츠에 대한 비판으로 옮겨가면서 더욱 거세졌다. 이러한 비판에도 쾰츠는 인민의회에서 중책을 맡았으나 1948년 10월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쾰츠의 사망 이후 소련군정청은 그의 후계자로 튜링겐주 은행의 대표인 알폰스 게르트너(Alfons Gärtner)를 후임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소련점령지역을 떠나면서 동독자유민주당은 다음 정당대회 때까지 간부들 간의 협의에 의해 움직이기로 결정되었다.

원래 1948년 1월 18일 전체독일 자유주의 정당 모임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서독지역의 대표들이 쾰츠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모임이 개최되지 못하였다. 쾰츠의 사망 이후에도 동독자유민주당은 계속해서 정당 강령이 없는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쾰츠의 대리인 리오테난트(Arthur Lieutenant)는 쾰츠의 대안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려고 했다. 그러면서 리오테난트는 동독자유민주당의 5월 1일 노동절 행사 참여와 관련해 사회주의통일당에 편지를 보



내는 형태로 당의 신문에 투고하였다. 그러나 당 내에서 이러한 행동은 결국 사회주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반대에 부딪쳐 실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당 내의 분위기는 1948년 서베를린의 봉쇄를 계기로 변화되었다. 특히 사회주의통일당의 정책과 가까운 정책을 지지하는 한스 노흐(Hans Loch)와 리오테난트가 속한 위원회가 작성한 동독자유민주당의 원칙이 발표되었는데 이 원칙은 기본적으로 동독자유민주당이 사회주의통일당의 정책을 지지하며 국유화를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③ 민주농민당(DBD)

1948년 2월 13일 동독자유민주당과 동독 기민당이 협력을 하기로 합의하자 사회주의통일당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이에 4월 16일 발터 울브리히트(Walter Ulbricht)는 농민들에 기반을 둔 농민당의 창당에 대해 언급하였다. 한 달 후인 5월 12, 13일 빌헬름 피크(Wilhelm Pieck)는 사회주의통일당의 당 간부의 회의에서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사회주의통일당의 상황에 대해 보고하였다. 이 보고는 향후 독일이 분단될 경우 소련군이 점령하였던 지역에서의 정치, 경제와 관련된 많은 책임들이 사회주의통일당의 손에 넘겨질 것인데 이를 대비해 대중의 신임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동독 기민당과 동독자유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해 사회주의통일당을 소수당으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상황에서 사회주의통일당은 새로운 정치적인 힘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그러나 빌헬름 피크는 이미 1948년 2월 공산당 당원인 에른스트 골텐바움(Ernstt Goldenbaum)과 함께 새로운 농민당의 건설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골텐바움을 농민당을 지도할 사람으로 임명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민주농민당이 비록 동독의 농민들을 대변하기 위한 정당이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태생 그 자체가 위성정당으로서의 역할에 머무를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④ 민족민주당(NDPD)

1947년 말 이미 소련군정청은 새로운 정당의 설립에 대해 검토를 하였는데 다시 민족민주당의 창당이 결정된 상황이었다. 소련군정청은 1948년 2월 26일 명령 35호를 발표하면서 소련군 점령지역 내에서의 비나치화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나치로서 활동한 이유로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략 2백만 명의 사람들이 처벌을 받은 이후 경제와 민주주의 건설에 함께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소련군정청은 1948년 3월 22일 이미 당의 창당을 위한 허락뿐만 아니라 신문의 창간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도 하였다. 이 신문을 통해 민족민주당의 창당위원회가 소개되었다.

민족민주당 또한 민주농민당과 같이 창당 그자체가 위성정당으로서의 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3. 위성정당의 역할

사회주의통일당과 함께 인민의회를 구성하였던 정당들은 동독 사회에서 크게 두 가지 기능을 담당하였다. 첫째, 이들 정당, 단체들은 무엇보다 동독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을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사회주의통일당이 이끄는 동독에 일체감을 갖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즉 사회주의통일당의 사상을 전파하는 것으로 동독 기민당(CDU-Ost)은 동독 사회 내에서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와 기능인 및 자영업자들, 동독 자민당(LDPD)은 동독에서 자유주의적 세력들, 동독의 농민당(DBD)은 농업 협동조합원들, 민족민주당(NDPD)은 전직 직업군인, 장교 그리고 후에는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통일당의 이데올로기 전파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들 정당들은 사회주의통일당이 이끄는 동독의 국민전선의 일원으로 자신들의 재정을 의존하고 있었으며, 사회주의통일당에 의해 당 지도부가 임명되었고, 사회주의통일당의 정책에 따른 선거강령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사회

주의통일당의 위성정당으로서 사회주의통일당의 이데올로기를 자신들이 대표하는 대중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조직으로 변모하였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 기능은 이들 정당들로 인해 동독의 정치체제가 공산주의적 일당지배체제가 아닌 다당제의 민주주의 체제임을 보여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위성정당들이 형식적인 측면에서 대외적으로 다수당체제였음을 보여주는데 성공하였는지 그리고 또한 내적으로 동독 사람들에게 사회주의통일당의 이데올로기 전파 기능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즉 이들 위성정당에 대한 사회주의통일당의 지속적 불신과 국가안전국의 수많은 요원들이 감시 및 이들 위성정당의 해산에 대한 논의는 동독 사회에서 동독의 지배이데올로기가 일반인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지식인, 프리랜서 그리고 기독교인들 중 당원인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점은 이들 위성정당의 당원의 수와 정당들 간의 실질적인 사회적 연합 역시 사회주의통일당의 기대, 목표와는 거리가 멀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위성정당을 통해 동독의 정당체제가 갈등의 흡수, 해결과 민주적이며 개방적인 체제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기능에 있어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표 1-1) 동독 위성정당의 당원 수 변동 추이(1949-1987년)

| | 1949년 | 1965년 | 1977년 | 1982년 | 1987년 | 1977-1987년 증가율 |
|---------|--------------------|---------|---------|---------|---------|----------------|
| 동독 기민당 | 211,200 (1948년) | 101,000 | 115,000 | 120,000 | 140,000 | 22% |
| 민주농민당 | 184,000 | 65,000 | 74,000 | 82,000 | 106,500 | 44% |
| 동독자유민주당 | 23,300 | 84,000 | 91,000 | 103,000 | 115,000 | 27% |
| 민족민주당 | 35,000 | 79,000 | 84,000 | 91,000 | 110,000 | 31% |
| 합계 | 422,500 | 329,000 | 364,000 | 396,000 | 471,500 | 30% |

출처: 통일부, 2011, 『독일의 통일·통합정책연구』 제1권 분야별 연구, p.9에서 재인용

사회주의통일당과 위성정당을 중심으로 한 동독의 인민의회는 5백 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73개 선거구에서 선출되었다. 또한 사회주의통일당과 위성정당을 비롯한 10개의 정당, 80여개의 정치, 사회단체 등이 의석을 배분받았는데 사회주의통일당이 127석, 4개의 위성정당이 각각 52석을 배분받았고, 기타 정당, 단체들이 나머지 의석을 배분받았다.

표 1-2) 1989년 12월 31일 기준 동독 정당의 재정 공개

| | 사회주의 통일당 | 동독 기민당 | 동독 자유민주당 | 민족민주당 | 민주농민당 |
|---------------------------------------|------------------|-----------------|-----------------|-----------------|-----------------|
| 수입 (백만 동독 마르크 기준) | 1,498.8 | 33.2* | 47.0 | 34.0 | 38.8 |
| 당원비 | 710.4 (47.5%) | 3.7 (11.2%) | 9.2 (19.5%) | 6.6 (19.4%) | 6.2 (15.9%) |
| 당 소속 기관의 수익 | 720.3 (48.2%) | 3.9 (11.9%) | 18.8 (38.5%) | 27.1 (79.7%) | 누락 + |
| 국가보조금 (정당자체 보고) | - | 25.1 (75.5%) | 18.1 (38.5%) | ** | 31.8 (81.9%) |
| 국가보조금 (1989년 12월 13일자 모드로우의 보고) | 19.0 (4.3%) | 35.5 (80.1%) | 18.1 (38.5%) | 27.1 (79.7%) | 31.8 (81.9%) |
| 기타 | 64.1 (4.3%) | 0.5 (1.5%) | 1.0 (2.1%) | 0.3 (1.0%) | 0.4 (1.1%) |

*1989년 9월 30일자 임시결산

**민족민주당은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다는 인상을 지우기 위해, 산업 물가 변동 상쇄액을 정당 소속 기관의 수익으로 기장하였다. 실제로 이 항목은 국가예산을 통해 국가보조금으로 지원된 것이다.

+민주농민당은 정당 소속 기업이나 출판사를 보유하지 않았다

출처: 통일부, 2011, 『독일의 통일·통합정책연구』 제1권 분야별 연구 p.18에서 재인용

4. 동독의 대중단체

① 독일자유노조연맹(FDGB)

독일자유노조연맹은 동독의 단일 노조로 스스로를 “동독을 지배하는 노동자 계급의 계급 조직”으로 규정하였다. 1986년 기준 960만 명의 노조원으로 구성된 독일자유노조연맹은 국민 전선에 합류하였고 인민의회와 지역 인민대표기관에 의원을 파견하였다. 독일자유노조연맹은 노동자들의 조직이



또한 동시에 생산수단은 공동으로 소유한 것으로 결국 인민의 자산에 속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와는 달리 근로자의 이익단체로 고용주에 맞서지 않고, 사회 전체 이익의 대변자로 활동하였다. 이로 인해 독일자유노조연맹의 활동의 초점은 근로자들의 휴가를 비롯한 각종 여가 프로그램의 조직 또는 근로가 불가능한 노동자들에 대한 연금 지급에 초점을 두었다.

② 자유독일청년단(FDJ)

자유독일청년단은 1946년에 설립된 대중조직으로 동독에서 국가적으로 유일하게 인정되고 지원된 청소년조직이었다. 따라서 이 조직은 사회주의통일당에 조력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 정신을 기초로 공산주의사회 건설을 위한 강건한 투사를 양성하기 위한 조직이었다. 80년대 자유독일청년단의 가입자 수는 평균 200만 명에 달했다.

③ 동독 문화연맹

문화연맹은 1945년 6월 13일 소련군정청에 의해 독일의 민주적 쇄신을 위해 설립되었다. 이를 위해 문화연맹은 동독 국민들이 파시즘적 독재에서 벗어나 반파시즘적이며 민주적인 문화에 익숙하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후 동독의 문화생활에 관한 사회주의통일당의 감시 기관으로 변화되었다. 인민의 회 내에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회원 수는 20만 명에 달했다.

표 1-3) 동독의 정당, 대중단체

| 형태 | 단체명 | 내용 |
|---------|-----------------|---|
| 국가지도 정당 | 사회주의통일당 | 1946년 동독 사민당(SPD)과 공산당(KPD)이 결합하여 창당되었으며 절대 권력을 갖고 국가정당으로서 전 사회를 장악 |
| 여성정당 | 동독 기민당(CDU-Ost) | 1945년 창당, 동독의 보수세력을 대표 |
| | 동독자유민주당(LDPD) | 1945년 창당, 동독의 자유주의 세력을 대표 |
| | 동독 농민당(DBD) | 1948년 창당, 동독의 농민세력 대표 |
| | 민족민주당(NDPD) | 1948년 창당, 군 출신 대표 |
| 대중조직 | 민주여성동맹(DFD) | 1947년 창설, 여성조직으로 20만 회원을 보유 |
| | 자유독일청년단(FDJ) | 1947년 창설된 동독 최대 청소년단체로 230만 회원을 보유 |
| | 독일자유노조동맹(FDGB) | 15개의 동독 개별노조가 가입되어 있던 동독 노동조합의 상위조직 |
| | 동독 문화연맹(KB) | 1945년 창설된 문화대중조직 |
| | 농민자조연합(VGB) | 1945년 창설된 농민조직 |

출처: 손기웅, 2010, 『독일통일 20년: 현황과 교훈』, p.33. 통일교육원

제2절 서독의 정당체계

1. 전후 서독의 정당 설립

1945년 6월 10일 소련군정부가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에서 정당의 활성화를 허용한 것과는 달리 영국군 점령지구에서는 1945년 8월 중순, 미국군 점령지구의 경우 9월, 프랑스군 점령지구에서는 12월에 정당의 활동이 공식적으로 허용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동독의 사민당은 1945년 6월 베를린에서 중앙위원회 형식으로 재창당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독지역의 경우 1945년 10월이 되어야 쿠르트 슈마허(Kurt Schumacher)를 중심으로 하노버(Hannover) 근처에서 독일 전체 사민당 임원들의 첫 회의를 소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미 여름에 재창당을 위한 강령 등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공산주의자들과의 통일전선에 대해 경고를 하는 등 독일의 노동자들의 정치적, 경제적 필요를 겨냥해



야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기민당의 경우 안드레아스 헤르메스(Andreas Hermes)를 중심으로 했던 베를린 지역과 달리 독일의 서부 쾰른(Köln)지역을 중심으로 기독교적 정치를 위한 토론이 진행되었고 이는 이후 당 강령 초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⁷ 서독의 초대 수상이었던 코나드 아데나워(Konard Adenauer)도 이 모임에 참석을 하였는데, 전후 점령군인 연합군은 그를 쾰른 시장으로 임명하였으나 10월 무능을 이유로 해임하였다. 그는 사회 개혁 등 진보적인 것을 강조했지만 사회주의를 수용해서는 안 되는 당의 건설에 공헌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을 바탕으로 1945년 12월 바드 고데스베르크에서 제1차 전당대회가 개최될 수 있었다.

서독의 자유주의 정당으로서 자유민주당(Freie Demokratische Partie, FDP)은 1848년의 독일 혁명 시 결성된 자유당을 전신으로 하는 자유주의적 사회개혁정책을 내세우고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 및 개인기업의 보호를 주장하는 정당이다. 따라서 자유민주당의 지지기반은 대체로 변함없이 중산계급, 고용주 및 기업경영자와 같은 상층시민계급이고, 그 성격도 기독교민주동맹보다 보수적인 반면 종교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 이 정당의 이름은 독일 자유주의 정치학의 창시자인 프리드리히 나우만(Friedrich Naumann, 1860-1919)의 이념을 따르는 독일국민당, 헤센의 자유민주당(Liberal-Demokratische Partei), 함부르크의 자유민주당(Partei Freier Demokraten), 브레멘의 민주국민당(Demokratische Volkspartei), 루르지역의 자유당(Liberale Partei)이 통합되면서 만들어 졌다.

서독의 정당체계에서 중요한 정당이 바로 녹색당이다. 1980년 1월 서독의 중남부도시 칼스루에(Karlsruhe)에서 전국대표자회의를 열고 1983년 총선에서 5.6%의 득표율로 27석의 의석을 확보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녹색당의 이

.....
⁷ 박정평, 2004, “독일 군정시기의 정치적 발전 추이,” 『경주사학』 제23편, p.194.

러한 득표는 1961년 총선 이후 CDU/CSU, SPD, FDP 세 정당 외에 처음으로 5%가 넘는 지지율을 확보한 것이었다. 녹색당은 기본적으로 1950년대 서독의 재무장과 NATO 가입 반대, 1960년대 평화운동 그리고 1970년대 신 사회운동에 주력한 젊은 사람들에게 뿌리를 둔 정당으로 반핵, NATO 탈퇴, 화학비료 사용제한, 진정한 완전고용 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녹색당의 노선투쟁은 정당으로서의 성격을 중요시하는 세력과 운동단체로서의 성격을 중요시하는 세력들 간의 논쟁이라 할 수 있었다.⁸

2. 서독 정당체계의 특징

서독의 정당체계는 통일 이전까지 이들 정당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서독 정당의 특징은 무엇보다 사회의 대립과 갈등 구조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자유주의를 대변하는 자민당, 보수를 대표하는 기민련, 전통적으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사민당 그리고 좌파당으로서의 공산당을 중심으로 제도화, 조직화되었다. 더욱이 정당이 구현하고자 하는 이념적 가치와 이들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사회 계층 구조가 유사한 국민정당으로 발전해 왔다. 또한 탈 물질적 가치에 대한 선호를 바탕으로 1980년대 이후 녹색당이 서독의 정당체계의 변화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특징의 서독 정당체계는 크게 3단계를 통해 형성되었다. 첫 번째는 1949년부터 1969년의 시기로 기독교민주연합을 형성하고 있는 기민/기사당과 사민당에게 표가 집중되면서 그 어느 당도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하고 제3의 소수 정당이 캐스팅 보드를 지는 2.5당 체계를 확립한 시기이다. 두 번째 단계는 1969년부터 1982년의 시기로 기본적으로 2.5당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이전과는 달리 사민당이 기민/기사당에 비해 우위를 점했던 시기이다. 통일 이전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기존의 기민/기사당, 사민당 그리고 자민당에 녹색당이 등장하면서 3당 구조

.....

⁸ 정용길, 1997, “독일의 정당구조와 정당통합”, 『한국정치학회보』 30호, 4집, p.407.



가 흔들리고 기민/기사당과 자민당 그리고 사민당과 녹색당을 각각 축으로 하는 양대 진영으로 변화된 시기이다.⁹

서독 정당체계에 있어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이념적 가치에 기반을 둔 정당체제이면서도 합의에 의해 정책이 결정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무엇보다도 연정에 의한 정국 운영이라는 점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서독의 기민/기사당과 사민당의 대연정, 사민당과 자민당 간의 연정은 원칙적으로 정당들 간에 이념적인 측면에서 명확하게 차이를 보이는 정당들이다. 그럼에도 이들 간에 계약에 의한 연정의 구성이라는 점은 기본적으로 서독의 정당체계가 합의에 기반을 둔 정책결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

⁹ 김영태, 1999, “독일통일 과정에서 정당체제의 변화와 역할,” 『통일경제』 9, p.70.

제3장

통일과정에서 동서독 정당체제의 변모

앞의 2장에서는 2차 세계대전 후 동서독이 분단되는 과정에서 각각 어떠한 과정을 통해 정당들이 생겨났는지, 그리고 동서독 정당체계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통일과정에서 동서독 정당들이 어떻게 이합집산을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제1절 베를린 장벽 붕괴 전 동독의 정치지형

독일통일에 있어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동서냉전의 종식과 동서독 통일의 서막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이미 동독은 국내외적으로 베를린 장벽 붕괴의 전조에 해당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표 1-4 > 1989년 시위 대중들의 정당정치성향(전체 응답자 2,000명에 대한 백분율)

| | 1989년 11월 말 | 1989년 12월 4일 | 1989년 12월 11일 |
|------------------|-------------|--------------|---------------|
| 동독 기민당(CDU) | 10 | 12 | 9 |
| 동독자유민주당(LDPD) | 23 | 11 | 7 |
| 민족민주당(NDPD) | 3 | 2 | 1 |
| 사회주의통일당(SED) | 31 | 6 | 15 |
| 민주농민당(DBD) | 5 | 1 | 0 |
| 신포럼(Neues Forum) | 17 | 18 | 14 |

| | | | |
|------------|---|----|----|
| 사회민주당(SDP) | 6 | 37 | 42 |
| 기타 정당 | 5 | 13 | 12 |

LDPD, NDPD: 자유민주동맹(BFD)으로 연맹하였다가 이후 자민당(FDP)으로 통합

SDP: 이후 SPD로 개명(1990년 1월 12-14일 대의원회의)

출처: 정병기, 2003, “독일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사회단체들의 대응: 개혁과 통일의 갈등,”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p.311.

먼저 국외적으로 1985년 3월 소비에트 연방의 당서기장에 취임한 고르바초프는 실용주의 개혁정책을 통해 소련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였다. 고르바초프는 또한 소련 외교정책의 큰 흐름인 브레즈네프 독트린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선언하면서 자신의 문제 해결 방식을 동독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에게도 요구하였다. 소련 사회의 이러한 변화는 동유럽의 위성국가들의 체제 변화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1989년 폴란드의 경우 사회주의 체제를 거부하고 시장경제와 의회민주주의로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헝가리 또한 복수정당제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시민들의 정치적 조직의 결사를 보장하였다.

국내적으로 동독 또한 자체적으로 소련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제개혁을 거부함으로써 동독 주민들의 불만은 커져갔다. 사회주의통일당의 이러한 태도에 대한 반대는 먼저 국가 탈출로 나타났다. 1989년 5월 헝가리의 자유주의 진영인 오스트리아와의 국경 봉쇄 해제를 계기로, 동독인들의 서독으로 이주하는 방식의 국가탈출 시도가 발생하였다. 1989년 5월 2일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국경이 개방되자 동독인들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서독 대사관으로 몰려와서 서독으로 이주를 신청하였다. 또 8월 22일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에 있는 서독 대사관의 경우 동독인들의 이주 물결로 인해 대사관 업무를 중지하기까지 하였다. 사회주의통일당에 대한 동독주민들의 불만은 다른 한편 동독 내에서 시위의 형태로 표출되었다. 일례로 1989년 9월 4일 라이프치히(Leipzig)시 니콜라이(Nikolai) 교회에서는 여행의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으며, 9월 7일에는 동베를린의

알렉산더 광장(Alexanderplatz)에서 5월 7일 시행되었던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을 규탄하는 시위가 발생해 80명이 체포되었다. 이처럼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에서 시작된 월요일집회는 동독 전역으로 파급되면서 평화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위 참여자가 증가하였는데 10월 2일 2만 5천 명에서 9일 5만 명, 16일 12만 명, 23일 3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또 이 시위는 다른 도시들로 파급되어 막데부르크, 드레스덴, 할레, 동베를린 등 동독의 주요도시에서 평화혁명으로 발전하였다. 이처럼 10월 들어서면서 동독의 체제 개혁에 대한 요구는 절정에 달하였다. 10월 9일 라이프치히시에서는 7만 명 정도가 참가하는 큰 시위가 있었지만 아무런 사고 없이 평화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7일 후인 16일 시위에 참가한 사람은 10만 명이 넘었으며 경찰은 이들을 통제할 수 없었다. 이 시위 이후 시위대는 ‘우리는 국민이다’(Wir sind das Volk), ‘폭력은 안 된다’(Keine Gewalt)는 구호를 외치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명확히 하였다. 드레스덴에서는 시위대 중 드레스덴 시장에게 전달할 임무를 부여 받은 20인을 중심으로 드레스덴 20인 그룹이 형성되었다. 이들은 사회주의적 사회를 토대로 비폭력적인 대화와 변화를 요구하면서 베르그호퍼(Berghofer)와 토론을 전개하였고 제한 없는 언론 보도, 의사 표현의 자유, 평화 시위의 승인 및 보호를 요구하였다.¹⁰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체제의 개혁에 대한 요구를 바탕으로 반체제 세력들이 그동안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사회주의통일당의 위상에 반기를 드는 것으로 사회주의통일당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주의통일당은 동독의 서기장 호네커(E. Hoecake)가 건강상의 이유로 물러나는 형태로 지도부를 교체하였다. 1989년 10월 18일 사회주의통일당 중앙위원회 비상전원회의가 개최되어 호네커가 당 서기장직 등 모든 공식적 지위에서 물러나고 그 후임으로 크렌츠(E.

¹⁰ 이들 드레스덴 20인 그룹은 스스로를 국가, 정당 기관과 드레스덴 시민 간 대화의 중재자로 규정하면서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이 대화에 반영되고 명확히 인식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Krenz)가 동독 공산당 중앙 서기장으로 취임하였다. 취임과 함께 그는 동독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 동독 공산당이 일대 변혁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동독 국영기계 공장의 노동자, 관리 그리고 교회의 대표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정치가, 기자, 학자, 시민들과의 공개토론을 TV를 통해 방송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크렌츠는 호네커의 황태자로 불리는 사람이었고 강경파였다. 그는 동독 주민들의 열망을 무시한 채 여전히 사회주의통일당의 지도적 위치를 강조하였다. 때문에 동독인들은 크렌츠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통일당의 독점적 위상과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1989년 11월 백만 명을 상회하는 군중이 참여한 집회가 동베를린에서 개최되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사회주의통일당의 퇴진과 자유선거, 서독으로의 자유로운 여행, 언론의 자유 등을 요구하였다.

제2절 베를린 장벽 붕괴 후 동독의 정치지형-원탁회의

1989년 동독인들의 서독으로의 이주와 동독의 변화를 요구하는 일련의 시위들은 그해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이어졌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 10월 절정에 달했던 동독 주민들의 개혁 요구는 결코 시들지 않았다. 당시 동독 시위대의 구호는 “우리가 인민이다”(Wir sind das Volk)로 이는 인민의 지배와 민주주의 원칙을 천명하는 것으로 동독인들의 구체적인 요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이에 동독의 사통당은 저항단체들과 함께 동독을 개혁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면서도 대화를 통한 주도권을 쥐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으로 1989년 11월 22일 중앙원탁회의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중앙뿐만 아니라 지역별 원탁회의의 구성을 촉발시켜 11월 29일에는 라이프치히를 비롯해 지역별 원탁회의도 구성되었다. 중앙원탁회의는 사회주의통일당과 다른 블록정당 그리고 좌익연합, 농민협동조합, 민주주의 지금(Demokratische Jetzt),

신포럼(Neues Forum) 등 17개 정당, 재야단체의 39명의 대표로 구성되었다. 12월 7일 첫 회의 이후 매주 월요일마다 회의가 열렸다. 중앙원탁회의의 경우 1990년 3월 18일 의회선거 이후 개최되지 않았지만 지방원탁회의는 1990년 5월 6일 지방의회선거가 있을 때까지 개최되었다.

원탁회의는 원래 통제, 감시기관으로 설립되었으나 나중에 자체가 입법기관으로의 역할을 하면서 선거법, 매스컴법, 노조법, 사회현장, 새헌법조항 등을 제정했고 동독선거에 서독인들이 참가하지 않도록 한 결의도 통과시켰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주의통일당이 실질적으로 통제력을 상실한 권력의 공백기에 많은 부분 정부와 의회의 기능을 대신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더욱이 원탁회의의 활동으로 동독정보기관이 해체되었고, 그 비밀 서류의 소각을 방지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원탁회의가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되었기 때문에 동독인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었다. 더불어 1990년 5월 6일 동독에서 최초로 자유선거를 실시한다는 결의는 원탁회의가 비록 자유선거의 결과에서 나온 합법적인 제도는 아니었지만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표 1-5) 통일시기 동독주민 이주와 시위 전개 내용

| 시기 1989 | 사건 주요 내용 |
|------------|--|
| 01.15 | 라이프치히에서 로자 룩셈부르크 사망 70주년 시위 |
| 05.08 | 동독 교회와 야당, 지방자치단체 선거 부정관련 시위 |
| 07.17 | 헝가리, 오스트리아 국경철책 제거 |
| 08.03 | 동독 이주 희망자 80명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로 들어옴 |
| 08.13 | 헝가리 주재 서독대사관, 동독 탈출민 쇄도로 폐쇄 |
| 08.22 | 체코 주재 서독대사관, 동독 탈출민 쇄도로 폐쇄 |
| 09.11 | 헝가리, 동독 탈출민의 출국 허용 |
| 09.13 | 동독에서 Neues Forum 결성 |
| 09.16 | 동독, 민주주의 지금(Demokratie Jetzt) 결성 |
| 09.24 | 서독 외무장관 겐셔 UN에서 탈출민 관련 체코, 헝가리, 폴란드, 동독 외무장관과 합의 |
| 09.27 |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에서 평화시위 |

| | |
|-------------|--|
| 09.31-10.01 | 동독, 동구권 주재 서독대사관 체류 탈출민 서독 이주 허용 |
| 10.07 | 동독 건국 40주년 기념행사 동베를린에서 개최, 행사장 밖 반정부 시위 운동 |
| 10.09 | 라이프치히에서 7만 명 평화시위, 동독 SPD 창당 |
| 10.15 | 동독의 당 기관지 노이에스 도이칠란트 동독 정부 비판 시작 |
| 10.18 | 호네커 당 서기장 및 국가평의회 의장 사임, 에곤 크렌츠 후임으로 취임 |
| 10.24 | 동베를린에서 크렌츠 반대시위 |
| 10.31 | 크렌츠 소련 방문 |
| 11.03 | 크렌츠 근본적 개혁 발표 |
| 11.04 | 동베를린에서 1백만 명 시위 |
| 11.07 | 동독의 빌리 슈토프 내각 총사퇴, 후임으로 모드로우 총리 취임 |
| 11.09 | 동서독 국경개방 |
| 11.10 | 베를린 장벽 철거 시작 |

출처: 김영운·양현모, 2009, 『독일, 통일에서 통합으로-문답으로 알아보는 독일통일』, 통일부, p.74.

제3절 신정치세력의 등장

사회주의통일당 일당 체제의 동독에서 사회주의통일당에 반기를 들거나 또는 체제개혁을 주장하는 단체의 구성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9년 여름 이후 동독에서는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반체제그룹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9-10월에는 반대 그룹들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통일 전후 동독에서는 새로운 다양한 정치세력이 등장하였는데 이들은 다음과 같다.

① 빌레너(Böhlener) 모임

9월초 동독의 빌레너(Böhlener)에서는 동독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제반 분야에서 혁신의 필요성을 인식한 다양한 사회주의 단체들이 「동독에 있는 좌익 연합을 위하여」라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② 신포럼(Neues Forum)

1989년 9월 10일 출발한 ‘신포럼’(Neues Forum)은 개신교인, 학자, 문인들을 회원으로한 단체로 동독인들의 대량 이주는 동독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으로 혁신을 통한 문제해결을 주장하였고 동독 정부에 정식 단체로서 인정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였지만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인정받지 못했다. 이들은 1990년 계획된 선거를 위해 정당 창당을 준비하였는데 이들이 발표한 ‘정당 창당을 위한 호소문’에 의하면 신포럼의 자매단체인 ‘신포럼당’이 설립되어야 할 이유로 첫째, 창당을 통해 국가 정부의 책임을 인수할 가능성이 마련될 수 있으며 둘째, 신포럼은 계속해서 많은 시민을 위한 폭넓은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¹¹

③ 민주주의 지금(Demokratie Jetzt)

‘민주주의 지금’(Demokratie Jetzt)은 9월 12일 「국내정치 참가를 위한 호소」라는 성명서를 통해 5월 7일 지방선거¹²에서의 부정선거를 규탄하면서 사회주의통일당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기 때문에 교인들과 비판적인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연합을 주장하였다. 더불어 동독체제의 민주주의적 변혁을 위하여 첫째, 권위주의 국가에서 공화국으로, 둘째, 생산수단의 민영화,

¹¹ “신포럼 정당 창당을 위한 호소”, in. 통일부, 2011, 『독일의 통일·통합정책연구』 제1권 분야별 연구, 위의 책, p.68. (문서번호 17).

¹² 5월 7일 지방선거는 동독에서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고 가속화된 결정적 계기라 할 수 있다. 동독의 경우 국민들이 선거준비 기간 중 각종 관청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는데 5월 7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년 대비 51% 이상 증가하였다. 이 청원에서 표현된 국민들의 불만 사항은 일차적으로 주거와 공급의 문제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동독 내부가 역시 잘 알고 있었다. “전화와 같은 통신 수단의 연결이나 신문과 잡지의 구독, 가구 구입 및 자동차 구입 대기 기간과 같이 국민들의 바람은 점점 더 다양해져 가고 있다 ... 국가 경제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현재의 공급 결핍은 이미 장기간 지속되어 온 문제이기 때문이다.” “1989년 5월 7일지 지아 선거 결과 관련 주요 현안 보고” BStU, ZA ZAIG 5352, Abgedruckt in Mitter, Armin/Wolle, Stefan, Hrsg. “그러나 나는 너희 모두를 사랑한다...” 국가안전부의 명령과 현황 보고, 1989년 1-11월. Berlin 1990. p.97f. 통일부, 2011, 『독일의 통일·통합정책연구』 제1권 분야별 연구, p.11에서 재인용



셋째, 환경파괴와 오염으로부터 자연과 영구적인 조화 등의 3가지를 동독체제의 민주주의적 변혁을 위한 과제로 제시하였다.

④ 민주주의 혁신

‘민주주의 혁신’은 10월 초 “민주주의 출발-사회적, 환경적”을 위한 호소문을 통해 쇄신된 민주주의를 위해 첫째, 국가와 정당의 분리, 둘째, 자유로운 여론의 발전과 여론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셋째, 자유로운 의사 형성, 넷째, 산업 사회의 친환경적 개혁을 요구하였다.¹³ 이후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 민주주의 혁신은 라이프치히 강령을 발표하였다. 이 발표는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 먼저 국가와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자유, 평등, 비밀 선거를 통한 정치적 대변, 입법, 행정, 사법의 분리, 법치국가 그리고 사회적 시장경제를 주장하였다. 둘째, 경제의 역동성 강화와 산업 사회의 친환경적 개혁을 위해 소유권 형태에 있어 동등한 권리가 부여된 다양한 소유권 형태의 존재를 주장하였고 피할 수 없는 독점은 민주적으로 감독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시장 경제를 지향하면서도 환경적 요구를 경제 메커니즘에 통합하고 국제적 분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주장하였다. 셋째, 연대적인 사회의 추구 넷째, 쇄신된 사회 내에서의 개인과 공동체를 위한 자유를 주장하면서 교육 분야의 재편성, 언론과 정보교환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와 헌법을 토대로 하는 모든 교회와 종교의 동등한 권리의 지향을 주장하였다. 다섯 번째로 유럽 평화 질서 속에서의 독일 국가의 국가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주장하였다.

⑤ 카네이션

마르크스주의적 정당의 창당을 위한 그룹인 카네이션은 1989년 12월 10

.....

¹³ “민주주의 출발-사회적, 환경적”을 위한 호소문 1989년 10월 20일, 통일부, 2011, 『독일의 통일·통합정책연구』 제1권 분야별 연구, p.73. (문서번호 22).

일 광범위한 경제, 사회 개혁을 주장하면서 역사청산, 국가에 대한 국민의 광범위한 감독, 권력 분립을 위한 법 체제의 완성, 개인 정보 보호법 도입 그리고 법치국가적 원칙을 요구하였다.

⑥ 독립 노조

독일자유노조연맹의 무능력으로 인한 개혁의 한계를 지적하며 새로운 조직의 필요성을 느낀 40개 사업장과 기관의 동료들은 1989년 12월 20일 근로자의 이익 대변을 위한 논의를 통해 독립 노조의 설립을 호소하였다. 이들은 호소문에 자신들의 주장을 크게 3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 자신들은 오직 근로자의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해 근로자의 이익은 기업경영진·국가의 이익 간에 대립이 존재하는 사실에서 출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둘째, 친환경적일 경우 경제에 있어 효율성에 반대하지 않지만 경제 발전이 근로자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은 저지할 것이라고 하였다. 셋째로 그들은 사업장에서부터 인민의회에 이르기까지 생산의 목표와 형식을 공동 결정하며 국영 관리자의 선출과 해임 권리를 주장하였다.

표 1-6) 동독 내 신정치세력

| 단체명 | 발족일 | 주체 | 성격 | 활동내역 |
|---------|------------|------------------------|-------------------------------------|---|
| 빌레너 모임 | 1989. 09 | 기독교인, 마르크스주의자, 동독 공산당원 | 시국 위기에 대처한 사회주의 단체의 공동협력 | - '동독에 있는 좌익 연합을 위하여' 호소문 작성 - '독립사회주의 야당의 최소한 합의서' 채택 |
| 신포럼 | 1989. 9.10 | 개신교인, 학자, 문예인 | 여러 사회단체의 이해관계 완화 | 동독 헌법 제 29조에 기초 |
| 민주주의 지금 | - | 개신교인, 비판적 마르크스주의자 | 기존 체제 개혁을 위한 교인과 비판적 마르크스주의자의 연합 형성 | 1989년 5.7 선거 비판 동독체제의 민주적 변혁을 위한 3가지 목적 제시 |
| 사회민주당 | 1989. 10.9 | 개혁적 동독 공산당원 | 기존 체제 개혁 | 서독 사민당의 자매정당 |

| | | | | |
|-------------|------------|-------------------------------------|---------|-----------------------------------|
| 베를리너 양상블 | - | 예술인, 문화인 | 민주화, 혁신 | 동독연극협회, 문예인협회, 예술인 노조 참가 |
| 민주주의혁신 | 1989. 10.1 | 개신교인, 목사, 문예인, 의사, 법률가, 학자 | 민주화 | |

출처: 김영운·양현모, 2009, 『독일, 통일에서 통합으로-문답으로 알아보는 독일통일』, 통일부, p.79.

제4절 동독정당의 개편

베를린 장벽 붕괴 직후 동독인들의 개혁에 대한 요구는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났다. 첫째로 동독의 정체성 확립에 대한 요구이다. 이러한 요구는 주로 과거 공산당 정권 시절 반대투쟁을 주도했던 예술인, 목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동독이 서독에 흡수되는 통일방식에 대해 거부하는 사람들이었다. 두 번째는 동독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동독 공산당 정권 독점 조항의 삭제였다. 12월 1일 동독 인민의회에서 이러한 결정이 이뤄진 같은 날 동독 인민위원회의 조사위원회는 호네커 등 사회주의통일당 간부들이 당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재산을 부정으로 축적하여 호화주택을 건설하고 서구의 사치품으로 장식하였으며, 불법적으로 많은 외화를 외국은행에 예치한 사건들을 발표하였다.¹⁴ 이에 12월 3일 사회주의통일당의 모든 정치국과 중앙위원회 위원들이 사표를 제출¹⁵하였고 크렌츠 또한 사임하였다. 동독 공산당의 이러한 부패와 관련된 사건들은 민주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각인시킬 뿐이었다.

동독의 정당 개편과 관련해 의미 있는 내용은 두 번째 측면으로 동독 공산당 정권 독점 조항의 폐지는 지난 시기 사회주의통일당의 블록정당으로

¹⁴ 박성조·양성철 공저, 1991, “제1부 독일통일과 실현과정: 제2장 동서독 통일의 제1단계,” 『독일통일과 분단한국』, pp.18-19.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¹⁵ “사회주의통일당 중앙위원회 제12차 총회 결의문”, in. 통일부, 2011, 『독일의 통일·통합정책연구』 제1권 분야별 연구, p.47. (문서번호 1).

있었던 동독의 기존 정당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노선을 걷는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즉 블록정당으로서 존재하였던 동독 기민당, 동독 자민당, 농민당 등이 자체의 노선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① 동독 기민당

동독 기민당은 동독의 몰락에 자신들 또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블록정당에서 탈피하여 사회주의통일당과 뚜렷하게 거리를 두면서 동독의 법치와 투명성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되었다. 그러나 당시 동독 기민당의 당수였던 게랄드 괴팅(Gerald Götting)은 사회주의통일당과의 관계에 중점을 둔 사람으로 그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1989년 11월 2일 괴팅은 파면되었고 동독 기민당은 11월 10일 개혁주의자인 로타 드 메지에르(Lothar de Maizière)를 새롭게 당 총재로 선출하였다. 이후 11월 20-22일의 지도부 비공개정당대회와 12월 15-16일 있었던 특별전당대회에서 압도적인 지지 아래 당 정강의 개정을 결의했고, 사회주의 노선으로부터 선회하여 사회적 시장경제와 연방제를 기반으로 하는 동서독 통일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사회주의를 공식적으로 표방하지 않는 것으로 사회주의적 사고는 시장경제에서의 사회주의적 평등에 대한 강조를 통해 계속 이어졌다. 하지만 당내의 기독교적 사회주의 진영 사람들은 이러한 결정이 자신들의 과거에 대한 부정이며 공격으로 받아들여 당을 떠났다.

② 동독 사민당

사회주의통일당과는 다른 노선을 걷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의 하나는 동독 사민당에서 찾을 수 있다. 1989년 7월 24일 독일의 막테부르크(Magdeburg)와 포츠담(Potsdam)의 기독교 신학자인 마르쿠스 메켈(Markus Meckel)과 마르틴 구트차이트(Martin Gutzeit)가 이끄는 그룹이 동독 사민당 발족을 목표로 하는 이니셔티브 그룹 건설 제안서를 작성하였다. 이 제

안서는 대략 6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많은 이들이 위로부터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지만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우리 모두 변화를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둘째, 사회주의통일당의 권력에 대한 요구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 동독은 정치적 대안과 여론, 민주적 조직이 필요하다. 셋째, 이를 위해 사회민주적 정당의 건설을 위한 이니셔티브 그룹이 발족되어야 한다. 넷째, 국가와 사회의 분리가 요구되며 국가는 국민들의 기본권과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문제로 법치국가, 민주주의와 다원주의, 복지국가와 생태, 연방주의, 사회적 시장경제, 근로자들의 경영 참여, 공동 경제, 자유 노조, 종교의 자유, 여성의 평등권, 결사 및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망명권을 제기하였다. 여섯 번째, 외교문제에 있어서는 독일의 2국가 체제, 서독과의 특별 관계, 탈무장화, 군사연합 해체, 공정무역, 독일 내 소수 민족과의 연대를 제안하였다.¹⁶

이후 이니셔티브 그룹들은 1989년 9월 12일 호소문을 작성하였다. 이들은 사회민주주의 정당 건설을 제안하고 법치국가와 삼권 분립, 민주주의와 다원주의, 연방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 자유 노조를 촉구하였다. 이러한 호소문을 바탕으로 1989년 10월 7일 동독 사민당이 베를린과 동독 남부 지방의 50인에 의해 설립되었다. 동독 사민당의 목표는 더욱 심각해지는 국가의 불안을 막고, 국가와 사회의 지속적인 민주화를 달성하고, 친환경적 사회민주주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동독의 민주화 그룹과 이니셔티브 집단, 개인들의 협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또한 이미 대규모로 사회주의통일당을 탈당하였거나 아직 사회주의통일당 당원으로 남아있는 이들에게 호소문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회주의통일당은 더 이상 구할 수 없다. 둘째, 사회주의통일당에 민주사회주의자들을 위한 자리는 없다. 셋째, 민주사회주

¹⁶ “동독의 사회민주적 정당 구성에 관한 안” in. 통일부, 2011, 『독일의 통일·통합정책연구』 제1권 분야별 연구, p.65. (문서번호 14).

의자들은 동독 사민당에 입당해야 한다.¹⁷ 동독 사민당은 1989년 10월과 12월 사이에 동독의 여러 도시에 지구당을 설립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동독의 중앙원탁회의에서 동독 사민당은 2석을 확보하였다. 제1차 대표자 회의에서는 동독 사민당의 당명을 사민당으로 변경할 것을 결의하였는데 이는 당의 방향과 관련해 서독의 사회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990년 9월 26일 동독 사민당과 서독 사민당은 합당을 하게 되었다.

③ 동독 자민당

장벽이 붕괴되기 전 이미 사회주의통일당의 노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동독정당의 변화는 감지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첫 번째 주역은 9월 사회주의통일당의 노선을 비판하면서 반기를 든 동독 자민당(LDPD)이었다. 그러나 당시 당수였던 만프레드 게르라흐(Manfred Gerlach)는 인도주의적 사회주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으로 장벽 붕괴 후 블록정당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정당 기저의 요구와 시장경제에 대한 찬성 및 조속한 독일통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다¹⁸. 이에 1990년 2월 드레스덴(Dresden)에서 열렸던 특별전당대회에서 게르라흐의 해임이 결정되었고 이를 계기로 전 통적 자유주의 노선의 추구를 명확히 하였다.

.....
¹⁷ 독일 기독교 정보문서보관소(Informations-und Dokumentationsstelle der Evangelischen Kirche in Deutschland) in. 통일부, 2011, 『독일의 통일·통합정책연구』 제1권 분야별 연구, p.72. (문서번호 21)

¹⁸ Alexander Thumfart 저, 안미현·최경인·안미라 역, 2007, 『동서독의 정치통합』, p.263. 통일연구원

④ 사회주의통일당

동독헌법에 보장되어 있던 동독 공산당 정권 독점 조항이 삭제된 사회주의통일당은 1989년 12월 12-13일 양일 간의 정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당수 그레고 기지(Gregor Gysi)를 선출했고 그는 앞으로 사통당 내에서 스탈린주의자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더불어 당명을 사회주의 통일당-민주사회주의당으로, 당 기관지의 별칭이었던 사통당 중앙기관지 대신 사회주의 일간지로 변경하였다.

이후 사회주의통일당-민주사회주의당은 1990년 2월 1일 중앙지도부 의장단의 제안에 따라 당명을 민주사회주의당으로 변경하였다. 이들은 강령 초안에 민주사회당과 동독 사민당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사민당은 자유, 정의연대성을 토대로 환경 중심의 사회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면서 개혁된 자본주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민주사회당은 완성된 사회 시스템이 아닌 그것을 향해 가는 과정과 끊임없는 과제, 도전으로 민주사회주의를 중시한다.

둘째, 사민당은 과거의 혹은 새로운 이데올로기 모델이 아닌 정치, 사회적 참여와 사회보장의 동일한 기회라는 의미에서의 새로운 정의를 가능케 하는 실용 정치를 추구하지만 민주사회당은 스탈린주의적 특징을 지닌 현실 사회주의의 사회적 개념 및 형상과 결별하였다. 그러나 변증법과 유물론을 비롯해 역사적 가치를 지닌 사상 즉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 등의 이론을 비롯해 그 추종자들이 발전시켜 나간 다양한 사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셋째, 사민당은 오직 노동자 운동의 사회 민주적 전통만을 토대로 한다. 그러나 민주사회당은 독일과 전 세계 노동자 운동의 사조와 인민의 혁명적이며 민주적인 전통, 반파시스트 운동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민주사회당은 노동자 운동 중 한 가지 사조의 유산에만 기대지 않는다.

넷째, 사민당의 강령에는 현 시대의 자본주의 혹은 자본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비판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민주사회당은 사민당과

달리 행정적인 국가사회주의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와도 거리를 두고 있다. 자본주의가 경제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으나 평화 보장과 군축, 자연과의 균형 형성에 대한 인류의 국제적 관심에 부합하고 사회적 정의를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인 시스템으로 입증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다섯째, 양 정당이 사회적 시장경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공동 재산의 가치에 있어서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시민당의 강령에는 공공 경제 부문은 공익을 위해 필수적인 규모로 보전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다양한 해석을 가능케 한다. 이에 반해 민주사회당은 사회적 재산이 지배적인 재산 형태로 남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생산자들이 생산 수단과 결과물을 실질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국가 재산이 진정한 인민 재산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섯째, 시민당은 서독에 자매당과 모당을 두고 있다. 서독 시민당은 동독 시민당 측에 선거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공동 조직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민주사회당은 서독에 의존할 수 있는 모당을 갖고 있지 않다.

일곱 번째, 독일 정책과 유럽 정책에 있어 양당은 여러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시민당의 경우 신속한 경제, 화폐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동독의 서독으로의 합병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사회당은 동서독 모두가 개혁 과정을 추진하며 공존하는 것이 독일 영토와 전 유럽의 민주적이며 사회적으로 공평한, 친환경적이며 연대적인 사회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¹⁹.

¹⁹ “민주사회당과 동독 시민당의 차이 1990년 2월 22일,” in 통일부, 2011, 『독일의 통일·통합정책 연구』 제1권 분야별 연구, p.55. (문서번호 7).

표 1-7)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동독 정당체제의 변화

| 당명 | 변화 내용과 형태 |
|------------------|---|
| 사회주의통일당 (SED) | 유일 지도정당으로서의 지위 상실, 민주적 다원주의 체제 하의 사회주의 세력으로 변화 시도 |
| 동독 자민당 (LDPD) | 동독의 새로운 자유주의 세력으로서의 변환 시도 |
| 동독 기민당 (Ost-CDU) | 사회주의 노선을 포기하고 사회적 시장경제와 연방제를 강령으로 채택 |
| 민주농민당 (DBD) | 블록정당에서 탈퇴, 후에 당을 해체하고 기민당에 개별적으로 가입 |
| 민족민주당 (NDPD) | 1989년 12월 위성정당에서 탈퇴한 후 동독 자유주의 세력으로 편입 |

출처: 손기웅, 2010, 『독일통일 20년: 현황과 교훈』, p.34. 통일교육원

제5절 통일과정에서 동서독 정당의 통합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 1990년 10월 3일 통일될 때까지의 독일통일 과정에서 동서독의 정당통합은 실질적으로 1990년 3월 동독 최초의 인민회의 자유선거에서 시작해 1990년 12월 통일 이후 첫 연방선거 기간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통일과정에서 동서독 정당의 통합을 2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정당연합과 인민의회 선거

베를린 장벽 붕괴 전후로 동독의 변화를 요구하는 정당, 사회단체들이 생겨났다.²⁰ 베를린 장벽 붕괴 전후 동독의 변혁을 요구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이들 정당, 사회단체들에게 있어 앞으로 동독이 나아갈 방향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 1990년 3월 18일 동독의 인민의회 선거였다. 무엇보다

²⁰ 1989년부터 1990년 2월까지 35개 정당, 16개 시민운동, 12개 여성운동단체, 52개 청년운동단체, 6개 노조, 24개 정당을 가지고 있는 단체, 42개 직업단체가 생겨났다.

다 선거의 결과에 따라 동독의 미래와 각 정당, 사회단체가 주장했던 내용에 따라 동독에서 자신들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 정당, 사회단체들은 향후 동독의 새로운 정치 환경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자신들과 비슷한 정치적 노선, 목적을 갖고 있는 정당, 사회단체와 선거연합을 결성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히 서독의 정당들은 동독에 파트너를 찾거나 자매정당²¹을 설립하여, 원탁회의에서 서독 및 외국정당이 동독 선거전에 참가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물질적, 인적으로 동독선거에 직접 개입하였다.

① 기민당

1989년 11월 동독 기민당의 대표가 된 드 메지에르는 서독의 기민당과 함께 독일에서 기독교민주주의 정당을 건설하고자 하였다. 서독 기민당의 경우 연방차원보다는 주 차원에서 동독 내 다양한 조직들과 회동을 통해 동독 자매정당인 동독 기민당의 성향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서독 기민당의 수뇌부는 동독의 기민당이 40여 년 간 사회주의통일당의 위성정당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과 자매정당과의 협력이 선거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동독 기민당을 자매 정당으로 인정하게 된다. 이는 동독 내 새로 등장한 정치단체들이 서독 기민당의 보수적 정치성향을 비판하는 점과 더불어 동독 기민당이 당 내 개혁을 추진한 것이 그 원인으로 작용했다.²²

당시 서독의 집권당이었던 기민당은 11개 주 의회 원내총무들을 중심으로

²¹ “독일자유민주당의 한 당원은 서베를린을 방문해 법률 전문서적을 조달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오랜 기간 선거청장을 지낸 베를린 시정부 내무부 고위 관리와 접촉하게 된다. 개인적인 친분으로 시작된 이 접촉은 곧 정당 간 공식 접촉으로 발전하게 되고, 서독의 대표 정당들 역시 동독 정당들과의 접촉에 뛰어들다.” 통일부, 2011, 『독일의 통일·통합정책연구』 제1권 분야별 연구, p.14-15.

²² 송태수, 2006, “1989/90년 격변기 동독 내 서독 정당의 전략과 정책”, FES-Information-Series, Friedrich Ebert Stiftung, p.5.

로 모임으로 갖고 동독 기민당의 저조한 지지율을 고려하여 다른 정치단체와 연합방식으로 선거에 참여할 것을 동독 기민당에 제안하였다. 더불어 서독 기민당 지도부 또한 동독 내 신흥 정치세력과의 연합을 모색하였다. 단 하나의 정당과의 접촉만을 고집하는 것은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으로 다른 세력과의 연대를 위한 모든 조건을 열어 놓았다. 이러한 입장에서 서독의 기민당은 기사연의 동독 자매정당인 독일사회연합(DSU)²³과 민주혁신(DA)²⁴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병행하여 1990년 2월 5일 독인연합을 창설해 인민의회 선거에 공동으로 대응하였다.²⁵ 또한 모든 선거구에서 서

²³ 독일사회연합은 1990년 1월 20일 라이프치히의 골데네 크로네 호텔에서 11개 소수 정당의 연합을 통해 설립된 정당으로 스스로를 서독 기사당의 자매정당으로 출발하였다. 따라서 기사당으로부터 막대한 물질 지원을 받았는데 쾨트도이체 차이퉁(Süddeutsche Zeitung)의 기사에 따르면 1990년 2월 초 선거 홍보 차량 6대와 전단지 200만 장, 포스터 20만 장, 스티커 5만 장을 지원받았다. 이러한 물질 지원 비용은 100만 마르크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독일사회연합은 민주주의의 출발과 동독 기민당과 ‘독일을 위한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선거 연합을 구성하였다. 당시 독일사회연합의 일부 당원들은 과거 동독 시절 위성정당의 역할을 했던 동독 기민당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서독 기민당의 지원으로 동독 기민당의 세력이 확장되면서 자신들의 독자적인 성공기회가 심각하게 줄어들자 독일사회연합의 지도부는 선거 직전에 동독 기민당과의 협력은 진행하지만 긴밀한 협력은 피하는 쪽으로 노선을 수정하였다. 1990년 3월 인민의회 선거에서 6.3%의 지지율과 5월 지자체 선거에서의 3%대의 지지율로 인해 기민당에 가입할 것을 호소하는 공개서한을 당수가 당원들에게 보내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²⁴ 1990년 6월 30일 민주주의의 출발 중앙위원회는 포츠담에서 독립당으로서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고 동독 기민당과의 합병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히나 얼마 남지 않은 주 의회 선거 준비로 동독 기민당과의 조속한 합당이 불가피해진 상황이기도 하였다.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전체 독일 기민당과의 합당이 더 좋은 선택일 수는 있지만 동독 기민당과의 합당을 미룰 경우 민주주의의 출발은 주 의회선거에 후보를 내세울 기회조차 잃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동시에 민주주의의 출발 지도부는 서독 기민당과의 회담도 지속해 나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0년 7월 19일 민주주의의 출발 지도부는 헬무트 콜과의 회담에서 기민당 내 “민주주의의 출발 실무 팀” 구성이라는 결과를 얻어냈다. 1990년 8월 4일 동베를린에서 민주주의의 출발의 150명 대표자들이 중심이 되어 개최된 특별전당대회에서 중앙지도부와 주(州) 지도부에 아래의 두 가지 사안이 위임되었는데 먼저, 최소 요구 사항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공동으로 확인할 것 그리고 둘째, 충족될 경우 합당을 즉각적으로 실행한다는 것이었다. 더불어 합당 조건으로는 실무단의 구성과 민주주의의 출발 당원의 지도부 위원으로의 임명, 주 의회 및 연방의회 선거 후보 지명”에 대한 보장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1990년 9월 8일 슈트라우스베르크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민주주의의 출발은 대다수 당원이 기민당에 입당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발전적 해체를 결의하였다.

²⁵ 손기웅, 강구섭, 양대중, 2009,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 동서독 통합과정 종합 평가』, p.10. 통일연구원

독의 선거 전문가들을 파견해 동독 각 주의 선거운동본부 핵심지위를 차지하고 선거운동을 진두지휘하여 압승을 거둘 수 있었다.

② 동독 사민당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기 전인 1989년 8월 26일 동독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창당을 위한 계획이 발표되었고 이후 10월 7일 창당대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서독에서는 동독 사민당이 대중적 지지 없이 건설된다는 비판 등으로 인해 동독 사민당과의 관계 설정에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환영 인사를 파견하지 않았고 창당 대회가 개최된 이틀 후에야 서독 사민당의 당대표가 동독 사민당이 동독의 도덕적 발전에 기여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연대사를 발표하는 수준에서 행동을 보였다.

그러나 연방차원에서는 서독으로 망명한 저항운동단체 인사들을 중심으로, 주 차원에서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을 중심으로 동독 사민당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계 개선에 물고개 트인 계기는 바로 동독 사회주의통일당이 동독 사민당과 명확한 구분을 밝힌 이후라 할 수 있다.

동독 사민당의 경우 1989년 여름 이후 평화혁명의 가치를 토대로 형성된 정당으로 서독의 사민당과 달리 자신들은 풀뿌리민주주의의 구조를 갖고 있는 신생정당이라는 점 그리고 1968년 혁명정신과 좌파-녹색당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동독 사민당이 안정적 정당조직을 갖춘 것은 빌리 브란트(Willy Brandt)와 헬무트 슈미트(Helmut Schmitt)의 노력을 통해 가능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990년 1월 동독 사민당이 당명을 서독과 동일하게 바꿈으로써 동서독의 사민당 관계에 진전을 마련할 수 있었다. 먼저 동서독 사민당 각 3인과 1인으로 구성된 교류위원회를 서베를린에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서독 사민당은 동독 인민의회 선거에 직접 개입하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강화하려 하였는데, 반대로 동독 사민당은 독자성



유지를 위해 서독의 원조를 자립을 위한 원조로 규정하고 기술적 수단, 이데올로기와 홍보 전략을 독자적으로 마련해 나가려 했다.²⁶

이처럼 동독의 사민당은 1990년 1월 당명을 독일사회민주당으로 변경한 이후 서독 사회민주당의 자매정당으로서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동독 사민당은 원래 동독 무혈혁명의 주역이었던 ‘민주혁신’, ‘신포럼’, ‘민주주의 지금’, ‘좌익연합’, ‘평화와 인간의 권리를 위한 발의’와 함께 ‘선거연합90’(Wahlbündnis 90)을 형성했으나 탈퇴해서 서독 사회민주당의 지원을 받아 독립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

③ 자유민주당

인민의회 선거를 계기로 서독의 자민당은 블록정당이었던 동독의 자민당(LDPD) 내 비판적 성향이 강했던 사람들과의 대화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접촉을 시도하였다. 또한 동독에서 평화혁명을 계기로 형성된 시민단체를 정당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서독의 자민당은 동독 사회 내 자유주의 세력 모두를 연계해 서독 자민당을 중심으로 통합하고자 시도하였다.

이에 1989년 11월 동독의 자민당과 서독 자민당의 정당 대표 회담이 결렬된 이후 동독에서 경쟁정당으로 1990년 2월 4일 동독-자유민주당(DDR-FDP)의 출현과 독일포럼당(Deutsche Forum Partei, DFP)의 창당을 주도하고 막대한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동독 자민당의 지도부를 압박하였다. 결국 동독에서의 자유주의 세력들인 동독-자유민주당(DDR-FDP), 동독 자민당(LDP) 그리고 독일포럼당(DFP)은 1990년 2월 11일 독일에서 통합된 자유주의 정당 건설이라는 목표를 위해 자유민주동맹(Bund freier Demokratien, BFD)이라는 선거연합체를 결성하였다.

.....
26 송태수, 위의 책, p.4

④ 사회주의통일당

사회주의통일당은 정당 해체가 아닌 정당의 개혁을 목표로 사회주의통일당-민주사회주의당(SED-PDS)으로 당명을 변경하였다. 이후 1990년 1월 정당 자체의 개혁을 목표로 하면서 당명을 민주사회당으로 변경하였고 단독으로 선거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당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주의통일당의 후계정당으로 민주화 노력은 지지하지만 서독으로의 무조건적인 통합에는 반대하는 기존 공산당원 등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⑤ 녹색당

서독의 녹색당은 통일정국에서 정치사안보다는 환경, 인권, 평화와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동독 시민단체들과 대화를 전개하면서 이들의 견해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조화를 모색하였다. 따라서 많은 단체들이 녹색당과 합류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어떤 단체와 협력할 것인가와 관련해 서독 녹색당 내에서는 근본주의자와 현실주의자 사이에 논쟁이 벌어져 당 내 갈등으로 나타났다.

동독 내에서 서독 녹색당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던 단체들인 신포럼, 민주주의 지금, 평화, 인권발의(Initiative Frieden und Menschenrechte, IFM) 등과 동독 녹색당은 정강 논의의 강화와 새로운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들 단체들은 서독에 자매정당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독 녹색당으로 빠른 행보를 취하였으나 정강 논의 속에서 주춤하였다. 왜냐하면 서독 녹색당은 기본입장인 두 개의 독일 국가를 일정 기간 유지하고 대등한 권리를 가진 동서독 두 국가의 유럽 내 공동발전을 목표로 하는 독일 정책을 추구하였기 때문이다. 서독 녹색당은 이들 동독 정치단체들의 민주주의적 요구는 동의했지만 무비판적 자본주의 도입에는 반대했다.

서독 녹색당은 이러한 정치적 입장으로 다른 정당들과 달리 동독의 인민

의회 선거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즉 서독 녹색당은 동독의 정치단체들의 자주성에 근거한 선거를 원칙으로 하여 내용적 개입을 피한 채, 간접지원 방침을 고수하였다. 결국 신포럼, 민주주의 지금 및 평화인권 발의는 녹색당과의 협력을 거부하고 동맹 90을 통해 독자적인 선거참여를 결정하였다.

⑥ 기타

애초에 동독 사민당과 함께 '선거연합90'(Wahlbündnis 90)을 구성하기로 했었던 사회단체들의 경우 동독 사민당, '좌익연합'의 연속적인 탈퇴로 인해 동력을 상실하였다. 그러나 IFM, '민주주의 지금', '신포럼'은 선거를 위해 1990년 2월 통합선거명부를 사용하는 선거연합을 결성했다.

1990년 3월 동독 인민의회 선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사민당이 54% 정도로 절대다수를 얻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선거 중반전에 들어서면 기민당 중심의 '독일동맹'의 부상으로 인해 30%, 사민당이 34%의 지지율을 얻을 것으로 예측되었고 민사당은 17%의 지지를 얻을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전반적으로 사민당, 민사당 등 좌익쪽 정당이 우세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선거결과는 여론조사와는 달리 기민당이 중심이 된 독일연맹이 47.7%로 193석을 차지하는 압승이었다. 기민당의 경우 40.9%로 164석을 차지하였고, 사민당은 21.84%로 84석, 민주사회당이 16.33%로 65석, 동맹 90이 2.90%로 12석, 독일사회연합이 6.32%로 25석을 차지하였다.

예상과 다른 이러한 결과는 동독인들이 부유한 생활을 원했고 이에 맞추어 당시 서독의 총리였던 기민당 콜 총리의 조기통일과 통화동맹에 대한 약속에 기인하였다. 또 사회주의통일당의 후신인 민주사회당은 예상 밖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는데 이는 유권자들에게 통일 후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 집중 선전한 것과 더불어 구 동독 집권세력들의 지지에 의한 것으로 설명된

다.²⁷

표 1-8) 1990년 3월 18일 동독 인민의회 선거 득표율 및 통일관련 공약

| 구분 | 독일동맹 (Ost-CDU, Demokratischer Aufbruch, DSD) | SPD | PDS | BFD(동독 자민 당, Deutsche Forumspartei, FDP) | B' 90(IFM, Demokratie Jetzt, Neues Forum) |
|------------|---|---------------------------------|---------------------|---|--|
| 통일관련 공약 | 조속한 통일, 기본 법 제23조에 의한 통일 | 신중한 통일, 기본법 제146 조에 의한 통일 | 국가연합을 거 친 단계적 통일 | 점진적 통일, 국민투표에 의한 통일 | 동서독의 체 제 개혁을 통한 통일 |
| 득표율 | 47.7% | 21.9% | 16.4% | 5.3% | 2.9% |

출처: 김영운·양현모, 2009, 『독일, 통일에서 통합으로-문답으로 알아보는 독일통일』, 통일부, p.108.

표 1-9) 각 정당별 인민의회 선거결과(51-52)

| | 표수 | % | 의석 |
|--|------------|-------|-----|
| 유권자수 | 12,377,372 | | |
| 투표참여자수 | 11,538,313 | 93.22 | |
| 유효표 | 11,475,353 | | |
| 민주혁신(Demokratischer Aufbruch, DA) | 105,251 | 0.92 | 4 |
| 독일사회연합(DSU) | 724,760 | 6.32 | 25 |
| 기독교사회민주당(Christlich-Demokratische Union Deutschlands, CDU) | 4,694,633 | 40.91 | 164 |
| Allianz für Deutschland | 5,524,647 | 48.15 | 193 |
| 독일사회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 2,506,151 | 51.84 | 87 |
| 민주사회당(Partei des Demokratischen Sozialismus) | 1,873,666 | 16.33 | 65 |
| 자유연합(Bund Freier Demokraten, DFP, LDP, FDP) | 606,283 | 5.28 | 21 |
| 동맹 90(Bündnis 90) | 333,005 | 2.90 | 12 |
| 민주농민당 | 250,943 | 2.19 | 9 |
| 녹색당 | 225,234 | 1.96 | 8 |
| 독일국민민주당(NDPD) | 44,435 | 0.39 | 2 |
| 독일민주여성당 | 38,088 | 0.33 | 1 |
| 행동연맹 | 20,180 | 0.18 | 1 |

²⁷ 김영탁, 1997, 『독일통일과 동독재건과정』, p.187.

| | | | |
|--|--------|------|---|
| 대체연합 | 14,573 | 0.13 | 1 |
| 기독교당(christliche Liga) | 10,699 | 0.09 | 0 |
| 독일공산당(KPD) | 8,836 | 0.08 | 0 |
| 독일독립사회민주당 | 3,891 | 0.03 | 0 |
| 유럽당 | 3,690 | 0.03 | 0 |
| 독립국민당 | 2,999 | 0.03 | 0 |
| 독일맥주연합 | 2,534 | 0.02 | 0 |
| 독일스파르타당(Spartakist- Arbeiterpartei Deutschlands) | 2,396 | 0.02 | 0 |
| 통일당 | 2,356 | 0.02 | 0 |
| 사회노동자연합 | 374 | 0.00 | 0 |
| 근로자정치민주연합 | 373 | 0.00 | 0 |
| 동독유럽동맹 | - | - | - |

출처: 박성조·양성철 공저, 1991, 『독일통일과 분단한국』,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p.50-51.

2. 동서독 정당의 통합

① 서독과 동독의 기민당

1989년 11월 10일 로타 드 메지에르 신임 당수의 선출, 12월 15-16일 동 베를린에서의 특별 전당대회를 통한 당 정강의 개정 등은 동독 기민당이 그동안의 SED의 위성정당에서 탈피하여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동독 기민당 내에는 사회주의통일당 및 서독 기민당과의 관계와 사회주의 개념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였다. 1989년 11월의 비공개 전당대회, 12월의 특별전당대회에서 사회주의를 표방하지는 않지만 시장경제에서의 사회주의적 평등에 대한 강조를 통해 계속 이어진다는 의견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일부의 사람들은 이러한 견해에 대해 자신들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즉 혁신과 미래라는 제목으로 12월 15일과 16일 개최된 특별전당대회에서 이전 동독 기민당의 간부들은 새롭게 당수로 선출된 드 메지에르가 추구하고자 했던 위성정당에서 국민정당으로 전환에 따르는 일련의 정책들 즉, 당 지도부의 새로운 선출, 당 내부 구조의 변화,

동독에서 기민당의 새로운 진로에 대한 합의 등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과거 위성정당의 노선과 더욱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입장도 제기되었는데 이들은 서독 기민당에 더욱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서독 기민당의 정책에 동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⁸ 이러한 모습은 새롭게 선출된 드 메지에르의 모습에서 잘 나타났다. 동독 라디오에서 처음으로 생중계된 연설에서 드 메지에르는 처참한 불행에 대해 동독 기민당의 공동책임에 대해 인정하였으며 사회주의는 그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또한 드 메지에르는 법치국가와 시장경제 체제에서 진행되어야만 하는 평화적인 과정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따라서 동독의 기민당은 앞으로 더 이상 사회주의통일당-민사당과 연정을 맺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드 메지에르의 모습으로부터 서독의 기민당 내에서 동독의 기민당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었지만 콜(Kohl) 수상을 중심으로 하는 당 지도부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인민의회 선거전날 서베를린의 진보적 신문인 TAZ지가 동독 기민당이 선거기간 동안 32만 동독 마르크화를 사용하였다는 보도를 하였지만 서독 기민당을 중심으로 모인 독일연맹(Allianz für Deutschland)의 선거 승리를 막지는 못했다. 당시 민주혁신(DA)의 회원이었던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은 유권자들이 3월 18일 기민당에 표를 준 것은 동독 기민당이 아니라 콜 수상과 독일의 통일에 표를 준 것이라고 말하였다.

1990년 5월 중순 콜 수상과 드 메지에르는 동독 기민당과 서독 기민당의 통합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5월 21일 정당 수뇌부회의에서 드 메지에르는 동독 기민당이 서독 기민당으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였다. 그는 동독 기민당과의 연대에 강조점을 두었고 낯선 대표들을 위한 선거연합이 되는 것을 중시시키겠다고 하였다. 드 메지에르는 서독 기민당 내에 있는 동독 기

²⁸ Schmidt, Ute, 1997, Von der Blockpartei zur Volkspartei? Die Ost-CDU im Umbruch 1989-1994, Opladen, pp.86-90.

민당 비판가들에게 우리 동독 기민당은 연방공화국에서 기민당의 당원이 되는 것보다 동독에서 기민당의 당원으로 되는 것이 훨씬 더 쉽다고 말하면서 서독 기민당이 원하는 절차에 의한 동독 각 주별로 기민당에 가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동등한 파트너로서 결합을 더 선호한다고 분명히 말하였다. 또한 1990년 6월 18일 본(Bonn)에서 기민당 연방정당위원회가 열리기 전 드 메지에르 총리는 공동 강령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동독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강령에 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본(Bonn) 방문을 계기로 드 메지에르는 양 자매정당의 성장은 공동의 기본위원회와 정관변경위원회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다. 이것이 양당의 통일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었다. 드 메지에르의 요구는 철회되었고 서독 기민당은 이에 대해 동독 기민당을 병합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화하는 것이라는 점, 본부 사무실을 동베를린으로 이주하는 것 그리고 동독 기민당의 재산을 새로운 연방 주의 기민당에 골고루 분배하는 것으로 화답을 하였다.

다른 한편 5월 18일과 30일 드 메지에르와 농민당의 당수인 귄터 마로이다(Günther Maleuda) 간에 기민당과 농민당(DBD) 간 합병에 대한 대화가 진행되었다. 민주농민당의 경우 1990년 1월 27-28일 베를린에서의 전당대회에서 당의장인 마로이다(Maleuda)는 동독의 잘못된 발전에 있어 민주농민당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4월 17일 민주농민당 수뇌부는 모든 가능한 파트너와 대화를 할 것을 결의하였다. 따라서 마로이다는 1990년 4월 동독 자민당(LDP) 의장 오르트랩과 대화를 하였다. 기민당의 농업정책에 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로이다는 또한 기민당의 부당수인 호르스트 콜르벨라(Horst Korbella)와도 대화를 하였고 5월에는 민주농민당과의 합당에 관심을 보인 사민당의 볼프강 티어제(Wolfgang Thierse)와도 대화를 하였다. 민주농민당 수뇌부는 6월 25일 8대 3으로 기민당에 가입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러한 합병에 반대를 한 마로이다가 당의장직에서 물러나고 합병에 찬성하는 울리히 융

한스(Ulrich Junghanns)가 새로이 당수에 취임하였다. 옹한스는 소위 민주농민당의 개혁가로 알려져 있는 인물로 이미 3월에 독일의 통일에 대해 언급을 하였다. 1990년 9월 3일 옹한스는 민주농민당은 9월 1일부터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기민당과 하나가 되었다고 하였고 이틀 뒤인 9월 5일 민주농민당 마지막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였다.

전독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구 동서독 정당들은 선거 전략의 하나로 통일 전 제휴했던 정당들과 합당하게 되었고 이러한 전략적 선택은 먼저 각 주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구체화되었다. 그 일례가 바로 1990년 9월 8일 동서독 베를린의 기민당 지구당들은 베를린 공동 주 지구당으로 통합이었다. 또한 이러한 각 주에서의 지구당의 통합은 동독 기민당이 서독 기민당에 합병된다는 인상을 지우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연방차원에서의 통합은 독일의 국가적 통일 직전인 1990년 10월 1일과 2일 함부르크(Hamburg)에서 동독 기민당과 서독 기민당의 통일전당대회를 통해 실현되었다. 또한 기존 기민당 지도부가 전원 사퇴하며 새로운 인물들에게 자리를 내어 주었는데 드 메지에르는 91%의 찬성표를 얻어 부당수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동독 기민당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독립적인 정당정책의 수립과 좌파적 성향의 기본토대 구축은 더 이상 실현되지 못하게 되었다. 1990년 10월 서독 기민당의 기본강령이 통합 기민당의 강령으로 적용되었는데 이는 동독 기민당의 요구나 기준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합당이라기보다는 합병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요소가 크다.

② 사민당과 동독의 사회민주당

서독 기민당의 경우 동독 기민당의 위성정당으로서의 활약으로 인해 동독지역에서 정치적 파트너를 찾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파트너가 제안되었다. 이에 반해 서독 사민당의 경우 동독의 사민당과의 긴밀한 협력에 있어 그리 큰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동독 사민당 내에서는 당의 조직과 구조에 있어 창당과정에 의견이 있었다. 창당 과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시민운동과 평화운동 참여자들은 애초에 자신들만의 시민정당 창당을 목표로 삼았었다. 이들은 법치주의, 민주주의, 사회 및 경제적 평등과 사회주의통일당의 지배에 대항하는 공적인 의사형성을 의회에 정착시키고자 하였고 그러한 정당을 창당하고자 하였다. 이는 동독 사민당 내에 당 구조와 관련해 두 가지 다른 흐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동독 사민당 내부구조와 조직형성에 있어 서로 다른 의견이 제기되었다. 먼저 동독의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주의의 경험으로 인해 정당의 밑에서부터 맨 위까지 대표를 선출해 인민민주주의적 정당을 만들고자 하는 하는 것이 시민정당으로서 동독 사민당을 꿈꾸는 사람들의 생각이었다. 이들은 하부집단을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주체로 만들어 과두정치를 방지하고 내부의 투명성과 30명의 대표로 구성된 정당의회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더욱 강력한 지도부의 구성을 생각하는 이들의 요구와 부딪치게 되었고 결국 타협점을 찾아 인민민주주의적 조직은 대체방안으로 유보되었고 기타 정당구조 관련 작은 부분들은 유지되었다.

이러한 설명은 동독의 사민당과 서독의 사민당 간의 통합에 있어 강령과 관련해 방향설정에 있어 동서독 사민당 간에 큰 갈등이 없었지만 동독의 사민당 내부에서는 당 조직과 구조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③ 자민당과 동독의 자유주의자

1989년 5월 동독 자민당의 당수인 게르라흐(Gerlach)는 다양한 지역에서 온 18명의 동독 자민당 당원들에게 동독의 상황과 지방선거의 결과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하였다. 게르라흐는 야당으로서 자민당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고 동독 사회의 개혁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하였다. 또한 그는 1989년 10월 28일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반정부적인 활동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그러한 단체의 출현은 결코 헌법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자신의 소

신을 명확히 밝혔다. 이러한 게르라흐의 모습은 다른 위성정당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당시 동독의 국가안보국은 동독의 자민당으로부터 동독 사회에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게르라흐와 동독의 자민당을 개혁세력의 선두주자로 생각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모습은 동독의 자민당이 다른 위성정당들과는 달리 사회주의통일당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게르라흐가 기본적으로 동독의 붕괴를 원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은 그의 슈피겔지와 인터뷰를 통해 명확히 알 수 있는데 그는 당시 동독에서의 변화를 혁명으로 표현하였지만 동독의 폐지가 아닌 개혁을 뜻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개혁적인 움직임과 더불어 동독의 자민당은 11월 1일 당의 강령을 처리할 기초위원회를 설립하여 게르라흐를 중심으로 한 체제 내적인 개혁과 새로운 노선을 위한 기초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1990년 1월 게르라흐는 서독 자민당의 볼프강 미쉬니크(Wolfgang Mischnick)를 만나 동독의 자민당과 서독 자민당의 앞으로의 협력을 위한 전제 조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다. 서독 자민당의 요구는 먼저 동독 자민당 내의 인사에 관한 것과 동독 내 모든 자유주의 세력과의 선거연합이었다. 더불어 또한 동독의 자민당이 사회적 시장경제, 법치국가 그리고 독일의 통일에 대한 지지를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동독-자민당(DDR-FDP)이 1월 4일 건설되었는데 이는 동독 자민당(LDPD)에게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게르라흐는 이러한 동독-자민당(DDR-FDP)의 창당 이면에 서독의 자민당이 동독 자민당(LDPD)에게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방안이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서독의 자민당이 목표로 했던 것은 동독에서 자유주의 세력의 분할이 아니라 동독 자민당(LDPD), 동독-자민당(DDR-FDP) 그리고 포럼당이 선거연합을 구성하도록 추동하는 것이었다. 포럼당의 경우 1989년 12월 신포럼에서 분리된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1990년 1월 27일 건설된 정당이었다.



1990년 2월 9-10일 양일 간 개최된 정당대회에서 동독 자민당(LDPD)은 자민당(LDP)으로 당명을 변경하고 새로운 당수 라이너 오르트렙(Rainer Ortleb)의 지휘 아래 당 강령에서 사회주의적 요소를 제거하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동독에 있었던 자유주의적인 가치에 부합하는 새로운 당 강령을 마련하였다.

오르트렙은 당의장으로 선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독일민족민주당(NPDP)의 의장인 볼프강 라울(Wolfgang Raul)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동독 자민당과 독일민족민주당이 함께 선거연합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자유민주주의자연맹(Bund Freier Demokraten, BFD)이 바로 이러한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자유민주주의자연맹은 동독 자민당, 독일포럼당(Deutsche Forumpartei), 독일민족민주당(NPDP), 동독-자민당(DDR-FDP)이 인민의회 선거에서 공동의 선거인 명부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인민의회 선거 이후 이들은 1990년 4월 4일 모임을 갖고 지방선거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오르트렙을 선거연합의 의장으로 볼프강 라울은 부의장 그리고 요아힘 귄터(Joachim Günter)를 사무총장으로 선출하였다. 서독의 자민당과의 통합 논의는 진척되고 있었지만 서독의 자민당은 자유민주주의자연맹의 실용적인 제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하였다. 무엇보다 사회적 권리가 정착되지 못하고 동독의 당원들을 가르침을 받아야 할 신참자로 생각하고 있었다.

통합정당대회가 8월 11-12일 하노버(Hannover)에서 개최되었다. 서독 자민당의 경우 7만 명의 회원들 중 405명의 대표단이, 동독의 자유주의 정당연합은 15만 명의 회원들 중 260명이 대표단으로 참석하였다. 오르트렙은 당의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35명의 수뇌부 중 동독 출신 자유주의자들은 모두 15명이 선출되었다.

④ 녹색당

동맹90/녹색당(Bündnis 90/Die Grünen)은 1993년 5월 14일에서 16일 라이프치히에서 개최되었던 통합전당대회에서 정식 연합정당으로 탄생하였다. 동맹90(Bündnis 90)은 1991년 9월 20일-21일 ‘평화와 인권단체’(Initiative Frieden und Menschenrechte, IFM), 민주주의 지금(Demokratie Jetzt), 신포럼(Neues Forum)의 일부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들 세 집단은 기본적으로 정치에 대한 윤리적인 접근방법, 가치표현, 중심적인 주제 등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때문에 1990년 가을 선거를 위해 신포럼, 민주주의 지금, 평화와 인권단체 그리고 구 동독의 녹색당(Grünen)이 정당 명부 결합을 하였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었다.²⁹

특히 구 동독에서의 녹색당은 의회주의적 생각을 명확히 하여 설립되어 정당조직도 신속하게 구성하였다. 그리고 주협회 다섯 개 중 네 개의 협회가 1990년 12월 2일 시행된 연방의원 선거 다음 날 서독 녹색당의 연방협회에 가입하였는데 이 시기를 선택한 것은 동독 협회를 서독에서 인수한다는 표현과 관련된 의미를 없애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1991년 9월 정당으로서의 동맹90이 설립된 이후 녹색당과 특히 동맹90의 경쟁적인 상황을 없애기 위한 구상의 일환으로 통합당 형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동맹90의 일부에서는 생태민주당과의 협력을 주장했다. 그러나 수적으로 열세한 동맹90이 당원수가 많은 녹색당과 통합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견들 간의 논의를 통해 결국 1992년 11월 23일 동맹90의 지도부 위원과 녹색당의 연방대표 사이에 연합합의서를 체결하였고, 1993년 1월 17일 승인되었다.³⁰ 이후 5월 통합전당대회를 통해 정식연합정당이 되었다. 그러나 초기부터 당 내에는 노선갈등이 잠재해있었다. 이러한 노선 갈등은 서

²⁹ 위의 책 pp.272-273.

³⁰ 위의 책, p.276.



독을 비롯해 동독의 동맹90-녹색당에 남아있는 것으로 당을 시민운동으로 보는 입장과 정당으로 보는 입장 사이에서 야기되는 것이었다. 또 다른 잠재적 갈등은 동맹90과 동독에 있는 녹색당 사이에서 그리고 서독 녹색당과 동독 녹색당 또는 동맹90 사이에서 발생하였다. 마지막으로 녹색당의 현실파와 근본주의파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 또한 존재했다.

3. 사회주의통일당의 변화

앞에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1989년 동독에서 있었던 일련의 평화혁명의 여파로 10월 18일 사회주의통일당의 서기장이었던 호네커와 그의 측근 당 간부들이 물러났으며 12월 동독의 인민의회는 사회주의통일당의 지도적 역할을 규정한 헌법을 삭제하였다. 이후 크렌츠(E. Krenz)가 호네커를 이어 당서기장으로 취임하였으나 계속되는 사회주의통일당의 부패 소식과 민을 향한 대안 제시의 부족으로 인해 12월 변호사 출신의 기지(Gregor Gysi)를 중심으로 새롭게 당 지도부를 선출하면서 당의 명칭을 사회주의통일당-민사당(SED-PDS)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후 사회주의통일당을 삭제하고 민사당으로 당명을 다시금 변경해 1990년 3월 18일 국민의회선거에서 66개의 의석을 차지하면서 기민련과 사민당에 이어 제3당이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과정에서 먼저 사회주의통일당이 새로운 정당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은 결코 사회주의를 부정³¹하는 것이 아니었음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무엇보다 먼저 1989년 12월 16일 전당대회 토론회의 연설문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연설문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³¹ 그러나 스탈린주의와의 완전한 단절을 주장하고 있다. 1989년 12월 16일 전당대회에서의 강연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약된다. “호네커의 정치국이 권력을 남용하고 스탈린주의의 많은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스탈린주의가 붕괴된 것이다. 스탈린주의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끼친 영향을 역사적으로 고찰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역사적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주의를 실현시키려 했던 동지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파시즘 이후 독일 민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 전개과정에 대해서도 역사적 고찰이 필요하다(문서번호 4).

첫째, 동독에서의 사회주의는 불법적으로 실현된 스탈린주의로 인한 문제에 부딪혔지만 그럼에도 동독사회는 사회주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동독에서의 사회적 업적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그러면서도 새로운 당의 강령은 무에서 창조될 수 없는 것으로 동독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고려에 있어 중요한 점이 바로 동독에서의 10월 평화혁명임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또한 동시에 당의 강령과 정책은 노동자와 농부의 이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대변해야 하며 마르크스와 레닌의 이론을 통해 사람들의 실제적인 관심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위해 더욱 현대화되어야 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셋째 연설문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 내용은 크게 8가지로 요약된다. ① 국내 경제의 세계경제로의 개방, ② 생태계 균형의 복구와 유지, ③ 생태, 건강, 사회 등을 고려하여 소비 및 삶의 양식 형성하기, ④ 향상된 경제 수익성, ⑤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는 메커니즘에 관한 경제규제, ⑥ 사회민주주의로서의 진정한 민주정치, ⑦ 서양 경제 질서의 기능 메커니즘으로부터 자국 민족의 보호, ⑧ 인간 개인성의 자유로운 계발이다.³² 결국 사회주의통일당이 주장하는 사회주의는 스탈린주의자들에 의해 오용된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은 1989년 12월 17일 결정된 사회주의통일당-민사당의 임시강령에 명확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당 강령은 그 첫 시작이 “본 당은 마르크스 사회주의당이다”라고 시작하고 있다.³³ 즉 당의 이론적 기초는 마르크스주의로 이를 바탕으로 평화, 연대, 환경보호, 사회 정의,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적 다원주의를 추구하며 근본적인 목적은 동독의 신 인

³² (문서번호 3).

³³ (문서번호 8).



도적 민주사회주의이고 이윤 추구 경제, 착취와 행정적, 관료적 사회주의를 넘어서며 사회주의 법치국가로서의 동독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당 강령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³⁴

사회주의통일당-민사당의 강령에는 ‘당의 이론적 기초로서 마르크스주의로서 여타의 정신적, 정치적 동향의 모든 이론과 개념상의 동력을 창조적으로 활용한다’³⁵고 밝히면서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지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후 1990년 2월 25일 당명을 민주사회당으로 변경한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당 강령에는 당의 이론적 기초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민주사회당의 당 강령은 크게 3가지 주제로 나뉘지는데 그 첫 번째에 해당하는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에 구체적으로 자신들이 계승하는 사람들이 직접 명시되어 있다.³⁶ 또한 민주사회당은 중앙집권주의와 스탈린주의는 사회주의에 불명예를 안겨준 것으로 설명하면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본주의가 갖는 효율성과 세계 문명을 풍족하게 만드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평화, 환경보호, 그리고 사회적 정의를 보장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장경제사회, 약자를 위한 보호/원조 등을 자신들의 목표로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³⁷

4. 동서독 정당 통합의 특징

1989년 여름 이후 평화혁명을 거쳐 1990년 통일에 이르기까지 1년 정도의

³⁴ (문서번호 8).

³⁵ (문서번호 8).

³⁶ “우리는... 칼 마르크스(Karl Marx), 프리드리히 엥겔스(Friedrich Engels), 빌헬름 립크네히트(Wilhelm Liebknecht), 아우구스트 베벨(August Bebel),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Eduard Bernstein), 칼 카우츠키(Karl Kautsky), 로사 룩셈부르크(Rosa Luxemburg), 칼 립크네히트(Karl Liebknecht), 블라디미르 I. 레닌(Wladimir I. Lenin) 그리고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를 계승한다.”(문서번호 9).

³⁷ (문서번호 9).

짧은 기간은 동독의 정당체계가 사회주의통일당 일당에 의해 지배되는 비경쟁적 체계에서 민주적인 다원주의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이었고 동시에 통일된 독일의 정당 체계로 단일화하는 과정이라 하겠다.

이러한 변화는 네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첫 번째 단계는 동독에서 사회주의통일당(SED)에 의한 일당 지배 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으로 인한 위기라 할 수 있다. 이 위기의 출발점은 1989년 동독에서 실시된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와 동독주민들의 동독탈출에서 시작되어 동독 국내에서 다양한 이해를 갖은 사람들이 정치세력화하며 정당 또한 새롭게 자신들의 진로를 모색하는 시기로 대체로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 전까지의 시간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 1990년 3월 18일 동독에서의 첫 자유선거가 실시되기까지의 시기를 의미한다. 이 시기는 각 정당들이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사회주의통일당과 명확한 거리를 두고 새롭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사회주의통일당은 사회주의통일당-민사당으로 당명을 변경하고 이후 한 번 더 민사당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스탈린주의적인 사회주의 정당이 아닌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해 신 인도적 민주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였다. 동독 기민당은 기독교에 바탕을 둔 사회주의적 노선과 비사회주의적 노선 간의 갈등 속에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였다. 또한 동독 내 각 정당과 사회단체가 원탁회를 중심으로 모여 스스로 정부와 의회의 기능을 수행한 시기이다.

세 번째 단계는 동독에서 3월 18일 인민의회 선거를 계기로 서독의 정당들이 동독에서 형성되는 정당체계에 영향을 강화하면서 의회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또한 동독의 정당과 시민운동 조직이 정치적 입장과 조직의 목적 및 활동 방식에서 점차 다원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다원화된 동독의 정당과 저항 운동 조직들은 점차 정치력을 상실하고 서독 정당들의 영향 아래 재편·집중화되기 시작했다. 3월의 인

민의회 선거에 서독의 정당들이 개입함으로써 동독의 인민의회 선거는 사실상 서독의 정당 정치로 변하여 서독 정당들의 자금과 조직력, 캠페인 전략과 유명 정치인들의 명성에 의해 지배되었다. 서독 정당들, 예를 들어 기민당이나 자민당은 동독의 자매정당들이 위성정당으로서 활약한 것에 대해 계속적으로 의구심을 갖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독 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가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동독의 선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동독 시민들의 통일에 대한 입장은 더욱 분명해져서 3월 18일 인민의회 선거는 내용 면에서 서독 마르크를 동독으로 유입하는, 즉 화폐 통합이 주요 이슈가 되었는데, 지도도에서 열세를 면하지 못하던 기민-기사련의 콜 수상은 선거 5주 전 화폐 통합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고, 선거 사흘 전 화폐 통합 시 동서독 마르크의 교환율 1:1을 발표하여 선거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2월 초 약 과반의 지지를 받던 사민당은 21.9%를 득표한 반면, 보수 연합 세력인 독일연합(Allianz für Deutschland: AfD)은 48%의 지지를 얻어 이후 기민-기사련은 통일 정책에서 주도권을 확보했다. 이 선거에서 민주사회당(PDS) 16.4%, 자유민주동맹(BDF) 5.3%, 동맹90 2.9%, 독일민주농민당 2.0%를 득표했다.³⁸

네 번째 단계는 1990년 인민의회 선거 이후 11월 통일 후 처음 맞는 연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서독 정당 체계가 동독의 정당 체계를 흡수, 통합하면서 단일한 하나의 정당 체계로 되는 시기이다. 인민의회 선거 후 구성된 대연정 정부가 4월 12일의 연정 합의에서 서독기본법 23조에 따라 동독이 서독으로 편입되는 방식으로 통일하기로 합의하고 5월 21일 화폐·경제·사회 통합 조약을 체결한 이후, 동서독 정당들의 통합을 위한 작업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1990년 8~10월 사이에 자민당, 사민당, 기민-기사련의 순서로 통합 당 대회가 열렸으며, 구 동독의 당 조직은 구 서독 정당에 흡수되는 방식으로 통합되었

³⁸ 송태수, 2006, “1989/90년 격변기 동독 내 서독 정당의 전략과 정책”, FES-Information-Series, Friedrich Ebert Stiftung, p.3

다. 통일되기 전에 녹색당을 제외한 동서독 정당의 통일이 완결되었다.³⁹

위의 네 가지 단계에서 나타나는 동서독 정당통합의 특징적인 요소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 격변기를 거치면서 동독에서는 서독의 지원 없이 자체적인 선거를 준비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서독 정당 후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과연 동독 사회에 민주주의적인 정당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었을까하는 점이다. 둘째 동독의 정당들은 스스로 위정정당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사회주의통일당으로부터 거리두기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당 내 민주주의적 개혁 등에 있어서는 미비한 상황이었다. 셋째, 동독 평화혁명에 주역들이었던 사회단체들은 사회주의통일당에 대한 비판에는 명확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동독사회의 발전 방향에 대한 비전의 제시가 부족하였고 정치적 경험 또한 부족한 상황에서 서독의 정당과 이합집산에 머무르는 한계를 넘지 못하였다.

동서독의 정당통합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서독 정당들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서독 정당들은 동독의 정당체계 확립에 안정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은 다른 한편 동독 정당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정체성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독일의 통일이 서독에 의한 동독의 흡수이듯이 정당 또한 동독의 정당, 사회단체들이 서독의 정당에 흡수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결국 동독 주민들의 이해를 대변해줄 정치세력의 부재로 연결되고 사회적 통합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
³⁹ 위의 책, p.3

통일 후 동서독 정당지형

앞의 3장에서는 베를린 장벽 붕괴 전후부터 1990년 12월 통일 이후 첫 연방선거 때까지 동독의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어떠한 이합집산의 과정을 거쳐 서독의 정당들과 통합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통일 후 구 동서독지역에서의 정당구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그 과정과 원인 그리고 양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어 동서독 정당통합에 대한 다양한 평가들을 소개함으로써 다면적으로 통일 후 동서독 정당지형의 이해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다.

제1절 통일 후 동서독 정당지형 변모과정

1990년 10월 3일 동서독이 공식적으로 통일된 후 동서독 정당 간의 통합을 가속화시킨 사건은 1990년 12월 2일 전독일 연방의회 선거의 확정이었다. 통일 후 연방의회 선거에서 구 동독지역에도 서독 선거법이 적용되기로 합의되면서 동서독 정당 간 통합이 가속화되었고 이를 통해 정치적 지형의 변화가 눈에 띄게 촉발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연방하원 선거 결과 구 서독과 구 동독지역 간의 정당지지는 통일 전에 비해 크게 변모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원동력은 ‘구 동독이라는 정체성’에 기반을 둔 지역성 요인과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인 사회경제적 재편 작업과 이에 적응하는 새로운 정치적 대응 과정에서 형성된 이데올로기 요인을 꼽을 수 있다.

1. 정당 지형의 변화: 연방하원 선거 결과

통일 후 정당 지형의 전반적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1990년부터 2009년까지 연방하원 선거 결과를 전체와 구 동서독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 <표 1-10>과 같다.

표 1-10) 통일독일 연방의회 선거결과(단위: %)

| 연도 | 기민/기사련 | 사민당 | 자민당 | 동맹90/녹색당 | 민사당/좌파당 | 기타 |
|-----------------|--------|------|------|----------|---------|-----|
| 1990 | 43.8 | 33.5 | 11.0 | 5.1 | 2.4 | 4.2 |
| 1994 | 41.5 | 36.4 | 6.9 | 7.3 | 4.4 | 3.5 |
| 1998 | 35.1 | 40.9 | 6.2 | 6.7 | 5.1 | 6.0 |
| 2002 | 38.5 | 38.5 | 7.4 | 8.6 | 4.3 | 2.7 |
| 2005 | 35.2 | 34.2 | 9.8 | 8.1 | 8.7 | 4.0 |
| 2009 | 33.8 | 23.0 | 14.6 | 10.9 | 11.9 | 5.8 |
| 구 서독지역(서베를린 포함) | | | | | | |
| 1990 | 44.3 | 35.7 | 10.6 | 4.8 | 0.3 | 4.3 |
| 1994 | 42.1 | 37.5 | 7.7 | 7.9 | 1.0 | 3.8 |
| 1998 | 37.1 | 42.3 | 7.0 | 7.3 | 1.2 | 5.1 |
| 2002 | 40.8 | 38.3 | 7.6 | 9.4 | 1.1 | 2.8 |
| 2005 | 37.5 | 35.1 | 10.2 | 8.8 | 4.9 | 3.5 |
| 2009 | 34.6 | 24.1 | 15.4 | 11.5 | 8.3 | 6.1 |
| 구 동독지역(동베를린 포함) | | | | | | |
| 1990 | 41.8 | 24.3 | 12.9 | 6.2 | 11.1 | 3.7 |
| 1994 | 38.5 | 31.5 | 3.5 | 4.3 | 19.8 | 2.4 |
| 1998 | 27.3 | 35.1 | 3.3 | 4.1 | 21.6 | 8.6 |
| 2002 | 28.3 | 39.7 | 6.4 | 4.7 | 16.9 | 4.0 |
| 2005 | 25.3 | 30.4 | 8.0 | 5.2 | 25.3 | 5.8 |
| 2009 | 29.8 | 17.9 | 10.6 | 6.8 | 28.5 | 6.4 |

자료: <http://www.bundeswahlleiter.de>

통일 전 서독은 거대 양당인 기민/기사련과 사민당을 중심으로 자민당

과 녹색당이 연정의 파트너로 참여하는 온건 다당제(1949) 혹은 양당 중심제(1953-1987)였다. 이러한 전통적인 구도는 <표 1-10>에서처럼 통일 이후 구 서독지역에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통일 전 동독은 사회주의 통일당(SED)이 국가정당으로서 사실상 독재체제를 구축하여 다른 블록정당들은 대중 동원기제로 기능하는 비경쟁적 정당체제를 유지했다. 그러나 통일 후 서독식 경쟁 정당체제 전환과정에서 사회주의통일당은 해산되어 민사당으로 재 창당되었고, 다른 블록정당 대부분은 서독의 정당에 흡수됨으로써 독일 전반에 걸쳐 구 서독 정당들과 민사당이 각축하는 구도가 형성되었다.⁴⁰

그러나 통일독일 전체로 보면, 구 동독지역의 주민수가 전체의 약 1/5에 불과해 민사당의 점진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정당체제는 2000년대 초반까지 기민/기사연과 사민당을 중심으로 자민당과 녹색당 및 민사당이 제3당을 두고 각축하는 구 서독 정당체제와 유지되는 모양새를 띄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1-10>에서 보듯이 1990년에는 사민당과 기민/기사연의 득표율이 저조해 다당제를 보였으나, 1994년 이후 양대 정당의 득표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2002년까지 양당중심제로 복귀됐다. 그러나 2005년부터 민사당뿐만 아니라 자민당과 동맹90/녹색당의 지지율이 점차 상승한 반면 기민/기사연과 사민당의 지지율은 낮아지면서 정당의 파편화가 심해짐에 따라 다시 다당제로 전환되었다. 심지어 2009년에는 극단적 다당제로 전환될 가능성까지 비치고 있는 형편이다.⁴¹

한편 이러한 선거결과를 구 서독지역과 구 동독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구 서독지역은 통일독일 연방 전체와 유사한 흐름을 나타내는 반면, 구 동독지역에서는 여전히 변동이 심한 상황에서도 연방 전체 및 구 서독과는

⁴⁰ 정병기. 2011. 통일독일 구 동독지역 정당체제: 연방주별 특수성이 반영된 새로운 다양성. 한국정치학회보 45(4), pp.323-324.

⁴¹ 위의 책 324.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중 가장 도드라지는 부분은 민사당/좌파당의 성장이다.

먼저 구 서독지역은 독일 전체와 마찬가지로 2005년 이후 기존의 양당 중심제에서 다당제로 전환했으며, 구 동독지역은 민사당의 급성장을 통해 삼당제(1994, 1998, 2005)와 다당제(1990, 2002, 2009) 사이에 부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나 사민당의 분당으로 인한 사민당 지지율의 급락과 1998년 집권기의 일시적 상승을 논외로 하면 양대 정당의 점진적인 약화와 제3정당들의 강화추세가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⁴²

반면 구 동독지역에서는 통일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한 사민당의 지지율이 2002년을 기점으로 꺾이고, 통일 효과의 반작용으로 기민연 지지율이 초기에 압도적 우위를 보이다가 이후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지속되었는데 2009년 선거에서 다시 상승하는 등 상당한 등락을 보였다. 반면 민사당 지지율은 2002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으며, 동맹90/녹색당과 자민당도 구 서독지역과 달리 부침을 거듭하는 장기적 추세를 보였다.⁴³

2. 민사당의 형성과 발전

구 동독 체제정당의 후신인 민사당은 통일독일 정당체제 변화의 핵심요인이라는 점에서 상세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구 동독지역을 중심으로 출발하였지만 결국 중앙무대에서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정치세력화에

⁴² 실업급여와 생계지원을 사실상 축소하는 법안인 제4 하르츠법(Hartz IV) 등 연방 적녹연정의 정책에 반대해 탈당한 사민당 좌파와 노동조합활동가들이 2005년 선거대안당(WASG)을 창당했고 이어 2007년 민사당과 통합해 좌파당(Die Linke)을 창당했다. Neugebauer, Gero und Stöss, Richard, 2008. "Die Partei Die Linke. Nach der Gründung in des Kaisers neuen Kleidern? Eine politische Bedarfsgemeinschaft als neue Partei im deutschen Parteiensystem." Oskar Niedermeyer, Hg. Die Parteien nach der Bundestagswahl 2005, 151-199.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위의 책 325p.에서 재인용.

⁴³ 정병기. 2011. 통일독일 구 동독지역 정당체제: 연방주별 특수성이 반영된 새로운 다양성. 한국정치학회보 45(4), pp.326.

성공하여 현재 좌파당(Die Linke)의 모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통일 이후 치러진 연방하원 선거에서 구 동독 집권정당인 사회통일당(SED)의 후신으로 처음 등장했던 민사당(PDS)은 약 20년 사이 괄목할 만한 발전상을 나타냈다.

1990년 연방 전체에서 2.4%를 득표하였으나 구 동독지역에서 11.1%를 차지하는 등 구 동독 정당으로 출발하였으나 이후 좌파당으로 통합창당하면서 참여한 2009년 선거에서는 연방 전체에서 11.9%를 그리고 구 동독지역에서는 28.5%를 획득하는 등 강력한 정당으로 부상한 것이다.⁴⁴ 이는 통일 이후 20년 사이 연방전체에서는 약 5배, 그리고 구 동독지역에서는 약 3배 가까운 괄목할 만한 지지율의 상승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점은 통일독일의 전반적인 정치지형을 바꿔놓기에 충분했다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동인을 살펴보는 것은 통일과정의 정당통합 다이내믹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민사당은 독일통일의 와중에서 구 동독의 국가지배정당이었던 ‘사회주의통일당(SED)’의 후신정당으로 창설되었는데 통일 직후 민사당은 당원의 급격한 감소와 선거에서의 참패 등으로 인해 당의 존속 자체가 불투명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 이 시기에 정당전문가들은 물론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도 민사당이 조만간 사라지리라고 생각하였다. 즉, 1990년 12월 최초의 전체 독일 연방의회 선거에서 민사당은 제2투표에서 총 2.4%의 득표율(동독지역에서는 11.1%, 서독지역에서는 0.3%)을 획득하여 연방의회에 진출가능성은 없어 보였다. 그러나 연방헌법재판소의 5% 제한 조항 완화 적용 결정으로 인해 민사당은 연방의회에 가까스로 진출할 수 있었다.⁴⁵

⁴⁴ 좌파당(Die Linke)은 1998년 이후의 슈뢰더 적-녹연정의 개혁정책, 이른바 신중도 노선(Neue Mitte)으로 더욱 어려움에 처한 사회 취약 계층을 대변하기 위해 분산되어 있던 동서독지역의 ‘좌파’ 정치세력들이 통합되어 탄생한 전국 정당이다.

⁴⁵ 5% 제한 조항을 40여 년 동안 전혀 다른 정당체제를 가졌던 구 동독지역에까지 확대 적용할 경우 구 서독의 군소정당과 구 동독의 정당들에게 의회진출에 불리한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정당

다른 한편, 민사당은 1991년 함부르크주 의회선거에서 0.5% 득표로 참패한 이후 서독에 뿌리내리려는 적극적인 시도를 하지 않았는데,⁴⁶ 1991년 6월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서독에서는 단지 0.5%, 동독에서는 6.5%만이 민사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⁷

민사당에 대한 이러한 저조한 지지율은 당원의 급격한 감소에서도 나타나는데, 1990년 12월 민사당 당원 수는 약 28만 5천 명이었으나, 1991년 5월에는 약 24만 명,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는 약 17만 3천 명으로 1년 사이에 10만 명이 감소하였다. 결론적으로 1991년 말 민사당은 일반 여론뿐만 아니라 당 내 분위기에서도 감지되듯 붕괴직전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통일 이슈가 지배한 1990년 선거에서 민사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아성으로 여겨온 구 동독지역에서조차도 기민련(CDU, 41.8%)과 사민당(24.3%)은 물론 군소정당 자민당(FDP, 12.9%)에도 뒤진 11.1%의 득표율에 머물렀는데 당시 구 서독지역에서의 득표율은 0.3%에 그쳤다.

한편 4년이 지나 민사당은 1994년 통일 초창기의 흥분이 가라앉은 총선에서 구 서독지역 1.0% 그리고 구 동독지역 19.8% 등 양 지역에서 모두 득표율의 급격한 상승을 가져오게 되어 연방 전체로는 4.4%의 득표율을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4년 후인 1998년 총선에서도 지속되었는데, 민사당은 구 서독지역에서 1.2%를, 그리고 구 동독지역에서는 21.6%를 나타내 연방전체로는 총 5.1% 득표에 이르렀다.

간의 기회균등을 해친다는 이유로 연방헌법재판소는 구 서독과 동독을 분리하여 5% 제한 규정을 적용할 것을 판시하였다. 이규영. 2000. “독일 의원내각제와 제도적 안정 운영”. 박호성, 이종찬 외 지음. 한국의 권력구조 논쟁 II: 권력구조의 운영과 변화. 풀빛, p.273. 김경미. 2002. 독일통일과 정당체제의 변화: 민주사회주의당(PDS)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0집, p.33에서 재인용.

⁴⁶ Neugebauer, Gero und Stöss, Richard, 2008. “Die Partei Die Linke. Nach der Gründung in des Kaisers neuen Kleidern? Eine politische Bedarfsgemeinschaft als neue Partei im deutschen Parteiensystem.” Oskar Niedermeyer, Hg. Die Parteien nach der Bundestagswahl 2005, 151-199.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p.47.

⁴⁷ 김경미. 2002. 독일통일과 정당체제의 변화: 민주사회주의당(PDS)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0집, p.33.

이렇듯 통일 직후인 1990년 선거와 큰 차이를 보이는 1994년과 1998년 선거결과에 대해 통일 후 동서독지역의 격차 문제와 통일 당시 약속된 사항들이 지체되는 것에 대한 구 동독지역민들의 실망감과 연계된 투표성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⁴⁸

한편 민사당은 1993년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제3차 전당대회 제1차 회의에서 제정한 당의 강령을 통해 현 사회의 문제로 경제적, 사회적 몰락과 동독의 정치적 소외, 민주주의 해체 그리고 제국주의적 경향을 거론하면서 구 동독지역을 대변할 것임을 공식화하게 되는데, 그 배경에는 통일 당시의 약속과 달리 지체되는 사회경제적 통합 과정이 구 동독주민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큰 현안으로 등장했기 때문으로, 강령에 의하면 동독의 산업과 농업, 과학과 문화가 파괴되었고 동독 사람들의 기본권은 제한되었다는 피해의식에서 비롯되고 있다.⁴⁹

즉, 구 동독지역의 실업률은 구 서독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1994년 말까지 중지부를 찍기로 약속한 임금동일화 과정이 계속 연기되는 등 통일 당시 희망에 부풀었던 구 동독민의 기대는 무참히 깨져 버렸다는 것이다. 결국, 이는 구 서독의 정치엘리트에 의해 주도되던 통일독일 현실 정치에 대한 반감이 그대로 표출된 바 그 결과는 구 동독 주민의 이해를 대

⁴⁸ 김면희. 2010. 통일독일의 정치지형 변화 연구: 정당체제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20(2), p.43. 이렇듯 통일 후 구 동독인들은 이전 동독에서의 생활에 대해 향수를 느낀다고 해서 유행한 단어인 오스탈기(Ostalgie: Ost+Nostalgie의 신조어로 동독에 대한 향수라는 뜻)라든지, 서독인들은 동독인을 비하하여 부르는 오씨(Ossi, 오스대고 게으른 동독놈) 혹은 동독인들이 서독인을 비하하며 부르는 베씨(Wessi: 거만하고 돈만 밝히는 서독놈)라는 신조어들이 등장하여 통일 이후 사회통합은 큰 문제로 제기되곤 하였다.

⁴⁹ 사회주의를 위한 대안적인 발전 방법으로, 관료주의, 첩보 기관, 무기 수출, 병역 의무, 이윤 창출 목적의 주택 민영화, 자본금 유출, 도심으로의 화물 운송을 반대하고, 직접적인 시민 참여, 동독과 서독의 평등한 삶의 수준, 노동, 주거, 교육 및 사회보장의 권리와 기본 보장, 낙태의 권리, 독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투표권, 난민을 위한 국경 개방, 이중 국적, 연방정부와 연방의회에 대립하여 동독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회 선출, 주 30시간 근무, 아동양육, 노인 요양 및 간병의 인정과 보상, 중소기업 장려, 학교 교육과 직업 교육에 대한 권리, 유치원 보육의 권리, 매년 10%의 국방 예산 삭감 등을 찬성한다고 밝히고 있다(문서번호 13).

변할 것을 선언한 민사당으로의 자연스러운 정치적 응집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⁵⁰

이러한 양상은 2002년 선거에서 잠시 주춤했으나 2005년과 2009년 팔목할 만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 민사당의 지지율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민사당은 2005년 구 서독지역에서는 4.9%를 그리고 구 동독지역에서는 25.3%를 얻어 연방전체에서는 8.7%를 차지하였고, 이어 2009년에는 구 서독지역 8.3%, 구 동독지역 28.8%의 득표를 통해 연방전체에서 11.9%를 득표하는 기염을 토했다.

한편 민사당과 좌파당의 약진에 대해 구 동독 정체성의 관점 외에 정당의 정체성과 직결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살펴볼 필요가 제기된다. 왜냐하면 좌파당의 탄생 배경은 전통적으로 노동세력을 비롯한 진보적 색채의 사민당과 녹색당의 틈새시장 즉 신자유주의적 경제 세계화 흐름에 대항하는 진영이었기 때문이다. 비록 기존 제도권의 ‘좌파’ 세력인 사민당의 신자유주의적 경제 세계화에 대한 ‘순응적’이고 ‘현실 가능한’ 영역 내에서의 실용주의적 선택이나 녹색당의 선명한 대응전략 부재와 대비하여 좌파당의 경우 달랐기에 좌파 정치세력의 분립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⁵¹

그러나 민사당은 라퐁텐(Lafontaine)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단체 및 노동조합들과의 연대를 통해 독일의 미래, 특히 소위 ‘독일병’ 해소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대응 전략의 일방적 추진에 제동을 거는 것을 주요 정책 목표로 내세우던 좌파당(Die Linke)과 2003년 10월 26일 제 8회 전당대회의 제 2회의 결의로 공동강령 제정을 통해 보조를 함께 했다.⁵²

⁵⁰ 김면희, 2010. 통일독일의 정치지형 변화 연구: 정당체제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20(2), p.44.

⁵¹ 위의 책 46p.

⁵² 좌파정당.PDS의 강령에 따르면, PDS를 동시대적 사회주의 정당으로 정립하며, 그 목적은 자기결정에 의한 연대적인 인간의 공동생활을 가능케 하는 사회의 변혁을 유도하는 것에 두며, 자유, 평등 및 연대와 같은 기본 가치는 사회의 강화된 민주주의에 의해 달성되어야 하며, 이의 핵심 문제

이러한 협력을 기반으로 결국 민사당은 사민당 전 대표였던 라퐁텐(La-fontaine)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단체 및 노동조합들과의 연대를 통해 독일의 미래, 특히 소위 ‘독일병’ 해소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대응 전략의 일방적 추진에 제동을 거는 것을 주요 정책 목표로 내세우던 좌파당(Die Linke)과 2005년 연방하원 선거에서 유력한 정치세력으로 응집되었다.⁵³

좌파당이 지향하는 방향은 종래 사민당의 실용주의 노선이 견지해온 신 자유주의적 정책에 반대하고, 시장경제 우위의 맹목적인 세계화에 저항하면서 성장과 아울러 분배를, 그리고 시장개방과 규제완화보다는 기존 사회안정망의 온전한 복구와 적극적인 국가와 사회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좌파당은 2005년 총선에 이어 2009년 총선에서 녹색당을 추월하는 기염을

.....

는 신자유주의인데, 그 이유는 신자유주의가 비연대적이고 탈 민주화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세계의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1세기 정보통신 기술이 세계화에 비판적이면서 다른 사회의 구조들을 서로 연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야 하며, 유럽연합도 미래에는 경쟁 구역에서 벗어나 세계 공동체의 집단적 안전을 최상의 목적으로 하는 국가들의 연합으로서 존재해야 할 것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어 정당 내부 정치의 목적으로 다음을 제시한다. 1) 국민 개인과 공동 권리의 확장/지방자치의 민주화/경제 민주주의/민주적인 세계질서, 2) 공동의 안전/시민갈등의 예방과 해결/제국주의적이고 호전적인 세계의 신질서에 반대하는 광범위한 동맹/포괄적인 탈군사와 군비축소, 3) 사회적 및 생태학적 규제/노조 요구 지원/공공투자/환경 친화적 기술 정책/공정과 과세/농업경제, 4) 생태계와 사회문제의 공동 해결/생활방식의 변화/환경 완화적 지역 경제순환/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 재생 에너지/지속가능한 교통정책, 5) 지역 단체 협약의 유지/주간 및 근로 노동시간 단축/생업 및 비생업 노동 간 전환에 대한 사회 보장/성별 평등/국내 시장 안정화/공공 및 공공 지원되는 고용/새로운 방식의 완전 고용, 6) 연대에 기초한 사회 국가와 퇴직 연금 제도의 변화/부가가치에 대한 고용주 납부의 관계/중증환자 치료 및 이종 의료체계의 민영화 반대/필요 중심의 기초 보장 도입, 7) 교육, 문화 및 정보에의 참여에서 사회 불평등 반대/교육 시스템의 공공 자금 조달, 민영화 반대/시대에 맞는 대학 개혁/국가 문화 진흥 획득, 8) 사회 생태학적 개혁을 위한 모델 지역에 대한 새로운 주들의 확장/더 효과적인 경제 진흥/임금, 월급, 연금 및 노동시간에서 동독인들에 대한 지속적 차별 반대/기회로서의 유럽연합의 동부로의 확장(문서번호 18번).

⁵³ 김면화. 2010. 통일독일의 정치지형 변화 연구: 정당체제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20(2), pp.15-20. 좌파당.PDS의 2005년 총선거 공약은 1) 국민 모두를 위한 일자리 보장 및 사회적 기본법 개선과 보충, 2) 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교육 범위 확대, 3) 독일 내 법률, 제도적 기초가 부실한 구 동독지역과 구 서독지역을 위한 새로운 법률, 4) 환경 보호, 미래 보장, 5) 시위에 대한 진지한 대응, 포괄적인 민주주의의 도입, 6) 위로부터의 재분배: 연대적 납세 시스템 구축, 7) 평화로운 삶 추구, 세계화 확장 등으로 제 9회 전당대회에서 두 번째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다(문서번호 19).

토했고, 11.9%의 득표율로 2005년에 비해 의석수도 22석이나 증가하였다.⁵⁴

좌파당의 세력 확장은 구 동독지역에 국한되지 않았는데, 아래 <표 1-11>에서처럼 2009년 총선에서 좌파당은 구 서독지역에서도 상당한 득표율을 보이는 등 전국적으로 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브레멘의 5.8%나 니더작센의 4.3% 성장은 구 동독지역의 증가율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높은 경향성을 보여준다. 아울러 독일 현대 정치에서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보여 온 바덴-뷔르템베르크와 바이에른주에서도 각각 7.2%와 6.5%를 획득하여 독일 정치에서 심리적 한계선으로 여겨져 온 5%의 벽을 넘었다. 해당지역들에서 2005년 총선에 비해 각각 3.4%와 3%를 더 획득함에 따라 좌파당은 명실상부한 전국 정당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고 평가할 만하다.⁵⁵

표 1-11) 2009년 총선에 나타난 좌파당의 주별 득표율 및 증가율(2005년 대비)

| 주명 | 득표율(%) | 증가율(%) | 주명 | 득표율(%) | 증가율(%) |
|--------------|--------|--------|-------------|--------|--------|
| 작센-안할트 | 32.4 | 5.8 | 함부르크 | 11.2 | 4.9 |
|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 29.0 | 5.3 | 라인란트-팔츠 | 9.4 | 3.8 |
| 튀링겐 | 28.8 | 2.7 | 헤센 | 8.5 | 3.2 |
| 브란덴부르크 | 28.5 | 1.9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 8.4 | 3.2 |
| 작센 | 24.5 | 1.7 | 니더 작센 | 8.6 | 4.3 |

⁵⁴ 김면희, 2010. 통일독일의 정치지형 변화 연구: 정당체제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20(2), p.47. 좌파당의 창립과 발전 과정에서 슈뢰더의 신자유주의에 경도된 신중도노선에 실망한 시민당 당원들은 시민당을 떠나 선거대안 노동과 사회적 정의(WASG, Wahlalternative Arbeit und soziale Gerechtigkeit)를 창설하였고 이후 2005년 연방의회 선거에 민사당과 함께 좌파. 민사당(die Linke.PDS)이라는 선거연합을 구성하여 8.7%의 지지율을 획득한 뒤 2007년 6월 16일 선거대안(WASG)과 PDS는 좌파당(Die Linke)으로 통합되었다. 2007년 3월 2일부터 25일 양일 간 WASG(노동사회정의당-선택의 대안)은 전당대회 결의안(강령적 기준-좌파정당 강령에 따른 창립문서)을 통해 WASG와 좌파정당.PDS가 새로운 정당으로 출발하기 위해 완성한 공통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새 좌파정당을 창립하기 위한 공통점으로 좌파 통합적, 민주적, 사회적, 생태적, 여성 해방주의적이며, 동시에 가부장적이지 않고 개방적, 다원적, 투쟁적, 관용적, 반인종차별 주의적이고 반파시스트적이며 철저히 평화정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 유럽 좌파 중 하나이며 사회운동과 평화운동에 속함을 밝히고 있다(문서번호 22).

⁵⁵ 김면희, 2010. 통일독일의 정치지형 변화 연구: 정당체제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20(2), p.47.



| | | | | | |
|------|------|-----|------------|-----|-----|
| 자르란트 | 21.2 | 2.7 | 슐레스비히-홀슈타인 | 7.9 | 3.3 |
| 베를린 | 20.2 | 3.9 | 바덴-뷔르템베르크 | 7.2 | 3.4 |
| 브레멘 | 14.3 | 5.8 | 바이에른 | 6.5 | 3.0 |

자료: Berg, Stefan & Deggerrich, Markus and Hornig, Frank. 2009, "Das Vergiftete Erbe," Der Spiegel 43/2009, p.23. Stefan Berg/Markus Deggerrich/Frank Hornig, p.23, 김면회. 2010. 통일독일의 정치지형 변화 연구: 정당체제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20(2), p.48에서 재인용

이렇듯 구 동독지역의 지역성에 기초한 좌파당은 경제적 세계화의 반작용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에 대항하는 시민사회와의 강한 연대를 통해 세력화해 오고 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대로 독일 현실정치 영역에서 계속적인 발전을 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독일 정치지형을 위협하는 새로운 정치지형으로의 변모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⁵⁶

이렇듯 통일 초기 약화된 세력을 만회하면서 점차 세력을 확장시켜간 기저에는 당에 우호적인 환경변화와 더불어 이를 정확하게 포착한 정당 스스로의 자구책 추진을 통한 득표율 확보의 계기를 마련했던 것이 주요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대외환경 변화 측면에서, 1991년에서 1992년 사이에 동독에서뿐만 아니라 독일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역전되기 시작하였는데 반전의 계기를 제공한 것은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회의적 시각의 급속한 확산이었다.⁵⁷ 특히 1992년 초부터 동독에서의 경제건설이 예상과는 달리 지연되고 있음이 분명해 졌으며, 그밖에도 동서독 양 지역에서 통일에 따른 사회 및 문화적 갈등과 환멸이 나타났고 이러한 상황은 민사당에게 유리한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했다.⁵⁸

.....

⁵⁶ 김면회. 2010. 통일독일의 정치지형 변화 연구: 정당체제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20(2), p.48.

⁵⁷ 위의 책 p.33.

⁵⁸ 기민련의 경우 통일 과정에서 과거 동독지역 정당들과 당원들을 흡수한 결과 1991년에는 2년 전에 비해 약 10만 명 증가한 총 935,676명의 당원 수를 보유하게 되었으나 1999년에는 다시금 820,229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큰 낙폭은 통일 후 동서 간의 극한 정치적·

또한 민사당은 생존위기에 맞서 스스로 자구책 마련을 통해 새로운 탈바꿈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현 사회 문제로 거론하는 경제적, 사회적 몰락과 동독의 정치적 소외, 민주주의 해체 그리고 제국주의적 경향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전국 정당으로의 도약을 결정하였다.⁵⁹

1992년 6월 베를린 지역선거에서 민사당은 처음으로 득표율에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고,⁶⁰ 이를 계기로 점차 동독의 이익정당으로 전환하게 되며 동독인들의 이해와 정체성을 대변하게 되었는데 1992년 말 민사당은 독일 정당체제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굳히게 되고, 1993년 12월에 실시된 동독지역의 브란덴부르크주 지역선거에서는 21%라는 역대 최고기록을 달성하기도 하였다.⁶¹ 특히 1994년은 민사당에게 정당으로서 존립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는데, 우선 연방의회선거에서 동독지역에서 19.8%의 득표율을 보였고, 동베를린에서 4개의 직접의석수를 획득하면서 연방의회에 재진출하였다.⁶²

또한 6월에 실시된 유럽의회선거에서 독일 전체로 4.7%를 획득, 자민당을

경제적·사회적 대립 및 갈등의 상황과 특히 구 동독지역에서 가졌던 통일의 기대와 거품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Oscar, W. Gabriel und Niedermayer, Oskar 2001, "Parteimitgliedschaft: Entwicklung und Sozialstruktur" in Oscar W. Gabriel and Oskar Niedermayer and Richard Stöss Parteiendemokratie in Deutschland (Bonn, Opladen). pp.277-280. 이경호, 2005. 독일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고찰. 국제정치논총 45(4), p.319에서 재인용.

⁵⁹ 강령을 통해 DDR이 실업을 일소하고 빈곤을 폭넓게 극복하며 교육과 보건, 문화 부문에 있어서 기회 균등과 포괄적인 사회보장 제도 그리고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권리를 도입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회주의적 시도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지는 못하였음을 시인하고, 이러한 원인으로 스탈린주의가 사회주의를 왜곡, 손상시킨 주범으로 지목하고 사회주의적 혁신을 주창하게 되는데, 이때 사회주의는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고, 평화와 평등, 연대와 자주적 해방, 정의와 환경 보호를 옹호하는 운동으로 규정했다(문서번호 13).

⁶⁰ 민사당은 베를린 전체로는 11.3%, 동베를린에서 29.7% 득표하여, 1990년 베를린 주의회 선거 득표율 보다 전체로는 2.1%, 동베를린에서는 6.1%의 상승을 보였다. 김경미, 2002, 독일통일과 정당체제의 변화: 민주사회주의당(PDS)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0집, p.34.

⁶¹ 위의 책 p.34.

⁶² 그러나 연방 전체로는 4.4%를 획득하여 5% 제한조항으로 인해 원내교섭단체 구성은 실패하였다. 위의 p.34.

넘어 제4당의 위치를 차지하였으며 동독지역의 경우 거의 21%에 달하는 득표율로 명실 공히 제3당이 되었다. 직후 실시된 동독지역의 작센-안할트주 의회 선거에서는 1990년보다 9.9%가 상승한 19.9%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의회선거에서는 7% 상승한 22.7%를 차지하는 등 파란을 일으켰으며 이러한 선거결과와 함께 주정부 구성에 있어 민사당의 참여 논의가 촉발되었다.⁶³

마침내 1998년 연방의회 선거에서 ‘5% 제한’ 장애를 넘어섬으로써 연방의회 내에 명실 공히 교섭단체를 형성하게 되었다. 또한 주 차원에서 민사당은 동독지역의 주들에서는 제3당의 위치를 굳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1999년 9월에 실시된 튀링겐과 작센의 주의회 선거에서는 사민당을 제치고 기민련에 이어 제2당이 되었다.

이렇듯 민사당의 급속한 발전에 대한 원인으로 지지기반의 다원화에 주목한 연구들은 1994년과 1998년 연방선거에서 민사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의 스펙트럼이 넓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1990년 연방선거에서 민사당에 투표한 유권자의 80% 이상이 1994년 연방선거에서도 표심을 이어가 지지기반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과 이에 덧붙여 젊은 유권자와 고등교육을 받은 상대적으로 고소득 전문직종 및 자유업 종사자들 중에서 민사당 지지 경향이 출현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⁶⁴ 1999년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3가 민사당이 동독주민의 이익을 가장 설득력 있고 강력하게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답변하고 있는 등 비록 독일 정당체제에서 민사당의 위치가 아직 확고한 것은 아니나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하나

⁶³ 작센-안할트주의 경우 민사당의 관용 하에 34.0%의 사민당과 5.1%의 동맹90-녹색당의 소수연합정부가 형성됨으로써 민사당이 직접 주정부에 참여하지는 못했으나 주정부 참여 권력으로 최초로 인정을 받기에 이른다. 위의 책 p.34.

⁶⁴ Falter, Jürgen W., & Markus Klein. 1994. “Die Wähler der PDS bei der Bundestagswahl 1994: zwischen Ideologie, Nostalgie und Protest.”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51-52. p.22.

의 국민정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⁶⁵

3. 정당지형의 변화 요인

1990년 통일 이후 독일의 정당체제는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의 핵심요인을 판별하고 그 메커니즘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제시된 변화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통일에 따라 구 동독지역이 특수하게 겪게 된 지역성 요인이고, 다른 하나는 당이 추구하는 이데올로기 요인이다.

우선 지역성 요인은, 베를린 장벽 해체 이후 1년 후에 공식화된 통일과 그 이후 전개된 사회경제적 재편 과정에서 부각된 ‘구 동독이라는 정체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구 동독 주민들이 통일과 함께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데 겪는 사회-경제적 문제에서 주로 유래된다고 본다.⁶⁶ 실상 1990년대 초에는 어떤 식으로든 통일로 인해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로 민사당의 지지기반을 이루었고 때문에 민사당은 ‘통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의 정당’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었다.⁶⁷

하지만 1994년과 1998년 연방선거에서 민사당 지지 유권자들의 지지기반이 종래 불이익 인식 구 동독 주민을 넘어 젊은 고학력 고소득 화이트칼라 집단으로 다원화된 점이 부각되면서 보다 다양한 원인규명을 요구하게 되었

⁶⁵ 1999년 7월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민사당이 미래 가능성을 가진 정당이라는 항목에 동독인의 약 51%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반면, 43%는 회의를 보였다. Brunner, Wolfram, 1999. “10 Jahre nach dem Mauerfall: Die Bewertung der deutschen einheit und der PDS in Ostdeutschland.” Bereich Forschung und Beratung - Gesellschaft - und Innenpolitik- . Abt. Empirische Politikforschung: St. Augustin Oktober, pp.7-8; 김경미, 2002, 독일통일과 정당체제의 변화: 민주사회주의당(PDS)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0집, p.32에서 재인용.

⁶⁶ 김면희, 2010. 통일독일의 정치지형 변화 연구: 정당체제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20(2), p.42.

⁶⁷ 김경미, 2002, 독일통일과 정당체제의 변화: 민주사회주의당(PDS)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0집, p.43.

다. 즉, 1994년 1월과 10월 사이에 경제개선 인식 동독인의 비율은 약 3배 정도로(인구의 약 20%에서 거의 60%로) 상승했으며, 미래의 경제상황에 대한 기대에서도 유사한 증가율을 보였다. ⁶⁸ 그리고 1998년 조사된 설문 조사에서 전반적인 경제상황과 개인의 경제 상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동독주민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을 통해 더 이상 지역성 요인을 단일 원인으로 삼기에는 설명력의 한계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⁶⁹

다음으로 이데올로기 요인은 거시적으로는 통일 시기와 결부되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인 사회경제적 재편 작업과 이에 적응하는 새로운 정치적 대응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독일통일 당시인 1990년대의 서독 자본주의와의 맥락 속에서 구 동독사회경제의 재편이 동인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⁷⁰ 미시적으로는 유권자인 동독주민의 다수가 경제적인 부와 소유가 사회적 정의 차원에서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주의 이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기에 이른 것이다. ⁷¹ 즉 통일 이후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열광과 기대가 수그러들면서 동독지역의 주민들은 사회정의와 인간 간의 연대를 강조하는 사회주의적 가치들을 재평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이 이념적으로 사회주의 가치인 평등과 사회 정의, 인간 간의 유대를 강조하는 민사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⁷²

⁶⁸ Betz, Hans-Georg & Helga Welsh, 1995, "The PDS in the New German Party System." German Politics 4, No3(December), p.9.

⁶⁹ Rattinger, Hans & Jürgen Maier, 1998, "Der Einfluß der Wirtschaftslage auf die Wahlentscheidung bei den Bundestagswahlen 1994 und 1998/"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52. pp.45-54.

⁷⁰ 세계자본주의에서 차지하는 서독자본주의의 위상과 그 내적 논리가 구 동독지역 재편의 준거틀이 되었으며, 자본제적 사회체제로의 전격적인 전환과 1990년대 세계경제로의 적응, 즉 신자유주의적인 사회적응 전략이라는 두 가지 기본 틀에서 구 동독 재편 작업은 진행되었다. 김면희. (2010). 통일독일의 정치지형 변화 연구: 정당체제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20(2). p.48.

⁷¹ 김정미. 2002, 독일통일과 정당체제의 변화: 민주사회주의당(PDS)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0집, p.44.

⁷² 위의 책 p.44.

이러한 해석은 사민당과 녹색당이 이념적인 우경화로 인해 이에 불만을 가진 유권자들이 민사당으로 정당지지를 바꾼 점에서 보다 설득력있는 설명을 제공한다. 특히 1994년 이래 젊고 도시적이며, 교육수준이 높은 화이트칼라, 즉 이들은 진보적 좌파정당 지지경향이 가장 높은 집단인데, 이들의 민사당에 대한 지지가 높아졌다는 것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⁷³

한편 서독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1994년 연방의회선거에서 민사당 지지자의 1/4은 1990년 선거에서 녹색당과 사민당에 투표한 사람들이었으며, 약 10%는 새로이 선거권을 획득했거나 1990년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⁷⁴ 결국 민사당은 사민당과 녹색당의 우경화를 통해 자신을 사민당 지지유권자들에게는 전통적인 복지국가정책의 대변자로 표현하고, 녹색당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타협할 줄 모르는 평화주의자로서 강력히 제시하면서 유권자를 동원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⁷⁵

이렇듯 다양한 해석들과 맞물려 실상 민사당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상시 두 가지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었음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합하고 효과적으로 대변하여 유권자를 동원하는 것으로 선거지향성을 이해한다면, 민사당은 통일 이후 독일의 근본적 사회갈등노선을 동-서독 간의 갈등과 사회정의-시장자유 의 갈등이란 프레임으로 설정하고, 통일 이후 서독 지향적이고 서독 의존적인 정당들에 대한 대안으로서 자신을 동독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

⁷³ 1994년 연방의회 선거에서 동독지역의 경우 민사당을 지지한 유권자의 15%는 1990년 연방 선거에서 사민당을 지지하였고, 약 10%는 신규 유권자였거나 1990년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 Falter, Jürgen W., & Markus Klein. 1994. “Die Wähler der PDS bei der Bundestagswahl 1994: zwischen Ideologie, Nostalgie und Protest.”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51-52. p.24.

⁷⁴ 위의 책 p.24.

⁷⁵ 김경미. 2002, 독일통일과 정당체제의 변화: 민주사회주의당(PDS)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0집, p.44.

독정당'(Ostpartei)화하는 전략을 추구했다는 것이다.⁷⁶ 이러한 전략은 통일이라는 예상치 못했던 전혀 새로운 상황변화와 관련하여 동독시민들 다수가 느끼는 불안과 불확실성을 감안해 볼 때 적절한 선거 전략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즉, 통일 이후 민사당은 '통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EinigungsverliererInnen)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책과 선거 전략을 취하였다.⁷⁷ 이러한 '통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은 첫째, 구 동독체제에서 가졌던 경력 및 지적 자산을 새로운 독일에서 시장가치를 가지는 자원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직업 활동이나 사회생활에서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된 사람들(여기에는 구체적으로 구 동독의 국가 및 당관료들, 군대 및 비밀경찰, 사회단체, 대중매체의 고위직 출신들 그리고 특히 인문사회과학분야 대학교수와 교사들, 즉 노멘클라투라와 인텔리겐차들이 속한다)과 둘째로 통일독일에서 스스로를 '이등국민'(Bürger zweiter Klasse)으로 느끼는 다수의 동독지역 주민들이 속한다.

동독지역 주민들이 스스로를 이등국민으로 생각하는 근거는 우선 동서독 간의 경제적 불균형 및 동일노동에 대한 임금차이, 동독에서의 보다 높은 장기적인 실업 등에 있는데 이러한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에 맞물려 서독인들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또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⁷⁸ 민사당은 이러한 동독지역주민들이 가지는 경제적 불만, 격심한 경쟁을 본질로 하는 시장경제에 대한

⁷⁶ Neugebauer, Gero und Stöss, Richard, 2008. Die PDS: Geschichte. Organisation. Wähler. Konkurrenten. Opladen: Leske+Budrich, p.42.

⁷⁷ 이미 통일 전 1990년 국민회의 선거에서는 통일을 반대하는 정책을 내세우면서 특히 구 동독체제의 노멘클라투라 출신의 통일반대론자 혹은 통일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의 표를 기대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구 동독지역의 이해를 반영하는 모습은 적어도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김경미, 2002, 독일통일과 정당체제의 변화: 민주사회주의당(PDS)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0집, p.40.

⁷⁸ 즉, 서독인들이 구 동독사회의 긍정적인 측면들(고용안정, 탁아시설, 사회정의, 범죄로부터의 보호, 교육제도, 남녀평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서독모델을 이식함에 따라 동독인들은 '잘난 체하는 서독인'(Besserwessi)들에 대해 심리적인 차원에서 자신들을 이등국민으로 생각하게 되고 집단적 패배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김경미, 2002, 독일통일과 정당체제의 변화: 민주사회주의당(PDS)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0집, pp.40-41.

환멸과 저항 및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적응에서 오는 사회문화적 갈등과 구 동독사회에 대한 향수를 조합하고 이를 대변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구 동독 사회주의체제의 이념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시장경제에 마주해서 사회정의에 대한 강조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제기되어야 할 점은, 이러한 당의 지향점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는 접점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알리고 지지를 동원해 왔다는 점이다.⁷⁹ 즉, 문화 및 정치 토론회와 지역주민을 위한 행사 등을 통해 통일과 함께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거나 구 동독에 대해 향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공간을 제공하며, 또한 통일 이후의 새로운 법률 및 제도에 관한 정보자료의 배포와 설명, 연금이나 주택임대처럼 생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조언과 조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동독의 유권자들에게 민사당이 동독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를 통해서 민사당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재빨리 파악하고 이에 반응할 수 있게 된다.

민사당이 이처럼 적극적인 주민활동을 할 수 있는 원천에는 동독지역에서 사실상 다른 어떤 정당보다도 더 많은 당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당원의 대다수가 여유시간이 많은 정년퇴직자라는 점도 주민활동에 유리하게 작용한다.⁸⁰

표 1-12) 각 정당의 동독지역 당원수(1990-1998)

| | 동맹90-녹색당 | 사민당 | 자민당 | 기민당 | 민사당 |
|------|----------|--------|---------|---------|---------|
| 1990 | 1,267 | 24,399 | 113,978 | 134,409 | 283,882 |
| 1991 | 1,340 | 27,214 | 90,600 | 111,248 | 170,000 |
| 1992 | 881 | 25,744 | 33,323 | 94,267 | 146,086 |
| 1993 | 2,700 | 26,000 | 38,184 | 91,327 | 130,530 |
| 1994 | 2,796 | 27,725 | 29,141 | 87,271 | 121,848 |

⁷⁹ 위의 책 p.41.

⁸⁰ Bastian, Jens. 1995. "The Enfant Terrible of German Politics: The PDS Between GDR Nostalgia and Democratic Socialism." German Politics 4, No. 2 (August), p.100.

| | 동맹90-녹색당 | 사민당 | 자민당 | 기민당 | 민사당 |
|------|----------|--------|--------|--------|---------|
| 1995 | 2,827 | 27,177 | 24,569 | 71,804 | 101,033 |
| 1996 | 2,757 | 26,863 | 21,212 | 65,923 | 102,976 |
| 1997 | 2,949 | 27,441 | 16,213 | 67,703 | 96,097 |
| 1998 | 3,150 | 27,527 | 15,590 | 61,046 | 98,000 |

출처: Bundesgeschäftsstellen der Parteien, 1998, 김경미, 2002, 독일통일과 정당체제의 변화: 민주사회주의당(PDS)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0집, p.40에서 재인용

제2절 정당통합 이후 정당체제의 변화

1. 신생 정당(민사당)의 정치적 기반 확보 성공

비록 사통당의 후신이라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신생 정당으로서 민사당은 체제전환기의 상황에서 구 동독 공산당의 잔당이라는 비판을 극복하고 동독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정치적 기반 확보에 성공할 수 있었다. 특히 통일 후 장밋빛 기대와 희망이 수포로 돌아가는 통일후유증에 따른 불만이 사회적으로 표출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1990년대에는 주로 구 동독에서 세를 결집하면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2000년대 이후부터 구 서독 좌파세력과의 연대 등 세력 확장을 통해 구 서독지역으로까지 지지기반을 확대할 수 있었고 결국 전국적인 지지를 얻는 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표 1-13>.

표 1-13> 민사당의 역대 선거 득표율 및 원내의석수(% , 석)*

| 지역 | | 1990 | 1994 | 1998 | 2002 | 2005 |
|--------|------|------|------|------|------|------|
| 득표율 | 전독일 | 2.4 | 4.4 | 5.1 | 4.0 | 8.7 |
| | 구 동독 | 11.1 | 17.7 | 19.5 | 18.8 | 25.4 |
| | 구 서독 | 0.3 | 0.9 | 1.1 | 1.1 | 4.9 |
| 원내 의석수 | | 17 | 30 | 35 | 2 | 54 |

* 독일 선거법은 5% 미만의 지지율을 얻는 정당은 정당명부에 의한 의석을 배정받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민사당의 경우 구 동독지역의 높은 득표율이 감안되어 예외적으로 의석이 배분되었다

출처: 정용길, 2006, 동독의 체제전환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16(1), 손기웅 외, 2009,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 동서독 통합과정 종합 평가』, 통일연구원, p.14에서 재인용

하지만 일각에서는 엄연히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하는 바 사통당 후신으로서 여전히 이념적으로 경직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⁸¹ 그러나 구 동독지역의 지방정부에서 사민당 등의 정당과 연정을 꾸리기도 하면서 좌파 성향의 정치세력으로 점차 독일 기성 정당체계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보인다. 물론 구 서독에서의 지지만을 두고 보자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 동독을 한정해서 볼 때는 전체 득표율의 1/4에 이르러 기민/기사당 다음으로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사당은 사민당과 노조 등 구 서독 출신 좌파세력들이 결성한 선거대안(WASG)과 2005년 연대하여 세력화를 모색하다가 이어 2007년 대안정당과 공식 합병하여 ‘좌파당’(Die Linke)이라는 새로운 당명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듯 동서독 좌파의 결합체라고 평가되는 좌파당은 진보정당으로서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진보성향의 세력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⁸²

2. 기성 정당체계의 불안정성 증가

통일 이전 독일, 구 서독의 정당체제는 1961년 연방의회 선거 이후 약 20년 동안 대정당인 기민-기사련(CDU-CSU)과 사민당(SPD) 그리고 소정당인 자민당(FDP)을 중심으로 2.5 정당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했었다.⁸³ 이 체제는 1983년 녹색당이 처음으로 5% 제한조항의 장애를 극복하고 연방의회에 진출한 뒤 와해되며, 이후 독일의 정당체제는 2개의 대정당(기민-기사련과 사민당)과 2개의 소정당(자민당과 녹색당)으로 구성된 온건다당제를 유지했다.

⁸¹ 손기웅 외, 2009,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 동서독 통합과정 종합 평가』, 통일연구원, p.13.

⁸² 위의 책 p.14.

⁸³ Alemann, Ulrich von. 2000. Das Parteiensystem der Bunderepublik Deutschland.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p.63.

독일통일은 이러한 정당체제의 기본구조를 상당히 변모시키는 동인으로 작동하여 동독은 물론 서독지역에서도 영향을 미쳤다.

우선 구 서독지역에서는, 통일 이후 기성 정당체제의 양태를 살펴보면, 우선 1990년 치러진 연방의회 선거에서는 양대 거대정당인 사민당과 기민/기사연의 득표율이 저조한 나머지 다당제 형태를 보였다가 1994년 이후 양대 정당의 득표율이 급증하면서 2002년까지 양당중심제로 전환하기도 했다가 2005년부터 자민당과 동맹90/녹색당, 민사당이 점차 지지율을 제고한 반면 거대 양당의 득표율이 저조해지면서 정당의 파편화가 심해짐에 따라 다시 다당제로 전환했고 심지어 2009년에는 극단적 다당제로 전환할 가능성까지 비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통일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정당체제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구 동독지역의 경우가 심한데, 주의회 선거에서 보더라도 기민/기사연과 사민당은 상대적으로 시기별 지지율의 편차가 크지 않은 반면, 득표율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주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고정지지층이 얇고 지역 편중도도 상대적으로 심하게 나타나 민사당/좌파당의 고른 지지율 및 두터운 고정지지층과 지속적 성장세와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⁸⁴

자민당과 녹색당의 경우에도 통일 직후에 거두었던 성공을 유지하지 못하고 곧바로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등 등락이 심했는데, 아직 동독지역의 주의회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민사당이 기민련과 사민당에 이어 강력한 제 3세력으로 부상하여 동독지역에서는 서독지역과는 달리 기민련, 사민당, 민사당의 3당 체제가 형성되었다.

⁸⁴ 정병기, 2011, 통일독일 구 동독지역 정당체제: 연방주별 특수성이 반영된 새로운 다양성. 한국정치학회보 45(4), p.340.

제3절 정당통합에 대한 평가

동서독 정당통합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급속한 통일과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민주적 정당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었다는 긍정적 평가 외에도 서독 정당체계의 이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동독의 정치적 이해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통일독일의 전체 정당체계의 질곡을 겪는 계기가 되었다는 부정적 평가 등 다양한 논의들이 있어 왔다.

1. 총평: 민주적 정당체계의 안정적 유지

구 동독 정당체계의 구 서독 정당체제로의 흡입은 정당의 수라는 측면에서 보면 구 서독 정당체계의 특징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주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다. 비록 통일과정을 놓고 봤을 때 정당체계가 급속히 분열해서 안정성이 상실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지배적이었지만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1990년 통일 후 실시된 연방선거에서 5% 봉쇄조항이 구 동서독으로 분리 적용된 결과에 힘입기는 하였지만 결국 민사당만이 추가로 연방의회에 진출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⁸⁵ 아울러 1990년 연방선거를 통해 기민당이 유지하던 사민당에 대한 상대적 우위는 더욱 강화되었는데, 내용적인 측면에서 구 서독 정당체계와 크게 상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독일의 정당체계는 이념적으로 구 서독 정당체계에 비해 다소 좌경화된 것이 사실이다.⁸⁶

다른 한편, 통일 이후 재형성된 구 동독지역의 정당체계는 구 서독지역의

⁸⁵ 김영태. 1999. 독일통일 과정에서 정당체계의 변화와 역할. 통일경제. 1999.9. p.70.

⁸⁶ 이에 대한 근거로, 첫째, 통일 이전에 비해 좌파로 분류할 수 있는 정당의 수가 증가하였고, 둘째, 이념적 특성 분류에 있어서도 시장 경제 우위를 주장하는 자민당을 제외하면 모두 사회복지국가 건설이나, 경제 문제의 국가 개입을 통한 해결, 환경보호 등에서 일치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 셋째, 특히 기민당은 보수적 입장을 어느 정도 벗어나서 동독 기민당의 이념적 성향으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일 당시까지 기민당과 녹색당의 대립으로 표현되던 양극체계는 민사당이 녹색당을 대체하여 기민-사민-자민-녹색-민사당이라는 이념적 틀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위의 책 p.71-73.

정당체계에 비해 상당히 양극화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은 구 동독지역에서의 민사당의 강세와 자민당의 약화로 특징지어지는데 이에 따라 주정부를 구성하는 연정 대상이 좁아져, 대연정 이외에 또 다른 대안은 현실적이지 못한 상태에 놓여있다. 결국 과거 구 서독에서와 달리 주 차원의 연정문제는 정책보다는 정치권력의 획득이라는 정략적 측면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⁸⁷

1990년 통일 당시 독일의 정당체계는 상대적으로 높은 정당성을 인정받았으나 1991년대를 경과하면서 정당성은 점차 약화되기 시작하는데,⁸⁸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통일 이후 열악해진 경제 사정과 구 서독에 의해 주도된 통일 과정에 대한 불만을 들 수 있다. 즉 민사당의 성장배경으로 구 서독인에 이끌려 통일이 진행되고 있고 자신들의 의견은 애초 기대와 달리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심리적 위축과 불만을 이유로 드는데, 민사당은 통일 이후 구 동서독의 갈등을 당 정책과 결합시켜 통일 후유증 속에서 스스로를 2등 계급(Zweite Klasse)이라 느끼는 구 동독 시민들을 급속히 흡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⁸⁹

2. 긍정적인 측면: 성공적인 정당통합

독일통일과정에서 정당통합이 성공적이었다는 의견은 성공적인 정당체제

⁸⁷ 위의 책 p.72.

⁸⁸ 정당체계 정당성 상실은 선거참여율의 하락을 통해 파악해 볼 수 있는데, 1990년에 실시한 인민의회선거 참여율은 93.4%였으나 이후 구 동독지역에서의 선거 참여율은 1990년에 74%, 1994년에 72.6% 그리고 1998년에는 다소 증가한 80%를 기록하는 등 점차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책 p.72.

⁸⁹ 자신을 이등국민으로 느끼는 동독인은 통일 직후인 1990년 말에는 전체 주민의 85-90%에 달했는데 이 비율은 점차 감소해서 1995년 가을에는 69%였다가, 1996년 3월에는 74%로 상승했으며, 1997년 5월에는 80%에 이르게 된다. Walz, Dieter & Wolfram Brunner. 1997. "Das Sein bestimmt das Bewußtsein. Oder. Warum sich die Ostdeutschen als Bürger 2. Klasse fühle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51-52, p.13.

의 구축과 정치 엘리트 교체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⁹⁰ 먼저 성공적인 정당 체제의 구축과 관련하여, 사회주의 일당체제를 단기간에, 그것도 안정적으로 민주적 선출 의회체제로 탈바꿈시킨 점은 높은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다. 통일 직후인 1990년 10월 다수의 동서독 정당이 통합된 것을 비롯하여, 1990년대 초반 구 동독지역에 새로운 정당체제를 구축하는 작업이 완료되었는데 이를 통해 민주적 정치체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정당체제 구축이 성공적으로 구 동독에서 완수되었다는 평가에는 이견이 없다.⁹¹ 결국 구 동독지역을 대표하는 정치 정당이 신속하게 설립됨에 따라 통일 후 공백 없이 전 독일에서 민주적 의회체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성공적인 정치 엘리트 교체를 꼽을 수 있다. 1990년 실시된 동독 5개 주의회 선거에서 선출된 509명의 의원 가운데 동독 인민의회 출신이 5명에 불과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구 동독에서의 정치인력 교체는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⁹² 한편 동독 정치인들은 정당 내에서 보직을 맡으면서 일부분에 국한되기는 하나 정당 내 인적통합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⁹³ 비록 동서독지역의 동일한 제도적 구조는 불균형한 통일로 인해 동독 신진 엘리트들에게 엄청난 적응의 압력을 행사하기는 하였지만, 통일 직후에 나타난 심각한 차이들이 점차 그 간격을 줄여나가고 있고 엘리트들의 채용 구조나 견해 유형에 있어 전 독일적으로 통합된 정치엘리트들을 양산해냈으며 이를 통해 양 지역의 통합에 상당히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⁹⁴

⁹⁰ 손기웅 외, 2009,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 동서독 통합과정 종합 평가』, 통일연구원, p.14.

⁹¹ 손기웅 외, 2009,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 동서독 통합과정 종합 평가』, 통일연구원, pp.13-15.

⁹² 헬무트 바그너, 2007, 특수사례로서 동독의 체제전환: 특별한 조건과 예외적 결과, 현대북한연구 10(3).

⁹³ 손기웅 외, 2009,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 동서독 통합과정 종합 평가』, 통일연구원, p.13.

⁹⁴ 통일부, 2011, 『독일의 통일·통합정책연구』 제1권 분야별 연구, p.290.

3. 부정적인 측면: 서독 주도의 통합방식으로 인한 문제

성공적인 측면 외에도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평가들은 주로 서독 주도의 통합방식으로 인해 파생된 문제점들을 지목한다.⁹⁵ 즉, 통일과정에 있어 양 당사자들이 동등한 눈높이가 아닌, 서독의 주요 제도와 엘리트들이 동독지역으로 이전된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주도권을 쥔 행위자가 서독이었던 불균형한 관계 속에서 조우했다는 점이다.⁹⁶ 이렇듯 서독 주도의 통합방식으로 인한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를 차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통합이 화학적 결합이 되지 않고 물리적으로 서독 정당체제의 확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즉 정당 간의 대등한 통합이 아닌 서독정당들의 당 조직과 행동영역의 구 동독지역 확대에 불과하다는 것인데, 실상 정치체제는 달라지지 않은 채 서독의 정치체제가 동독지역으로 확장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⁹⁷ 즉, 통일과정과 관련하여 구 동독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정치권만의 논의 속에서 통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정당 간의 통합 과정에서도 이러한 과정을 답습했다는 것이다.⁹⁸

서독의 기민/기사련과 사민당 및 자민당 등 주요 정당들은 통일과정에서 각각 동독 정당의 선거캠페인에 참여하고 물적·인적 자원을 적극 지원하는 등 인민의회 선거를 “동독 땅에서 치러진 서독의 선거”로 만들었는데,⁹⁹ 이런 동독의 서독 정당 정치화는 결국 통일 이후 동독의 정당들이 서독의 정당들로 흡수 통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결과는 성공적인 정당 통합의 과정을 위해 당원의 의사를 구하거나, 구 동서독의 당 조직을 해체하고 새로운 정당을 구성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 서독 정당이 구 동독

⁹⁵ 손기웅 외, 2009,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 동서독 통합과정 종합 평가』, 통일연구원, p.14.

⁹⁶ 통일부, 2011, 『독일의 통일·통합정책연구』 제1권 분야별 연구, p.287.

⁹⁷ 손기웅 외, 2009,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 동서독 통합과정 종합 평가』, 통일연구원.

⁹⁸ 김영태, 1999, 독일통일 과정에서 정당체계의 변화와 역할, 통일경제, 1999.9. p.75.

⁹⁹ 송태수, 2006, 독일통일에서 정당의 역할, 사회과학연구 14(1), p.273.

정당을 단지 흡수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는데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¹⁰⁰ 따라서 동독정당의 서독정당 체제로의 흡수통합은 이후 구 동독 주민의 특수한 이해관계를 대변할 정당조직의 부재 문제뿐만 아니라 통일후유증에 의해 구 동독 주민 스스로 ‘2등 국민’이라고 느끼는 집단적 의식의 형성에도 상당정도 원인으로 작용했다.¹⁰¹ 왜냐하면 통일과정에서 분출하는 구 동독 시민들의 민주 열기를 통일독일의 정당체계가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구 동독인들에게 자신들의 의견은 정치체계에 또렷이 대변되고 있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까지 강화시켜 구 동서독지역 갈등의 계기로 작용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¹⁰² 결국 이러한 양극은 급속한 정당통합에도 불구하고 경제, 문화 및 사회 심리적 영역에서의 내적 통합은 여전히 보다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¹⁰³

둘째, 정당의 주요 보직자 선정이나 연방 장관 비율 등 주요 정치엘리트 보직에서 나타나는 불균형성을 꼽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당대표, 사무총장 등의 주요 보직은 서독측 인사가, 그리고 부대표, 당무위원 등은 동독측이 맡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으로는 흡수통합방식으로 이뤄진 통일과정에서 서독으로의 헤게모니 편중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나, 다른 한편으로는 서독의 유권자 수가 동독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복잡한 양면성을 지닌다.

통일 후 실시된 첫 연방의회 선거결과에 따르면, 선출된 662명의 의원 가운데 구 동독 5개주에서 선출된 127명과 베를린에서 선출된 28명, 즉 총 155명이 구 동독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전체의

¹⁰⁰ 김영태. 1999. 독일통일 과정에서 정당체계의 변화와 역할. 통일경제. 1999.9. p.75.

¹⁰¹ 송태수. 2006. 독일통일에서 정당의 역할. 사회과학연구 14(1). p.273.

¹⁰² 김영태. 1999. 독일통일 과정에서 정당체계의 변화와 역할. 통일경제. 1999.9. p.75.

¹⁰³ 통일 10년 이후인 2000년 여름에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동독인의 약 20%가 여전히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어 동독지역의 이익과 사회적 불만 및 갈등을 대변하는 정당 지지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Die Zeit, 2000.9.28.일자 기사.

약 23.5%에 해당된다는 점에서도 불균형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¹⁰⁴

단적인 예로, 통일 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동독인 연방 장관 비율은 단 한번도 13%를 넘어서 적은 없으며, 1990년 이래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현재 메르켈 총리의 2기 내각에서는 5.9%(1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토대로 하면, 동독 출신 최초의 연방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은 특별한 예외적 케이스임을 알 수 있다. 그 외의 엘리트 분야에서도 서독 출신의 인물들은 광범위하게 포진되어 있는데, 특히 이들이 구 동독지역의 행정 분야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87.3%에 달할 정도다. 이와 반대로 동독인들이 서독 주의 엘리트 관직을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거의 찾기 어려울 만큼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들어 엘리트 채용에 존재하는 명확한 불균형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¹⁰⁵

이렇듯 서독인들이 구 동독지역의 엘리트 직을 상당부분 점령하고 있는 이유는 구 동독지역의 제도를 개혁하거나, 완전히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사법 및 조직적 전문 능력에 대한 수요가 생겨났기 때문인데, 특히 군대, 부처 행정, 사법 및 대기업과 같은 분야들에서 요구되는 지식은 통일 전까지 서독지역에서만 습득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¹⁰⁶ 이렇듯 구 엘리트 세력의 퇴진을 통해 발생한 엘리트 공백 상태는 신규 동독 엘리트뿐 아니라 서독의 엘리트 이전을 통해서도 채워지게 되었기 때문에 통일은 동독의 구 엘리트 세력과 그들의 전문능력의 재활용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

¹⁰⁴ 손기웅 외, 2009,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 동서독 통합과정 종합 평가』, 통일연구원, p.13.

¹⁰⁵ 아울러 서독인은 동독에서도 엘리트 직책으로의 승진이 가능한데 반해, 동독인의 경우 극히 일부만이 서독 엘리트 직책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국민들이 주로 동독에서 서독지역으로 이주하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통일부, 2011, 『독일의 통일·통합정책 연구』 제1권 분야별 연구, p.259.

¹⁰⁶ 동독 간부진들이 기관별로 특수하게 습득한 전문지식은 체제전환으로 인해 대부분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고 서독지역에는 동독지역으로의 발령을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근무지 변경은 금전적 개선(“보조금 다발, Buschzulage”)과 승진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선호되는 측면도 있었다. 위의 책 p.259.

들었으며, 이를 통해 기타 탈공산주의 국가들과 비교해 엘리트 계층의 단절이 강도 높게 성취될 수 있었다.¹⁰⁷

뿐만 아니라 직급이 높아질수록 구 서독 출신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거의 모든 엘리트 분야에 해당되는데 상대적으로 중하위 관리자 급에 있어 서독 엘리트들의 점유는 훨씬 덜한 것으로 나타난다.¹⁰⁸ 물론 정치 엘리트 중 서독인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라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서독인들은 주로 내무부장관이나 법무부장관 혹은 시장과 두 개의 주 총리직(작센과 튀링겐)과 같은 매우 주목받고 중심적인 엘리트 직위를 맡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결국 절대적인 수치상의 통계로만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방증이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볼 때, 특히 통일 직후 초기 몇 년 간 동독 주민들 사이에서 “식민지화”라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유발되게끔 한 요인을 제공하는 단초였다고 볼 수 있겠다. 식민지화의 감정은 서독인들에 대한 유보적인 입장을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 간의 통합마저 어렵게 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¹⁰⁹

셋째, 통일로 인한 불균형적인 정치 엘리트 교체비율을 들 수 있다. 구 동독 정치엘리트는 큰 폭으로 교체된 반면 구 서독지역에서는 구 동독지역에 비견할 만한 기관과 조직 내 엘리트 교체를 수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¹⁰⁷ Welzel, Christian. 1997. Rekrutierung und Sozialisation der ostdeutschen Elite – Aufstieg einer demokratischen Gegenelite, in: Bürklin, Wilhelm und Rebenstorf, Hilke(Hrsg.)(1997): Elite in Deutschland. Rekrutierung und Integration. Opladen Leske und Budrichs, p.214.

¹⁰⁸ Derlien, Hans-Ulrich. 1997: Elitenzirkulation zwischen Implosion und Integration, Abgang, Rekrutierung und Zusammensetzung ostdeutscher Funktionseliten 1989-1994, in: Wollmann, Hellmut, u.a. (Hrsg.)(1997): Transformation der politische-administrativen Strukturen in Ost-deutschland, Leske und Budrich, Opladen, p.396.

¹⁰⁹ 식민지화라는 개념은 서독이라는 외부세력에 의해 결정을 당하는 감정을 뜻하는데 이러한 감정은 동독의 주요 엘리트 관직에 포진해 있는 서독인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통일부, 2011, 『독일의 통일·통합정책연구』 제1권 분야별 연구, p.260.

표 1-14) 최초로 임명된 장관/의원 비율(단위: %)

| | | 1990-1994 | 1994-1998 | 1998-2002 | 2002-2006 | 2006-2010 | 2010-2014 | 합계 |
|----|----|-----------|-----------|-----------|-----------|-----------|-----------|------|
| 장관 | 서독 | 57.7 | 35.8 | 51.0 | 49.2 | 41.7 | 44.1 | 47.4 |
| | 동독 | 91.9 | 51.5 | 55.7 | 50.7 | 51.7 | - | 61.9 |
| 의원 | 서독 | 31.1 | 33.6 | 29.2 | 33.3 | 30.3 | 29.1 | 31.4 |
| | 동독 | 79.1 | 40.6 | 32.3 | 35.3 | 35.1 | 23.3 | 49.2 |

출처: 예나 의원 연구, SFB580/A3, 2010년 통일부 프로젝트·베를린자유대 한국학과 통일연구팀, 『독일의 통일·통합정책연구』 제1권 분야별 연구, p.251에서 재인용.

위의 <표 1-14>를 살펴보면, 구 동독 출신의 연방 장관과 주 장관들의 90%가 1990년 선거 이후 처음으로 장관직에 취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장관직에 최초로 취임한 동서독 정치인들의 비율인 10%(7명) 중, 동독 출신은 마티아스 플라첵(Matthias Platzeck)과 한스-요아힘 마이어(Hans-Joachim Maeyer), 레기네 힐데브란트(Regine Hildebrandt)로 단 세 명뿐이었고 나머지 장관직은 서독 출신의 정치인들에 의해 채워졌다. 한편 서독에서는 장관직에 최초로 취임한 비율이 58%로, 평균 비율인 47%에 비해 높기는 했지만 구 동독과 비교해 훨씬 낮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의회 의원들에게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통일 직후 구 동독지역 출신의 의원 중 최초로 의원직에 오른 비율이 79%에 달하는데 비해, 구 서독지역의 경우 31%에 그쳤으며, 이는 1990-2010년의 평균치와 동일한 수준이다. 때문에 정치 엘리트의 일부인 장관과 의원 급에서는 구 동독지역과 비견할만한 엘리트 교체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체제 전환기 초기에는 구 서독지역의 엘리트 채용 형태에 있어 지속성이 나타났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를 통해 체제 전환의 특수한 정황은 서독 기본법 유효 지역으로의 동독 편입과 제도 이전으로 동독에서는 대부분 모든 것들이 변화되었지만, 서독의 제도적 시스템은 유지되었으며 그 연속성을 보장받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¹¹⁰

¹¹⁰ 위의 책 p.250-251.

표 1-15) 동독에서의 정치적 소속(단위: %)

| 소속 | 비율 |
|---------|------|
| 사통당 당원 | 28.0 |
| 위성정당 당원 | 17.5 |
| 무소속 | 30.3 |
| 반체제 인사 | 24.2 |
| 합계(명) | 268 |

출처: Welzel, Christian. 1997. Rekrutierung und Sozialisation der ostdeutschen Elite-Aufstieg einer demokratischen Gegenelite, in: Bürklin, Wilhelm und Rebenstorf, Hilke(Hrsg.)(1997): Elite in Deutschland. Rekrutierung und Integration. Opladen Leske und Budrichs, p.219, 포츠담 엘리트 연구: 분류근거-1995년 기준 설문조사 대상 엘리트들이 진술한 자가 정보. 통일부, 2011, 『독일의 통일·통합정책연구』 제1권 분야별 연구, p.257에서 재인용.

한편 위의 <표 1-15>에서 볼 수 있듯이 구 동독지역의 신진 정치 엘리트의 구성을 살펴보면, 1995년의 경우 절반 가까이가 이미 동독에서 한 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했던 인물들이었는데 과반수는 사통당 출신이었으나 대부분은 사통당을 비롯한 위성정당의 위계질서 내에서 주목받는 직책을 맡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일 전 반체제 운동에 가담했던 반체제 인사(Oppositionelle)의 경우 구 동독지역의 신진엘리트 중 2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동독에서 적극적으로 정치적 활동을 한 반엘리트 세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¹¹¹

그리고 통일과정 속에서 수반된 서독 제도의 인수에 이어 서독 정치 엘리트의 수입이 시작되었는데, 1989년 전까지 동독에서 살았던 인물들 중 엘리트 직책을 맡은 이들은 12%에 불과해 전 독일 대비 동독 주민들의 비율(약 21%)을 감안해 볼 때 확실히 낮기는 하나, 정치 엘리트 비율은 32.1%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구 동독지역 연방 주들에 지역 엘리트 직책이 과도하게 할당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¹¹²

.....
¹¹¹ 위의 책 p.257.

¹¹² 위의 책 p.259.

구 동독지역에 정치신인이 대거 등장하면서 대폭적인 정치 엘리트 교체가 이루어짐에 따라 인구학적 구성도 달라졌다 <표 1-16>. 서독 의회 엘리트들의 평균 연령은 연방의회의 경우 약 50세이며, 주 의회의 경우 약 48세인데, 주 의회의 경우 1990년부터 평균 연령이 약 1세 높아진 것이다. 이에 반해 1990년대 초 동독의 의회 엘리트들은 연방의회와 주 의회에서 45세와 44.6세를 기록하여, 서독의 동료들보다 약 4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¹¹³

표 1-16) 의원의 평균 연령(단위: %)

| | '90-94 | '94-98 | '98-02 | '02-06 | '06-10 |
|---------|--------|--------|--------|--------|--------|
| 서독 연방의원 | 49.7 | 49.7 | 50.5 | 49.5 | 49.8 |
| 동독 연방의원 | 45 | 47 | 47.5 | 48.2 | 47.6 |
| 서독 주의원 | 48.3 | 48.4 | 49.1 | 48.9 | 49.3 |
| 동독 주의원 | 44.6 | 45.7 | 47.4 | 46.7 | 46.9 |

출처: 예나 의원 연구, SFB590/A3, 통일부, 2011, 『독일의 통일·통합정책연구』 제1권 분야별 연구, p.269에서 재인용.

한편 1990년 이후 구 동독지역 의회 엘리트들의 평균 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기는 했으나, 연방의회와 주의회 모두에서 서독의 평균 연령과 비교해 여전히 2세가 낮은데 이는 동독지역에서의 의회 진입 대기기간이 지속적으로 짧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기 기간의 차이는 그리 심각하지 않아, 세대나 경험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¹¹⁴

아울러 동서독 엘리트들의 중요한 차이로 동독 엘리트들 사이에서 자연과학과 공학 분야의 지식인층이 지배적이라는 점을 꼽을 수 있다. 1990년 이후 선발된 의원들의 발전상을 살펴보면, 자연과학과 공학 분야의 우세는 과

¹¹³ 이러한 사실에는 신진 세력으로서 의회 의원직을 맡게 되었으며, 일부 모험적인 상황 하에 입후보를 하게 된 인물들의 비율이 높았다는 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가능했던 이유는 서독에서와는 달리 당시에는 공천을 받기 위해 의회 입성 전 단계의 정치적 지위에서 장기간 대기하며 정치적 능력을 입증 받아야 하는 전형적인 필수과정이 빠져있었기 때문이었다. 위의 책 p.268.

¹¹⁴ 위의 책 p.269-270.

도기적 현상을 의미하며, 체제 전환의 상황으로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 자연과학과 공학 분야의 전공자들은 이데올로기와는 거리가 먼 전공 분야를 통해 과거의 동독 정권과 거리를 둘 수 있었기 때문이다.¹¹⁵ 한편 점차 동독의 신진엘리트들은 서독지역의 동료들과 유사한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공 분야들은 제도적 구조로 인해 엘리트 지위로 오를 수 있는 이점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동서독의 제도적 구조가 평준화된 경향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동독의 역사와 체제 전환의 상황이 수반하는 차이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구 동독지역 의회 엘리트들은 통일 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경영학이나 법학 분야에서보다는 공학 분야의 지식인층에서 더 빈번히 충원되고 있다. 반면 인문학 및 사회과학 전공자의 비율에 있어서는 동서독의 차이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다.¹¹⁶

그러나 이전까지 정치경험이 없던 새 인물들이 구 동독지역의 정치인으로 상당수 등장하면서 서독 의회체제에 대한 이해나 경험 부족으로 인해 정치인으로서의 역할, 여당과 야당의 역할 등에 대한 혼선 또한 나타난 것이 사실이나, 이러한 문제는 급격한 정당체제 변화과정에서 기인했다는 점에서 점차 정치에 대한 이해, 정당정치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개선여지가 있다.¹¹⁷

넷째, 구 동독지역 유권자의 미약한 민주주의 의식과 낮은 정치참여수준이다.¹¹⁸ 구 동독지역 주민들의 선거참여는 계속 보장되었지만, 통일 후 좌절감으로 참여율은 점차 하락하게 되었다.¹¹⁹ 즉 통일 초기 새로운 정치체제에

¹¹⁵ 대학졸업장을 소지한 의회 엘리트 중 자연과학-공학 분야의 졸업장을 지닌 비율은 1990년 약 60%에서 2010년 약 1/3으로 감소한다. 동 기간 법학을 전공한 자들의 비율은 5%에서 14.7%로 증가하였으며, 경제학을 전공한 자들의 비율은 약 8%에서 12%로, 인문학 및 사회학을 전공한 자들의 비율은 21.6%에서 35.6%로 증가했다. 반대로 서독에서의 전공 비율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책 p.270.

¹¹⁶ 위의 책 p.270-271.

¹¹⁷ 손기웅 외, 2009,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 동서독 통합과정 종합 평가』, 통일연구원, p.15.

¹¹⁸ 위의 책 p.15.

¹¹⁹ 민족통일연구원·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1998, 동·서독의 정치통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대한 구 동독인들의 관심은 매우 높았고 높은 투표율로 이어졌으나 통일과정을 통해서 서독 정당들에 의해 남발된 장밋빛 공약, 즉 수년 내에 서독수준까지 경제적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동독 부흥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으면서 정치에 대한 실망감이 크게 늘어났고 이로 인해 동독지역에서 선거 등의 정치참여율은 급격히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통일 이후 동독지역사회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보다는 냉소와 정치적 무관심이 팽배해 있고, 통일독일 정부의 정치체제에 대한 비판 역시 매우 높다.¹²⁰ 즉 정치라는 민주주의 장치가 동독지역의 상황개선을 위한 유일한 가능성이려면, 통일독일 사회의 정치체제는 동독지역 청소년의 통일독일 사회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이 불만족은 점점 정치적 소외로 비치고 있는 것이다.¹²¹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개인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는 정치조직이나 수렴경험 등이 동독지역에서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아울러 무엇보다 새로운 정치체제를 필요로 하는 민주적 정치문화의 미성숙이 큰 원인이라는 평가이다.¹²² 처음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를 끌어들이 수 있는 정당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 젊은 유권자들의 선거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대화가 가능하면서도 대화하고자 원하는 정치인이 드물다는 점, 젊은 유권자를 위해 학교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재 불만족스러운 상황이라는 점이다.¹²³

인프라테스트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민주주의 국가체제에 대한 호감도에

공동주최 워크샵(98.6.15-17) 발표논문집.

¹²⁰ Shell Jugendstudie, 2002.

¹²¹ 이영란, 2007. 통일 이후 독일청소년 일탈문화에 대한 연구: 스킨헤드의 극우적 폭력실태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23(2), pp.151.

¹²² 손기웅 외, 2009,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 동서독 통합과정 종합 평가』, 통일연구원, p.15.

¹²³ 민족통일연구원·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1998. 동·서독의 정치통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공동주최 워크샵(98.6.15-17) 발표논문집.

서독지역 청소년들은 74%가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반면, 동독지역 청소년들은 59%에 머무르고 있는데, 민주주의 국가체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은 서독지역 8%인데 비해 동독지역은 두 배나 높은 17%로 나타났다.¹²⁴ 능동적인 정치참여 역시 통일 직후와 비교했을 때 엄청난 감소를 보여주고 있는데, 정치참여에 대한 동독지역 청소년들의 태도는 통일의 결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1995년을 기점으로 부정적으로 전환하면서, 정치구조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이 정점에 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²⁵

표 1-17 > 1987-2002년 동독지역 청소년의 정치참여 평가(단위: %)

| | '87 | '88 | '89 | '90 | '91 | '92 | '93 | '94 | '95 | '96 | '98 | '00 | '02 |
|-------|-----|-----|-----|-----|-----|-----|-----|-----|-----|-----|-----|-----|-----|
| 긍정 | 37 | 36 | 30 | 32 | 24 | 14 | 11 | 9 | 7 | 5 | 7 | 8 | 7 |
| 매우 긍정 | 17 | 16 | 13 | 9 | 4 | 3 | 3 | 4 | 3 | 2 | 2 | 1 | 2 |

* 질문: 정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척도: 매우 긍정1, 긍정2, 그저 그렇다3, 부정4, 매우 부정5).

출처: Förster, Peter. 2003, "Junge Ostdeutsche heute: doppelt enttäuscht," APUZ: B15, p.11.

한 체제에 대한 불만과 실망이 동독지역처럼 민주주의 정치구조를 통해 해소되지 못할 때, 정치적 불만은 민주주의와 제도에 대한 불신과 법치국가에 대한 냉소주의로 나타나고, 바로 이 때 극우적인 사상에 대한 선전과 선동이 표출되면서 그 사회에 확산되게 마련인데, 동독지역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¹²⁶

이러한 상황은 2005년까지 연방의회 선거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다음의 <표 1-18>은 연방의회선거 결과인데, 동독지역 주민의 정치

.....

¹²⁴ Shell Jugendstudie. 1990, p.105.

¹²⁵ 정치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10%를 넘지 않고, 민주주의 체제와 정치참여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영란. 2007. 통일 이후 독일청소년 일탈문화에 대한 연구: 스킨헤드의 극우적 폭력실태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23(2). pp.153.

¹²⁶ Wiesendahl, Elmar. 2001, "Keine Lust mehr auf Parteien. Zur Abwendung Jugendlicher von den Parteien," APUS: B 10, pp.7-19.

적 불만족에 대한 평가를 REP, NPD 등의 극우적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정당 지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18 > 1990년-2005년 연방의회 선거 시 극우정당들 지지율

| | 합계 | 동독지역 | 서독지역 |
|---------------|-----|------|------|
| 1990년 연방의회 선거 | 2.4 | 1.6 | 2.6 |
| 1994년 연방의회 선거 | 1.9 | 1.3 | 2.0 |
| 1998년 연방의회 선거 | 3.3 | 5.0 | 2.8 |
| 2002년 연방의회 선거 | 1.0 | 1.7 | 0.9 |
| 2005년 연방의회 선거 | 2.2 | 4.2 | 1.7 |

출처: Bayerische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sarbeit, 2006.

특히 극우 스킨헤드의 정치목표와 실현의 리더역할을 하는 NPD 연방의회선거 지지율은 동서독지역 모두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는데, 서독지역에서 1990년 0.2%에서 1.1%, 동독지역에서 1990년 0.2%에서 2005년 3.6%의 지지를 획득하였고, 2004년 작센주 지방선거에서 9.2%의 지지를 얻어 지방의회 진출에 성공한다.¹²⁷ 의회진출은 극우 이데올로기의 정치적 행보의 합법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결과가 독일사회에 끼치는 파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¹²⁸

이러한 상황은 정치체제 이식 등 외형적인 통일은 빠른 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으나 그에 적합한 인식의 변화 즉 내재적인 통일과 내용상의 적응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과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¹²⁹

¹²⁷ Jesse, Eckhard, 2005. "Das Auf und Ab der NPD," APUZ: Nr.42, p.34.

¹²⁸ 1990년대 NPD 정당금지에 대한 공방이 독일사회에서 치열한 공론을 일으켰다는 것을 상기해 볼 때, 2004년과 2005년 NPD에 대한 지지상승과 정치권에서의 부활은 매우 의미심장해 보인다. 이영란, 2007. 통일 이후 독일청소년 일탈문화에 대한 연구: 스킨헤드의 극우적 폭력실태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23(2), pp.152-153.

¹²⁹ 구 서독 정치인뿐만 아니라 구 동독 정치인들조차도 구 동독의 구 서독체제 편입을 통해 경제·사회·문화·정치적 분열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잘못 판단했다는 점에서 구 동서독의 발전과정은 통일이 1990년 10월 3일에 달성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 과정이 이제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날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김영태, 1999. 독일통일 과정에서 정당체계의 변화와 역

다섯째, 극우주의 세력의 준동이다.¹³⁰ 극우주의는 자민족 중심주의, 타민족 배척주의, 차별주의, 민족주의, 인종중심주의(Ethnozentrismus), 사회다윈주의(Sozialdarwinismus), 반유대주의, 친나치주의, 우파독재수용, 외국인혐오(Ausländerfeindlichkeit), 성성주의(Sexismus) 등이 포함되는데, 이 사상들은 제국주의와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고, 생물적, 인종적 우월성을 합리화시키게 되는 등 차별과 배척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양산하게 된다.¹³¹

통일이라는 사회 대전환 속에서 불안정한 사회적 상황과 실추된 동독주민의 입지는 우리의식을 강조하는 ‘동독 소속감’ 현상이나 ‘동독적 가치의 재생’으로 나타나면서 역으로 타 집단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강화되는데 이때 차별의 대상은 외국인과 소수자 집단이 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무력적 권력행사는 혼란해진 동독사회의 질서극복과 조화로운 사회추구를 위해 정당화되는 것이다.¹³²

통일 이후 동독 노동시장의 침체는 만성실업과 직업교육의 부족으로 나타나고, 이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집단이 저학력층과 직업실습생, 실

.....
 할. 통일경제. 1999.9. p.75.

¹³⁰ 손기웅 외, 2009,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 동서독 통합과정 종합 평가』, 통일연구원, p.15.

¹³¹ 즉, 극우주의는 첫째, 민족공동체(Volksgemeinschaft)의 완성을 위해 단일민족화를 추구하고, 반다윈주의나 평등주의 등에 투쟁적으로, 때로는 폭력까지 동원하여 전투적으로 대항하며, 나아가 외국인이나 이방인 같은 소수자나 사회주변 집단에 대한 거세까지도 정당화시킨다. 둘째,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극우주의와 광신적 민족주의를 추구했던 정권들의 특징은 독재정권을 통한 부국강병을 합리화시키고, 전체주의적 정치구조를 추구하고, 사회질서와 규범으로서 권위주의, 위계질서주의, 규율우선주의를 지향한다. 동시에 민주주의나 내각의회 등 합리적인 정치체제나 자유로운 정치구조를 약하고 비효율적인 국가장치라고 폄하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셋째, 불평등이데올로기인 극우주의는 사회의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으로 폭력이나 선전, 선동 등의 사용을 정당화시킨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영란. 2007. 통일 이후 독일청소년 일탈문화에 대한 연구: 스킨헤드의 극우적 폭력실태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23(2). pp.132-133.

¹³² 통일 이후 동독사회에서 나타난 외국인혐오나 극우적 배경의 폭력사건들은 바로 이런 권위주의적 공격성과 파괴주의, 다양성의 거부와 우위적 지위강화(Superiorität)의 결과라고 해도 타당하다. 나아가 이 태도는 관습주의, 합리주의, 도그마티즘, 엄격주의(Rigorismus)와도 연관을 갖는다. 위의 책 p.151.

업자로 이들은 서독 생활수준에 못 미치는 자신들의 상황을 상대적으로 빈곤하게 평가함으로써 통일독일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고, 자신들이 처한 사회문제, 가정문제, 학교문제 등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폭력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낳게 한 것이다.¹³³

독일의 3대 극우정당인 민족당(NPD), 공화당(REP), 국민연(DVU)은 통일 후 1990년대 중반까지는 구 서독지역에서 지지율이 높았으나, 1998년부터는 구 동독지역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났는데, 지지율 변화도 구 서독지역에서는 부침을 거듭하면서도 일정한 범위를 유지하면서 낮아지는 반면, 구 동독지역에서는 역시 부침을 거듭하면서도 큰 폭의 성장세를 보여 왔다.¹³⁴ 비록 구 동독지역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인 2009년 선거에서도 그 수치는 3.3%에 불과해 독일 정당정치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는 못하고 있으나 이들의 구 동독에서의 영향력 확대는 구 동서독지역 간, 구 동서독인 간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조치가 요구된다 하겠다.

즉 이러한 상황은 구 동독지역의 민주적 정치문화가 부재한 현실에 기인한다는 것으로, 극우주의 세력의 확장은 서독지역에서도 일부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지만, 특히 동독지역에서 두드러진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¹³⁵ 극우정당 지지자는 주로 교육수준이 낮고 경제적 상황변화에 민감한 단순노동자 계층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이 경제위기에 노출

¹³³ 즉 통일독일 사회에 대한 불만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사회적 소외감으로 이어지고, 자신들의 무기력과 이에 대한 반항적 태도로서 극우적 배경의 폭력을 낳게 했다는 분석은 이 점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책 p.149.

¹³⁴ 정병기. 2010. 통일독일 20년의 정치적 변화와 방송의 역할. KBS 통일 방송 연구(2010.11.29.) http://jungbyungkee.net/think/essay/german_reunification_and_broadcast.htm

¹³⁵ 2000년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구 100,000명당 극우적 청소년 집단에 의해 양산되는 지역적 폭력실태는 서독 바덴 뷔템부르크주 0.96명, 바이에른주 0.50명, 헤센주 0.71명, 자알란트주 0.93명인데 비해 동독 튀링겐주 3.74명, 브란덴부르크주 2.93명, 작센 안할트주 2.47명, 메클렌부르크 포어포메른주 2.73명으로 동독지역은 서독지역에 비해 거의 3배를 웃돌고 있다.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Verfassungsschutzbericht, Bonn, 2000. 이영란. 2007. 통일 이후 독일청소년 일탈문화에 대한 연구: 스킨헤드의 극우적 폭력실태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23(2), pp.141에서 재인용.

되면서 경제적 불안정과 심리적 불안으로 인해 극우정당을 지지하는 상황은 구 동독 일부지역에서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¹³⁶ 새로운 정치체제가 구축되었으나 그에 걸맞은 정치문화는 아직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가운데 일부 계층의 불만이 극우정당을 지지하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¹³⁷ 구 동독지역에 민주적 정치문화 조성은 통일독일의 정당통합이 해결해야할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¹³⁸ 아울러 독일사례를 통해 이념에 순응된 사회화의 결과와 통일에 대한 불만이 폭력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표출된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이질적인 두 문화의 통합 과정이 얼마만큼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앞으로 통일 공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청소년 세대의 경우 통일에 직접 참여하는 독립적 주체라기보다는 통일의 당위성을 수용해야하는 교육적 차원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어 왔다는 점에서, 통일의 주체이자 통일문화의 전달자로서 민감성이 강한 청소년 세대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담론이 필요하다는 점도 중요하다 하겠다.¹³⁹

.....

¹³⁶ 극우정당은 1994년 구 동독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주의회 선거에서 두드러진 지지율 증가를 보였는데, 같은 해 있었던 작센 지방선거에서도 1990년 선거보다 1.3% 많은 득표율을 보였고, 튀링겐 지방선거에서도 지지율 증가를 보였다. 손기웅 외, 2009,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 동서독 통합과정 종합 평가』, 통일연구원, p.15.

¹³⁷ 이영란, 2007, 통일 이후 독일청소년 일탈문화에 대한 연구: 스킨헤드의 극우적 폭력상태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23(2), pp.149.

¹³⁸ 손기웅 외, 2009,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 동서독 통합과정 종합 평가』, 통일연구원.

¹³⁹ 이영란, 2007, 통일 이후 독일청소년 일탈문화에 대한 연구: 스킨헤드의 극우적 폭력상태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23(2), pp.149.

한국에의 시사점

제1절 통일과정에서 정당체계의 변화와 정당 간 통합

1989년 여름 이후 동독사회에 잠재되어 있던 개혁 요구는 봇물 터지듯 제기되었다. 이는 제기의 수준을 넘어 국가탈출 그리고 직접적인 시위의 형태로 나타났고, 이후 11월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야기하면서 동서독 통일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이 과정에서 동독에서는 그동안 사회주의통일당에 의해 억압되어 있던 다양한 요구들이 구체적인 정치세력화의 형태로 나타났다. 동독에서 이러한 정치세력화는 초기에 분명 동독사회에서 민주주의와 법치를 주장하는 개혁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1990년 3월 인민의회 선거 전후로 서독의 각 정당들은 동독에 파트너 정당을 찾고 이들을 후원하는 과정에서 합당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파트너 정당이 과거 동독에서 행했던 역할 등에 대한 판단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해 여러 시민단체와 정당들 간의 연합이 이루어졌다. 3월 인민의회 선거가 갖는 의미와 관련해 무엇보다 정당적인 차원에서는 동서독 제 정치세력과 정당들 간에 향후 통합을 위한 기반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10월 연방선거를 준비하는 전략, 전술적인 차원에서 정당들 간의 통합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당들 간의 통합

은 큰 무리 없이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동독 사람들의 이해가 얼마만큼 반영되었는지는 의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통합 또는 합당이라기보다는 서독의 정당에 의한 동독 정당의 합병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¹⁴⁰ 이러한 결과 구 동독 주민들은 통일된 독일이라는 사회에서 자신들이 갖는 특수한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조직을 갖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사회적 통합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구 동독 주민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2등 국민이라는 생각을 스스로 갖게 된 것이라 하겠다.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바야마르 공화국의 경험을 겪은 동독 그리고 발전된 정당정치 문화와 체계를 갖춘 서독의 경우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정당 통합의 경험이 시사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라 하겠다. 우리의 경우 정당정치의 문화와 체계에 있어 서독에 비하면 부족한 점이 많고 또한 민주주의적인 제도를 경험해 본 적이 전혀 없는 북한을 생각했을 때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민주주의적 제도를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주는 대목이다.

통일 이후 남북한은 결국 하나의 정치체계를 갖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정당체계에 있어서도 하나의 전국적인 조직체로 묶인 다수의 정당이 존재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당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이유라 하겠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키워나가면서 통일 과정에서 북한 스스로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할 정치적 주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¹⁴⁰ 송태수, 2006, 1989/90년 격변기 동독 내 서독 정당의 전략과 정책, FES-Information-Series, Friedrich Eberet Stiftung.

제2절 통일 후 정당체계 변모

구 서독과 남한의 정당체제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독일통일 과정의 정당통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통일 이후 남북한 정당통합을 예측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제한적으로나마 통일 한국의 정당통합에 대한 가능한 시사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우선 정치 및 사회적 갈등노선들에 바탕으로 한 기성 정당 체계가 통일로 촉발된 새로운 이해들을 담보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독일의 기존 정당들은 자본과 노동의 대립, 국가와 교회의 갈등, 성장과 환경의 갈등 등 정치 및 사회적 갈등노선들에 따라 형성되고 발전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통일 이후 독일정당체제에서 지역정당으로서 민사당의 지속적인 존속은 외적인 국가 통일이 경제, 사회, 문화 영역의 내적 통일을 동시에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기존 국민정당들이 제공하는 사회적 갈등노선에 따른 이익대변만으로는 동독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이해 및 정체성을 제대로 대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많은 동독주민들에게는 동서독 간의 지역 갈등이 사회 전체와 관련된 갈등노선들보다 더 커다란 중요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⁴¹

이렇듯 통일독일의 정당통합의 시사점으로, 서독의 기존 정당들이 동독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이해 및 정체성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 결과 민사당/좌파당의 지속적인 세력화가 진행되었음을 상기해 볼 때 남북한 통일 후 남한의 기존 정당들이 북한 지역주민들의 이익과 불만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사상에 순응된 북한주민과 자본주의와 개인주의에 익숙한 남한주민의 의식 충돌 등 다양한 갈등요인을 양산할 수 있다.¹⁴² 이에 따라 북한지역

¹⁴¹ 김경미. 2002, 독일통일과 정당체제의 변화: 민주사회주의당(PDS)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0집. pp.46.

¹⁴² 이영란. 2007. 통일 이후 독일청소년 일탈문화에 대한 연구: 스킨헤드의 극우적 폭력실태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23(2). p.155.

에 북한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역정당이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¹⁴³ 아울러 통일에 대한 불만족 증가에 따라 지역정당은 점차 정치적 세력 확장을 피하면서 그 갈등의 폭은 통일 한반도 전체에 걸쳐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 있다.¹⁴⁴ 한걸음 더 나아가 독일의 민사당처럼 통일 이후 북한지역을 전체적으로 대변하는 정당이 형성되고 좌파 이데올로기를 표방하면서 남한의 진보적인 집단의 지지를 동원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바 이념에 의한 정당지형이 재편되는 상황이 예상된다. 또한, 이에 대립하여 남한지역 보수정당의 대연합이 진행된다면 그야말로 정당 간 갈등을 넘어선 구 남북한 지역 간의 갈등 시나리오도 예상해 볼 수 있다.¹⁴⁵

결국 독일의 정당통합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정당통합은 당리당락의 이합집산으로 끝나는 단기적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정당체계의 변화를 이끌어 오는 시간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과제라는 점이다. 통일 후 구 동독지역의 정당체계는 서독의 제도가 이전되었음에도 기민련과 사민당 등 거대 양당 외에 민사당과 좌파당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었다. 아울러 구 서독지역의 경우 거대 양당의 우월적 지위는 점차 감소하면서 전통적인 정치지형은 상당히 변화되었고 민사당과 좌파당의 약진도 눈에 띈다. 결국 이러한 변화의 기저에는 통일과정에서 서독정당들이 쏟아낸 통일에 대한 장밋빛 공약들이 현실화되지 못하면서 구 동독지역 주민들의 실망감에 연유한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비록 통일 초기 동독인들은 새로운

¹⁴³ 현재 남한의 정당들은 지역정당의 성격을 강하게 띤다는 점에서 구 서독의 정당들보다도 훨씬 더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지역에 다수의 지역정당(평안도당, 함경도당 등)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남북한 통일 이후 정당체계는 다수의 지역정당들의 난립으로 특징지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경미, 2002, 독일통일과 정당체계의 변화: 민주사회주의당(PDS)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0집, p.46.

¹⁴⁴ 이영란, 2007, 통일 이후 독일청소년 일탈문화에 대한 연구: 스킨헤드의 극우적 폭력상태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23(2), p.155.

¹⁴⁵ 김경미, 2002, 독일통일과 정당체계의 변화: 민주사회주의당(PDS)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0집, pp.46-47.



정치체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으나 통일과정에서 남발된 ‘동독 부흥의 약속’이 불발되면서 정치에 대한 실망감이 늘어났고 이에 따른 정치적 무관심 혹은 구 동독 주민의 이해에 부합하는 민사당/좌파당을 선택하거나 극우 정당으로 빠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정당들은 통일과정에서 책임감 있는 공약제시 등 정치활동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정치적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당차원에서 북한지역에 대한 충분한 관심과 의견수렴을 통해 독일에서 보이듯이 통일 후유증으로 인한 극우정당이 출현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긴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국문>

- 김경미, 2002. 독일통일과 정당체제의 변화: 민주사회주의당(PDS)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0집.
- 김면희, 2010. 통일독일의 정치지형 변화 연구: 정당체제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20(2).
- 김영윤·양현모, 2009, 『독일, 통일에서 통합으로-문답으로 알아보는 독일통일』, 통일부
- 김영태, 1999. 독일통일 과정에서 정당체계의 변화와 역할. 통일경제, 1999.9.
- 민족통일연구원·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1998. 동·서독의 정치통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공동주최 워크샵(98.6.15-17) 발표논문집.
- 박성조·양성철 공저, 1991, 『독일통일과 분단한국』,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박청평, 2004, “독일 군정시기의 정치적 발전 추이” 『경주사학』 제23편, p.181-222.
- 손기웅, 2010, 『독일통일 20년: 현황과 교훈』, 통일연구원.
- 손기웅, 강구섭, 양대중, 2009,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 동서독 통합과정 종합 평가』, 통일연구원
- 송태수, 2006. 독일통일에서 정당의 역할. 사회과학연구 14(1).
- 송태수, 2006, 1989/90년 격변기 동독 내 서독 정당의 전략과 정책, FES-Information-Series, Friedrich Eberet Stiftung.
- Alexander Thumfart 저, 안미현, 최경인, 안미라 역, 2007, 『동서독의 정치통합』, 통일연구원.
- 유지훈, 2001, “독일사회민주당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18(2), pp.195-229.
- 이경호, 2005. 독일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고찰. 국제정치논총 45(4).
- 이규영, 2000. “독일 의원내각제와 제도적 안정 운영”. 박호성, 이종찬 외 지음. 한국의 권력구조 논쟁 II: 권력구조의 운영과 변화. 풀빛.
- 이영란, 2007. 통일 이후 독일청소년 일탈문화에 대한 연구: 스킨헤드의 극우적 폭력실태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23(2). pp.132-133.
- 정병기, 2011. 통일독일 구 동독지역 정당체제: 연방주별 특수성이 반영된 새로운 다양성. 한국정치학회보 45(4).
- 정용길, 1997, “독일의 정당구조와 정당통합”, 『한국정치학회보』 30호, 4집, p.401-418.
- 정용길, 2006. 동독의 체제전환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16(1).
- 통일부, 2011, 『독일의 통일·통합정책연구』 제1권 분야별 연구.
- 헬무트 바그너, 2007. 특수사례로서 동독의 체제전환: 특별한 조건과 예외적 결과. 현대북한연구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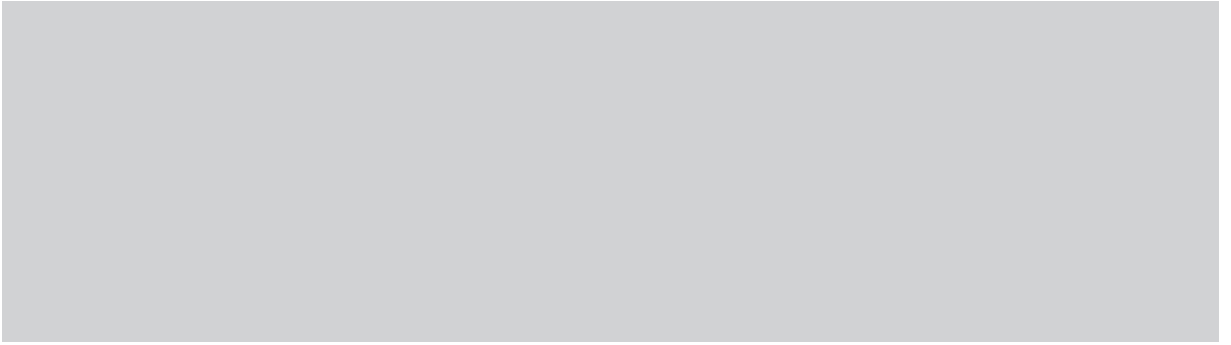
〈외국 문헌〉

- Alemann, Ulrich von. 2000. *Das Parteiensystem der Bunderepublik Deutschland*.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 American Association for a Democratic Germany, 1946, *Der neue Kampf um Freiheit. Briefe und Dokument Berliner Sozialisten*, New York.
- Bastian, Jens. 1995. "The *Enfant Terrible* of German Politics: The PDS Between GDR Nostalgia and Democratic Socialism." *German Politics* 4, No. 2 (August).
- Berg, Stefan & Deggerrich, Markus and Hornig, Frank, "Das Vergiftete Erbe," *Der Spiegel* 43/2009.
- Betz, Hans-Georg & Helga Welsh, 1995. "The PDS in the New German Party System." *German Politics* 4, No3(December).
- Brunner, Wolfram, 1999. "10 Jahre nach dem Mauerfall: Die Bewertung der deutschen Einheit und der PDS in Ostdeutschland." *Bereich Forschung und Beratung-Gesellschaft- und Innenpolitik-*. Abt. Empirische Politikforschung: St. Augustin Oktober, 1-10.
-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Verfassungsschutzbericht*, 2000.
- Derlien, Hans-Ulrich. 1997: *Elitenzirkulation zwischen Implosion und Integration. Abgang, Rekrutierung und Zusammensetzung ostdeutscher Funktionseleiten 1989-1994*, in: Wollmann, Hellmut, u.a. (Hrsg.)(1997): *Transformation der politische-administrativen Strukturen in Ost-deutschland*, Leske und Budrich, Opladen.
- Die Zeit*, 2000.9.28. http://www.zeit.de/2000/40/politik/umfrage_vereinigung.html
- Falter, Jürgen W., & Markus Klein. 1994. "Die Wähler der PDS bei der Bundestagswahl 1994: zwischen Ideologie, Nostalgie und Protest."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51-52.
- Förster, Peter. 2003. "Junge Ostdeutsche heute: doppelt enttäuscht," *APUZ: B15*.
- Gabriel, Oscar W. and Niedermayer, Oskar. (2001), "Parteimitgliedschaft: Entwicklung und Sozialstruktur" in Oscar W. Gabriel and Oskar Niedermayer and Richard Stöss *Parteiendemokratie in Deutschland* (Bonn, Opladen).
- Jesse, Eckhard. 2005. "Das Auf und Ab der NPD," *APUZ: Nr.42*.
- Neugebauer, Gero und Stöss, Richard, 2008. "Die Partei Die Linke. Nach der Gründung in des Kaisers neuen Kleidern? Eine politische Bedarfsgemeinschaft als neue Partei im deutschen Parteiensystem." Oskar Niedermeyer, Hg. *Die Parteien nach der Bundestagswahl 2005*, 151-199.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 Neugebauer, Gero und Stöss, Richard, 2008. *Die PDS: Geschichte. Organisation.*

- Wähler, Konkurrenten, Opladen: Leske+Budrich.*
- Oscar, W. Gabriel und Niedermayer, Oskar 2001, "Parteimitgliedschaft: Entwicklung und Sozialstruktur" in Oscar W. Gabriel and Oskar Niedermayer and Richard Stöss Parteiendemokratie in Deutschland (Bonn, Opladen).*
- Rattinger, Hans & Jürgen Maier, 1998, "Der Einfluß der Wirtschaftslage auf die Wahlentscheidung bei den Bundestagswahlen 1994 und 1998/"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52.*
- Schmidt, Ute, 1997, Von der Blockpartei zur Volkspartei? Die Ost-CDU im Umbruch 1989-1994, Opladen,*
- Shell Jugendstudie, 1990, 2002, Hamburg.*
- Welzel, Christian, 1997, Rekrutierung und Sozialisation der ostdeutschen Elite – Aufstieg einer demokratischen Gegenelite, in: Bürklin, Wilhelm und Rebenstorf, Hilke(Hrsg.) (1997): Elite in Deutschland, Rekrutierung und Integration, Opladen Leske und Budrichs.*
- Wolle, Stefan, 1998, Die heile Welt der Diktatur, Alltag und Herrschaftin der DDR 1971-1989, Bonn.*
- Wunnicke, Christoph, 2014, Die Blockparteien der DDR, Kontinuitäten und Transformation 1945-1990, Schriftenreihe des Berliner Landesbeauftragten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DR, Band 34.*

독일통일 총서 6

정당분야 통합 관련 정책문서



문서를 통해서 본 통일과 정당

(사회주의통일당의 변화를 중심으로)

베르너 페니히 / 이은정

(독일 베를린 자유대)



들어가며

독일통일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무엇보다도 변혁을 요구하는 동독 국민들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압력과 동독의 지도부가 그것을 무력으로 진압하지 못하게 만든 다양한 국내적, 국제적 요인들이었다. 1989년 동독 지도부가 국민들의 봉기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적인 진압을 고려하였다고 한다. 동독 지도부는 이미 1953년 6월 17일 베를린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선언하고, 경제, 사회, 정치적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을 때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군사적으로 진압한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1988년 고르바초프가 개혁정책을 실행하면서 브레즈네프 독트린(Breschnew-Doktrin)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사회주의 국가들에 독자적인 노선추구를 허용할 것을 천명한 후 동독 지도부의 입지가 오히려 약화되었다. 물론 고르바초프가 이러한 새로운 정책을 통해 추구한 것은 “공산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이었다.

동독의 비판적 시민들 또한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에 열광하였고 동독정부에 대해서도 그러한 개혁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독 엘리트들은 많은 압력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1989년 동독의 정치엘리트들은 마치 급변하는 현실에 압도당한 것과 같은 인상을 주었다. 1989년 여름에 서독으로 이주를 원하는 동독주민들이 부다페스트, 프라하, 바르샤바 주재 서독대사관에 대거 진압하였고, 가을에는 라이프치히에서 7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월요일의 촛불시위에 참여하였다. 이들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경찰과 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발포하지 않았던 것은 독일통일과정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경찰과 군이 시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음으로써 동독 지도부에서 강경파가 주도권을 잡고 있

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 이후 동독의 지도부는 정치변화를 주도하기보다는 격변하는 상황에 수동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동독의 체제붕괴를 설명하는 학자들은 “내적 파괴(Impllosion)”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고령의 간부들이 “무계획적으로, 무조직적으로, 부분적으로는 좌절된 채” 정치적 결정을 내리면서 체제가 스스로 내적으로 붕괴했다는 것이다. 동독 정부의 권력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1989년 11월 9일 저녁, 베를린 장벽의 갑작스러운 개방을 만들었던 귄터 샤보브스키(Günther Schabowski)의 기자회견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시기에 동독 지도부는 이미 개혁을 요구하는 반체제인사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대규모 시민운동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 동독 내에서 체제 개혁을 요구하던 반체제 세력조차도 자신들이 발휘하는 막강한 영향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시기에 동독에서 새로운 정치적 실험을 추구하는 다양한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탄생하였고, 각종 단체의 대표들이 원탁회의를 구성하여 동독의 민주화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원탁회의는 베를린에 설치된 중앙원탁회의뿐만 아니라 기초단체 Kommune와 베치르크(Bezirk)라 불리는 동독 특유의 지역단위에도 설립되었다. 1989년 겨울 동서독의 언론은 연일 원탁회의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도하였고 국민들 또한 그런 보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원탁회의를 중심으로 진행된 다양한 개혁조치들을 통해 과거 동독의 지배구조들은 그 정당성을 상실하였고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불필요한 것으로 전락하였다. 중앙원탁회의에서 자유로운 총선거를 통해 최고인민회의를 새로 구성하기로 결정하였고, 선거일은 1990년 5월 6일로 결정하였다가 다시 1990년 3월 18일로 앞당겼다. 그만큼 당시 동독은 정치적으로 격변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동독의 정당이 가장 급격하게 그리고 본질적으로 변화하였다. 이 장에서는 주로 동독을 지배하였던 정

당 즉 사회주의통일당(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ED, 이하 사통당)에 그 초점을 맞추어서 통일 전후 구 동독지역 정당의 변화를 설명할 것이다.

통일 과정에서 서부 진영의 많은 사람들은 사통당이 민주적 자유선거 시스템 하에서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러나 사통당은 1989년 12월에 당명을 민주사회주의당(Partei des Demokratischen Sozialismus-PDS, 이하 민사당)으로 개칭하였고 결국 살아남아서 변화의 길을 걸어갔다. 2014년에는 민사당과 서독의 좌파가 통합한 좌파당(Die Linke)이 신연방주의 하나인 튜링겐의 주총리를 배출할 정도로 통일된 독일에서 사통당은 여전히 자신의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사통당의 변화과정은 동독의 당 수뇌부와 지도층 인사들 대부분이 개혁과 적응 기간 이후 독일통일에서 어떻게 국가 요직을 다시 수행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흥미로운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과정에서 드러나는 동독 및 신연방지역에서의 정당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특히 두 개의 질문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 사통당이 통일과정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으며, 살아남기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자체적인 변화를 꾀했고, 아울러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제반 여건들이 사회주의통일당의 생존에 도움을 주었는가?
- 사통당이 어떻게 단순히 살아남은 것뿐만 아니라 신연방주들 내에서 연정이라는 형식을 통해 정부에 참여하고 정권을 창출할 수 있었는가?

1989년 격변기 동독 정당의 변화

제1절 동독의 정당구조

동독은 형식적으로는 단일정당의 독재국가가 아니었다. 사통당 외에도 독일어로 Blokpartei라고 불리는 네 개의 위성정당들이 존재하는 다당제 시스템이었다.

- 동독 기독교민주당(Christlich-Demokratische Union Deutschlands, 이하 동독 기민당)
- 독일 민주농민당(Demokratische Bauernpartei Deutschlands-DBP)
- 동독 자유민주당(Liber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LDPD)
- 독일 민족민주당(Nation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NDPD)

표 2-1) 동독 위성정당 당원 수의 대략적 변화 추이(1949년~1987년)

| | 1949년 | 1965년 | 1977년 | 1982년 | 1987년 | 1977년~1987년 (증가세) |
|--------|----------|---------|---------|---------|---------|----------------------|
| 동독 기민당 | 211,200* | 101,000 | 115,000 | 120,000 | 140,000 | 22% |
| 민주농민당 | 184,000 | 65,000 | 74,000 | 82,000 | 106,500 | 44% |
| 자유민주당 | 23,300 | 84,000 | 91,000 | 103,000 | 115,000 | 27% |
| 민족민주당 | 35,000 | 79,000 | 84,000 | 91,000 | 110,000 | 31% |
| 합계 | 422,500 | 329,000 | 364,000 | 396,000 | 471,500 | 30% |

물론 이 정당들은 정치적으로 독립된 행보를 취할 수 없었으며, 지배 정당의 권력 행사에 그 어떤 반대 의견도 제기하지 못하는 입장이었다. 실질적으로는 사통당이 국가와 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것을 지배하였다. 사통당의 지도적인 역할은 동독의 헌법에도 명기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1989년까지 사통당과 동독이라는 국가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더욱이 동독 체제 하에서 두려움의 대상이자 감시 및 통제를 담당했던 동독 국가안전부(Stasi)는 자타가 공인하듯 “정당의 칼과 방패” 역할을 했었다.

제2절 1989년 사회적 변화에 대한 사통당의 대응

정치적 조직으로서 정당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활동하는 기구이다. 그것은 동독과 같은 독재 국가에도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 정치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지도부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변화를 감지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1989년에 동독의 상황을 보면 지배정당인 사통당이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늦게야 그것을 인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변화의 의미와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잘 대응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사통당이 비로소 스스로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한 후에는 그로 인해 사회적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었다.

동독 사회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된 결정적인 계기는 1989년 5월 7일에 실시된 지방 의회 선거였다. 사통당 지도부는 이미 선거 전초전에서 국민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고, 불만을 갖고 있는 비판적 세력이 결집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주민들이 불만을 제출하는 청원서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동독 주민들은 불만이 있을 경우 담당기관에 직접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장치, Eingabe를 형식적으로나마 가지고 있었다. 동독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의 지배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원서라고 번역될 수 있는 이 장치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비밀경찰의 억압과 감시를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불만을 해당기관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반체제 세력으로 낙인찍힐 것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였다. 그런데 1989년 5월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되기 이전에 이러한 불만을 제기하는 청원서의 수가 1986년과 비교할 때 51% 증가하였다. 그것은 동독의 주민들이 비밀경찰에 의한 억압의 위협을 감수하더라도 변화를 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며, 동시에 정부와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높았는지 보여주는 분명한 지표였다. 이러한 청원서의 내용들은 주로 주거문제나 소비재 공급과 관련된 문제였지만 사통당 지도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다.

1989년 초에 기록된 다음과 같은 정보에 따르면 동독 내각은 국민들 사이의 이러한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다. - “전화와 같은 통신 수단의 연결이나 신문, 잡지의 구독, 가구 구입 및 자동차 구입 대기 기간과 같은 국민들의 청원 내용은 점점 더 다양해져 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에 국가는 현재로서는 국가 경제적으로 해결 방법이 없다고 응답했고, 장기간 지속된 공급 결핍으로 국민 대부분은 그러한 국가의 주장을 더 이상 수용하지 않았다.”¹

사통당 지도부는 어떠한 개혁 의지도 갖고 있지 않았고, 동독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 때문에 불만을 피력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반체제 인사들은 1989년 초에 차기 최고인민회의 선

¹ “1989년 5월 7일 지방 의회 선거 결과와 관련된 주요 문제점에 관한 지적”, 비밀경찰 문서 ZA ZAIG 5352, Mitter, Armin/Wolle, Stefan, (편), “Ich liebe euch doch alle...” Befehle und Lageberichte des MfS, Januar bis November 1989. Berlin 1990, 97p. 이하에서 재인용.

그를 위해 “녹색 리스트(Grüne Liste)”를 작성할 것을 발표했다. 반체제 인사들의 이러한 노력의 목적은 더 이상 단순한 체제 개혁과 자유화가 아니라, 반체제 세력의 확대에 이어졌다. 이를 위해 모인 반체제 세력 내의 주도적인 인사들의 성향을 보면 일부는 동독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만 한다고 주장하였고, 또 다른 한 쪽은 체제를 완전히 전복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성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1989년 초 두 그룹은 1989년 5월 7일에 치러질 지방 의회 선거에 선거 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5월의 선거에서 동독 정부가 선거 결과를 조작하였다는 사실 또한 밝힐 수 있었다.

사통당의 지도부는 그때까지도 상황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선거결과 조작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사통당의 이러한 태도를 동독 주민들은 더 이상 수긍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당 내부에서는 불안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당 내부에 존재하던 개혁세력이 이를 계기로 응집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사통당에 충성해 온 위성정당들의 입지를 어렵게 만들었다. 사통당 지도부의 대응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반체제 운동에 합류하였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동독을 떠나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었다. 그 결과 서독으로의 이주 신청 숫자가 극적으로 증가하였다.²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동독을 떠나는 것이 대안될 수 없으며, 동독사회를 개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그들은 동독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존재한다고 확신했다.

사통당 지도부가 1989년 5월 지방선거 결과 조작에 대한 반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은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개인적인 용기를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는 구심점을 제공하였다. 사통당 지도부의 나태함이 동독

² 사통당 특별 전당대회(Außerordentlicher Parteitag) (문서번호 2).

내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동독 국민과 사통당 지도부는 다원주의적 정당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갖고 있지 않았다. 192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의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없었다. 사통당의 민주주의 개념은 개인의 자주적 결정을 중심으로 하는 참여가 아닌 정치적 협의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국민 대부분이 자유선거에 대해 알지 못했다. 이 지역에서는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였던 1932년 9월에 열린 자유선거가 마지막이었기 때문이다. 사통당 지도부 역시 제한된 민주주의 경험만을 갖고 있었으며, 이들에게 정치적 반대세력(Opposition)이란 위험 세력과 동일한 것이었다. 이들은 건설적이며 체제에 내제하는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실질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세력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즉 당 내부적으로 근본적인 개혁으로 가는 길이 모두 차단되어 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변혁기 당의 성격과 정신에 대한 당 내부적 평가 및 성찰에 대한 막스 클라인(Max Klein)의 글은 이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³

그런 상황에서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고, 1989년 11월 28일 헬무트 콜(Helmut Kohl) 서독 수상이 연방 의회에서 향후 독일통일로 가기 위한 10개항 계획(Zehn-Punkte-Plan)을 발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통당의 중앙 지도부는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고, 여전히 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 결과 사통당 지도부는 국민들로부터 뿐만 아니라, 당 내부에서도 존경과 신뢰를 잃게 되었다.

이 시기에 대규모 탈당이 일어났으며, 특별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군 대표자 회의(Kreisdelegiertenkonferenzen)에서는 과거 사통당과 국가 지도층의 직권 및 권력 남용에 대한 거침없는 논쟁이 진행되었다. 이때부터 사통당의

³ 1989년 12월 9, 10일과 15, 16일에 열린 사통당 특별전당대회에 관한 개인적 회고 (문서번호 4).

위성 정당이었던 동독 기민당과 민주농민당, 자유민주당, 민족민족당은 사통당과 거리를 두게 된다. 1989년 12월 1일 최고인민의회는 동독 헌법 1조, “노동자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마르크스-레닌주의 당”의 지도적 역할, 즉 사통당이 국가와 사회에서 지도적 역할을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의하였다. 1989년 12월 4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대규모 시위에서는 15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포츠담(Potsdam)과 칼-마르크스 시(캄니츠 시), 할레(Halle), 게라(Gera), 노이브란텐부르크(Neubrandenburg)에서도 수천 명이 시위에 나섰다.⁴

이와 관련해 당 중앙위원회(Zentralkomitee)는 12월 3일에 열린 마지막 회의를 통해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 한스 알브레히트(Hans Albrecht), 베르너 크로리코브스키(Werner Krolkowski), 귄터 클라이버(Günther Kleiber), 에리히 밀케(Erich Mielke), 게르하르트 뮐러(Gerhard Müller), 알렉산더 샬크-골로드코브스키(Alexander Schalck-Golodkowski), 호르스트 진더만(Horst Sinermann), 빌리 슈토프(Willi Stoph), 해리 티쉬(Harry Tisch), 헤르베르트 치겐한(Herbert Zigenhahn), 디터 뮐러(Dieter Müller)를 직권 남용과 비리를 이유로 중앙위원회 지도직에서 제명하였다.⁵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당일 새로 선출된 에르푸르트(Erfurt) 지역의 헤르베르트 크로커(Herbert Kroker) 제 1서기를 대표로 하는 특별실무위원회(Arbeitsausschuss)가 당 지도권 인수와 코앞으로 다가온 특별 전당대회 준비를 위해 구성되었다.⁶

1989년 12월 8, 9일과 16, 17일 베를린에서 열린 특별 전당대회는 당이 스탈린적 체제와 완전히 결별하고, 현대적이며 민주사회주의적인 방향으로 진일보하는 것을 의미했다. 특별 전당대회에서 가장 큰 찬반양론을 일으켰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사통당을 해체하고, 동독에 좌파적 사회주의 정당을

⁴ 사통당 특별 전당대회(Außerordentlicher Parteitag) (문서번호 2).

⁵ 에리히 호네커를 비롯한 당 중앙위원회 전원 사퇴 (문서번호 1).

⁶ 사통당 특별 전당대회(Außerordentlicher Parteitag) (문서번호 2).

새로이 건설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사통당을 쇠신하고 개혁할 것인가? 당 해체에 대한 제안은 다수의 반대에 부딪혔다. 당 서기로는 그레고어 기지가 선출되었으며, 사통당-민사당으로의 전환이 결의되었다. 이는 사통당의 형식적인 종말과 민사당의 창당대회(Inaugural-Parteitag)로 간주되었다.⁷

1989년 12월 17일에 새로이 만들어진 정강(政綱)은 사통당 지도부가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가 사통당의 기본적인 이념의 틀을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그에 따르면 사통당은 여전히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에 기반을 둔다. “사통당의 근원은 공산주의, 사회민주주의적 노동운동, 사회주의, 반파시즘, 평화주의 및 국제적 좌파 전통, 특히 레닌의 전통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정당의 이론적인 근본은 마르크시즘이다”이라는 문장만으로는 사통당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면서 스스로도 변화하기로 결정한 것을 분명히 알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당은 정치 시스템 내에서 다른 정당들과 동등하다”고 명기된 문장을 보면 사통당이 일당독재에 대한 요구를 분명히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었다.

나아가 사통당의 새로운 정강에는 사통당의 새로운 명칭인 민사당과 사회민주주의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SPD, 이하 사민당)의 차이를 강조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사민당은 사회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데 반해, 민사당은 민주사회주의를 고수한다. 새로이 창설된 동독의 사민당은 서독 사민당과 달리 자본주의를 비판하지만, 민사당은 그렇지 않다. 민사당은 국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와 거리를 둔다. 사민당은 동독의 서독 합병을 뜻하는 즉각적인 경제-화폐 연합을 지지하지만, 민사당은 동독과 서독의 상호적 접근을 지지한다. 사민당

⁷ 사통당 특별 전당대회(Außerordentlicher Parteitag) (문서번호 2).
 사통당/민사당 정관-민주사회주의당 (문서번호 3).
 사통당 특별전당대회에 관한 개인적 회고 (문서번호 4).

의 당 정체성은 민사당에 대한 거부적 태도와 독일통일에 대한 지지로 점철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민당은 민사당과 객관적인 대결을 벌일 수 없다. 반대로 민사당은 사민당과의 건설적인 관계를 위해 노력한다.⁸

물론 사통당은 스스로 새로운 정강의 도입을 통해 자발적인 개혁에 성공한 “새로운 정당”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사실 예전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새 정강을 통해 당 지도부는 최소한 과거를 뒤로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사통당 지도부가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했다고 해서 개혁을 위해 당을 해체할 의사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나아가 사통당 지도부는 신속한 변화를 실현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았다. 그 근거로 얼마 후에 새로이 도입될 정당법을 들었다. “늦어도 내년 초에는 이 같은 문제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정당법이 재정된다. 우리는 이 법안을 기다리고 있다.”⁹ 여기에는 당의 명칭 문제도 포함되었다.

1989년 말, 1990년 초 동독에서는 새로운 정당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당장 시급하며,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왜냐하면 당시 거의 모든 동서독 관계자들이 두 개의 독일 국가 체제가 적어도 일정 기간(최소한 2년 내) 동안은 유지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만약 동독이 갑자기 해체될 경우 자산, 소유권 및 재정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므로, 당분간은 두 국가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인위적으로 통제되는 변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다른 사회 권력들과 마찬가지로 사통당-민사당은 급격히 진행되는 변화에 놀랐으며, 점점 빨라지는 변화 속도에 맞춰 그때 그때 겨우 반응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많은 변화들 속에서 사통당 지도부는 1990년 2월 1일 당 수뇌부 의장단의 제안에 따라 “민주사회주의당”으로 당명을 바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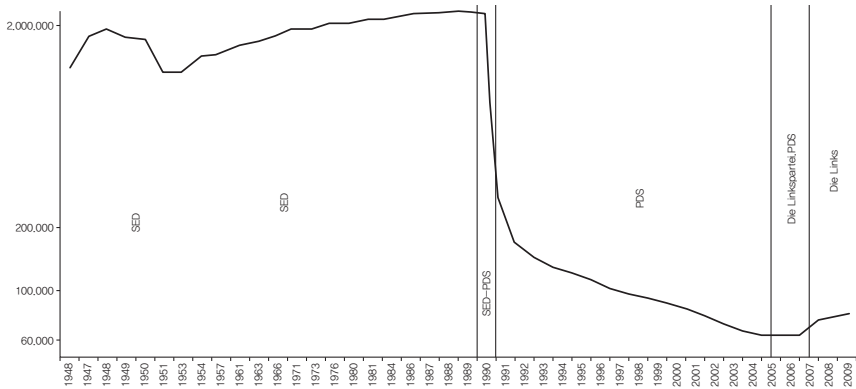
⁸ 민사당과 동독 사민당의 차이 (문서번호 7).

⁹ 독일 사회주의통일당-민주사회당의 임시 조례 (문서번호 59. 445p).

로 결의하였다.¹⁰ 1990년 2월 4일에 공식적으로 당명을 민주사회주의당(Partei des Demokratischen Sozialismus-PDS)으로 바꾸고 삼권분립과 정당다원주의를 표방할 것을 공표했다.¹¹

사통당이 이러한 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물론 급격한 사회적 변화 때문이었다. 그것은 무엇보다 사통당 당원 수의 급격한 감소를 통해 분명히 드러났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1989년 말의 상황은 사통당에게는 마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과 같았다. 1989년 초까지만 해도 230만 명에 달하던 당원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1990년 5월에 사통당의 당원 수는 45만 명으로 감소하였다(표 2-2 참조). 그런 상황에서 사통당 지도부는 당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여 재산을 이 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¹²

표 2-2 > 1946년부터 2009년까지의 사통당/사통당-민사당/민사당/Die Linkspartei(좌파당), 민사당/Die Linke(좌파당) 당원 수 변화 추이



사통당: 1946~1989, 사통당-민사당: 1989~1990, 민사당: 1990~2005, 좌익정당, 민사당: 2005~2007, 좌파당: 2007~현재.

¹⁰ 사통당의 민사당으로의 당명 변경 (문서번호 6).
¹¹ 사통당/민사당 정관-민주사회주의당 (문서번호 3).
¹² 사통당/민사당 정당 자산 확보를 위한 조치 (문서번호 44).
 건축물, 토지, 주택 등의 사통당 자산 매각 및 소유권 이전 (문서번호 45 a~c).
 사통당/민사당 기관 전환 (문서번호 46 a~g).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통당을 탈당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당에서 제명된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그 외의 주요한 이유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순수한 교리를 추종하던 사람들은 사통당의 새로운 방향이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지금까지 이어져 온 동독의 “실제로 존재하는 사회주의” 실천에 대한 반역이라 생각했다.
- 자신의 영달만을 생각하던 기회주의자들은 더 이상 사통당에 가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사통당 당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보장하는 대안들이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 사통당 내의 개혁 세력들은 지도부의 완고함과 개혁할 수 없는 현실에 실망하였고 당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는지 지켜본 후에 정치적 참여 여부를 결정내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고자 하였다.

한스 모드로우(Hans Modrow) 동독 총리는 1990년 2월 초 “국가 전체를 위한 책임을 지는 정부(Regierung der Nationalen Verantwortung)”라는 이름 하에 일종의 거국내각을 수립하였다.

제3절 신생 정당의 등장

1990년 2월 21일 동독의 최고인민의회는 새로운 정당법을 도입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를 통해 정당의 법적 지위를 새로이 규정하였다. 이 법안의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새로운 내용은 제3조에 규정된 정당 구성에 관한 국민의 권리이다: “정당은 자유롭게 구성될 수 있으며, 어떠한 허가도 요하지 않는다.” 사통당의 특수한 지위(Sonderstellung)는 제6조를 통해 폐지되었다: “국가적 기관과 기업, 기관이 지원 서비스를 한 정당에 제공하거나, 허용할 경우, 나머지 정당 모두는 그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민주주의 출발(Demokratischer Aufbruch)”과 같은 신생 정당들은 당사

확보와 출판사 및 언론사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었다.

그 외의 규정들은 서독의 정당 법령을 모델로 작성되었다: 정당은 민주적으로 건설되어야 하며, 정관이 있어야 한다. 정당은 당 간부진을 통해 대표된다. 최고 위원회는 간부진을 선출하고, 당의 해체를 결정하는 기구는 총회 또는 전당대회이다. 정당은 자산과 구매 목록에 대한 회계 보고를 할 의무가 있다. 신생 정당들은 사통당 그리고 위성정당들과 달리 재산을 보유하지 않으므로, 국가가 재정을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

이 시기 동독에는 이미 협회와 네트워크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시민 이니셔티브 결성노력이 있었다.¹³ 그 중에 몇 개의 단체만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새로운 정당의 창당 및 역사적 정당의 부활,
예: 독립사회민주당(이하; USPD)¹⁴
- 독일공산당(이하; KPD)의 부활 시도¹⁵
- 좌파 민주주의자 연합을 위한 시도¹⁶
- 독립 노조 설립을 위한 호소¹⁷
- 동독 영토에 그 어떤 극우주의 조직이나 정당(예: 공화당(Die Republikaner))도 허락하지 않기 위한 노력¹⁸
- 카네이션(Die Nelken)¹⁹
- 국가안전보위부 해체를 감독하기 위한 시민 위원회 노르만넨 슈트라

.....

13 신설 정당 및 정치 연합 (문서번호 40).
 14 독립사민당(USPD) 설립에 관한 단상 (문서번호 34).
 15 독일공산당(KPD) 부활을 위한 이니셔티브의 토론문 (문서번호 35).
 16 좌파 민주주의 총연합을 위한 호소문 (문서번호 37).
 17 독립 노조 설립을 위한 발기문 (문서번호 33).
 18 동독 인민의회 의장단 제안서 (문서번호 36).
 19 마르크스주의적 정당 창당 그룹/카네이션 (문서번호 32).

세(Normanen Strasse)²⁰

- 녹색 동맹(Die Grüne Liga)²¹
- 라일락 공세(Lila Offensive)-여성 운동 지원²²
- 단일 정당으로 굳어있지 않고, 초당적 통합을 통해 활동하고자 하는 드레스덴 그룹 20(Gruppe der 20)과 같은 여러 운동들²³
- 평화와 인권을 위한 이니셔티브²⁴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바로 정치무대에서 사라졌다. USPD나 KPD를 부활시키려는 시도도 있었다.²⁵

6개의 정치 그룹(사민당, 민주주의 출발, 신 포럼, 민주주의 지금, 좌파 연합(Vereinigte Linke), 이니셔티브 평화와 인권)은 1990년 3월 18일로 예정된 동독 총선에서 지금까지의 지배 세력을 해체시키기 위해 1990년 1월 3일 동맹90(Bündnis 90)을 구성 하였다.²⁶ 동맹90에서 가장 막강한 세력을 지닌 당은 당원 수가 10만 명이 넘었던 신포럼(Neues Forum)으로 유일하게 전국 각지에 당원을 갖고 있었다. 반면 “민주주의 지금”이나 “이니셔티브 평화와 인권” 같은 정치 집단은 전국적으로 당원수가 천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수파에 불과했다. 동맹90이 공동으로 지향한 강령의 토대는 시민 중심의 민주주의 이해와 동독에서 시장경제를 발전시키자는 촉구였다. 동맹90은 복지과 환경 문제에도 힘썼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과 성과주의를 강력히 지지했다.

²⁰ 시민 위원회 “노르만엔 거리” (문서번호 38).

²¹ “녹색 동맹” 설립을 위한 호소문 (문서번호 39).

²² “보랏빛” 공세의 입장 표명-활동 계획서 (문서번호 16).

²³ 드레스덴 시 “그룹 20”의 성명서 (문서번호 15).

²⁴ 평화와 인권을 위한 이니셔티브(IFM)의 호소문 (문서번호 13).

²⁵ 독립사민당(USPD) 설립에 관한 단상 (문서번호 34).

독일공산당(KPD)부활을 위한 이니셔티브의 토론문 (문서번호 35).

²⁶ 1990년 선거 연대를 위한 선언문/녹색당 (문서번호 30).

1990년 3월 18일 인민회의 자유총선거를 위한 선거 연합인 “독일을 위한 동맹(Allianz für Deutschland)”이 헬무트 콜 서독 총리에 의해 발의되었고, 1990년 2월 5일에 서베를린에서 창립되었다. 독일 동맹 소속 정당으로는 위성정당이었던 동독 기민당과 독일사회연합(Deutsche Soziale Union), 민주주의 출발(Demokratischer Aufbruch)이 있었다. 이 선거 연합은 동등한 가치 지향(Wertorientierung)을 기반으로 했다. 강령적으로는 기독교적인 인간상을 토대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와 독일통일을 지향했다. 독일 동맹의 목표는 선거 승리를 통해 동독 정부 구성에 필요한 의석 과반수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1990년 9월 민주주의 출발은 기민당으로 통합되었다.²⁷

동독 체제 내에서 위성정당으로 존재하였던 기민당은 1945년 6월 26일 소련군 점령지역(SBZ)에 설립되었다. 1990년 10월 1일과 2일에 기민당은 서독의 자매당인 서독-기민당과 합당했다. 로타 드 메지에르는 초대 기민당 부대표직을 맡았었다.²⁸

제4절 동독 사회민주주의당(SDP)의 창당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독일사회민주주의당과 독일공산당(KPD)은 새로운 형태로 재편되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독일의 사회민주주의자와 공산주의자의 분열로 인해 노동운동도 분열되었고 결국 히틀러가 지지 세력을 넓힐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다. 실제로 몇몇 사회민주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은 노동운동의 분열을 막기 위해 양 당을 통합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는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사민당과 공산당 모두 나치의 억압을 받았다. 종전 후에 독일을 분할 점령한 소련군은 군정 초기의 유보적인 태도를 중단하고, 사민당에 막대한 압력을 가

²⁷ 인민회의 총선에서부터 기민련(CDU) 합당까지/(민주혁신당, DA) (문서번호 24).

²⁸ 인민회의에서부터 기민련 합당까지-동독 기민련 (문서번호 43).



해서 1946년 4월 22일 베를린의 제독 궁전(Admiralpalast)에서 소련군 점령지역 내의 사민당과 공산당의 합당 전당대회를 개최케 하였다. 이러한 합당을 통해 독일 사통당(SED)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사민당과 공산당은 이로부터 1989~1990년의 변혁기까지 수십 년에 걸쳐 동독에 존재하지 않았다.²⁹

1989년 7월 24일 막테부르크 시(Bezirk Magdeburg-현재 작센-안할트주)와 포츠담 시(Bezirk Potsdam-현재 브란덴부르크주)의 기독교 신학자인 마르쿠스 메켈(Markus Meckel)과 마르틴 구트차이트(Martin Gutzeit)를 중심으로 하는 그룹은 동독 사회민주당 발족을 목표로 이니셔티브 그룹 건설을 위한 제안을 작성하였다. 이 제안은 1989년 8월 26일 발송되어 베를린의 골고다 교구에서 소개되었다. 그들은 이 제안을 통해 더 이상 위로부터의 변화를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였다. 사통당의 지도력은 도마 위에 올려졌고, 정치적 대안이 시급히 요구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사회민주주의 정당 건설을 위한 이니셔티브 그룹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국가와 사회의 구분, 국민들의 기본권 수호, 환경 보호와 더불어 국가와 사회에 대한 문제(법치국가, 민주주의와 다원주의, 복지국가와 환경, 연방주의,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근로자들의 경영 참여, 공동 경제, 자유 노조, 종교의 자유, 여성의 평등권, 결사 및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망명법)와 외교에 관한 문제(독일의 두 국가 체제, 서독과의 특별 관계, 탈군사화, 군사연합 해제, 공정 무역, 독일 내 소수 민족과의 연대) 등 다양한 사회 정치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문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³⁰

이렇게 발족된 이니셔티브 그룹은 1989년 9월 12일 새로운 정치를 위한 호소문을 작성했다. 이들은 사회민주주의 정당 건설을 제안하고, 법치국가와 삼권 분립, 민주주의와 다원주의, 연방주의와 사회주의 시장경제, 자유

²⁹ 서독에서 KPD는 1965년 8월 위헌판결이 내려져 정당 활동이 금지되었다.

³⁰ 동독 사회민주당(SDP) 건설을 위한 제의 (문서번호 14).

노조의 허용을 촉구하였다.³¹ 1989년 10월 7일 슈반테(Schwante) 목사관에서 모인 50인이 동독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창당을 선언하였다. 이들은 베를린과 동독 남부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다. 동독 사회민주주의당의 목표는 점점 심각해져 가는 국가의 불안을 막고, 국가와 사회의 지속적인 민주화를 달성하고, 친환경적 사회민주주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독의 민주화 그룹과 이니셔티브, 인물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³²

1989년 가을 동독 사민당은 사통당을 탈당하였거나, 아직 사통당 당원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호소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사통당은 이제 구제 불가능한 상태이다. 사통당에 사회민주주의자들을 위한 자리는 없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사민당에 입당해야 한다.³³ 1989년 10월과 12월 사이에 동독의 여러 도시에서 동독 사회민주주의당의 지부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중앙 원탁회의에서 동독 사회민주주의당이 2석을 확보하였다. 동독 사민당의 제1회 대표자회의는 사회민주주의당(SDP)의 당명을 앞으로 SPD로 변경할 것을 결의한다. 이는 당의 방향을 서독의 사회민주주의로 선회한다는 것을 더욱 분명케 하는 결정이었다. 그러나 동독 사회민주주의당은 서독의 자매 정당을 향해서만 정당의 색깔을 밝힌 것이 아니었다. 이들은 동서독의 신속한 통일과 경제와 화폐의 통합을 지지하는 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나아가 동독 사민당은 유럽 이웃 국가들의 국경 불가침과 동유럽의 성장 및 민주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³⁴ 1990년 초 동독 사민당은 1990년 3월 18일로 예정된 동독

.....

³¹ “동독 사회민주주의당” 이니셔티브 그룹의 호소문 (문서번호 19).

³² 동독 사회민주당(SDP) 설립강령 (문서번호 25).
동독 사회민주당 정관 (문서번호 26).

³³ 사통당 구 당원과 사통당 당원으로 남아있는 모두를 향한 동독 사민당의 호소문 (문서번호 21).

³⁴ 독일통일을 위한 동독 사회민주당 대표자 회의 선언문 (문서번호 27).



최초이자 유일했던 자유 총선거에 맞춰 시와 지역에 지부를 구성했다. 1990년 9월 26일 양 독일 시민당은 합당하였다.

제5절 개혁기 정당과 시민단체의 재정

1989년과 1990년 동독의 과도개혁기에 다양한 시민단체와 정당이 설립되었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여러 이니셔티브를 통해 적극적으로 활동했지만 그러한 활동에 필요한 재정이나 조직, 의사소통을 위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지 못했다. 반면에 기존의 위성정당들은 막대한 자금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독립적인 정치 업무에는 무능한 상태였다.

동독 자유민주당은 새로운 선거법의 초안을 작성해, 1989년 12월 초 인민회의와 원탁회의에 제출하고자 하였다.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자유민주당의 당원 한 명이 서베를린에 가서 전문법률서적을 조달하고, 오랜 기간 선거 청장을 지낸 서베를린 시정부 내무행정부서의 고위 관료를 지인을 통해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접촉은 개인적인 성격으로 시작되었으나, 곧 서독의 정당과 동독의 정당 간의 공식 만남으로 확대된다.

동독 시민운동단체들의 경우, 어떤 형태의 권력기관과의 협력도 거부한 채 자체적으로 정치 개혁을 위한 초안을 작성하고, 국민투표의 중요성 및 폴뿌리 민주주의(Basisdemokratie)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권력기관에 대한 반감은 동독에서 자행된 권력기관의 횡포, 그리고 이를 억제할 수 있는 법치국가의 권력 감시 기능 부재로 생겨난 것이었다. 동독 국민들에게 익숙한 것은 체제에 적응하고 당국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개인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에는 익숙했으나, 공개적인 토론의 장을 조직하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조직적 역량이 부족한 동독인들에게 시민운동은 힘에 부치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조기 총선(1990년 3월 18일)에서 그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했다.

반면에 사통당(SED)과 위성정당들은 막대한 재정을 보유하고 있었다. 사통당이 1989년 10월 현재 보유하고 있던 자산은 다음과 같았다:

- 상근직 당 직원 4만 4천 명,
- 매년 15억 동독 마르크의 당비 수입
- 은행 잔고 62억 동독 마르크(1989년 12월 31일 기준), 이 중 27.5억 동독 마르크를 사통당 중앙위원회가, 1989년 12월 7일 이후부터는 사통당-민사당 당 수뇌부가 직접 보유,
- 8천 7백만 동독 마르크에 달하는 외화,
- 4억 6천 4백만 동독 마르크에 달하는 동적 시설자산(사무실, 자동차 등), 그 외에도 국가기관 전체와 언론사가 사통당의 자산이었다.

기지와 모드로우를 중심으로 하는 사통당 및 동독 정부의 지도부는 동독 붕괴 직전에 해외, 즉 오스트리아에 위장기업을 설립해서 엄청난 액수의 자금을 이체하였다. 통일 이후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Novum”³⁵이라는 무역회사가 오스트리아로 이체한 1억 2천 9백만 유로의 영수증이 발견되면서 이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었다. 이러한 증거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2억 3천만~2억 4천만 유로에 달하는 금액이 이체되었다. 오랫동안 이어진 소송 끝에 이 자금이 사통당의 자산이었음이 판명되었고, 통일 이후에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자산으로 귀속되었다. 이 재판의 독일 측 고소인은 연방통일특수과제청(Bundesanstalt für vereinigungsbedingte Sonderaufgaben)이었다. 담당 기관은 Novum이 이체한 자금이 사통당의 자산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에 대한 권리는 권리 계승자인 신연방주 지역의 주정부에 귀속된다고 주장하였다. 통일 조약에 따르면 이 자금은 신연방주 지역의 공공 프로젝트를 위해 투입되어야만 했다.

1989년 12월에 사통당과 위성정당들은 자신들의 재정 상태를 공개하는

.....

³⁵ 동독 정당 및 대중 조직 자산 검증을 위한 독립위원회(UKPV)의 최종 보고서 (문서번호 51. C장, II 특수사안 “Novum”, p.50~71 참조)

것에 반대했다. 특히 위성정당들은 재정 공개를 통해 사통당에 대한 높은 의존성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을 우려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통당과 위성정당들은 다른 신생정당들 및 시민단체들이 원탁회의의 대화 중단을 위협하자, 재정 상태 공개에 나서게 된다.

〈표 2-3〉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사통당을 비롯한 동독의 위성정당들은 엄청난 수입처를 보유하고 있었다. 독일 민주농민당을 제외한 모든 위성정당들은 신문사와 출판사 등 지속적인 수입을 제공하는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표에 나타난 수치들은 정당들이 직접 제출한 내용이며, 대부분의 경우가 그러하듯 여기서도 재정 상태를 가장 축소할 수 있는 회계 방식을 통해 장부가 공개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동독의 모든 정당들이 엄청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시민운동단체들과 비교해 엄청나게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당 재정 조달을 위한 공평한 규정은 새로이 도출되지 못했으며, 1990년 3월 18일에 인민의회 선출을 위한 동독 최초의 민주적 자유선거가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동등한 기회는 제공되지 못했다.

표 2-3) 1989년 12월 13일 기준 동독 정당의 재정 공개

| | 사통당 | 동독 기민당 | 자유민주당 | 민족민주당 | 민주농민당 |
|---|------------------|-----------------|-----------------|-----------------|-----------------|
| 수입 (백만 동독 마르크) | 1,498.8 | 33.2* | 47.0 | 34.0 | 38.8 |
| 당비 | 710.4 (47.5%) | 3.7 (11.2%) | 9.2 (19.5%) | 6.6 (19.4%) | 6.2 (15.9%) |
| 정당 소속 기업의 수익배분 | 720.3 (48.2%) | 3.9 (11.8%) | 18.8 (39.9%) | 27.1 (79.7%) | 누락 + |
| 국가로부터의 공급 (자체 보고) | - | 25.1 (75.5%) | 18.1 (38.5%) | - ** | 31.8 (81.9%) |
| 국가로부터의 공급 (1989년 12월 13일 모드로우 자료) | 19.0 (4.3%) | 35.5 (80.1%) | 18.1 (38.5%) | 27.1 (79.7%) | 31.8 (81.9%) |
| 기타 | 64.1 (4.3%) | 0.5 (1.5%) | 1.0 (2.1%) | 0.3 (1.0%) | 0.4 (1.1%) |

* 1989년 9월 30일자 임시 결산

** NDPD는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다는 인상을 지우기 위해, 산업 물가 변동 상쇄액을 정당

소속 기업의 수익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이 자금은 국가 예산을 통해 “국가로부터의 공급” 명목으로 지원되었다.

+ 민주농민당은 정당 소속 기업이나 출판사를 보유하지 않았다.

(표 자료 출처: Kloth, Hans Michael. 2000. Vom “Zettelfalten” zum freien Wählen. Die Demokratisierung der DDR 1989/90 und die “Wahlfrage”. Berlin: Ch. Links Verlag, S 694.)

1989년 시민운동단체들은 서독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동독 내의 변화가 놀라운 수준으로 가속화되고, 통일의 가능성이 분명해지면서 동독의 위성정당들이 1990년 2월부터 서독의 파트너 정당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 시기부터 동독의 자생적인 시민운동단체들은 서독 정당들로부터 관심과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되었다.

사통당의 개혁과 민주적 정당으로서의 재탄생?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동독의 상황을 사통당 지도부는 “생각하지 못한 기회와 미리 계산하지 못한 위기·위험시기, 가치와 노선의 붕괴 및 새로운 정의가 찾아 온 시기”라고 표현하였다.³⁶ 그렇지만 1990년 2월 25일자로 발표된 민사당 정책안에서 당 지도부는 여전히 사회주의 이념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간주의적 개념”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그들이 동독의 원칙이 과거에도 옳았었고, 현재에도 여전히 옳은 것이지만, 단지 이러한 원칙을 실행함에 있어 잘못이 있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즉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 원칙이 관료적이고, 중앙집권적인 현실 사회주의에 의해 더럽혀졌다는 것이다. 1990년 균열과 불안을 감지하는 와중에도 이와 같이 사회주의를 형식적으로나마 미화한 이유는 여전히 당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자존감을 위해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동독 체제에서 사회주의가 관료적이고, 중앙집권적인 형태로 타락했던 이유를 시스템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찾기 위해 노력하지는 않았다.

이 정책안에서 민사당 지도부는 향후 일정기간 동안은 동독과 서독이 두 개의 국가로 존재하고, 동서독 진영 모두 어느 정도 변화가 필수적일 것이라

³⁶ 민주사회당의 정책안 (문서번호 60, 88p).

고 보고 있다. “동독에서는 관료주의적-중앙집권적으로 조직된 현실 사회주의가 철저히 붕괴되어야만 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진짜 민주주의가 보장되고, 휴머니즘에 입각한 새로운 도덕이 제시되어야 하며, 사회적 시장경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시장경제는 주민들의 사회 복지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장해 주고, 아울러 수많은 사람들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 줄 것이다. 서독은 자체의 현 정치적 제도나 의회 시스템을 단순히 동독에 강요만 할 수는 없다.”³⁷ 이 정책안은 나아가 “인류 진보를 위한 우리의 비전은 구 동독과 소비에트연합의 존속과 발전능력을 위한 결정적인 조건이자, 현 변혁기의 유럽 안정을 위한 요소로 간주 된다”고 강조하면서 “소비에트연합 및 다른 국가에서 진행되는 진보적이며 민주적인 변화를 강력히 지지하며, 소련공산당과 민사당 간의 긴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는 이와 같은 목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한다.³⁸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 정책안은 1990년 2월에 발표되었다. 그리고 7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서 동독이라는 국가는 사라지고, 1991년 12월 26일에는 소비에트연합도 해체되었다.

1990년 3월 자유총선거 이후에는 독일통일이 기정사실이 되었고 모든 상황은 통일준비 과정에 맞추어 급변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10월 통일이 되면서 독일연방공화국으로 가입한 구 동독지역에서는 새롭게 개혁된 정당 시스템으로 인해 각 제반 여건들이 변화되었다. 기존에 동독에 존재하던 위성정당들(기독교민주주의,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등)이 재빠르게 서독의 정당들과 연계하였지만, 민사당(PDS)은 그렇게 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결국 그들은 홀로 남게 되었고, 서독에 존재하던 정당 체제로 편입되어야만 했다. 이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도 민사당은 스스로 쇄신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90년 9월에 열린 쇄신 회의에서는 그때까지 진행된 당의 쇄신 과정이 결산

³⁷ 민주사회당의 정책안 (문서번호 60. 104p).

³⁸ 민주사회당의 정책안 (문서번호 60. 107p).

되었고, 아래의 다섯 개 강령이 제안되었다.³⁹

1. 역사 극복: 과거청산과 역사적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 없이는 당의 근본적인 쇄신은 불가능하다. 과거의 배타적 모델(“진보” vs. “보수”)로부터의 전향이시급하다. 사통당은 쇄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었는가? 공산당과 사통당 내에 카알 리프크네히트와 로자 룩셈부르크 이후에 진정한 민주주의적 견해가 존재했는가? 이러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적이며 사회주의적인 전통은 유지되어야 한다. 동독에서 실패한 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동독의 유산 중 어떠한 것이 미래 독일에 대물림 되어야 할 것인가? 반대 세력의 영향력 또한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2. 공산주의 강령과 사회주의에 대한 논의: “민주적 사회주의”란 사통당에 대한 거부를 뜻한다. 현실과 개인, 남녀평등은 민사당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변증법적-물질주의적 자본주의 분석과 자본주의 비판은 필수적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모든 신기술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명되었다. 그러나 진보적 원칙이 자본주의만의 특징인 것은 아니다.
3. 당의 민주화: 민사당은 당의 구조와 조직을 변화하고 민주주의적인 체질을 키워나가야 한다. 특히 여론은 아래로부터 형성되어야 한다. 갑작스럽게 생겨난 집단들과 직접 민주주의, 투명성, 연대는 중요하다. 다양한 연령 집단 간의 중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군(Kreis) 단위 이상의 단체의 대표단은 남녀의 비율이 1:1로 구성되어야 한다. 상임 당 기관은 축소되어야 한다.
4. 당원 구조: 민사당의 당원은 현재 35만 명에 달한다. 이들의 입당과 탈당 동기와 요인은 무엇인가? 민사당에는 여성당원 (대다수가 신입 당

³⁹ 민사당 쇄신 회의(1990. 9) 준비 (문서번호 8).
민사당 쇄신 회의(1990.9.8~9)를 위한 강령 (문서번호 9).

원)과 사무직 직원이 많으며, 노동자와 간부, 중년의 연령대는 적다. 순수하게 따져보면 당의 규모는 작아졌다. 당의 규모는 확장되어야 한다. 입당 최소 연령을 16세로 낮추고, 당 내 소규모 그룹에 신입 당원을 입당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5. 독일통일에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민사당: 화폐, 경제, 사회 통합 이후 민사당은 실질적으로 독일 전역에서 당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서독의 국민들도 그 업무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민사당은 동독의 시민들도 대표할 것이다. 민사당의 성향은 반자본주의적이어야 하며, 기존 체제에 대한 대안을 도출해 내야만 한다. 민사당은 서독의 좌파주의 정당과 시민운동, 특히 사민당에 대한 태도를 결정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근본적인 쇄신과정을 거치면서 민사당은 1990년 12월 2일 독일 전역에서 실시될 연방의회 총선에 대비해서 독일 연방의회로의 진입과 당의 활동 영역을 독일 전역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민사당은 서독 의회 선거에서 적용되는 5% 이하로 득표한 정당의 의회 진입 제한 규정을 동독지역에 그대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

5% 봉쇄조항은 정당 문화의 극심한 분열로 인해 민주주의가 실패했던 바이마르 공화국(1919-1933)의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서독에서 도입되었다. 제2투표에서 5%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경우, 만약 선거구에서 의석 획득에 실패했다면, 의회에 진출할 수 없게 한 것이다.⁴⁰ 만일 이 규정이 1990년 12월에 치러질 연방의회 선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민사당이 통일된 독일의 연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였다. 그러나 1990년에 연방헌법재판소가 통일된 독일에서 적어도 과도기에는 두 개의 선거지역을 지정해야만 한다고 결정했다. 그 결과 동독지역에는 5% 봉쇄조항이 적용

.....

⁴⁰ 독일은 1인 2표제 선거로 1표는 지역구 입후보자에게, 다른 1표는 정당에 투표한다. 후자의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 후보 리스트에 등재된 후보를 대상으로 의석을 배분한다.

되지 않았다. 1990년 10월 4일 연방의회는 연방 차원에서 실시되는 최초의 선거를 위해 개정된 선거법을 의결했다.⁴¹ 동쪽지역과 서쪽지역에 서로 상이한 제한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민주사회당은 1990년 12월의 연방의회 선거에서 2.3% 밖에 득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었다.

연방의회 선거를 준비하면서 민사당은 서독 및 동독의 좌파 세력들과 연합해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동서독 좌파 후보들을 함께 포함시키는 전략을 세웠다. 이 전략은 서독과 동독에서 상반된 선거 결과가 나타날 경우, 동독의 민사당이 의회에 진출하였을 때 서독의 좌파 세력들이 민사당의 후보로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목표를 위해 민사당은 7월 말부터 좌파 리스트(Linke Liste)/민사당(LL/PDS)이라는 선거 연합을 구성하였다. 선거 연합 구성 초기에 연합의 성격은 조직이 아닌 인물들의 연합이었으나, 이후 모든 구 연방주에서 이 선거 연합은 LL/PDS 주 선거 연합으로 전환된다.⁴²

연방의회 선거 전인 1990년 10월에 민사당의 첫 번째 전당대회에서 좌파 리스트/민사당 지방 연합의 명칭을 민사당 지방 연합으로 변경할 것을 결정한다. 지방 연합이 공동으로 추구한 선거 강령은 “강력한 좌파 야당의 구축”이었다.⁴³

그러나 통일과정에서 그리고 통일 이후 민사당과 다른 정당들과의 관계는 어려워졌다. 그것은 급격하게 변화한 상황에 대한 서로의 적응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사당에게는 특히 완전히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학습하는 과정이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⁴¹ 구 서독과 구 동독 간에 있었던 최초 독일의회 선거를 위한 법 초안 (문서번호 61). 독일 전역에서 최초로 실시된 선거에 대한 연방 헌법재판소의 판결 (문서번호 62). 독일선거법 개정 및 정당법 개정을 위한 10번째 법 초안 (문서번호 63).

⁴² 독일 총선 준비를 위한 민사당 당 대표회 결의안 (문서번호 10).

⁴³ 서독에서의 민사당 주 조직 결성을 위한 전당대회 결의안 (문서번호 11).

- 권력상실-무력감과 급격한 구성원 감소로 민주사회당은 새로운 시스템의 규칙을 수용하고 적응하기가 어려웠다.
- 민주사회당은 사회주의통일당이 구 동독 시절인 1989년까지 보유하고 있던 홍보 및 미디어 기관이 없었다. 또한 정당에 의해 지휘되던 대규모 조직도 없었다.
- 민주사회당은 동독 체제 하에서 “노동자 계급의 적”으로 규정하였던 세력들과 함께 의회에 앉아 자유선거와 민주주의의 규정을 따라야 했다.
- 민주사회당은 구 서독 정당들과 연계한 위성정당의 멤버들과도 불편한 관계였다.
- 한편 서독의 모든 정당들은 민사당을 형식상으로는 동등한 정당조직으로 간주해야 했다. 통일 직후 서독의 정당들에게는 장벽을 쌓았던 “불법적인 체재”를 직접 대표한 사람들 또는 그 “후손”들을 민주주의 의회에 수용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2001년 10월 민사당은 베를린 선거에서 22%의 지지율을 얻었고, 베를린 동쪽 지역에서는 심지어 약 50%에 가까운 득표를 했으며, 2002년 이후부터는 사민당과 연정을 꾸려나가고 있다.⁴⁴

통일 이전까지 민사당은 동독의 근본적인 개혁을 지지하면서도 통일에는 반대했다. 이 정책은 많은 동독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지는 못했고, 이는 <표 2-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990년에 치러진 각종 선거에서 민사당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⁴⁴ 이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1998) 이후 두 번째 사민당-민주사회당 연정이다. 2001년 베를린에서는 민주사회당이 베를린 주의회에서 사민당-녹색당 간의 소수당 정부를 허가했다(“막테부르거 모델” 1994-2002).

표 2-4) 1990년 선거 민사당 득표율

| 시기 | 선거형태 | 득표율(%) |
|-----------|------------|--|
| 1990년 3월 | 구 동독 | 16.4 |
| 1990년 5월 | 지방 선거 | 14.6 |
| 1990년 10월 | 주의회 선거 | 12.7 |
| 1990년 12월 | 최초 연방의회 선거 | 총 2.4% (구 동독지역 11.1%, 구 서독지역 0.3%) |

통일 직후에 민주사회당은 과거청산 문제와 당의 목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 것은 민사당이 낡은 사고패턴으로부터 아주 천천히 단계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 1993년 1월의 정책안을 보면 “과거사에 대한 적절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동시에 신연방주의 각 기관의 공무원직을 수행하게 될 사람들을 대상으로 동독 국가보안부(Stasi)와 연루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구 동독지역의 주민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기존 정당의 정책으로 인해 구 동독의 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어쩌면 수십년 간 기본권을 제한받는 존재로 전락할 것이다”⁴⁵ 이러한 표현을 보면 1989년의 평화적 혁명으로 다수의 시민들이 민주사회당의 그늘을 이미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사회당은 여전히 구 동독 시민들을 대변하는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

1993년의 민사당 정책안은 동독 사회주의통합당의 과거에 대해 평가하면서 동유럽 및 동독의 사회주의가 원래부터 실패작은 아니었다고 변명한다. 단지 그것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로 인해 “사회주의 개혁을 위한 모든 노력이 차단당했다”는 것이다.⁴⁶ 이 문장을 보면 민사당이 동독의 사회주의가 실패한 책임을 여전히 외부 요인으로 돌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

⁴⁵ 민주사회당의 정책안 (문서번호 64. 7p).

⁴⁶ 민주사회당의 정책안 (문서번호 64. 10p).

다면 누가 사회주의가 제대로 발전하는 것을 차단하였을까? 이 문서에는 민사당/사통당의 당원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세력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정책안은 동독 사회주의의 오류를 설명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민주적이고 사회주의 정신에 입각한 사회는 이윤의 원칙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 및 정치 세력 간의 상호 공동 노력에 기초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몰락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인 모순, 타협, 합의, 관용 및 민주적 개방성이 다원적인 의사형성 과정에 반드시 필요하다.”⁴⁷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동독의 사회주의는 민주주의를 배제한 채 사회주의를 증명하려 했기 때문에 실패하였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적인 혁신과 대안적인 발전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이 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
⁴⁷ 민주사회주의의 정책안 (문서번호 64, 10p).

민주사회당의 부활과 좌파당으로의 변신

제1절 선거를 통한 복권

1990년에 있었던 모든 선거에서 참패를 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당이 오늘날과 같이 구 동독지역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계기는 1993년과 1994년 사이 구 동독지역의 경제가 급속히 나빠지기 시작하면서였다. 이 시기에 연방정부가 통일 직후 신연방지역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쏟아 부은 막대한 재정이 가져온 호경기가 끝났다. 구 동독지역에서 대량실업, 구조조정의 어려움 그리고 희망의 상실 등과 결부된 급속한 탈산업화는 결과적으로 항의 사태와 정당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졌다. 민사당이 이 상황을 해결할 방안을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고 통일이 가져올 문제를 지속적으로 경고했었다. 구 동독지역의 신연방주들에서 불만이 팽배해지고, 실업률이 급증하며, 동서지역 간의 생활수준 균등화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증가하는 시기였다. 이에 민사당은 사회적 정당성 실현에 당 정책의 포커스를 맞추고 신연방지역에서 지지자를 얻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1990년대 초반 민사당은 구 동독지역의 이해관계를 변호하면서도, 동시에 동독지역만을 위한 정당이라는 이미지에 국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

였다. 그로 인해 1990년대 전반에는 당 내부에서 긴장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런 노력으로 인해 민사당의 선거 결과는 1990년 초반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다만 서독지역에서의 지지 기반은 여전히 빈약한 상태에 머물렀다.

표 2-5> 연방의회선거 민사당 득표율, 연방 전체 지역 및 구 동독지역(%)

| | 1990 | 1994 | 1998 | 2002 |
|--------------|------|------|------|------|
| 연방 전체 | 4.2 | 4.4 | 5.1 | 4.0 |
| 구 서독지역 | 0.3 | 0.9 | 1.2 | 1.1 |
| 베를린 | 9.7 | 14.8 | 13.4 | 11.4 |
| 브란덴부르크 | 11.0 | 19.3 | 20.3 | 17.2 |
|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 14.2 | 23.6 | 23.6 | 16.3 |
| 작센 | 9.0 | 16.7 | 20.0 | 16.2 |
| 작센-안할트 | 9.4 | 18.0 | 20.7 | 14.4 |
| 튀링겐 | 8.3 | 17.2 | 21.2 | 17.0 |

표 2-6> 1994-2002년 연방의회 민사당 제2투표 결과, 구 서독 및 구 동독지역의 사회 계층별(%)

| | 1994 | | 1998 | | 2002 | |
|---------------|------|----|------|----|------|----|
| | 서독 | 동독 | 서독 | 동독 | 서독 | 동독 |
| 직업군 | | | | | | |
| 노동자 | 5 | 15 | 6 | 17 | 4 | 15 |
| 회사원 | 6 | 26 | 6 | 25 | 4 | 19 |
| 공무원 | 3 | 35 | 3 | 15 | 3 | 24 |
| 자영업자 | 3 | 17 | 4 | 17 | 3 | 13 |
| 농업종사자 | 3 | 10 | 3 | 8 | 4 | 13 |
| 노조 | | | | | | |
| 있음 | 6 | 24 | 7 | 22 | 5 | 20 |
| 없음 | 4 | 20 | 5 | * | 4 | 16 |
| 노동자+노조 | | | | | | |
| 구성원임 | 5 | 17 | 6 | 17 | 4 | 16 |
| 구성원 아님 | 5 | 14 | 6 | * | 5 | 15 |

| 회사원+노조 | | | | | | |
|--------|-----|------|-----|------|-----|------|
| 구성원임 | 10 | 29 | 8 | 25 | 7 | 24 |
| 구성원 아님 | 5 | 26 | 6 | 25 | 4 | 18 |
| 총계 | 4.4 | 19.8 | 5.1 | 21.6 | 4.0 | 16.9 |

민주사회당이 연방정치무대에서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계기는 2005년이였다. 2004년에 기존 사민당의 당원이었거나 노조원이었던 사람들이 “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선거대안(WASG)”이라는 정파를 창립하였고, 2005년에 민사당은 이들과 연방의회 총선을 위한 후보자명단 교섭을 진행하였다. 그것은 두 그룹의 협력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였으며, 2007년 6월 두 그룹은 실제로 통합하여 좌파당을 구성하였다.

표 2-7) 2005년 연방의회 선거 좌파당 민주사회당(제2투표) 득표율

| 지역 | 득표율 | 2005/2002 | 절대치 | 2005/2002 |
|--------|------|-----------|-----------|-----------|
| 연방 | 8.7 | +4.7 | 4,118,194 | 2,201,492 |
| 구 동독지역 | 25.3 | +8.4 | 2,243,797 | 769,231 |
| 구 서독지역 | 4.9 | +3.8 | 1,874,379 | 1,432,261 |

표 2-8) 민사당 유권자 사회계층별 구성(2005년 제2투표, %) 및 전체대비

| 성별 | 전체 | 좌파당 민사당 |
|----------|----|---------|
| 남성 | 49 | 54 |
| 여성 | 51 | 46 |
| 연령 | 전체 | 좌파당 민사당 |
| 18-29세 | 13 | 12 |
| 30-44세 | 30 | 32 |
| 45-59세 | 25 | 30 |
| 60세 이상 | 32 | 26 |
| 직업 활동 상태 | 전체 | 좌파당 민사당 |
| 직업 활동 중 | 50 | 49 |
| 연금생활자 | 27 | 24 |
| 실업자 | 5 | 14 |

| 직업군 | 전체 | 좌파당 민사당 |
|-------|----|---------|
| 노동자 | 28 | 38 |
| 회사원 | 43 | 43 |
| 공무원 | 7 | 4 |
| 자영업자 | 9 | 5 |
| 농업종사자 | 2 | 1 |
| 노조 | 전체 | 좌파당 민사당 |
| 구성원 | 15 | 21 |
| 비구성원 | 79 | 73 |
| 교육 | 전체 | 좌파당 민사당 |
| 초졸 | 31 | 24 |
| 중졸 | 34 | 40 |
| 고졸 | 16 | 15 |
| 대졸 | 15 | 17 |

적어도 신연방주 차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민사당의 정치적 비중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어느 정당도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립정부를 구성하게 될 때 민사당이 연립정부의 구성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당 스스로가 연립정부의 구성원으로 정부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2014년에 신연방주의 하나인 튜링겐주에서 좌파당 출신이 최초로 주총리를 맡게 되었다.

표 2-9) 민사당의 직접적인 연정 참여 및 참여하지 않은 경우 연립 정부 활동에 대한 지원

| 연방주 | 선거 시기 | 득표율(%) | 형태 및 정당 |
|--------------|-----------|--------|------------|
| 작센-안할트 | 1994-1998 | 19.9 | 사민당-녹색당 지원 |
| | 1998-2002 | 19.6 | 사민당 지원 |
| 메클렌부르크 포어포메른 | 1998-2002 | 24.4 | 사민당과 연정 구성 |
| | 2002-2006 | 16.4 | 사민당과 연정 구성 |
| 베를린 | 2002-2006 | 22.6 | 사민당과 연정 구성 |
| | 2009부터 | 13.4 | 사민당과 연정 구성 |
| 브란덴부르크 | 2009부터 | 27.2 | 사민당과 연정 구성 |

제2절 좌파당의 창당

1998년 연방의회 선거에서의 승리로 녹색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면서 정권을 잡은 사민당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정책에서 중도노선을 지향했다. 그러나 그가 추진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은 전통적으로 사민당을 지지하던 노동자계층에게 불안감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민주사회당은 이런 정책에 실망한 사민당 유권자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는데, 서독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을 중심으로 형성된 새로운 정치단체 “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선거대안(WASG)”도 동일한 의도를 갖고 있었다. 그 결과 민사당과 선거대안(WASG)은 서로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이 점을 분명히 인지한 두 그룹은 2005년의 연방의회 총선거에서 전략적인 연대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런 연대를 통해서 민사당은 장기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되었다.

물론 그것은 민사당이 자신의 정책을 통해 유권자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경기가 침체되고 정치적 제반 여건이 변화하면서 가능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당이 서독지역을 근거로 활동하던 선거대안(WASG)과 협력하게 되면서 민사당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던 서독지역에서의 지지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2007년에는 두 그룹이 함께 좌파당을 창당하였다. 이로써 민사당은 독일 정당 시스템 내에서 장기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 조건과 함께 서독지역의 선거에서도 득표율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되었다.

표 2-10) 사통당-민사당-좌파당의 명칭 변경

| 시기 | 명칭 |
|------------|------------------------------|
| 1946-1989 | 사회주의통일당(SED) |
| 1989-1990 | 사회주의통일당(SED)-민주사회주의당(PDS) |
| 1990-2005 | 민주사회주의당(PDS) |
| 2005-2007 | 좌파당.민주사회주의당(Linkspartei.PDS) |
| 2007.06 이후 | 좌파당 |

제3절 민사당-좌파당의 과제와 목표

2005년에 선거대안(WASG)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정치적 행보를 시작한 민사당은 2003년 10월과 2005년 7월에 발표한 정책안에서 오래 묵은 문제들을 다시 제기하였다. 그것은 과거문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하는 것과 통일된 독일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하는 점이였다. 이 2005년의 정책안에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자기 비판적인 답을 읽을 수 있다.

이 정책안에서 민사당은 새로운 정책을 세우려는 의지와 함께, 그 이유로서 새로운 정책 도입의 정당성과 필요성 및 과거문제에 대한 반성을 강조했다.

“우리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독재적인 수단으로 모든 반항을 억누른 범죄에 대해 가차 없이 토론할 것이다. 우리는 사통당을 포함하여 적지 않은 좌익 정당들에 의해 행해진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를 거스르는 행위를 거부하는데 모두 동의한다.”⁴⁸

민사당은 이러한 실책으로부터 얻을 교훈을 통해 통일된 독일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지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사회주의통합당은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지배정당으로서 창설되었을 때부터 소련에서 형성된 사회주의 모델과 소련의 정책을 추종하는 것이 확정되었다. 사통당은 사회주의를 민주주의와 자유에 결합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그럴 의지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통당의 노선은 범죄와 문화적 실책과 같은 아픈 오류들로 점철되어 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사통당 당원의 적지 않은 인원이 이러한 억압행위에 동참하고,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핍박받도록 허용하거나 그 행위를 지지하였다는 사실을

⁴⁸ 좌파당 민주사회당의 2003년도 정당 정책안 (문서번호 69. 2p).

인정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그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에 명기되어 있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다.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민주적 기본원칙을 해치는 행위는 그 어떤 목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⁴⁹

이러한 자기 비판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새롭게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의 목적은 다른 정당들과 함께 “자유, 평등, 정의 및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설명한다.⁵⁰

“우리에게 사회주의는 자유, 평등, 연대, 해방, 정의, 자연과 평화의 유지와 같은 이념을 포괄하는 가치체계이다. 사회주의 이념은 독재와 억압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오용되면서 많은 손상을 입었다. 체제 붕괴의 원인 규명을 포함한 동독에서의 모든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사회주의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⁵¹

민사당의 정책안은 단순히 과거문제를 언급하고 새로운 정치적 목표를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과거문제에는 통일 이후 2005년까지의 경험에 관한 평가도 포함된다. 즉 붕괴된 동독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1990년 통일 이후 독일에서 전개된 상황에 대한 평가와 성찰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여러 가지 잘못된 결정들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독일의 동쪽 지방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파괴하였다. 동부 독일의 적지 않은 지역이 저발전지역으로 규정된다. 1990년 이후에 150

⁴⁹ 좌파당 민주사회당의 2003년도 정당 정책안 (문서번호 69. 52p).

⁵⁰ 좌파당 민주사회당의 2003년도 정당 정책안 (문서번호 69. 1p).

⁵¹ 좌파당 민주사회당의 2003년도 정당 정책안 (문서번호 69. 3p).

만 명의 경제활동 가능인구가 자녀들을 데리고 구 동독지역을 떠났다. 경제정책, 환경정책, 고용정책에서 새로운 시작이 없으면 앞으로 구 동독의 많은 지역이 위기지역으로 전락할 것이다.”⁵²

이 정책안은 나아가 정치의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거듭 강조한다.

“독일통일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특히 유능한 젊은이들이 서독지역으로 대거 이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장경제적 또는 서독의 경험에만 근거를 둔 조정정책이 구 동독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발전이라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었다. 그를 위해 정부가 아무리 막대한 금액의 재정을 이전하더라도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더욱이 이러한 재정이전을 위한 비용은 주로 임금 근로자들이 부담하고 있다”⁵³

위에 인용된 문장들은 민사당이 자기 비판적으로 과거문제를 논하면서 언급하는 문제들이 많은 독일인들로부터 충분히 공감을 얻고 있는 문제임을 잘 보여 준다. 민사당이 제시한 분석이 부분적으로는 아주 예리하고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독일 전역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지는 못하고 있다. 그들이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 또한 그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런 현상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좌파당이 시급한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지만 그에 대한 현실적인 답을 제시하지는 못한다고 본다.

민주사회주의당과 좌파당이 연합한 것을 역사적인 시각에서 볼 수도 있다. 192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이 성립되면서 독일에서 처음으로 실현된 민주주의가 그렇게 짧은 기간에 붕괴하고 나치의 전체주의 지배체제가 성립된 데에는

⁵² 좌파당 민주사회당의 2003년도 정당 정책안 (문서번호 69. 19p).

⁵³ 좌파당 민주사회당의 2003년도 정당 정책안 (문서번호 69. 48p).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당시 좌익 진영이 분열했던 것도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였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 노동자계급은 통합되지 않았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의 종결 이후 소련군 점령지역에서 공산당과 사민당이 통합하여 사회주의통합당을 창설하였을 때 “통합”을 강조하고 당기와 당의 명칭에도 통합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을 포함시켰던 것이다. 민주사회주의당과 선거대안(WASG)가 좌파당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역사적 경험도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것은 통일된 독일에서 좌익 진영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2007년의 합당은 1946년의 합당과 분명히 구분될 필요가 있었다. 1946년의 합당은 소련군에 의해서 강제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사통당의 독재체제가 시작되었지만 2007년의 합당은 1989년의 평화적 혁명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당세로 본다면 합당시기에 민사당이 좌파에 비해 우위에 있었다. 왜냐하면 민사당은 연방의회에 진출하여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었고 신연방주의 모든 주의회에도 진출해 있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구 동독지역에서는 민사당의 고정적인 지지기반이 있었다. 좌파당으로의 합당 결과 이들은 2008년~2009년에 소수지만 서독지역에도 고정 지지층을 확보하게 되었다.

제4절 민주사회당과 새로운 좌파당 내의 당파와 계파

2007년에 합당한 이후 좌파당은 당 내에 여러 계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러한 계파는 이미 민사당 시절에도 존재하였고 이들 계파들은 서로 상이한 정치적 의견을 갖고 있다. 계로 노이게바우어는 민사당과 좌파당의 계파를 대략 4개로 분류하였다.

- 현대화 추구파
- 정통 사회주의파

- 실용주의파
- 원리주의파

이들 계파는 정치이념의 내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 규모나 조직성 정도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다.

나아가 민주사회당/좌파당에는 두 개의 중요한 정치그룹이 있다. 공산주의 플랫폼(KPF)과 마르크스주의 포럼(MF)이다. 이들 두 그룹은 동독과 사회주의통일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회고한다. 동독이 실패하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올바른 시도였다고 본다. 공산주의 플랫폼(KPF)은 자체적으로 매달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으며 약 500명의 회원을 갖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동독의 엘리트였거나 서독지역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좌파들이다.

2007년 좌파당이 창립된 후에 새로이 등장한 계파도 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네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 민주사회주의 포럼.
- 사회주의 좌파(“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선거대안(WASG)”당의 주류를 형성).
- 반자본주의 좌파.
- 네트워크 “마르크스 21”(트로츠키스주의자).

이들 새로운 계파들은 자유롭게 활동하는 좌파세력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다양한 세력들과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토론포럼을 만들기도 한다. 이들의 존재가 현재 독일연방공화국의 정치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서 전직 비밀경찰 소속원들은 비공개로 활동하며 토론행사에 참여할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잘 조직하여 참가하는 등 일종의 비밀결사체처럼 활동하고 있다.⁵⁴

.....

⁵⁴ 예를 들어 “시민권과 인간존엄 수호 단체(GMB)”, “국민군 전통 협회” 및 “법적, 인간주의적 지지 단체”들이 바로 이런 단체에 속한다. 그 외에 구 동독의 공무원, 주로 비밀경찰 구성원들이 공

제5절 민사당/좌파당의 전략과 전술

동독체제 하에서 지배적인 국가정당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통당의 후신인 민사당은 통일된 후에도 다음과 같은 해결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오랫동안 직면해 있었다.

-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 나가면서, 과거의 빛으로부터 벗어나야 했고, 자신의 과거사를 공개적으로 토론하면서 그로부터 결과를 도출해야 했다.
- 동시에 기존 당원들과 신규 당원들 및 유권자들 모두에게 신뢰를 주어야 했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적응 정도에 있어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 사회 복지 문제와 구 동독지역의 문제에 온전히 집중해야만 했다. 그를 위해서 동독 시절부터 이어 온 오래된 정치적 관계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예전의 정책을 동원할 필요도 있었다.
- 장기적으로 서독지역에서 당세를 확장하고 성공적인 선거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체 독일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1990년에 사통당이 사회주의통합당-민주사회주의당으로 변신한 것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아니었다. 동부의 조직은 기존에 있었던 사통당의 회원들과 재정자원을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사당은 1993년부터 점차 통일 반대주의자의 집합체에서 구 동독지역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상적인 정당으로 변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당/좌파당은 지금도 여전히 다른 정당들과 구분되는 특수한 정당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2014년에 좌파당에서 튜링겐주의 주총리를 세우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좌파당이 정권을 잡고 주총리를 세우는 것을 용납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

제 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돕는 “이니셔티브 단체”와 같은 이익단체도 있다. “이니셔티브 단체”에는 1만 명 정도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전히 존재한다. 그런 의미에서 좌파당은 분명히 다른 정당들과 구분된다.

좌파당과 다른 정당들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규정된다.

- 선거 득표율 및 의회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보면 산술적으로는 좌파당이 직접적으로 연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지원하여 소수당 정부를 가능하게 해 주거나 직접 연립정부에 참여할 수 있다.
-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소한의 정책적 합의와 절차적 규율에 대한 동의가 존재한다. 여기에는 내용적인 측면 외에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신용문제도 포함된다.
- 공조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정당은 무엇보다 사민당이다. 그리고 사민당과의 직간접적인 협력이 이미 실현되고 있다.

1989년~1990년에 이론적으로는, 특히 신연방주 차원에서는 민사당이 다수당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로 인해 당 내부에서도 전략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당 지도부의 인물이 많이 교체되었고 과거에 유명했던 인사가 지도부를 맡는 경우가 거의 없게 되었다. 2002년까지 민사당의 사무총장은 동독의 엘리트 집단에 속했던 사람이었다. 2002년만 해도 다른 정당들이 민사당과 연립하는 것을 고려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립정부 구성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 더욱이 연방정부와 연방의회 차원에서는 민사당을 포함하는 연립정부를 구성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생각조차 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배제되었다. 그리고 다른 정당의 입장에서 볼 때 민사당과는 사회경제적으로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나아가 민사당은 독일이 국제사회에서 평화유지를 위해 UN 평화군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였다.

민사당/좌파당은 사민당과 녹색당보다 훨씬 더 분명한 좌파 노선을 추구하려 했으며, 2009년 연방의회 선거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사민당이 선거에서 실패한 것의 덕을 톡톡히 보게 되었다. 2009년의 경우 2005년 선거에

비해서 약 110만 명의 유권자가 사민당에서 좌파당으로 지지정당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민사당은 일찌감치 다양한 사회단체들과 접촉을 시도했다. 민사당 당원이 아닌 단체와도 기꺼이 협력했지만, 바라던 성과를 크게 거두지는 못했다. 1990년부터 민주사회당은 세입자 연합 모임, 자문 상담소 및 실업자 통합 문제 등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우선적으로 특정 주제를 집중적으로 접근하려 했으며, 편협한 세계관을 가진 정당은 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2005년까지는 이런 목표를 실현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다 “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선거 대안(WASG)” 당과의 통합과 새 좌파당의 창당(2007) 이후 조금씩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사회주의 이념의 추종자들은 1989~1990년의 대변혁 이후 통일독일의 정치체제에서 민주사회당이 안정되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 비교적 뒤로 물러나 있었다. 위에서 본 것처럼 1990년 2월에 작성된 민사당의 정책안에는 사회주의통일당의 역사에 대한 비판적인 토론도 있었다. 그러나 1994~1995년부터는 어느 정도 정책화된 모습을 갖춘 이중 노선이 추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물론 그로 인해서 당 내부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2002년까지는 민사당이 입지를 확립하고 기반이 견고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연방의회와 신연방주의 선거에서도 세가 약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제6절 좌파당과 2009년 이후 변화된 환경

2009년의 연방의회 선거 이후 사민당이 기민/기사당의 연정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볼 때 사민-녹색-좌파당으로 구성되는 좌파 블록이 연방의회의 다수를 구성할 수 있었다. 좌파당과 사민당은 국내정책과 사회정책에서 유사한 입장을 취했지만 대외정책과 안보정책의 경우 서로 의견

의 상이었다. 이 두 정당 간에는 연방의회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으로서의 활동에서 간헐적으로 공조하는 것 외에는 서로 협력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좌파당 내에서도 일관성 있게 개혁적인 대안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 반대론자로 활동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태였다.

2007년에 민사당과 “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선거대안(WASG)”이 합당하였을 때에는 무엇보다도 선거 전략적인 고려가 우선시되었기 때문에, 장기적 정책에 대한 것은 별로 심사숙고하지 않았다. 이것은 좌파당에게 아직까지도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신연방지역에서는 좌파당이 사민당을 제치고 제2정당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 득표율만을 보면 사민당보다 오히려 좌파당이 국민정당의 위상을 갖고 있다. 좌파당의 당원을 보면 실업자의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 2004년에는 당원의 13%만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서독지역에서는 좌파당을 불평분자들의 정당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좌파당이 전독일의 정당으로 정착하는데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서독지역에서는 좌파당이 여전히 기초 자치단체 차원에서 당 조직을 구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서독지역에서 좌파당은 5% 봉쇄조항으로 인해 지역 의회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좌파당이 민사당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었다. 좌파당은 현재 16개 독일 연방주 가운데 13개 주의회에 진출해 있다(라인란트 팔츠, 바덴 뷚템베르크, 바이에른 등은 제외). 민주사회당에는 2002년 기준 약 1,700명의 지방자치단체 및 연방주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이 소속되어 있었다. 현재 구 동독지역에서만 5천명 이상의 의회 의원을 확보하면서 지자체 및 지역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다.

2014년에는 좌파당 소속의 주총리가 배출될 정도로 신연방지역에서의 좌파당의 위상은 확고하다. 단, 연방 차원에서 좌파당은 여전히 연정의 파트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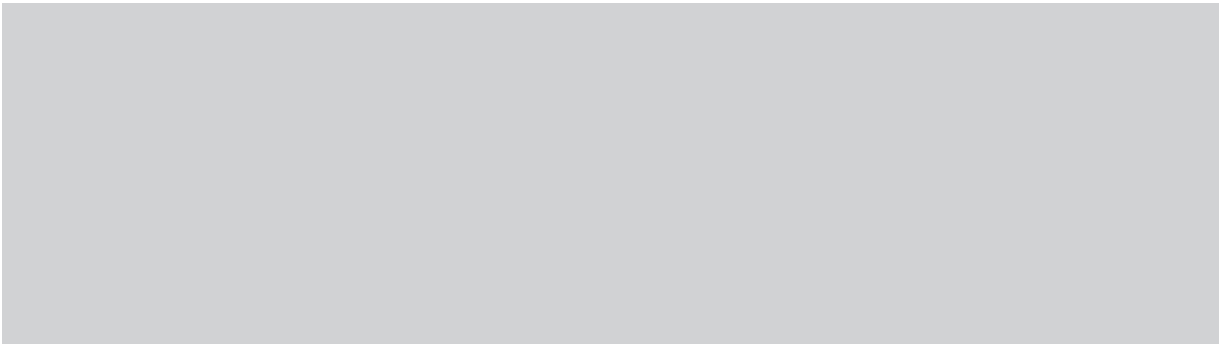
후보로서도 원칙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주와 지역 차원에서 좌파당은 다른 정당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연립정부를 구성하거나 연정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연방정부 차원에서 좌파당이 구체적으로 추구하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좌파당이 유권자에게 아직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⁵⁵

표 2-11) 교육 수준에 따른 전체 국민 및 민사당 유권자 분포(1993-2005)

| 교육수준 /년도 | 초졸 | | 중졸 | | 고졸/대졸 | |
|-------------|----|------------|----|------------|-------|------------|
| | 전체 | 민사당 유권자 | 전체 | 민사당 유권자 | 전체 | 민사당 유권자 |
| 1993 | 39 | 16 | 30 | 35 | 25 | 45 |
| 1995 | 39 | 16 | 32 | 36 | 25 | 44 |
| 1997 | 38 | 19 | 32 | 40 | 25 | 37 |
| 1999 | 37 | 18 | 35 | 36 | 26 | 42 |
| 2001 | 31 | 15 | 31 | 32 | 32 | 49 |
| 2003 | 24 | 13 | 32 | 35 | 39 | 48 |
| 2005 | 22 | 16 | 32 | 37 | 41 | 44 |

55 사통당-민주사회당의 향후 과제 (문서번호 79).

정당분야 통합 관련 정책문서



문서 목록

| 문서 | 제목 | 날짜 | 담당자/기관 | 출처 |
|----|---|------------------------|--|--|
| 1 | 에리히 호네카를 비롯한 당 중앙위원회 전원 사퇴-제 12차 사통당 중앙위원회(Zentralkomitee) 결의 | 1989년 12월 3일 | 사통당 중앙위원회, 당 중앙 감독위원회(Zentrale Parteikontrollkommission, ZPKK), 정치국(Politbüro) | 제 12차 사통당 중앙위원회 결의. 민주사회주의 문서고(Archiv Demokratischer Sozialismus) 로자-룩셈부르크 재단(Rosa-Luxemburg-Stiftung) |
| 2 | 사통당 특별 전당대회(Außerordentlicher Parteitag) | 1989년 12월 8/9일, 16/17일 | 전당대회, 한스 모드로우 총리(Ministerpräsident Hans Modrow), 특별 실무위원회(Arbeitsausschuss) | Lothar Hornburg u.a.(Hrsg.), 1999. 1989년 12월 8/9일, 16/17일 베를린에서 열린 자문 회의록(Außerordentlicher Parteitag der SED/PDS: Protokoll der Beratung am 8./9. und 16./17. Dezember 1989 in Berlin). Berlin: Ditzien Verlag. |
| 3 | 사통당/민사당 정관-민주사회주의당 | 1989년 12월 8/9일, 16/17일 | 좌파당(Die Linke)/당 수뇌부(Parteivorstand) | 노이에 유스티츠(Neue Justiz) 지 - NJ 1992, S. 147~151 |
| 4 | 사통당 특별전당대회에 관한 개인적 회고 | 1989년 12월 | 막스 클라인(Max Klein) | Klein, Max. 2000. 우토피 크레이티비 지: 특별 전당대회(Utopie Kreativ: Außerordentlicher Parteitag), S. 130~135 |
| 5 | 사통당/민사당 대표회 의장단의 구조와 업무 방식 | 1990년 1월 4일 | 사통당 중앙위원회, 당 중앙 감독위원회(ZPKK), 정치국 | 당 수뇌부 의장단의 결의안 /31 5/90 민주 사회주의 자료보관소/로자-룩셈부르크-재단 |
| 6 | 사통당의 민사당으로의 당명 변경 | 1990년 2월 1일 | 당 수뇌부 위원회, 당 수뇌부 | 당 수뇌부 의장단의 결의안 2./88 11/90, 회의록 11번, 첨부 문서 3번, 민주 사회주의 자료보관소/로자-룩셈부르크-재단 |

| 문서 | 제목 | 날짜 | 담당자/기관 | 출처 |
|----|-----------------------------------|---------------|-----------------------------------|---|
| 7 | 민사당과 동독 사민당의 차이 | 1990년 2월 22일 | 민주사회주의당(민사당), 서독과 동독의 사회민주주의당 | 민사당 수뇌부 의장단의 결의안, 1/142, 회의록 14/90번, 첨부서 4, 민주사회주의 자료보관소/로자-룩셈부르크-재단 |
| 8 | 민사당 채신 회의(1990. 9) 준비 | 1990년 6월 8일 | 민주사회주의당(민사당) | 당 수뇌부 위원회 결의안, 8/329, 회의록 31/90번, 첨부문서 4, 민주사회주의 자료보관소/로자-룩셈부르크-재단 |
| 9 | 민사당 채신 회의(1990. 9. 8~9)를 위한 강령 | 1990년 7월 9일 | 민주사회주의당(민사당), 독일사회민주당(사민당) | 민주사회주의 자료보관소/로자-룩셈부르크-재단 |
| 10 | 독일 총선 준비를 위한 민사당 당 대표회 결의안 | 1990년 7월 21일 | 민사당, 독일 연방의회(Deutscher Bundestag) | 민주사회주의 자료보관소/로자-룩셈부르크-재단 |
| 11 | 서독에서의 민사당 주 조직 결성을 위한 전당대회 결의안 | 1990년 10월 13일 | 민사당 | 당 수뇌부 위원회의 결의안, 2/596, 회의록 56/90번, 첨부문서 4, 민주사회주의 자료보관소/로자-룩셈부르크-재단 |
| 12 | 국가안전부-슈타지(MIS) 문제에 관한 민사당 의장단 선언문 | 1991년 4월 15일 | 민사당, 민사당 의장단 | |
| 13 | 평화와 인권을 위한 이니셔티브(FM)의 호소문 | 1989년 3월 11일 | 평화와 인권을 위한 이니셔티브(FM) | http://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010/30582692_wegmarken_einheit3/index.html |
| 14 | 동독 사회민주당(SDP) 건설을 위한 제의 | 1989년 7월 24일 | 동독 사회민주당, 독일 사회주의통일당(SED) | 사민당 수뇌부, 사민당 수뇌부 회의록, 1989년 9월 18일 회의파일 |
| 15 | 드레스덴 시 "그룹 20"의 성명서 | 1989년 11월 10일 | 그룹 20 | |
| 16 | "보라빛" 공세의 입장 표명-활동 계획서 | | 리일락 공세 | Lila(보라빛 공세) 활동 계획서, 연도 및 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제2차 초안 |

| 문서 | 제목 | 날짜 | 담당자/기관 | 출처 |
|----|--|---------------|---|--|
| 17 | 정당 설립을 위한 호소문/신포럼(Neues Forum) | | 신포럼 | 베를린 로베르트-하베만 자료보관소 (Robert-Havemann-Archiv Berlin) |
| 18 | 사통당 당원 전원을 향한 호소/신포럼 | 1989년 10월 6일 | 신포럼 | 신포럼-동독 시민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자화상, 노조 건설 활동을 위한 자료, 독일노조 연합(DGB)-연방 대표, 노조 건설 부서, 장소 및 날짜에 관한 기록 없음 |
| 19 | "동독 사회민주주의당" 이니셔티브 그룹의 호소문 | 1989년 9월 12일 | "동독 사회민주주의당" (SDP) 이니셔티브 그룹 | 동독 시민당-SDP/SPD 당 수뇌부, 2:ISDPA000002 |
| 20 | "민주주의 지금"의 호소문 | 1989년 9월 12일 | 민주주의 지금(Demokratie Jetzt) | 베를린 로베르트-하베만 자료보관소 |
| 21 | 사통당 구 당원과 사통당 당원으로 남아있는 모두를 향한 동독 시민당의 호소문 | 1989년 가을 | 동독 사회민주주의당, 독일사회주의통일당 | 동독 기록고 정보/문서관리소 |
| 22 | "사회적, 친환경적 연합"을 위한 호소문/민주적 개혁 | 1989년 10월 2일 | 민주주의 출발(Demokratischer Aufbruch)(DA) | |
| 23 | "민주적 개혁"의 라이프치히 강령 | 1989년 12월 17일 | 민주주의 출발(DA) | |
| 24 | 인민의회 총선에서부터 기민련(CDU) 합당까지/(민주 혁신당, DA) | 1990년 9월 | 민주주의 출발(DA) | 독일을 위한 연합: 기민련, 민주주의 출발, 독일 사회주의 연합 1989/1990, Jäger, Wolfgang/Walter, Michael, 1998, Die Allianz für Deutschland: CDU, Demokratischer Aufbruch und die Deutsche Soziale Union 1989/1990, Köln, Böhlau, S. 144~147 |
| 25 | 동독 사회민주당(SDP) 설립강령 | 1989년 10월 7일 | 동독 사회민주당(SDP), SDP 설립을 위한 이니셔티브 그룹, 독일민주공화국 | 안론 보도 AP-085 4 pl. 195 APD3801, 시민당 수뇌부, 의장단 회의파일 02.10-16.10.1989 |
| 26 | 동독 사회민주당 정관 | 1989년 9월 12일 | 동독 사회민주당 | 베를린 로베르트-하베만 자료보관소 |

| 문서 | 제목 | 날짜 | 담당자/기관 | 출처 |
|----|-------------------------------------|---------------|---|---|
| 27 | 독일동일을 위한 동독 사회민주당 대표자 회의 선언문 | 1990년 1월 14일 | 동독 사회민주당 | 동독 시민당 당원 명부, SDP/SPD 당 수뇌부, 대표자 회의와 전당대회: 베를린에서 열린 대표자 회의, 12. -14. 01. 1990, 21SDPA000005 |
| 28 | 독일 사회주의 연합(Deutsche Soziale Union) | 1990년 3월 | 독일 사회주의 연합 | |
| 29 | 동독의 녹색당 설립을 위한 이니셔티브 | 1989년 11월 5일 | 동독 녹색당 | |
| 30 | 1990년 선거 연대를 위한 선언문/녹색당 | 1990년 1월 3일 | 토마스 셀(Thomas Sell), 민주주의 출발 콘라트 바이쓰(Konrad Weiß), 민주주의 지극 리인하르트 바이스훈(Reinhard Weißhuhn), 평화와 인권을 위한 이니셔티브 미르틴 구르차이트(Martin Gurzeit), 사회민주당 베른트 게르케(Bernd Gehrke), 좌파 연합 | 베를린 로베르트-하베만 자료보관소 |
| 31 | 슈타지 요원 대상 사회 재편입 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촉구/녹색당 | 1990년 1월 15일 | 녹색당 | 원탁회의, 제7차 회의, 5항 |
| 32 | 마르크스주의적 정당 창당 그룹/카네이션 | 1989년 12월 10일 | 카네이션 | 디 악치온(Die Aktion) 지, Zeitschrift für Politik, Literatur, Kunst(정치, 문학, 예술 전문 잡지), 60/63호, 1990년 1월, 발행 10주년 |
| 33 | 독립 노조 설립을 위한 발기문 | 1989년 12월 20일 | 독립 노조 이니셔티브 | 베를린 로베르트-하베만 자료 보관소 |

| 문서 | 제목 | 날짜 | 담당자/기관 | 출처 |
|----|------------------------------|-------------|---|---|
| 34 | 독립사민당(USPD) 설립에 관한 단상 | 1990년 1월 | 독일 독립사민당(USPD) | 할레 시 자유, 사회주의 일간지(Freiheit, Sozialistische Tageszeitung für den BezirkHalle), 1990년 1월 13일자, 11번 기사; 제시쉴레 차이팅(Sächsische Zeitung), 1990년 1월 24일자; 20번 기사-발간 45주년, 정치, 경제, 문화 전문 일간지, 출판사: Verlag Sächsische Zeitung |
| 35 | 독일공산당(KPD) 부활을 위한 이니셔티브의 토론문 | 1990년 1월 | 독일공산당(Kommunistische Partei Deutschlands) | 라우저처 룬트샤우(Lausitzer Rundschau), 1990년 2월 5일, 30번 기사, 발행 29주년, 독립 일간지 |
| 36 | 동독 인민의회 의장단 제안서 | 1990년 2월 2일 | 동독 인민의회, 제9차 회기 | 원탁회의 제 11차 회의, 1990년 2월 5일, 정보 11/2, 인쇄물 64번 |
| 37 | 좌파 민주주의 총 연합을 위한 호소문 | 1990년 2월 5일 | 독일공산당(KPD) | 프라이에스 보르트(Frees Wort) 지, 1990년 2월 5일자, 30번, 남 튀링겐 지역의 독립 일간지, 창간 39주년 |
| 38 | 시민 위원회 “노르만네 거리” | 1990년 2월 9일 | 시민 위원회 노르만네슈트라세 (Normannenstraße) | 베를린 마티아스-도마쉬 자료보관소 (Matthias-Domaschk-Archiv) |
| 39 | “녹색 동맹” 설립을 위한 호소문 | 1990년 11월 | 녹색 동맹(Grüne Liga) | 할레쉴레 레폼차이팅(Hallesche Reformzeitung), 신설 민주주의 운동 단체와 정당의 목소리, 1990년 2월 1일, 제 3호 |

| 문서 | 제목 | 날짜 | 담당자/기관 | 출처 |
|----|-----------------|----|---------------------|--|
| 40 | 신설 정당 및 정치 연합 | | | <p>동독 연감 '90. 자료, 정보, 수치, DDR Almanach ' 90. Daten, Information, Zahlen, Stuttgart, München 1990</p> <p>피셔 세계 연감. 동독 특별 호. 연대 기, 이름, 정당, 선거 결과, 전망, Der Fischer Weltalmanach, Sonderband DDR. Chronik, Namen, Parteien, Wahlergebnisse, Perspektiven, Frankfurt am Main 1990.</p> <p>부상하는 정당들. 1990년 3월 18일 인민의회 선거 이전의 동독 반공산주의 정당들과 정치적 연합. Weilemann, Peter R.; Meyer zu Natrup, Friedhelm B.; Bulla, Marchel; Pfeiler, Wolfgang; Schüller, Ulrich: Parteien im Aufbruch, Nichtkommunistische Parteien und politische Vereinigungen in der DDR vor der Volkskammerwahl am 18. März 1990, Melle 1990.</p> <p>구 동독 마지막 해의 정당과 정치 운동. Wuttke, Carola; Musiolek, Berndt (Hrsg.): Parteien und politische Bewegungen im letzten Jahr der DDR, Berlin 1991.</p> |
| 41 | 독일기독교민주주의연합(동독) | | 동독 독일기독교민주주의연합(기민련) | |

| 문서 | 제목 | 날짜 | 담당자/기관 | 출처 |
|----|--|---------------|---|---|
| 42 | 기민련(CDU) 강령 | | 동독 기민련(CDU) | 콘라트-아덴아우어 재단(Konrad-Adenauer Stiftung)(발간), 1990: 부 상하는 정당들. 동독의 반공산주의 정당들과 정치적 통일. Parteien im Aufbruch, Nichtkommunistische Parteien und politische Vereinigungen in der DDR, Bad Godesberg, S. 20-23 |
| 43 | 인민의회에서부터 기민련 합당까지-동독 기민련 | 1990년 10월 | 동독 기민련(CDU) | 독일을 위한 연합: 기민련, 민주혁신 당, 독일 사회주의 연합 1989/1990, Jäger, Wolfgang/Walter, Michael, 1998, Die Allianz für Deutschland: CDU, Demokratischer Aufbruch und die Deutsche Soziale Union 1989/1990, Köln, Böhlau, S. 70-95 |
| 44 | 사통당/민사당 정당 자산 확보를 위한 조치 | 1989년 12월 21일 | 사통당 수뇌부, 사통당-민사당 수뇌부 위원회 장, 사통당-민사당 자산 보호를 위한 실무단 | 사통당/민사당 당 수뇌부 결의안, /15 5/89, 민주사회주의 자료 보관소, 로 자-룩셈부르크-재단 |
| 45 | 건축물, 토지, 주택 등의 사통당 자산 매각 및 소유권 이전 | 1990년 | 당 수뇌부 의장단, 당 자산 보호 실무 단 단장 게르트 펠리칸(Gerd Pelikan) | 1990년 초 당 수뇌부 의장단의 결의안 |
| 46 | 사통당/민사당 기관 전환 | 1990년 | 당 수뇌부 의장단, 당 자산 보호 실무 단, 당 구조 관리 실무단, 시 대표단, 내 무 관리 부장, 원탁회의. | 민주사회주의 자료보관소, 로자-룩셈 부르크 재단 |
| 47 | 동독 정당 및 대중 조직 자산 검증을 위한 독립 위원 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1990년 2월 21일 정당법 변 경 법안 | 1990년 5월 31일 | 동독 인민의회, 제10차 임기, CDU/DA, DSU, Die Liberalen, SPD | 연방의회-인쇄물 제 51번 |

| 문서 | 제목 | 날짜 | 담당자/기관 | 출처 |
|----|---|---------------|---|--|
| 48 | 민사당 정당 자산 내역/볼프강 폴(Wolfgang Pohl) | 1990년 6월 13일 | 부대표 볼프강 폴(Wolfgang Pohl) | 민사당 홍보자료, 1990년 6월 14일, 당 수뇌부, 민주사회주의 자료 보관소, 로자-룩셈부르크 재단. |
| 49 | 동독 정당 및 대중조직의 자산 검증을 위한 독립 위원회 설립과 검증 절차에 관한 규정(정당자산위원회 규정-PVKV) | 1991년 6월 14일 | 연방정부 | BGB1 I S. 1243, 1991년 6월 14일 |
| 50 | 동독 정당 자산에 대한 현 정당과의 합의(제2차 조사 위원회 보고서 내용 발췌) | 1998년 5월 28일 | 동독 정당 자산 검증을 위한 독립위원회(이하 UKPV), 신탁 관리청(THA), 시민면, 민사당, F.D.P | 제2차 조사 위원회 보고 내용 발췌, 인쇄물 13/10900, 1998년 5월 28일 |
| 51 | 동독 정당 및 대중 조직 자산 검증을 위한 독립위원회(UKPV)의 최종 보고서 | 2006년 7월 5일 | UKPV 대표 크리스타인 폰 함머슈타인(Christian von Hammerstein), 신탁 관리청(THA), 통일 특수과제청(BvS), 독일 연방의회 | 독일 연방의회, 인쇄물 16/2466, 2006년 8월 24일, 2006년 7월 5일 동독 정당 및 대규모 조직 자산 검증을 위한 독립 위원회의 최종보고 |
| 52 | 시통당 전당대회 그레고어 기지의 연설- "우리 모두가 새로운 정당을 위해 투쟁한다면, 그 정당은 강인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1989년 12월 8일 | 그레고어 기지, 사회주의통일당 전당대회에서. | 좌파 민주사회당 2011 베를린 URL- http://archiv/2007.sozialisten.de/partei/dokumente/index.htm (2011.07.19). |
| 53 | 시통당 전당대회 한스 모드로우의 연설- "정당은 지지자를 필요로 한다." | 1989년 12월 16일 | 한스 모드로우, 사회주의통일당 전당대회. | 좌파 민주사회당 2011 베를린 URL- http://archiv/2007.sozialisten.de/partei/dokumente/index.htm (2011.07.19). |

| 문서 | 제목 | 날짜 | 담당자/기관 | 출처 |
|----|---|---------------|---------------------------------------|--|
| 54 | 시통당 전당대회, 디터 클라인의 발언- "현대적인 사회당의 재편성과 이 재편성이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에 기여하는 바에 대하여" | 1989년 12월 16일 | 디터 클라인, 전당대회 토론에서. | 좌파 민주사회당, 2011 베를린 URL- http://archiv/2007.sozialisten.de/partei/dokumente/index.htm(2011.07.19). |
| 55 | 시통당 전당대회, 미하엘 슈만의 발언- "스탈린주의에 입각한 제도를 결연히 정산하다." | 1989년 12월 16일 | 미하엘 슈만, 사회주의통일당 전당대회. | 좌파 민주사회당, 2011 베를린 URL- http://archiv/2007.sozialisten.de/partei/dokumente/index.htm(2011.07.19). |
| 56 | 시통당 전당대회, 그레고어 기지의 발언- "진정한 새로운 시작을 위해 새 이름이 필요하다." | 1989년 12월 17일 | 그레고어 기지, 사회주의통일당(SED)-민주사회당(PDS)전당대회. | 좌파 민주사회당 2011 베를린 URL- http://archiv/2007.sozialisten.de/partei/dokumente/index.htm(201107.19). |
| 57 | 시통당 전당대회, 볼프강 폴의 발언- "정당을 철저히 혁신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조례가 필요하다." | 1989년 12월 16일 | 볼프강 폴, 사회주의통일당 전당대회. | 좌파 민주사회당 2011 베를린 URL- http://archiv/2007.sozialisten.de/partei/dokumente/index.htm(2011.07.19) |
| 58 | 시통당 전당대회 제인위원장 클라우스 헵케의 보고- "12월 7일까지 2,552건의 지시, 질의, 비판 및 제안서가 제출되었다." | 1989년 12월 17일 | 클라우스 헵케, 사회주의통일당 비정규 전당대회 제인위원장. | 좌파 민주사회당 2011 베를린 URL- http://archiv/2007.sozialisten.de/partei/dokumente/index.htm(2011.07.19). |

| 문서 | 제목 | 날짜 | 담당자/기관 | 출처 |
|----|---------------------------------------|---------------|---|--|
| 59 | 독일 사회주의통일당-민주사회당의 임시 조례 | 1989년 12월 17일 | 전당대회 의결사항: | 호르보겐, 로타/나카스, 데트레프/슈데판, 게르트 루디게(발행) 1999. 사회주의통일당/민주사회당 비정규 전당대회, 1989년 12월 8/9일 및 16/17일 베를린에서 있었던 논의. 베를린: 디츠 출판사 438-445 p. |
| 60 | 민시당의 정책안 | 1990년 2월 25일 | 민주사회당, 시민당, 코메콘, 바르샤바 조약, 농업생산조합, 구 동독, 구 서독, 소비에트연합, 미국. | 선거 전당대회 결의안 |
| 61 | 구 서독과 구 동독 간에 있었던 최초 독일의회 선거를 위한 법 초안 | 1990년 8월 5일 | 연방의회, 11차 선임기간. | 독일연방의회, 2011 베를린, URL- http://dip.bundestag.de/btd/11/076/1107624.pdf (2011.07.28). |
| 62 | 독일 전역에서 최초로 실시된 선거에 대한 연방 헌법 재판소의 판결 | 1990년 9월 29일 |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독일연방하원, 독일연방상원, 공화당, 녹색당, 좌파/민시당, 구 동독. |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82, 322 http://www.servat.unibe.ch/dfr/bv082322.html (2011.08.09). |
| 63 | 독일선거법 개정 및 정당법 개정을 위한 열 번째 법 초안 | 1990년 10월 2일 | 독일연방의회, 제 11차 회기. | 독일연방의회 2011 베를린, URL- http://dip.bundestag.de/btd/11/080/1108023.pdf (2011.07.28). |
| 64 | 민시당의 정책안 | 1993년 1월 31일 | 민주사회당, 노조, NATO, 구 동독, 코메콘, 독일연방군, 연방정부, 연방하원, 서유럽연합. | 3차 전당대회, 1차 회의 결의안 |

| 문서 | 제목 | 날짜 | 담당자/기관 | 출처 |
|----|----------------------------------|---------------|--|---|
| 65 | 민사당이 제출한 독일 헌법 개정 초안 | 1994년 1월 12일 | 우베 예스 호이어, 그레고어 기지(독일 연방하원 의원) 및 연방하원의 민사당/좌파 당원. | 독일 연방의회, 12차 선거기간, 인쇄물 12/6570 |
| 66 | 민사당의 구 자산에 관한 비교 | 1995년 7월 18일 | 고등행정법원, 민사당, 특별자산 및 연방재정자산 관리이사회, 구 동독 정당 및 대중단체 자산 검토위원회, 연방 출판, 컨설팅 및 무역 유한회사, VULKAN 부동산 자산 유한회사. | 베를린 고등행정법원, 1995 URL- http://die-linke.de/fileadmin/download/finanzen/950718_vergleich_altvermoegen_pds.pdf (2011.07.21). |
| 67 | 민사당 유권자층의 사회구조(다양한 특성에 따라) | | | 아르츠하이머, 카이/클라인, 마르크스 1996. 동서독 공화당 및 민주사회당 유권자들. 제국적인 비교, URL- http://www.kai-arzheimer.com/pds-rep/reppds.html (2011.07.06) |
| 68 | 2002년 민사당 선거결과를 나타낸 표 및 그래프 | | | 노이게바우어, 게로/슈퇴스 리하르트 2002. 2005년 연방의회선거 분석, 베를린: 오토 슈타머 센터 실무자. |
| 69 | 좌파당 민사당의 2003년도 정당 정책안 | 2003년 10월 26일 | 8차 정당대회 두 번째 회의 의결사항 | Kutzmutz, Rolf(발행) 2005. 좌파 민사당 정책안 베를린: 좌파당 민사당 또는 좌파 민주사회당 2003. 좌파당 민사당의 정책안: http://archiv2007.sozialisten.de/partei/dokumente/programm/index.htm (2011.07.21) |
| 70 | 2005년 연방의회선거를 위한 좌파당 민사당의 선거 정책안 | 2005년 8월 27일 | 좌파당 민사당, 구 동독 연방주들, 독일연방군, 지방자치단체, 미국, EU, NATO. | 9차 정당대회 두 번째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 |

| 문서 | 제목 | 날짜 | 담당자/기관 | 출처 |
|----|--|----------------|--|---|
| 71 | 극좌파주의적 노령과 의혹 사례 Ⅲ. 정당과 기타 당파 "좌파당 민사당" | 2007년 5월 15일 | 내무부장관 불포강 쇼이블레, 내무부, 연방헌법수호청. | 연방내무부, 2006, 연방안전기 회부 보고서 2006, 베를린: 연 방내무부, URL=http://www.verfassungsschutz.de/download/SAVE/vsbericht_2006.pdf (2011.07.21). |
| 72 | 2005년 연방의회선거 당시 좌파당에 관한 표 및 그 래프 | | | |
| 73 | 좌파의 정당 문건 | 2007년 3월24/25일 | 좌파당 민사당, "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선거대안(WASG)" 당, 구 동독, 구 서독, EU, 미국, 경찰, 독일 연방군, 자 치단체, NATO. | "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선거대안 (WASG)" 당과 좌파당 민주사회당의 정당대회 의결사항. |
| 74 | 좌파당의 연방법령 | 2007년 3월 24일 | "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선거대안 (WASG)" 당과 좌파당 민사당의 정당대 회 2007년 3월 24/25일. | 좌파 민주사회당 2011 베를린 URL=http://archiv2007.sozialisten.de/partei/dokumente/index.htm (2011.07.19). |
| 75 | 좌파당의 연방재정 규칙 | 2007년 3월 24일 | "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선거대안 (WASG)" 당과 좌파당 민사당의 정당대 회 2007년 3월 24/25일. | 좌파 민주사회당 2011 베를린 URL=http://archiv2007.sozialisten.de/partei/dokumente/index.htm (2011.07.19). |
| 76 | 좌파당의 선거규칙 | 2007년 6월 16일 | 정당 좌파의 정당전당대회. | 좌파 민주사회당 2011 베를린 URL=http://archiv2007.sozialisten.de/partei/dokumente/index.htm (2011.07.19). |
| 77 | 좌파의 기본법 컴퍼런스(요약) | 2009년 3월 6/7일 | 할리나 바브치니악, 좌파, 연방 하원, 구 동독, 구 서독, 독일군. | |

| 문서 | 제목 | 날짜 | 담당자/기관 | 출처 |
|----|---|---------------|--|---|
| 78 | 정치변화의 원동력이 되자 | 2010년 10월 25일 | 게지네 뢰취, 클라우스 에른스트, 그레고어 기지-게파의 과업에 대해. | 좌파, 연방정부 2011 베를린 URL- http://dokumente.linksfraktion.de/inhalt/20101025-motor-fuer-politikwechsel.pdf (2011.07.29). |
| 79 | 사통당-민사당의 향후 과제 | | | 슈테판 리히터, O.D. 민사당의 연혁, 17년 간의 연혁 요약장리, 베를린 URL- http://archiv2007.sozialisten.de/partei/geschichte/view_html?zid=35814&bs=18n=0 (2011.07.21). |
| 80 | 민사당 연혁 17년 간의 연혁 요약장리 사회주의통일당부터 "노동과 사회정의의 위한 선거대안(WASG)" 당과의 통합까지(1989-2007) | | | 오토프리드 아르놀트/프랑크 슈만/에트빈 슈베르트너, 1995 시적을 기점으로-삼화로 설명하는 민주사회당의 역사, 1989년부터 1994년까지, 베를린: 디츠 출판사. |
| 81 | 좌파당의 전당대회 결의안, 1989년부터 2007년까지의 민사당 | | | |
| 82 | 좌파당 강령 홍보물- "민영화 대신 재공영화를" | 2008년 5월 8일 | 좌파 강령 홍보물. | 좌파당 민사당 2011 베를린, URL- http://archiv2007.sozialisten.de/partei/dokumente/index.htm (2011.07.19). |
| 83 | 좌파당 홍보물- "민영화 중단" | 2008년 5월 29일 | 좌파 강령 홍보물. | 좌파당 민사당, 베를린 URL- http://archiv2007.sozialisten.de/partei/dokumente/index.htm (2011.07.19). |
| 84 | 좌파의 평균연령 및 분담금 수입 그래프 2010 | | | 슈피겔지 30호, 2011년 7월 25일, 15 p. |

문서 요약

문서요약(문서번호 1~84)

문서
번호 1

에리히 호네커를 비롯한 당 중앙위원회 전원 사퇴-제 12차 사통당 중앙위원회 (Zentralkomitee) 결의

1989년 12월 3일

담당자 / 기관 사통당 중앙위원회, 당 중앙 감독위원회(Zentrale Parteikontrollkommission, ZPKK), 정치국(Politbüro)

내용

- 특별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군 대표자 회의(Kreisdelegiertenkonferenzen)에서는 과거 사통당과 국가 지도층의 직권 및 권력 남용에 대한 거침없는 논쟁이 진행되었다.
- 이러한 이유와 정치국의 제안, 당 중앙 감독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 한스 알브레히트(Hans Albrecht), 베르너 크로리 코브스키(Werner Krolikowski), 귄터 클라이버(Günther Kleiber), 에리히 밀케(Erich Mielke), 게르하르트 뮐러(Gerhard Müller), 알렉산더 샬크-골로드코브스키(Alexander Schalck-Golodkowski), 호르스트 진더만(Horst Sinermann), 빌리 슈토프(Willi Stoph), 해리 티쉬(Harry Tisch), 헤르베르트 치겐한(Herbert Ziegenhahn), 디터 뮐러(Dieter Müller)를 당 중앙위원회에서 제명한다.
- 당 중앙위원회는 정치국과 중앙위원회의 집단 사퇴를 선언하는 바이다.

출처 제 12차 사통당 중앙위원회 결의. 민주사회주의 문서고(Archiv Demokratischer Sozialismus) 로자-룩셈부르크 재단(Rosa-Luxemburg-Stiftung)

담당자 / 기관_ 전당대회, 한스 모드로우 총리(Ministerpräsident Hans Modrow), 특별 실무 위원회(Arbeitsausschuss)

내용_

- 특별 전당대회의 출발상황
 - 5월 7일에 열린 지방의회 선거 결과 조작과 사통당 지도부의 개혁의지 부재로 인해 1989년 가을 대규모 시위가 시작되었다. 그와 동시에 대규모 동독 탈출이 일어났다.
 -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다. 1989년 11월 28일 서독의 헬무트 콜(Helmut Kohl) 총리는 연방의회에서 독일의 연방국가적 질서를 목표로 하는 연방구조 건설을 위한 10개항 계획(Zehn-Punkte-Plan)을 발표하였다.
 - 이 시기에는 대규모 탈당이 일어났으며, 위성정당인 CDU, LPDP, DBD, NDPD는 “지도당 (Führende Partei)과 거리를 취하게 된다. 1989년 12월 1일 인민의회는 동독 헌법 제1조에 명시된 “노동자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마르크스-레닌주의 당”의 지도적 역할에 대한 내용을 삭제한다. 1989년 12월 4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대규모 시위에서는 15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으며, 포츠담(Potsdam)과 칼-마르크스시(캄니츠 시), 할레(Halle), 게라(Gera), 노이브란덴부르크(Neubrandenburg)에서도 수천 명이 시위에 나섰다.
 - 12월 3일에는 중앙위원회 전원과 정치국, 중앙위원회 서기국(ZK-Sekretariat), 총서기(Generalsekretär)가 사퇴하였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직후 새로이 선출된 에르푸르트(Erfurt) 지역의 헤르베르트 크로커(Herbert Kroker) 제 1서기를 대표로 하는 특별 실무위원회가 당 지도권 인수와 코앞으로 다가온 특별 전당대회 준비를 위해 구성되었다.
- 특별 전당대회의 결과
 - 회의를 통해 새로운 지도위원회(Leitungsgremien) 선출이 결정되었으며, 그레고어 기지(Gregor Gysi)가 당 대표로 선출되었다.
 - 당의 해체는 과반수에 의해 거부되었다.
 - 미하엘 슈만(Michael Schumann)과 디터 클라인(Dieter Klein) (현대적인 사회주의의 당 재형성과 신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당의 기여), 볼프강 폴(Wolfgang Pohl) (정관위원회 보고), 그레고어 기지(당면한 당의 업무에 대하여)의 발표에 대한 논의 후 새로운 정관이 채택되었다. 이로 인해 1976년 5월에 열린 제9차 사통당 전당대회에서 결의된 정관은 효력을 잃게 되었다.
 - 특별 전당대회는 당이 스탈린적 체제와 완전히 결별하고, 현대적이며 민주사회주의적인 방향으로 진일보하는 것을 의미했다. 전당대회는 사통당의 형식적인 종말과 민사당의 취임-전당대회(Inaugural-Parteitag)로 간주되었다.

출처 Lothar Hornburg u.a (Hrsg.). 1999. 1989년 12월 8/9일, 16/17일 베를린에서 열린 자문 회의록(Außerordentlicher Parteitag der SED/PDS: Protokoll der Beratung am 8./9. und 16./17. Dezember 1989 in Berlin). Berlin: Ditzien Verlag.

담당자 / 기관_ 좌파당(Die Linke)/당 수뇌부(Parteivorstand)

내용_

정관의 내용은 당 성격에 관한 선언문과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사통당-민사당은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당이며, 독일과 전 세계적인 노동운동의 전통과 유산을 기반으로 한다. 사통당-민사당의 이론적 토대는 마르크스주의이다.
- 사통당-민사당의 목표는 동독에 새로운 인간적, 민주적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이다. 당은 민족주의(Nationalismus), 파시즘(Faschismus), 인종주의(Rassismus), 국수주의(Chauvinismus)의 모든 형태에 대해 투쟁한다.
- 사통당-민사당은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 그 외 전 세계 좌파 운동 단체와의 적극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 입당 자격. 18세 이상이며, 강령과 정관을 인정하는 동독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은 당원이 될 수 있다. 당원에게는 제안 제출과 언론과의 접촉, 선거 및 피선거권이 부여된다.
- 민주적 정당 확장. 사통당-민사당의 기본 조직은 당의 토대를 이루며, 당의 가장 중요한 조직 단위이다. 당의 기본 조직들은 결의권과 독립적인 행위권을 갖는다. 이들은 단위 지역의 원칙(Territorialprinzip) 혹은 생산원칙(Produktionsprinzip)에 따라 배치될 수 있다. 여성들은 정당 활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 당원 총회(Mitgliederversammlung)는 통상 한 달에 한 번 소집된다. 당 수뇌부들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다. 대표자 회의는 당 대표와 당 수뇌부, 중재위원회(Schiedskommission)를 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당 대표와, 부대표, 위원회 장들은 의장단(Präsidium)의 구성원이다.
- 당의 최고 기구. 사통당-민사당의 상임 최고 기구는 전당대회이다. 의결을 위해서는 선출된 대표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전당대회는 강령과 정관을 결정하며, 당의 기본 노선을 정한다. 당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논의할 안건을 제출한다.
- 국민의 대표와 사회적 조직. 계파와 당의 대표들은 독립적으로 일한다. 계파 소속원에 대한 강제(Fraktionszwang)는 존재하지 않는다.
- 물질적, 재정적 자원. 대표들은 사통당-민사당의 자산을 관리한다. 당의 재정은 당비와 당 기관의 수입, 기부를 통해 충당된다. 당비는 당원 스스로 결정

출처_ 노이에 유스티츠(Neue Justiz) 지-NJ 1992, S. 147~151

담당자 / 기관_ 막스 클라인(Max Klein)

내용_

- 막스 클라인은 민사당 전당대회가 끝난 직후, 출판을 위해서가 아닌, 자기 자신과 측근 동지들을 위해 회고록을 작성했다.
- 1989년 가을 사통당은 권력을 상실하게 되며, 막스 클라인이 정치적으로 신봉했던 것들 대부분은 갑자기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 1988년 동지 당원들의 서독으로의 탈출과 에곤 크렌츠(Egon Krenz)가 이끈 선거 결과 조작은 당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그의 생각을 무르익게 한다. 막스 클라인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변화에 관심을 가졌다.
- 쾨니히스 부스터하우젠(Königs Wusterhausen)에서는 평당원들이 지식인들에 반감을 갖고 있다는 유언비어에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난다.
- 쾨니히스 부스터하우젠에서 발표한 그의 연설은 개인적 동기로 인해 당에 남고자 하는 의지와 전당대회를 통해 확신을 갖게 한 현대적인 사회주의당의 개념이라는 두 가지 핵심 내용만을 담고 있다.

출처_ Klein, Max. 2000. 우토피 크레이티브 자: 특별 전당대회(Utopie Kreativ: Außerordentlicher Parteitag), S. 130~135

문서
번호 6

사통당의 민사당으로의 당명 변경
1990년 2월 1일

담당자 / 기관_ 당 수뇌부 위원회, 당 수뇌부

내용_

당 내의 엄청난 변화에 기인해 당 수뇌부는 당 수뇌부 의장단의 제안에 따라 당명을 “민주사회주의당”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한다.

출처_ 당 수뇌부 의장단의 결의안 2./88 11/90, 회의록 11번, 첨부 문서 3번. 민주 사회주의 자료보관소/로자-룩셈부르크-재단

문서
번호 7

민사당과 동독 사민당의 차이
1990년 2월 22일

담당자 / 기관_ 민주사회주의당(민사당), 서독과 동독의 사회민주주의당

내용_

- 사민당은 사회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민사당은 민주사회주의를 고수한다. 서독 사민당은 동독 SPD보다 사회주의와 거리를 덜 둔다.
- 사민당은 실용주의 정당으로 민사당과는 달리 사회 이론과 이데올로기 및 이데올로기 모델을 거부한다.
- 사민당은 노동운동의 사회민주주의 전통을 기반으로 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전통을 따르지 않고 있다. 민사당은 독일과 전 세계적 노동운동, 그리고 반파시즘을 기반으로 한다.
- 동독 사민당은 서독 사민당과 반대로 자본주의를 비판하지만, 민사당은 그렇지 않다. 민사당은 국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와 거리를 둔다.
- 민사당은 공익이 지배적인 자산 형태로 남기를 지지하지만, 사민당은 그렇지 않다.
- 사민당은 농업이 누구나 취할 수 있는 자산 형태라고 주장한다. 반대로 민사당은 농업 생산 협동조합과 원예 생산 협동조합, 국민 소유의 대농장이 수십만 명의 생존을 위한 토대라고 생각한다. 사민당은 토지의 소유권 불가침성을 찬성하지 않는다.
- 동독 사민당은 서독 사민당으로부터 선거 지원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동독 사민당은 민사당과는 달리 독립적이지 않다.
- 사민당은 동독의 서독 합병을 뜻하는 즉각적인 경제-화폐 연합을 지지한다. 민사당은 독일의 상호적 접근을 지지한다.
- 민사당은 양 독일의 완전한 탈군사화를 지지하지만, 사민당은 그렇지 않다.
- 사민당의 당 정체성은 민사당에 대한 거부적 태도와 독일통일에 대한 지지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민당은 민사당과 객관적인 대결을 벌일 수 없다. 반대로 민사당은 사민당과의 건설적인 관계를 위해 노력 한다.

출처_ 민사당 수뇌부 의장단의 결의안, 1/142, 회의록 14/90번, 첨부문서 4, 민주사회주의 자료보관소/로자-룩셈부르크-재단

담당자 / 기관_ 민주사회주의당(민사당)

내용_

당 쇄신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당의 쇄신 과정이 결산되어야 한다. 당 쇄신 회의는 민사당이 통일된 독일에서 당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당 쇄신 회의는 위원회와 학자, 지지 기반을 통해 준비되어야 한다. 민사당은 국내외의 초청 인사들로부터의 비판 내용을 회의를 통해 논의할 것이다. 다음의 5개 특별실무단의 구성이 제안될 것이다.

1. 역사 극복: 사회 모델 정립과 사통당의 역할 규명
2. 강령과 사회주의에 대한 논의: 논의 상황은 비판적으로 결산되어야 하며, 통일 자본주의 독일에서의 민주사회주의 실행 가능성이 타진되어야 할 것이다.
3. 당의 민주화: 현대적인 사회주의당의 새로운 “정형(Typus)”과 당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문제.
4. 당원 구조: 당원 구조 변화에 대한 분석
5. 통일독일에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민사당. 강령과 정치력의 문제. 이 특별실무단은 전 동독 총리였던 한스 모드로우(Hans Modrow)가 이끈다.

출처_ 당 수뇌부 위원회 결의안, 8/329, 회의록 31/90번, 첨부문서 4, 민주사회주의 자료보관소/로자-룩셈부르크-재단

담당자 / 기관_ 민주사회주의당(민사당), 독일사회민주당(사민당)

내용_

1. 역사 극복. 과거 청산과 역사적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 없이는 당 쇄신은 불가능하다. 과거의 배타적 모델(“진보” vs. “보수”)로부터의 전향이 시급하다. 사통당의 당 정형(Typus)은 쇄신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이 아니었는가? KPD와 사통당 내에서 카를 리프크네히트(Karl Liebknecht)와 로자 룩셈부르크(Rosa Luxemburg) 이후에 진정한 민주주의적 견해가 존재했는가? 이러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적이며 사회주의적인 전통은 유지되어야 한다. 동독에서 실패한 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동독의 유산 중 어떠한 것이 미래 독일에 대물림 되어야 할 것인가? 반대 세력의 영향력 역시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2. 강령과 사회주의에 대한 논의. “민주적 사회주의”란 사통당에 대한 거부를 뜻한다. 현실과 개인, 남녀평등은 민사당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변증법적, 물질주의적 자본주의 분석과 자본주의 비판은 필수적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모든 신기술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명되었다. 그러나 진보적 원칙이 자본주의만의 특징인 것은 아니다.
3. 당의 민주화. 민사당은 당의 구조와 조직을 변화하고 민주주의적인 체질을 키워나가야 한다. 특히 여론은 아래로부터 형성되어야 한다. 갑작스럽게 생겨난 집단들과 직접 민주주의, 투명성, 연대는 중요하다. 다양한 연령 집단 간의 중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군(Kreis) 단위 이상의 집단의 대표단은 남녀의 비율이 1:1로 구성되어야 한다. 상임당 기관은 축소되어야 한다.
4. 당원 구조. 민사당의 당원은 35만 명에 달한다. 이들의 입당과 탈당 동기와 요인은 무엇인가? 민사당에는 여성 당원(대다수가 신입 당원)과 사무직 직원이 많으며, 노동자와 간부, 중년의 연령대는 적다. 순수하게 따져보면 당의 규모는 작아졌다. 당의 규모는 확장되어야 한다. 입당 최소 연령을 16세로 낮추고, 당 내 소규모 그룹에 신입 당원을 입당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5. 통일독일에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민사당. 화폐, 경제, 사회 연합 이후에는 민사당이 독일 전역에서 활동하는 정당이어야 하며, 서독의 국민들도 정당활동의 대상이 된다. 민사당은 물론 동독의 시민들을 대표할 것이다. 민사당의 성향은 반자본주의적이어야 하며, 민사당은 기존 체제에 대한 대안을 도출해 내야만 한다. 민사당은 좌파 정당들에 대한 태도와 독일 내에서의, 특히 사민당에 대한 움직임을 규정한다.

출처_ 민주사회주의의 자료보관소/로자-룩셈부르크-재단

담당자 / 기관_ 민사당, 독일 연방의회(Deutscher Bundestag)

내용_

- 민사당은 5% 봉쇄조항을 포함한 선거에 반대한다. 이는 비민주적이며,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 민사당은 단일 선거구에서 서독과 동독의 좌파 세력들과 연합해 민사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동서독 좌파 후보들을 포함시키는 안을 통해 선거전에 돌입할 계획이다. 서독과 동독에서 상반된 선거 결과가 나타날 경우, 동독의 민사당은 비례대표로 의회에 진출해, 서독의 좌파 세력들을 민사당의 후보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동시에 민사당은 선거전에서 서독의 좌파 세력을 지원할 것이다.
- 단일 선거구가 타결될 경우, “좌파 리스트(Linke Liste)”와 선거 연합을 구성해 선거전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1990년 8월 말까지 특별 전당대회를 소집해, 공동 선거 강령과 정관을 결의해야 한다.
- 선거 강령의 토대는 다음과 같을 수 있다: 민주화, 기회 균등, 친환경화, 남녀평등(모든 주요 분야에서의 남녀 비율을 포함),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업무 시간 단축, 경제 감독과 관리, 마이너리티의 평등화, 탈군사화(NATO와 바르샤바 조약의 해체).
- 새로이 문을 열게 될 전(全) 독일 협력 사무소는 서독의 좌파 정당 및 단체들과의 다음과 같은 접촉을 관리한다. 1. 민사당 대표들이 독일 좌파 세력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2. 민사당에 입당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과 연락을 취한다. 3. 서독에 있는 민사당의 연락 사무소와 연락을 취한다. 4. 서독 내 민사당 건설을 지원한다. 5. 문헌 발송 시스템을 확장한다. 6. 서독과 서 베를린 좌파 세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 민사당은 전(全) 독일 의회로의 진출과 선거를 통해 좌파/사회주의당/단체를 독일 전역에 구성하는 것을 지향한다.
- 민사당은 양 독일의 근로자를 대표하고, 동시에 동독 국민들을 지원하며, 서독의 잠재 유권자들을 확보할 계획이다.

출처_ 민주사회주의 자료보관소/로자-룩셈부르크-재단



문서
번호 11

서독에서의 민사당 주 조직 결성을 위한 전당대회 결의안
1990년 10월 13일

담당자 / 기관_ 민사당

내용_

- 좌파 리스트/민사당 지방 연합은 민사당 지방 연합으로서 구성될 수 있다. 그 전에 먼저 좌파 리스트/민사당 지방 연합이 해체되어야 한다. 제12차 독일연방의회 입후보자로 이미 선발된 후보들은 새로운 민사당 지방 연합의 후보 리스트에 의거하여 입후보할 수 있다.
- 지방 연합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선거 강령은 “강력한 좌파 야당의 구축”이다.
- 자문 위원회(Beirat)는 여러 좌파 세력의 협력을 도모하는 기관으로서 기능해야 한다.
- 지방 연합의 대표들은 선거 시작 전까지 당 수뇌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 1991년으로 예정된 제2차 민사당 전당대회는 독일 전역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제2차 전당대회 이전까지는 전 독일 회의(Kongress)가 2회 개최될 예정이다. 서독지역 연합의 대표들은 정관위원회(Statutenkommission)과 기본강령위원회(Grundsatzkommission)의 위원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출처_ 당 수뇌부 위원회의 결의안, 2/596, 회의록 56/90번, 첨부문서 4, 민주사회주의 자료 보관소/로자-룩셈부르크-재단

담당자 / 기관_ 민사당, 민사당 의장단

내용_

- 슈타지(MfS) 역사 청산: 민사당은 슈타지 역사 청산이라는 중요한 업무에 그 무엇보다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은 불가능하다. 슈타지 역사 청산은 구 동독 체제에 대한 분석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슈타지에 관한 보도는 종종 객관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으며, 정치인들에 대한 주제 역시 남용되는 경우가 있다. 뿐만 아니라 슈타지 역사 청산 이외의 문제들이 더욱 시급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 슈타지 활동 평가. 구 동독 체제는 소련에 의해 지배되었으며, 서독의 투쟁 대상이었다. 슈타지 활동에 관한 책임은 구 동독 체제의 정치 지도자들의 몫이지, 슈타지 요원들의 몫이 아니다. 슈타지는 결국 무장 저항 없이 해체되었다. 슈타지의 특정 활동들은 전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나, 정당한 활동들도 존재했다. 민사당은 첩보 활동에 반대한다. 구 동독 체제의 첩보 활동은 다른 국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심판되어야 한다.
- 비공식 슈타지 요원. 비공식 슈타지 요원들의 활동은 공식 요원들의 활동과 근본적으로 그 어떤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 슈타지의 모든 활동들은 개별적으로 조사되어야 한다.
- 사통당과 슈타지. 슈타지의 상임 요원들은 모두 사통당 당원이었다. 슈타지 비공식 요원들은 타 정당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 당이 없었다. 슈타지는 사통당의 결의 내용을 따랐으나, 사통당의 시, 군 단위의 지도부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슈타지와 사통당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현재 민사당 당원이 된 과거의 사통당 당원들의 죄는 타 정당 당원들의 죄보다 크지 않다. 민사당에도 스탈린주의의 희생자는 존재한다.
- 구 슈타지 요원들을 위한 엠네스티. 지금까지 민사당은 구 슈타지 요원들을 위한 엠네스티에 대해 그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다. 민사당 구 슈타지 요원들이 동독의 형법을 어겼을 경우(예: 협박이나 공갈), 엠네스티를 찬성하지 않는다. 연방 독일의 형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불허한다. 이는 특히 첩보 활동이 폭력 행위로 이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첩보 활동은 유죄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된다.
- “범죄 조직”으로서의 슈타지. 민사당을 제외한 모든 연방의회 원내교섭단체들은 슈타지를 “범죄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슈타지의 수준을 히틀러 독일의 권력기관과 동등시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슈타지가 저지른 개별 범죄이다. 슈타지 요원들에게는 범죄 행위가 허용되지 않았다.
- 슈타지 문서 처리. 설득력 있는 문서들은 청산될 수 있어야 한다. 슈타지 요원들에 대한 문서는 보관 되어야 하며, 추후에 경우에 따라 폐기되어야 한다. 슈타지 요원들에 대한 문서는 제 3자에게 전달되어서는 안 된다. 당사자들은 문서 인도권을 갖는다. 슈타지 문서들은 국내외 첩보기관에 전달되어서는 안 된다. 슈타지 문서의 오용은 형법



상의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

- 과거 슈타지 요원들의 직업 활동 투입. 형법상의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 과거 슈타지 요원들은 일반 국민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들이 공공 업무에 적합한 지에 관한 여부는 개별적인 검증을 거쳐야만 한다. 형법상 범죄 행위로 처벌받은 슈타지 요원들은 차후 직업 활동에 투입될 수 있어야 한다. 슈타지 요원들의 연금 추가 축소는 불허한다.
- 슈타지 역사 추가 청산. 구 동독 정부가 슈타지의 잘못에 어떠한 특혜를 주었는지를 조사한다. 국민들은 슈타지 청산 문제에 더 큰 관심을 보여야 한다. 과거 슈타지 요원들과 희생자들과의 공공 토론은 계속되어야 한다. 구 슈타지 요원들은 슈타지의 과거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슈타지의 과거를 낱알이 공개할 수 있는 구 슈타지 요원들은 민사당에 남을 수 있거나, 입당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책임의식이다. 진실규명은 서독에 대한 자신감을 강화시켜 준다. 동독으로 인해 히틀러 독일이 잊혀져서는 안 된다. 민사당은 구 슈타지 요원들에 대한 선입견에 반대한다.

담당자 / 기관_ 평화와 인권을 위한 이니셔티브(IFM)

내용_

“평화와 인권을 위한 이니셔티브”(이하 IFM)는 조직 단체도, 정당도 아니다. IFM은 다음의 내용을 지지한다.

- 평화와 인권 보호
- 인간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권리와 의사 자유의 권리
- 군비 축소와 탈군사화
- 법치국가와 삼권분립
- 사회 구조의 분권화와 자치화

출처_ http://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010/30582692_wegmarken_einheit3/index.html

담당자 / 기관 동독 사회민주당, 독일 사회주의통일당(SED)

내용

- 많은 사람들은 위로부터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상황의 시급성으로 인해 국민 모두는 스스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
- 사통당의 지도력은 용납될 수 없다. 동독은 정치적 대안과 정치적 공공성, 민주적 조직 형태를 필요로 한다.
- 사회민주당 건설을 위해서는 이니셔티브 집단들이 형성되어야 한다.
- 국가와 사회의 구분이 요구된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 국가와 사회에 대한 입장. 법치국가, 민주주의와 다원주의, 복지 국가와 환경, 연방주의,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근로자들의 경영 참여, 공동 경제, 자유 노조, 종교의 자유, 여성의 평등권, 결사 및 집회의 자유, 자유 언론, 망명법.
- 외교적 입장. 독일의 2 국가 체제, 서독과의 특별 관계, 탈군사화, 군사연합 해제, 공정 무역, 독일 내 소수 민족과의 연대.

출처 사민당 수뇌부, 사민당 수뇌부 회의록, 1989년 9월 18일 회의파일

문서
번호 15

드레스덴 시 “그룹 20”의 성명서
1989년 11월 10일

담당자 / 기관_ 그룹 20

내용_

그룹 20은 시위대의 요구사항을 드레스덴 시장에게 전달할 업무를 위임받았다. 그룹 20은 비폭력 대화와 사회주의 사회를 토대로 하는 변화를 촉구하는 바이다.

- 언론 제한 해제
- 의사 표현의 자유
- 평화 시위와 집회의 허가와 보호



문서
번호 16

“보라빛” 공세의 입장 표명-활동 계획서

담당자 / 기관_ 라일락 공세

내용_

“보라빛 공세”는 기타 정당과 조직으로부터 독립적이다. 보라빛 공세는 독립 여성단체에 속한 자립 여성 이니셔티브이다.

- 여성 이니셔티브 “보라빛 공세”의 목표
 - 남녀평등
 - 요구 사항
 - 모든 정치권력 기관의 남녀 비율 동등화
 - 성적 자기결정(Sexuelle Selbstbestimmung)
 -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 여성학 연구 지원

출처_ Lila(보라빛 공세) 활동 계획서, 연도 및 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제2차 초안

문서
번호 17

정당 설립을 위한 호소문/신포럼(News Forum)

담당자 / 기관_ 신포럼

내용_

자매동맹인 “신포럼 정당”이 설립되어야 한다.

- 노이에스포럼 정당 설립으로 지방 정부에서 책임을 떠맡을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한다.
- 노이에스포럼은 많은 국민들을 위한 대규모 기반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출처_ 베를린 로베르트-하베만 자료보관소(Robert-Havemann-Archiv Berlin)



문서 번호 18 사통당 당원 전원을 향한 호소/신포럼
1989년 10월 6일

담당자 / 기관 신포럼

내용

200만 사통당 당원들은 동독지역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정치적 실체로서, 사회 쇄신을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엄청난 전문 지식과 지도 경험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바, 노이에스 포럼은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이다.

출처 신포럼-동독 시민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자화상, 노조 건설 활동을 위한 자료, 독일 노조 연합(DGB)-연방 대표, 노조 건설 부서, 장소 및 날짜에 관한 기록 없음

문서
번호 19

“동독 사회민주당” 이니셔티브 그룹의 호소문
1989년 9월 12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사회민주당”(SDP) 이니셔티브 그룹

내용_

“동독 사회민주당” 이니셔티브 그룹은 아래의 요구 사항을 포함한 정당 건설을 제안한다.

- 법치국가와 삼권분립
- 민주주의와 다원주의
- 연방주의
- 사회주의 시장경제
- 자유 노조

출처_ 동독 사민당-SDP/SPD 당 수뇌부, 21SDPA000002



문서
번호 20

“민주주의 지금”의 호소문

1989년 9월 12일

담당자 / 기관_ 민주주의 지금(Demokratie Jetzt)

내용_

시민운동단체 “민주주의 지금”을 위한 호소문

- 모든 이를 위한 사회적 평등과 자유, 인권을 지지
- 법치국가 지지
- 우리 사회의 다원주의

출처_ 베를린 로베르트-하베만 자료보관소

문서
번호 21

사통당 구 당원과 사통당 당원으로 남아있는 모두를 향한 동독 시민당의 호소문
1989년 가을

담당자 / 기관_ 동독 사회민주당, 독일사회주의통일당

내용_

- 사통당은 더 이상 구원이 불가능하다.
- 사통당에 민주사회주의자들을 위한 자리는 없다. 민주사회주의자들은 SDP에 입당해야 한다.

출처_ 독일 기독교 정보/문서관리소



문서
번호 22

“사회적, 친환경적 연합”을 위한 호소문/민주적 개혁
1989년 10월 2일

담당자 / 기관_ 민주주의 출발(Demokratischer Aufbruch) (DA)

내용_

- “민주주의 출발-사회, 친환경적” 연합 설립에 관한 제안
- 민주주의 쇄신을 위한 요구 사항
 - 국가와 정당(들)의 분리
 - 자유 여론의 발전과 여론과의 자유로운 접촉
 - 자유로운 의사 형성
 - 산업화 사회를 친환경 사회로 전환

문서
번호 23

“민주적 개혁”의 라이프치히 강령
1989년 12월 17일

담당자 / 기관_ 민주주의 출발(DA)

내용_

- 국가와 사회의 민주화
- 자유, 평등, 비밀 선거를 통한 대의 정치
- 입법, 행정, 사법의 분리
- 법치국가
-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 경제 활성화, 산업화 사회를 친환경 사회로 전환
- 자산 형태
- 효율 경제의 증명
- 무역 관계
- 쇠신된 사회에서의 개인과 공동체를 위한 자유
- 교육 분야 재정비
- 언론과 정보 접촉의 자유
- 종교
- 유럽의 평화 질서 내에서의 독일의 국가적 통일지지



문서 번호 24 인민의회 총선에서부터 기민련(CDU) 합당까지/(민주혁신당, DA)
1990년 9월

담당자 / 기관_ 민주주의 출발(DA)

내용_

- 네 명의 민주주의 출발 소속 의원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브리기타 쾨글러(Brigitta Kögler), 한스 가이즐러(Hans Geisler), 클라우스 슴츠(Klaus Schulz) 튜링겐 지방 정부 대표가 원내교섭단체 내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네 명의 의원은 기민련과 공동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였다.
- 선거 후보 리스트 연합인 “독일 연합(Deutsche Union)”은 기민련 및 포럼당과 함께 지방의회 선거전에 돌입한다. 전체적인 결과는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 1990년 6월 30일 중앙위원회(Hauptausschuss)는 포츠담에서 민주주의 출발의 미래에 대해 논의한다. 민주주의 출발은 독립 정당으로서는 미래가 없기에, 민주주의 출발을 기민련에 편입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었다.
- 1990년 9월 8일 슈트라우스베르크(Strausberg)에서 열린 최종회의 후 민주주의 출발의 법률적 존립은 구 동독 몰락 3일 전에 끝이 났다. 민주주의 출발에 남아있던 당원 대부분은 기민련에 입당했다.

출처_ 독일을 위한 연합: 기민련, 민주주의 출발, 독일 사회주의 연합 1989/1990, Jäger, Wolfgang/Walter, Michael. 1998. Die Allianz für Deutschland: CDU, Demokratischer Aufbruch und die Deutsche Soziale Union 1989/1990. Köln, Böhlau. S. 144~147

문서
번호 25

동독 사회민주당(SDP) 설립강령

1989년 10월 7일

담당자 / 기관 동독 사회민주당의당(SDP), SDP 설립을 위한 이니셔티브 그룹, 독일민주공화국

내용

- SDP 설립을 위한 이니셔티브 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친환경 중심의 사회민주주의가 건립되어야 한다.
- 동독의 모든 민주주의 집단과 이니셔티브, 인물들과의 협력이 요구된다.
- 점점 심각해져 가는 국가의 불안을 막고, 국가와 사회의 지속적인 민주화가 달성되어야 한다.

출처 언론 보도 AP-085 4 pI. 195 APD3801. 사민당 수뇌부, 의장단 회의파일 02.10-16.10.1989



문서
번호 26

동독 사회민주당 정관
1989년 9월 12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사회민주당

내용_

- 기본 원칙. SDP는 민주주의와 사회적 평등, 환경보호의 의무를 느끼는 모든 이를 하나로 묶는다. 사민당은 인권(특히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 책임, 자유)을 위해 노력한다.
- 당의 구조. 지역 단위의 총회, 군 단위 이상의 전당대회. 남녀 대표 선출. 동독지역에서는 30명의 당원으로 구성된 지역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다.
- 입당 조건. 정관의 기본 원칙에 동의하며, 18세 이상인(이후 16세로 변경) 자는 모두 당원이 될 수 있다. 당 위원회에 대해서는 감독 위원회가 결정한다.
- 선거. 일반 당원들은 소속 집단의 제 1, 2 대변인과 총무를 지도부 위원으로 선출한다. 당원 모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전당대회. 군 단위 이상부터는 매년 업무 규정을 포함한 전당대회가 열린다. 전당대회는 당 실무의 방향과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결의한다. 전당대회는 재정, 감독, 관리 위원회를 선출한다.
- 재정. SDP는 정당 활동을 위한 재정을 당비와 기부를 통해 마련한다. 당비는 지방 전당대회가 결정한다. 대규모 기부금의 경우 출처를 공개한다.
- 정관의 첨부문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입장. 법치국가, 민주주의와 다원주의, 최저 생계비 보조, 국가와 사회의 분리, 시민적 권리, 언론의 자유, 연방주의,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 자유 노조, 남녀평등, 데이터 자료 보호, 탈군사회, 여행의 자유, 망명법, 국수주의와 인종주의 반대. 외교적 입장. 국제기관의 강화, 군사연합 해제, 독일의 2 국가 체제, 서독과의 특별 관계, 독일 내 소수 민족과의 연대.

출처_ 베를린 로베르트-하베만 자료보관소

문서
번호 27

독일통일을 위한 동독 사회민주당 대표자 회의 선언문
1990년 1월 14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사회민주당

내용_

-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독일 국가의 통일을 지지한다. 사회민주주의 정책의 목표는 통일 독일이다.
-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민주주의적으로 지도된 동독의 정부가 나타날 것이다. 이 정부는 경제공동체와 통화공동체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 유럽 이웃국가와의 국경선은 불가침이다.
- 동유럽의 민주화와 성장이 지원되어야 한다.

출처_ 동독 사민당 당원 명부, SDP/SPD 당 수뇌부, 대표자 회의와 전당대회: 베를린에서 열린 대표자 회의, 12. -14. 01. 1990, 2ISDPA000005



문서
번호 28 독일 사회주의 연합(Deutsche Soziale Union)
1990년 3월

담당자 / 기관_ 독일 사회주의 연합

내용_

- 설립
 - 1990년 1월 20일 “Goldene Krone” 호텔에서 11개 그룹의 연합을 통해 설립
 - 독일 사회주의 연합 정당은 처음부터 서독의 연합당, 특히 바이에른주의 CSU의 자매 정당으로 규정되었다.
- CSU 측의 대규모 재정 지원
- 인민의회 선거를 위한 선거 연합 “독일을 위한 동맹”
- 1990년 5월 독일 사회주의 연합은 과거의 위성정당이었던 “민주 농민당(Demokratische Bauernpartei) (DBD)”과 접촉한다. 그러나 합당은 성사되지 못하였다.
- 디스텔(Diestel)과 에벨링(Ebeling)을 선두로 간부진을 비롯한 여러 당원들이 독일 사회주의 연합을 탈당했다.

문서
번호 29

동독의 녹색당 설립을 위한 이니셔티브
1989년 11월 5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녹색당

내용_

- 동독의 녹색당 설립을 위한 결의안
- 당의 목표:
 - 국가의 지속적 친환경 개편
 - 보편적이며 완전한 무장해제를 통한 영구적인 평화 확보
 - 제한 없는 남녀평등



문서 번호 30 1990년 선거 연대를 위한 선언문/녹색당
1990년 1월 3일

담당자 / 기관_ 토마스 셸(Thomas Sell), 민주주의 출발
콘라트 바이쓰(Konrad Weiß), 민주주의 지금
라인하르트 바이쓰훈(Reinhard Weißhuhn), 평화와 인권을 위한 이니셔티브
마르틴 구르차이트(Martin Gurzeit), 사회민주주의당
베르트 게르케(Bernd Gehrke), 좌파 연합

내용_ 민주주의 출발, 민주주의 지금, 평화와 인권을 위한 이니셔티브, 사회민주주의당, 좌파연합은 지금까지의 집권 정치 세력을 해체시키기 위해 1990년 5월 6일로 예정된 인민의회 선거에 공동 출마할 것을 결의한다.

출처_ 베를린 로베르트-하베만 자료보관소

문서
번호 31

슈타지 요원 대상 사회 재편입 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촉구/녹색당
1990년 1월 15일

담당자 / 기관_ 녹색당

내용_

녹색당은 원탁회의와 동독 정부에 구 슈타지 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재편입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출처_ 원탁회의, 제7차 회의, 5항



문서 번호 32 마르크스주의적 정당 창당 그룹/카네이션
1989년 12월 10일

담당자 / 기관_ 카네이션

내용_

카네이션은 광범위한 경제 개혁과 사회 개혁을 촉구한다.

- 역사 청산
-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광범위한 국가 감시
- 국민 개개인 모두를 위한 자료 보호의 도입
- 법치국가적 원칙 발표

출처_ 디 악치온(Die Aktion) 지, Zeitschrift für Politik, Literatur, Kunst(정치, 문학, 예술 전문 잡지), 60/63호, 1990년 1월, 발행 10주년

문서
번호 33

독립 노조 설립을 위한 발기문
1989년 12월 20일

담당자 / 기관_ 독립 노조 이니셔티브

내용_

모든 근로자들의 독립 노조 건설 참여를 촉구한다.

- 우리는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한다.
- 우리는 생산의 목적과 형태에 대한(영업장에서부터 인민의회에 이르기까지) 의사 결정 참여를 원한다.
- 1990년 1월 15일까지 우리는 대안적인 정관 초안을 제출할 것이다.

출처_ 베를린 로베르트-하베만 자료 보관소



문서
번호 34 독립사민당(USPD) 설립에 관한 단상
1990년 1월

담당자 / 기관_ 독일 독립사민당(USPD)

내용

독립사민당은 사회민주주의적 전통을 이어갈 것이다.

- 새로이 창당한 독립사민당은 민주사회주의와 정당과 국가의 즉각적인 분립과 법치주의를 지지한다.
- 정당 강령-경제와 보건 및 환경 정책, 사회 정책의 탈중앙화

출처 할레 시 자유, 사회주의 일간지(Freiheit, Sozialistische Tageszeitung für den BezirkHalle), 1990년 1월 13일자, 11번 기사; 쾰시쉴 차이퉁(Sächsische Zeitung), 1990년 1월 24일자, 20번 기사-발간 45주년, 정치, 경제, 문화 전문 일간지, 출판사: Verlag Sächsische Zeitung

담당자 / 기관_ 독일공산당(Kommunistische Partei Deutschlands)

내용_

우리는 독일공산당 창당자의 전통을 이어갈 것이다.

우리는

- 평화와 군비축소를 지지한다.
- 2 독일 주권 국가 체제를 지지한다.
- 인간의 개인적 자유와 다양한 의견을 지지한다.
- 국민이 주인인 강력한 산업경제를 사회주의 시장 경제로 개발하는 것을 지지한다.
- 성과 위주의, 사회적으로 공평한, 친환경적인 사회 구축을 지지한다.
- 공평한 사회 정책을 지지한다.

우리는 동독의 안정과 자유, 민주, 비밀 선거의 방해 없는 준비를 위해 모드로우(Modrow) 연정 정부를 지지한다.

출처_ 라우치처 룬트샤우(Lausitzer Rundschau), 1990년 2월 5일, 30번 기사, 발행 29주년, 독립 일간지



문서
번호 36

동독 인민의회 의장단 제안서
1990년 2월 2일

담당자 / 기관 동독 인민의회, 제9차 회기

내용

공화주의당(Die Republikaner) 당원과 추종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극우주의와 네오파시즘 세력의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와 시민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 인민의회 의장단은 동독 영토 내 공화주의자 당의 활동 금지를 신청한다.
- 이러한 활동 금지 조치는 공화주의자 당 이외의 이름으로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는 후속 조직 혹은 보완 조직에도 해당된다.

출처 원탁회의, 제 11차 회의, 1990년 2월 5일, 정보 11/2, 인쇄물 64번

문서
번호 37

좌파 민주주의 총 연합을 위한 호소문

1990년 2월 5일

담당자 / 기관_ 독일공산당(KPD)

내용_

사통당-민사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 사통당-민사당은 앞으로의 평화적 사태 진전을 위해 중국적으로 해체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좌파 민주주의 운동단체들은 현재의 격동기에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의회 진출을 위해 투쟁할 수 있을 것이다.

- 목표
-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위한 평화적이며 비폭력적인 발전
- 인도주의와 관용
- 동독 국가를 최소한 1994년까지 유지

출처_ 프라이에스 보르트(Freies Wort) 지, 1990년 2월 5일자, 30번, 남 튜링겐 지역의 독립 일간지, 창간 39주년



문서 번호 38 시민 위원회 “노르만넨 거리”
1990년 2월 9일

담당자 / 기관_ 시민 위원회 노르만넨슈트라세(Normannenstraße)

내용_

기본 원칙과 목표

- 시민 위원회 노르만넨슈트라세는 동독 정부를 통한 슈타지 해체를 객관적이며 건설적인 감독 활동을 통해 지원하는 감독 조직이다.
- 원칙
- 위원회의 업무 방식

출처_ 베를린 마티아스-도마슈크 자료보관소(Matthias-Domaschk-Archiv)

문서
번호 39

“녹색 동맹” 설립을 위한 호소문
1990년 11월

담당자 / 기관_ 녹색 동맹(Grüne Liga)

내용_

정당으로부터 독립적인 행동 연합 설립. 친환경적 국가 개편을 위해 노력하는 기존 그룹과 신설 그룹 모두의 연합을 촉구한다.

출처_ 할레쉴레 레폼차이퉁(Hallesche Reformzeitung), 신설 민주주의 운동 단체와 정당의 목소리, 1990년 2월 1일, 제 3호

내용

| 정당, 시민운동단체, 정치 그룹 | 설립 일자 | 1989년 가을/1990년 초 지도 당원 |
|--|---|--|
| 민주주의 지금/DJ (Demokratie Jetzt) | 1989년 9월 12일 | Hans-Jürgen Fischbek, Ludwig Mehlhorn, Ulrike Poppe, Wolfgang Ullmann, Konrad Weiß |
| 민주주의 출발/DA (Demokratischer Aufbruch) | 이니셔티브 그룹 설립일: 1989년 6월, 정당 구성일: 1989년 10월 30일, 창립 전당대회: 1989년 12월 16, 17일 | Fred Ebeling, Rainer Eppelmann, Brigitta Kögler, Angela Merkel, Erhard Neubert, Günther Nooke, Rudi Pahnke, Edelbert Richter, Wolfgang Schnur, Friedrich Schoriemmer, Christiane Ziller, Herbert Wirzewski |
| 독일 포럼당 (Deutsche Forumpartei) | 1990년 1월 27일(창립 전당대회) | Jürgen Schmieder |
| 독일 사회주의 연합/DSU (Deutsche Soziale Union) | 1990년 1월 20일 | Peter-Michael Distel, Hans-Wilhelm Ebeling, Stefan Sabotka, Hansjoachim Walter |
| 통일 지금 (Einheit Jetzt) | 1990년 2월 25일 | Heiko Kühne |
| 자유 민주주의 정당/F.D.P (Freie Demokratische Partei) | 1990년 2월 4일(창립 전당대회) | Bruno Menzel, Jürgen Neubert, Peter Thietz, Werner Wiemann |
| 녹색당 (Grüne Partei) | 1989년 11월 24일 | Judith Demba, Marianne Dörfler, Friedrich Heilmann, Carlo Jordan, Viktor Liebreiz, Dorit Nessing-Stranz, Mathias Platzeck, Henry G. Schramm, Christine Wieske, Vera Wollenberger |
| 녹색 동맹 (Grüne Liga) | 1990년 2월 3일(창립 총회) | Gunnar Böhrnke, Helmut Geppe, Gisela Henze, Klaus Schlüter |
| 평화와 인권을 위한 이니셔티브/IFM (Initiative Frieden und Menschenrechte) | 1985년 10월 | Werner Fischer, Gerd Poppe, Thomas Rudolph, Wolfgang Templin |
| 카네이션 (Die Nelken) | 1990년 1월 13일 | Rainer Bartscher, Michael Cyollek, Brigitte Kahnwahl |

| | | |
|--|---|---|
| 신포럼/NF (Neues Forum) | 1989년 9월 9일 | Bärbel Bohley, Joachim Gauck, Katja Havemann, Rolf Henrich, Ingrid Köppe, Heiko Lietz, Sebastian Pflugbeil, Jens Reich, Reinhard Schult, Werner Schulz, Hans-Jochen Tschiche |
| 동독 사민당/사민당 (SDP/SPD) | 설립을 위한 촉구: 1989년 8월 26일, SDP 설립일: 1989년 10월 7일, 지방 대표자 회의에서의 SPD 당명 변경일: 1990년 1월 13일 | Angelika Barbe, Ibrahim Böhme, Helmut Becker, Stefan Finger, Martin Gutzeit, Regine Hildebrandt, Karl-August Kamilli, Markus Meckel, Arndt Noack, Steffen Reiche, Sybille Reider, Walter Romberg, Emil Schnell, Frank Terpe, Wolfgang Thierse |
| 독일 독립사민당/USPD (Unabhängige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 1990년 2월 16일 | Steffen Hultsch |
| 독립 여성 연합/UFV (Unabhängiger Frauenverband) | 1989년 12월 3일 | Petra Bläss, Tatjana Böhm, Brunhild Friedel, Ines Merkel, Christiane Zachen, Eva Schäfer, Christiane Schindler, Petra Wunderlich |
| 좌파 연합 (Vereinigte Linke) | 1989년 9월 | Jutta Braband, Bernd Gehrke, Thomas Klein, Thomas Krüger, Herbert Millitz, Hans Scherner, Marion, Seelig, Conny Smolny |

출처_ 동독 연감'90. 자료, 정보, 수치, DDR Almanach ' 90. Daten, Information, Zahlen, Stuttgart, München 1990

피셔 세계 연감. 동독 특별 호. 연대기, 이름, 정당, 선거 결과, 전망, Der Fischer Weltalmanach. Sonderband DDR. Chronik, Namen, Parteien, Wahlergebnisse, Perspektiven, Frankfurt am Main 1990.

부상하는 정당들. 1990년 3월 18일 인민의회 선거 이전의 동독 반공산주의 정당들과 정치적 연합, Weilemann, Peter R.; Meyer zu Natrup, Friedhelm B.; Bulla, Marchel; Pfeiler, Wolfgang; Schüller, Ulrich: Parteien im Aufbruch. Nichtkommunistische Parteien und politische Vereinigungen in der DDR vor der Volkskammerwahl am 18. März 1990, Melle 1990.

구 동독 마지막 해의 정당과 정치 운동, Wuttke, Carola; Musiolek, Berndt (Hrsg.): Parteien und politische Bewegungen im letzten Jahr der DDR, Berlin 1991.

우리는 국민이다. 독일 혁명의 전단, 호소문, 글, Schuddekopf, Charles (Hrsg.): Wir sind das Volk. Flugschriften, Aufrufe, und Texte einer deutschen Revolution, Reinbeck bei Hamburg 1990.



문서 번호 41 독일기독교민주주의연합(동독)

담당자 / 기관 동독 독일기독교민주주의연합(기민련)

내용

- 기민련은 1945년 6월 26일 소련 점령 지역(SBZ)에 설립되었다. 독일의 소련군사 행정부(이하 SMAD)는 반파시즘 성향의 민주주의 정당들의 소련 점령 지역 내 정당 설립을 승인해 주었다. 이는 베를린에 위치한 정당 중앙 사무소들을 통해 독일의 정당 건설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함이었다.
- 기민련의 업무는 SMAD에 의해 여러 방식으로 방해를 받았다. 기민련의 내부 행사를 포함한 모든 행사에는 SMAD의 승인이 필요하였다.
- 서독으로 탈출한 소련 점령 지역의 기민련 당원들의 조직인 망명(Exil)-기민련. 이 조직은 서독 기민련으로부터 동독 기민련의 대리기관으로 간주되었으며, 지방 연합과 동등한 대우를 받았다.
- 1990년에 실시된 인민의회 선거에서 동독 기민련은 민주혁신당(DA), 독일 사회주의 연합(DSU)과 함께 “독일을 위한 동맹”이라는 선거 연합을 구성했다.
- 1990년 10월 1, 2일에 동독 기민련은 자매 정당인 서독 기민련과 합당했다. 로타 드 메지에르(Lothar de Maiziere)는 초대 기민련 부대표직을 맡게 된다.

담당자 / 기관_ 동독 기민련(CDU)

내용_

- 정치 시스템
 - 사통당의 지배적 역할 해체, 정당과 국가의 엄격한 분리, 사회주의와의 명확한 거리 두기, 법치국가 신봉
- 경제 정책에 관한 입장
 -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 공장 내 노조의 입지 개선
- 내독 문제, 외교 및 안보 정책
 - 자유롭고 통합된 유럽 안에서의 국민들의 자결권을 바탕으로 하는, 연방제 과도기를 거친 독일의 국가적 통일.
 - 독일의 정치적 목표는 당 대표가 연설 끝부분에서 강조한 것처럼 ‘하나인 것은 함께 성장해야 한다’ 국가 연합 내의 통일’이다.

출처_ 콘라트-아덴아우어 재단(Konrad-Adenauer Stiftung) (발간). 1990: 부상하는 정당들. 동독의 반공산주의 정당들과 정치적 통일. Parteien im Aufbruch. Nichtkommunistische Parteien und politische Vereinigungen in der DDR. Bad Godesberg. S. 20-23

문서
번호 43

인민의회에서부터 기민련 합당까지-동독 기민련
1990년 10월

담당자 / 기관_ 동독 기민련(CDU)

내용_

- 당 수뇌부는 1990년 5월 21일과 28일의 제6차 회의에서 내용과 조직에 있어 양 당의 합당을 추진하기 위해 자매당과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양 당은 공동 선거 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 양 당의 합당이 결정된 후 의장단과 당 수뇌부의 당원들은 자매당의 해당 회의에 참석하였다. 당 자산 처리에 관한 결정은 일차적으로 연기되었다.
- 서독 기민련과의 합당 추진과 함께 5월부터는 과거의 위성 파트너였던 DBD(민주농민당)와의 합병 회담이 진행되었다. 농민당의 전망 부재로 인해 농민당 의장단은 1990년 4월 17일 잠재 파트너들과의 회담 개시를 결정하였다. 시민당 측은 DBD에 큰 관심을 보였고, 동서독 SDP당은 DBD의 잠재 유권자 확보에 관심을 보였다. 그 밖에 동독 기민련은 “농촌에서의 신속한 입지 확보”를 위해 DBD의 구조를 이용하고자 했다.
- DBD-CDU 합병 결의에 대한 논거
 - 지금까지의 DBD 당원의 이익을 기민련에서 더욱 개선된 방법으로 실현하기 위한 기회는 DBD-CDU 합병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 기민련 측이 양당 합병으로 취할 수 있는 이득: 동독 농촌 지역에서의 입지 개선
- 1990년 7월 21, 22일 부르크샤이딩엔(Burgscheidungen)에서는 DBD와 기민련의 당 수뇌부 공동 회의가 열렸다.
- 서독 기민련과의 합병에 관한 결정: 1990년 9월 8일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의 기민련 지역 연합(CDU-Kreisverbände)은 베를린 지방 공동 연합으로 연합했다.
- 서독 기민련과 동독 기민련은 독일통일이 이루어지기 직전인 1990년 10월 1, 2일에 합당했다.

출처 독일을 위한 연합: 기민련, 민주혁신당, 독일 사회주의 연합 1989/1990, Jäger, Wolfgang/Walter, Michael. 1998. Die Allianz für Deutschland: CDU, Demokratischer Aufbruch und die Deutsche Soziale Union 1989/1990. Köln, Böhlau. S. 70-95

담당자 / 기관 사통당 수뇌부, 사통당-민사당 수뇌부 위원회 장, 사통당-민사당 자산 보호를 위한 실무단

내용

1. 특별 전당대회의 결정에 따라 기존 정당 자산은 보호되어야 하고, 정당 업무를 위해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사통당-민사당의 소유물에 대한 공격은 저지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표를 위해 재무 관리 부서, 정당 운영 부서, 경제 운영 관리부서, 교통 관리부서, 국가 및 법치 사안 관리부서, 재정-물가관리부의 국가 자산 및 신탁 자산(Treuhandvermögen) 관리부서, 기획 재정부서, 문화부서, 베를린 시 대표부, 대법원, 베를린 국립 공증 사무소, 동독 자산 권리 보호청(Amt für den Rechtsschutz des Vermögens der DDR)과 같은 여러 부서와 분야를 통합한 사통당-민사당 수뇌부 소속 임시 실무단을 구성한다.
3. 이 임시 실무단의 중점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임시 실무단은 1990년 2월까지의 사통당/민사당의 자산을 총 결산한다. 이러한 총 결산 보고서에는 사통당/민사당 소유물에 대한 가치와 관련된 명확하며 법적인, 증빙 자료 및 그 발생 내역이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정당 소유물의 염가 매각을 막기 위해, 198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당의 자산 가치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자산 결산 책임자는 재정 관리 및 정당 운영 부장과 사통당-민사당 시 대표단의 회장이다.
 - 당의 변화된 업무와 새로운 구조를 기반으로 1990년 1월 15일까지 당 소속 공장 및 사업장, 토지, 당 기관의 시설, 당 소속 학교, 주택, 숙박 시설 등과 같이 어떠한 물질적 토대가 향후 당 업무를 위해 필요한지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해당 업무의 책임자는 당 수뇌부 위원회장과 시 대표단 회장, 재정 관리 및 정당 운영 부장이다.
 - 정당 자산 보호와 관련된 계획들과 당의 새로운 재정 정책 원안은 1990년 1월 15일까지 제안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부문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광고 및 광고주 섭외를 통한 새로운 수입처 발굴을 통해 일간지 언론사의 적자를 줄인다. 정당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기관들은 양도 또는 매각한다. 해당 업무의 책임자는 재정 관리 및 정당 운영 부장이다.
 - 사통당-민사당 간부진 유지를 위한 효율적인 정당 자산 이용 계획은 1990년 2월 1일까지 수립되어야 한다. 해당 업무의 책임자는 재정 관리 및 정당 운영 부서, 경제 운영 관리부서, 교통 관리부서의 부장들이다.

출처 사통당/민사당 당 수뇌부 결의안. /15 5/89, 민주사회주의 자료 보관소, 로자-룩셈부르크-재단

담당자 / 기관_ 당 수뇌부 의장단, 당 자산 보호 실무단 단장 게르트 펠리칸(Gerd Pelikan)

내용_

사통당-민사당의 토지 및 건축물, 주택, 주말 농장 토지 매각 및 교환에 관한 당 수뇌부 위원회와 시 대표단, 정당 자산 수호를 위한 실무단의 결정 제안은 당 수뇌부 의장단에 의해 승인되었다. 근본적인 제안 원칙은 다음과 같다.

- 당의 건축물과 토지는 일부 매각하거나, 국가 기관에 반환, 혹은 건물과 토지를 매각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보전 및 복지 기관에 가치 보상 없이 맞교환하거나, 무료로 기부한다.
- 그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프랑크푸르트/오더 지역의 군 지도부(Kreisleitung) 건물은 소비조합(Konsumgenossenschaft) 시 지도부(Bezirksvorstand)에 매각한다. 슈메르비츠(Schmerwitz)의 전투그룹(Kampfgruppe) “Ernst Thälmann”의 중앙학교는 내무부에 인도한다. 당 소속 학교인 “Franz Mehring”은 Griesinger 종합 병원에 무료로 인도하고, 에르푸르트(Erfurt)의 뮐하우젠(Mühlhausen) 군 지도부(Kreisvorstand) 건물은 가치보상 없이 뮐하우젠 외래 종합병원과 맞교환한다. 로스톡(Rostock) 시 지도부(Bezirksvorstand)의 숙박시설은 시 자문단에 인도한다.
- 동산 및 기타 소유물은 새로운 소유자와 법인에 매각 여부를 문의한다. 타자기 및 인쇄기기들은 당의 정치 업무를 위해 남겨 둔다.
- 사통당-민사당 소유 주택과 주말 농장 토지들은 일부 현 이용자에게 매각 여부를 문의한다. 현 이용자가 주택을 매입할 의사가 없을 경우, 주택 매입 의사를 갖고 있는 자와의 주택 교환을 알선한다.
- 주택 교환의 대표적인 사례는 카겔(Kagel) 지역의 “Walter Smolka” 지구에 위치한 79개의 방갈로이다. 이 중 49개의 방갈로가 오랜 기간 이 방갈로를 사용해 온 현 이용자에게 매각되고, 나머지 30개는 시민 이니셔티브 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뤼어스텐발데(Fürstenwalde)군의 주민에 매각될 예정이다.
- 제안된 조치는 지체 없이 실행되어야 한다.

자료목록

- 자료 45 a. 1990년 1월 25일자 당 수뇌부 의장단의 결의./80 9/90: 사통당/민사당 당자산에 관한 결정 제안
- 첨부 문서 1. 토지 및 건축물의 인도 및 맞교환에 관한 당 수뇌부 및 시 지도부 위원회의 결정 제안
- 첨부 문서 2. 구조 실무단의 향후 활동에 관한 결정 제안
- 자료 45 b. 1990년 2월 1일자 당 수뇌부 의장단의 결의. 94/ 11/90: 주택 및 주말 농장 토지 매각

- 1990년 2월 1일 회의록 제 11번의 첨부 문서 7번
- 첨부 문서 1. VOB 기반으로 관리될 정당 소유 주택 및 주말 농장 토지 이용자 목록
 - 자료 45 c. 1990년 11월 4일자 당 수뇌부 의장단의 결의 5./234 22/90: 정당 자산에 관한 민사당 시 지도부의 결정 제안
- 1990년 4월 11일자 회의록 22번 첨부 문서 4 번.
- 첨부 문서 1. 정당 자산에 관한 민사당 라이프치히 시 지도부의 제안
- 첨부 문서 2. 정당 자산에 관한 민사당 할레 시 지도부의 제안
- 첨부 문서 3. 정당 자산에 관한 민사당 게라 시 지도부의 제안
- 첨부 문서 4. 데사우(Dessau), 리브니츠-담가르텐(Ribnitz-Damgarten), 아이제나흐(Eisenach), 존넨베르크(Sonnenberg) 군 지도부의 신청
- 첨부 문서 5. 제목 없음
- 첨부 문서 6. 제목 없음

출처_ 1990년 초 당 수뇌부 의장단의 결의안

문서 번호 46 **사통당/민사당 기관 전환**
1990년

담당자 / 기관 당 수뇌부 의장단, 당 자산 보호 실무단, 당 구조 관리 실무단, 시 대표단, 내무 관리 부장, 원탁회의.

내용

당의 중앙 기관들은 유한책임 회사(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 이하 GmbH)나 국민의 자산으로 전환된다.

- 정당 자산 보호를 위해 새로이 구성된 GmbH의 사례:
 - 신탁 토지 관리 GmbH(TV-GmbH): 조직 소유의 운영 기반인 토지를 신탁 관리하고, 이를 통해 당 수뇌부가 토지 관리에서 즉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 가치 보존 및 수리 GmbH(WI-GmbH): 공장의 건설 및 개발 시설 및 당 수뇌부에 존재하는 시설들을 통신 공학 유지 보수 시설로 통합한다.
 - 베를린 홍보물 출판사 GmbH: 교통 관리 부서 소속인 Pöhnix 인쇄소를 VEB Interwerbung Berlin, Altberliner 출판사와 통합한다.
- 중앙 기관의 GmbH 전환의 사례
 - Cliff-Hotel Baabe → 독립 GmbH
 - 동독 Panorama 해외 통신사 → GmbH
 - Neues Deutschland 출판사 → “Neues Deutschland”출판 유한책임 회사
- 기타 기관으로 전환된 중앙 기관의 사례
 - 정당 소속 대학을 민사당의 회의실 및 홍보실로 전환
 - 사회학 아카데미 해체 및 프로젝트 공동체 “사회 연구”, 노동 운동 역사 연구소, 교육 소통 센터 “진보주의 연단(Podium progressiv)”, 쾰니첸 공원 도서관의 조성
- 국민 자산으로의 전환 사례: 정당 사무소를 인민의회에 인도

자료목록

- 자료 46 a.
1990년 2월 1일자 당 수뇌부 의장단의 결의안./93 11/90:
사통당/민사당 당 자산에 관한 결정 제안
 - 1990년 2월 1일자 회의록 제 11번의 첨부 문서 6
 - 정당 사무소(구 제국 은행 건물)에 관한 첨부 문서
 - 무 제목 첨부 문서
- 자료 46 b.
1990년 2월 15일자 당 수뇌부 의장단의 결의안.132/ 13/90:
민사당 자산 보호를 위한 결정 제안
 - 1990년 2월 13일 회의록 제 13번의 첨부 문서 12번
 - 바트 엘스터(Bad Elster) 지역의 구 중앙위원회 소유물이었던 “하우스 암 제(Haus am

See)에 대한 결정 제안 첨부 문서

- 민사당 시 대표단의 결정 제안 첨부 문서
- 자료 46 c.

1990년 4월 11일자 당 수뇌부 의장단의 결의안./235/ 22/90:

벨베데르 호텔 GmbH 리노베이션

- 자료 46 d.

1990년 5월 7일자 당 수뇌부 의장단의 결의안./283 24/90

구 정당 소속 대학과 남아 있는 기숙사 학교, 하우스 12(Haus 12)를 민사당 회의장 및 홍보실로 전환

- 첨부 문서 1. 구 정당 소속 대학 건물을 민사당 홍보실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
- 첨부 문서2. “ 정치교육과커뮤니케이션센터”(ZBK) 설립을 위한 계획
- 첨부 문서 3. 민사당 수뇌부의 연락정보 사무소 개설을 위한 계획
- 첨부 문서 4. 쾰니첸 공원 도서관 관리를 위한 구조 및 인사 계획
- 첨부 문서 5. 향후 기관 명 변경을 위한 제안
- 첨부 문서 6. 오버바췌슈트라췌(Oberwasserstrasse) 11, 12의 활용
- 첨부 문서 7. 쾰니첸 공원 도서관의 공간 배정 계획(제안서)
- 자료 46 e.

1990년 6월 11일자 당 수뇌부 의장단의 결의안./328 32/90

Neues Deutschland 출판을 GmbH로 전환

- 1990년 6월 11일 회의록 제 32번 첨부 문서 3
- 첨부 문서 1. “ Neues Deutschland VerlagsgesellschaftgmbH” 설립계약서
- 첨부 문서 2. 화폐통합으로 인한 2:1 마르크 교환을 고려한 Neues Deutschland 출판사에 필요한 추가적인 자금에 관한 요약.
- Neues Deutschland 출판사 임원진, 1990년 5월 21일, 베를린
- 자료 46 f.

1990년 10월 22일자 당 수뇌부 의장단의 결의안 ./628 59/90

정당 지원 재단 확대

1990년 10월 22일 회의록 제 59번, 첨부 문서 7

- 자료 46 f.

1990년 10월 22일자 당 수뇌부 의장단의 결의안./628 59/90

사회학 아카데미 해체에 관한 조치 계획; 민사당을 위한 사회학적 잠재력 조성을 위한 제안

- 1990년 10월 22일 회의록 제 59번, 첨부 문서 8

출처_ 민주사회주의 자료보관소, 로자-룩셈부르크 재단



문서
번호 47

동독 정당 및 대중 조직 자산 검증을 위한 독립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1990
년 2월 21일 정당법 변경 법안

1990년 5월 31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인민의회, 제10차 임기, CDU/DA, DSU, Die Liberalen, SPD

내용

인민의회는 아래의 내용을 결의한다.

- 정당법 개정법이 의결된 후에는 20, 20a, 20b조가 추가될 것이다. 추가된 조항의 주요 내용은 모든 정당과 정당 소속 국내외 대규모 조직의 자산 가치와 그 자산의 신탁 관리에 관한 정부 차원의 보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 인민의회는 지도부에 1990년 6월 30일까지 인민의회 측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독립 위원회를 즉시 구성할 것을 위임한다.
- 주요 감사 대상은 1989년 10월 7일자 기준, 혹은 그 이후에 동독의 모든 정당 및 대규모 조직, 법인의 자산으로 등록된 예치금과 토지, 부동산, 공장, 기업 지분, 판매 수익, 기타 유동 자산이다.
- 본 결의안이 발효되면 동독의 정당과 대규모 조직, 법인들은 보유 자산의 가치를 공개하고, 독립 위원회 대표의 동의 하에서만 그 보유 자산 내역을 변경할 의무를 갖는다.

출처_ 연방의회-인쇄물 제 51번

담당자 / 기관_ 부대표 볼프강 폴(Wolfgang Pohl)

내용

볼프강 폴은 자산 문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인민회의의 결의를 통해 마련된 자산 리스트를 국내의 기자들이 참석한 1990년 6월 13일의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

- 본 계획에 따르면 정당 자산과 관련해 아래의 다섯 개 원칙이 실현되어야 한다.
 1. 정당 자산의 정확한 파악
 2. 출처를 법적으로 명확히 밝힐 수 없는 자산의 인도
 3. 당의 채신을 유지하는 데 모순되는 자산의 인도 및 검증
 4. 당의 이익에 더 이상 재정적으로 기여할 수 없는 자산의 인도
 5. 동독 정당법이 발효된 후에는 영업장과 기관의 자산이 정당법 제 15, 16, 23조의 기준과 부합하는 지가 검증되어야 한다.
- 지금까지는 정당의 자산 산정을 위한 기준이 인민회의나 정부를 통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 결정 시에는 위에 명시한 다섯 개 기준과 더불어, 정당 기구와 정당 소속 기관의 상임 직원의 숫자를 당의 채신을 위해 급격히 줄여야 한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 1989년 12월 31일 기준, 당은 다음과 같은 재정 자원을 보유했다.
 - 1984년까지 일반 예산 외에 3조 410억 동독 마르크를 보유했다. 이 액수는 1990년 2월 9일부터 2월 20일까지의 이체를 통해 국가 예산 명목으로 재정부에 송금되었다.
 - 그와 더불어 당의 연기금과 게넥스 사(Firma Genex)에 대한 채무, 위성정당에 대한 공급 등의 명목으로 배정된 5천 5백만 동독 마르크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금액은 1990년 3월 1일까지 동독 국가 보험사에 이전되었다.
 - 마지막으로 당은 26억 동독 마르크를 유동성 기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이 중 대부분은 사통당 구 채무 청산을 위해 투입되었다.

출처 민사당 홍보자료, 1990년 6월 14일, 당 수뇌부, 민주사회주의 자료 보관소, 로자-룩셈부르크-재단.



문서
번호 49

동독 정당 및 대중조직의 자산 검증을 위한 독립 위원회 설립과 검증 절차에 관한 규정(정당자산위원회규정-PVKV)

1991년 6월 14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내용_

- 1990년 10월에 체결된 통일조약 제 3부, 부문 A, 제 2장, 첨부 문서 II를 토대로 동독 정당법 제 20a와 20b조는 효력이 지속되며, 동독 정당 자산 검증 독립 위원회의 업무는 연방정부가 수행한다.
- 위원회는 베를린 사무소를 본부로 운영된다.
- 위원회는 16명으로 구성된다.

출처_ BGBI I S. 1243, 1991년 6월 14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정당 자산 검증을 위한 독립위원회(이하 UKPV), 신탁 관리청(THA), 기민련, 민사당, F.D.P

내용_

정당 자산은 현 정당과의 조정 및 포기 합의를 통해 UKPV의 신탁관리를 받게 되었다.

- 기민련은 이미 1990년 11월 15일 신탁관리청(Treuhandanstalt, THA)과 UKPV 측에 동독 정당 기민련과 DBD의 자산 가치 모두에 관한 포기 선언을 하였다.
- 민사당은 사통당/민사당 자산의 물적, 법적 유산과 관련된 UKPV의 모든 결정에 거듭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 재판소에 항소를 신청했다. 1995년에는 형사 재판 소송을 통해 1990년 민사당 정당 본부(Parteizentrale)가 불법으로 사용한 과거 자산에 대한 환원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대해 민사당은 불법으로 사용한 과거 자산을 환원하는 대신, 토지와 예술품 및 귀중품, 영업 시설 네 가지를 제외한 지금까지 밝혀진 모든 자산과, 앞으로 밝혀질 수 있는 모든 자산을 포기할 것을 선언하였다.
- F.D.P.는 1992년 4월 LDPD와 NDPD의 자산 환원을 신청하였다. 오랜 협상 끝에 UKPV는 1995년 11월 LDPD와 NDPD의 자산에 대한 광범위한 조정 심사를 선언하였다.

출처_ 제2차 조사 위원회 보고 내용 발췌, 인쇄물 13/10900, 1998년 5월 28일

담당자 / 기관 UKPV 대표 크리스타인 폰 함머슈타인(Christian von Hammerstein), 신탁 관리청(THA), 통일 특수과제청(BvS), 독일 연방의회

내용

로타 드 메지에르 동독 총리에 의해 1990년 6월 창설된 UKPV는 16년 간의 집중적인 업무를 뒤로하고 2006년에 해체되었다. UKPV는 최종 보고서를 통해 총 업무 결산을 광범위하게 소개하였다.

- UKPV의 법적 토대는 1990년 5월 31일 인민의회에 의해 개정된 정당법(§20a, §20b)과 1990년 8월 31일자 통일 조약, 1991년 6월 14일자 연방정부 정당 자산 위원회 법령, 1992년 7월 14일자 자산법이다.
- UKPV의 설립은 한 마디로 사통당/민사당을 비롯한 동독 정당들에 큰 타격이 아니라 할 수 없었다. 동독 시절과 1990년 3월에 열린 동독 최초의 인민의회 자유 총선 이전까지, 사통당(민사당)과 사통당/민사당의 위성정당 및 대규모 조직들은 엄청난 자산 가치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UKPV의 설립으로 인해 이들은 정치적 경쟁력이 상당 부분 와해될 위험에 처해있었기 때문이다. UKPV의 임무는 동독의 정당 간 정치적 경쟁에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 UKPV의 신탁 관리를 받은 정당과 조직들은 사통당/민사당, 위성정당(동독 CDU, DBD, LDPD, NDPD), FDGB(자유 독일 노조 연합(Freier Deutscher Gewerkschaftsbund), FDJ(자유 독일 청소년(Freie Deutsche Jugend), 동독 평화협의회(Friedensrat der DDR)와 같은 정당 소속 대규모 조직이다. [20~22 p. 참조]
- UKPV를 통해 보호되고, 관리된 자산(정당 및 조직 자산)의 총액은 16억 450만 유로이다. 총 자산의 3/4 가량이 사통당/민사당의 자산이다. 이는 동독에서 사통당의 재정 권력이 어느 수준이었던지를 확인해 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동독 정당들의 자산 비율에 관한 세부 내용은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 2장. 자산 검증 문제. 27 p. 참조]

| | | |
|------------------------------|---------------|--------|
| 사통당/민사당 | 1,169.7 백만 유로 | 72.9 % |
| LDPD/NDPD | 20.9 백만 유로 | 1.3 % |
| 동독 CDU/DBD | 8.0 백만 유로 | 0.5 % |
| 대중조직 | 368.5 백만 유로 | 23.0 % |
| 유동자산 평가액 및 직접 수입(FED), 기타 지출 | 37.4 백만 유로 | 2.3 % |

- 정당 자산은 현 정당과의 조정 및 포기 합의 [36~50 p. 참조], 그리고 조사와 압류를 통해 UKPV의 신탁 관리를 받게 되었다.
- UKPV는 검찰의 권한을 부여받았다. UKPV는 기술적인 지시로부터 독립적이었으며,

이러한 독립성으로 인해 UKPV는 국내외 모든 협상 파트너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협력관계를 창출하였다. 검찰의 공권력 투입을 통해 17개 사안에 대해 1992년 민사당 관할 지역과 같이 50개가 넘는 지역에서 조사와 압수가 진행될 수 있었다. 전환기 이전에 해외에서 혹은 해외를 통해 이전된 정당 및 대규모 조직의 자산에 대해 UKPV는 헝가리와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스위스에서 조사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UKPV는 국내 조사와 달리 해외 조사에서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그 이유는 조사 내용의 복잡성 때문이 아닌, 해외 조사가 비교적 늦게(1998/1999년)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해외 조사가 시작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증거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급속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1995부터 2000년 사이에 은행과 무역회사들의 법정 자료 보관 기간이 대다수 만료되었기 때문이다. [C.II 장, 해외 자산, 55~71 p. 참조]

- 해외 조사 부문에 있어 특수한 사례는 Novum사의 사건이다. 이 사건은 해당 기업이 동베를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사통당 소속 회사인지, 아니면 오스트리아 국민이자 기업의 대표인 루돌피네 슈타인들링(Rudolfine Steindling) 여사와 해당 기업이 주장하는 것처럼 오스트리아 공산당 소속 회사인지에 대한 문제를 둘러싼 사건이었다. 제 1심에서 베를린 행정재판소는 Novum이 사통당 소속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반대로 베를린 최고행정재판소는 UKPV가 새로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통해 슈타인들링 여사 측의 변호인단이 소송 사기와 형법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서류 조작을 저질렀음을 밝혀냈다. 이를 근거로 베를린 최고행정재판소는 Novum이 사통당 소속 기업이었다는 판결을 내렸다. 슈타인들링 여사와 Novum사의 항소 신청이 2004년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되어, 베를린 최고행정재판소의 판결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 이를 토대로 취리히에서는 1심을 통해 슈타인들링 여사와 AKB 민간 은행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자를 포함한 총 소송액은 약 2억 3천 7백만 유로에 달한다. 슈타인들링 여사와 Novum사 측은 베를린 최고행정재판소와, 연방행정 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연방행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출하였다. 헌법 소원에 대한 심리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절차는 아직도 개시가 가능한 상태이다. [C.II. 장, 특수 사안 “Novum”, 50~52 p. 참조]
- 징수된 정당 및 대규모 조직의 자산은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다:

| | |
|--------------------------|------------------|
| 법적으로 규정된 목적에 따른 사용 | 총 917.0 백만 유로 |
| 신연방주 지역의 경제 지원 | 311.1 백만 유로(34%) |
| 지방 정부의 문화, 예술, 문화재 관리/지원 | 155.1 백만 유로(17%) |
| 구 채무청산기금(ARG) | 375.8 백만 유로(41%) |
| 사통당 독재 청산 재단 | 75.0 백만 유로 (8%) |
| - 정당 및 대규모 조직 청산 비용 | 177.5 백만 유로 |
| - 관리비 및 인건비 | 62.3 백만 유로 |
| - 자산의 신탁 관리 해제 | 328.2 백만 유로 |
| - 법정 예비비 | 199.5 백만 유로 |



- 신탁관리청과 통일 특수과제청(Bundesanstalt für vereinigungsbedingte Sonderaufgaben (BvS)) 간의 협력은 1992년 7월 23일에 작성된 원칙에 근거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UKPV는 해당 자산을 조사하며, 이 자산은 신탁관리청과 통일 특수과제청에 의해 원칙에 명시된 UKPV와의 협조를 통해 우선적으로 관리되며, 구 소유주에게 반환되지 않아도 될 경우, 해당 자산은 법적으로 계획된 목적을 위해 신연방주 지역에 할당되었다. 1994년부터는 신연방주 지역에 할당된 자산은 대부분 통일 조약에 명시된 경제 재건을 위한 목적에 투입되었으며, 1994년 2월 신연방주들과 연방정부 간에 체결된 자산 관리 협약에 따라 신연방주정부에 예산 투입 결정권이 위임되었다.(첨부 문서 2)

출처 독일 연방의회. 인쇄물 16/2466, 2006년 8월 24일. 2006년 7월 5일 동독 정당 및 대규모 조직 자산 검증을 위한 독립 위원회의 최종보고

사통당 전당대회 그레고어 기지의 연설“우리 모두가 새로운 정당을 위해 투쟁한다면, 그 정당은 강인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989년 12월 8일

담당자 / 기관 그레고어 기지, 사회주의통일당 전당대회에서.

내용

기지는 구 동독의 민주적 사회주의가 구 서독의 민주주의 시스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새 정당은 구성원의 다양한 이념 경쟁 속에서 자라나 새로운 정치적 이론을 무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조사위원회의 실무보고서가 이어졌다.

기지는 다음과 같은 당원들의 질문에 답한다.

1. 사회주의의 정의
2. 정당의 해체와 새로운 창당 및 개명
3. 업무 원칙에 대한 정당의 입장
4. 노동자 계급에 속한 투쟁단체에 대한 입장
5. 국가안보청에 대한 입장
6. 구 동독의 고유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

출처 좌파 민사당 2011 베를린 URL=<http://archiv2007.sozialisten.de/partei/dokumente/index.htm> (2011.07.19).



문서
번호 53

사통당 전당대회 한스 모드로우의 연설-“정당은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
1989년 12월 16일

담당자 / 기관_ 한스 모드로우, 사회주의통일당 전당대회.

내용_

주총리의 이 연설은 정당 수뇌부의 오류와 전임자들의 권력남용을 주제로 한다.

모드로우는 연합정당의 독립성 및 사회주의 소비에트연합의 개혁과 사회주의통일당에 대한 기대에 대해 언급한다. 그는 동지들에게 결집을 요구했다.

출처_ 좌파 민사당 2011 베를린 URL-<http://archiv2007.sozialisten.de/partei/dokumente/index.htm> (2011.07.19).

사통당 전당대회, 디터 클라인의 발언- “현대적인 사회당의 재편성과 이 재편성이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에 기여하는 바에 대하여”

1989년 12월 16일

담당자 / 기관 디터 클라인, 전당대회 토론에서.

내용

비록 스탈린주의가 구 동독에서는 일부 범법적인 형태로 이행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사회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목표 설정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10월 혁명으로 구 동독 시민들이 자신들의 삶을 자유롭게 결정하기 희망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사회주의 정당은 정책안을 마련할 때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과거의 낡은 구조 속으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를 넘어 성장하고, 관료적인 사회주의로 회귀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의 가치를 대변해야 한다.

앞으로의 정당 정책은 전통가치와 노동자 및 농민의 이해관계를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대변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과제를 다른 정당에 일부분이라도 위임해서는 안된다.

나아가 인간의 실질적인 이해를 충분히 담기 위해 마르크스, 레닌 이론을 현대 사회학적 이론들과 접목시켜야 한다.

변화된 사회 구조 때문에 새 정당은 더 이상 노동자만의 정당으로 머무를 수 없다. 모든 사회 계층의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구 동독의 사회적 업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존중해야 한다.

정책안의 다음 목표는 기업의 생존 및 경영과 결부된 글로벌한 인간문제를 포함해야 한다.

“제3의 길”에 대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세계 경제에 대해 국내 경제 개방.
2. 환경을 고려한 균형있는 재생산과 환경 보전.
3. 소비 방식과 삶의 방식을 환경적/보건적/사회적으로 형성.
4. 높은 경제적 수익성.
5.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는 메커니즘으로 경제를 규제.
6. 사회적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진정한 의미의 민주정치.
7. 서구 경제규칙의 기능주의로부터 자국민 보호.
8. 모든 인간의 개별성을 자유롭게 구현.

출처 좌파 민사당, 2011 베를린 URL-[http://archiv2007.sozialisten.de/partei/dokumente/index.htm\(2011.07.19\)](http://archiv2007.sozialisten.de/partei/dokumente/index.htm(2011.07.19)).



문서
번호 55

사통당 전당대회, 미하엘 슈만의 발언- “스탈린주의에 입각한 제도를 결연히 칭
산하다”

1989년 12월 16일

담당자 / 기관_ 미하엘 슈만, 사회주의통일당 전당대회.

내용

스탈린주의 청산은 호네커식 정치국의 권력 남용과 스탈린주의 희생자들에 대한 재활의
부재에서 기인된 것이다.

그 결과 스탈린주의의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은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주의의 역사적인 업적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던 동지들
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파시즘 이후 동독 내에서 발전한 스탈린주의도 역사적으로 사라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출처_ 좌파 민사당, 2011 베를린 URL-[http://archiv2007.sozialisten.de/partei/dokumente/
index.htm](http://archiv2007.sozialisten.de/partei/dokumente/index.htm)(2011.07.19).

사통당 전당대회, 그레고어 기지의 발언- “진정한 새로운 시작을 위해 새 이름이 필요하다”

1989년 12월 17일

담당자 / 기관 그레고어 기지, 사회주의통일당(SED)-민사당(PDS) 전당대회.

내용

기지는 이 발언에서 몇몇 형식적인 사실을 먼저 열거한 후, 동독에 부정적일 수 있는 통일의 결과에 대해 심려를 나타낸다. 사회주의통일당의 후퇴는 우파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방지하는 것은 정당의 “큰 국제적 책임”이며, 명칭 문제에 있어 의견이 양분되어서는 안되고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

기지는 정당 자산에 관한 질문으로 잠시 주제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명칭 문제로 돌아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민사당”과 “동독 사회주의 정당”. 기지는 예전 이름을 조금 보충하여 그대로 사용할 것도 제안했다. 이는 열린 자세로 역사를 대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희망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기지는 한시적으로 “독일 사회주의통일당”이라는 명칭을 쓰고, 독일 사회주의당으로 명칭을 바꾼 다음, 정당법이 마련되는대로 최종 결정을 하자고 제안한다. 이 제안은 전당대회에서 받아들여졌다.

출처 좌파 민사당 2011 베를린 URL-<http://archiv2007.sozialisten.de/partei/dokumente/index.htm> (2011.07.19).



문서
번호 57

사통당 전당대회, 볼프강 폴의 발언- “정당을 철저히 혁신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조례가 필요하다”

1989년 12월 16일

담당자 / 기관 볼프강 폴, 사회주의통일당 전당대회.

내용

조례 위원장의 보고서에 새로운 조례를 위한 제안이 이루어졌다. 기존 조례는 효력이 정지되고 임시 조례가 채택되었다. 해당 제안을 그때까지 철저히 심사하고, 경우에 따라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폴은 정당의 기본가치를 시작점이라 칭하고, 당원과 기본조직의 중심적인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차기 정규 전당대회의 조속한 소집을 요구했다.

출처 좌파 민사당, 2011 베를린 URL-<http://archiv2007.sozialisten.de/partei/dokumente/index.htm> (2011.07.19)

사통당 전당대회 제안위원장 클라우스 힉케의 보고- “12월 7일까지 2,552건의 지시, 질의, 비판 및 제안서가 제출되었다”

1989년 12월 17일

담당자 / 기관 클라우스 힉케, 사회주의통일당 비정규 전당대회 제안위원장.

내용

접수된 제안서 절반이 당을 개혁하고, 사회주의적 사고방식 및 관료적 중앙집권 사회주의로부터 멀어지기를 희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번째 제안은 인간주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요구에 관한 것이다. 이는 정부에 전달되었다.

새로운 교육 컨셉 마련에 대한 제안도 있다. 이것 역시 당 수뇌부의 입장표명과 함께 정부에 전달되었다.

또 다른 제안서는 예전 구성원들에 대해 정당소송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정당의 역사연구소는 스탈린주의적 책략 마련시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영향력에 대해 해명해야 했다.

당원은 보상 문제에서 이득이 되는 물질적 조건을 포기해야 했다.

토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기타 다른 제안서에서는 비정규 전당대회에 주어지는 의석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당의 활동 능력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수백 건의 제안서들은 경제, 보조금, 사회정책의 변화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연금생활자들의 생활형편 개선을 다룬 제안서들도 있었다.

위원회는 좌파, 마르크스주의를 지향하는 청년단체 및 조직에 대한 보다 강력한 지지를 주장하는 제안서를 지원했다.

정당이 신파시즘, 인종주의 및 국가주의 세력에 대한 확실한 입장표명을 해야한다고 밝힌 제안서도 적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타 정당들 및 민주주의 세력과 융화하여 구 동독의 국가 독립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출처 좌파 민사당 2011 베를린 URL-<http://archiv2007.sozialisten.de/partei/dokumente/index.htm>(2011.07.19).



문서
번호 59 독일 사회주의통일당-민사당의 임시 조례
1989년 12월 17일

담당자 / 기관_ 전당대회 의결사항.

내용_

본 새로운 정당은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 정당으로서 이해되며, 그 목적은 동독 지역에서 “새롭고, 인간적이며, 민주적 사회주의”를 확립하는 것이다.

조례는 당원의 양태, 당의 민주적 설립, 당 조직의 위계질서 및 당 재정문제를 규정하였다.

당 수뇌부는 명칭 변경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출처_ 호르보겐, 로타/나카쓰, 데트레프/슈테판, 게르트 뢰디거(발행) 1999. 사회주의통일당/민사당 비정규 전당대회, 1989년 12월 8/9일 및 16/17일 베를린에서 있었던 논의. 베를린: 디츠 출판사 438-445 p.

담당자 / 기관 민사당, 사민당, 코메콘, 바르샤바조약, 농업생산조합, 구 동독, 구 서독, 소비에트연합, 미국.

내용

1. 친사회적, 친환경적인 개발, 연대적 경제질서, 계획적으로 컨트롤되는 성장, 지속적인 평화적 질서.
2. 중앙집권주의와 스탈린주의는 사회주의의 명예를 손상시킴.
3. 자본주의는 효율적이고 세계 문명을 풍요롭게 했지만 평화, 환경보호, 사회정의를 보장해주지는 않음.

I.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는가?

1. 독일/국제 노동운동, 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 빌헬름 립크네히트, 아우구스트 베벨,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 칼 카우츠키, 로사 룩셈부르크, 칼 립크네히트, 블라디미르 1세 레닌 및 안토니오 그람스키에 기초.
2. 플랫폼, 당 내 주류, 민주주의적 의사형성(아래쪽에서 위쪽으로의 의사형성) 및 소수참여의 덕을 봄.
3. 다른 정당, 특히 사민당과의 공동 활동.
4. 독일통일, 반파시즘, 여성의 권리, 노동권, 사회 주거 기금을 통한 주거 안정, 국민투표, 범죄와의 전쟁, 유치원 자리, 모두를 위한 교육, 발전 능력 있는 농업 생산자 조합.
5. 권력독점 반대.
6. 가치: 개별성, 연대성, 의미있는 노동과 여가시간, 자유, 민주주의, 인권, 환경보호 및 국내외 평화.
7. 목표: 개성의 자유로운 표현, 사회적 시장경제, 남녀평등, 약자 보호/원조, 강한 자치구, 청년을 위한 가능성, 모두를 위한 교육과 문화, 평화/무장해제, 정당한 세계경제, 신앙의 자유, 국민투표, 인종주의의 합법적 금지.

II. 우리 사회 발전 방안

1.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의견대립 없음: 발전과 효능.
2. 경제 관리에 의한 시장의 자체 규제화.
3. 국가의 재산은 국민의 재산이 되어야 함, 피고용인의 수익참여, 강한 노조.
4. 코메콘 및 바르샤바조약을 위한 심의회 개혁.
5. 현대 서비스업 분야, 능력 있는 사회간접자본.
6. 건강한 환경에 살 권리, 토양, 물, 공기는 양도할 수 없음, 보다 푸른 도시를 추구.
7. 동서독지역의 농업조합에 대해 농업생산 협동조합을 독자적인 기업으로서 인정 및 지원.

출처 선거 전당대회 결의안

문서
번호 61

구 서독과 구 동독 간에 있었던 최초 독일의회 선거를 위한 법 초안
1990년 8월 5일

담당자 / 기관 연방의회, 11차 선임기간.

내용

본 법안은 1990년 8월23일 초안에 부합되어 가결된다.

1990년 8월3일 베를린에서 비준된다.

연방선거법 유효지역을 동독지역까지 확장함으로써 최초 독일의회 선거를 위한 법적 통합의 근거가 마련된다.

연방선거법의 다수 조항 개정.

1. 연방의회 의원수를 518명에서 656명으로 늘림.
2.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브란덴부르크, 작센-안할트, 작센, 튀링겐 및 베를린(동쪽) 해당 지역구(선거구 257-328)에 대해 선거구 재정비.
3. 독일 전역에서 최초로 실시될 선거를 위해 여러 정당의 후보자 명단 교섭을 허가.
4. 베를린은 한 개의 주로 간주.
5. 연방선거법에 정해져 있는 기한 및 일정 단축, 개정법 인가.

출처 독일연방의회, 2011 베를린, URL-<http://dip.bundestag.de/btd/11/076/1107624.pdf>(2011.07.28).

담당자 / 기관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독일연방하원, 독일연방상원, 공화당, 녹색당, 좌파/민사당, 구 동독.

내용

1. 신청자는 공화당, 녹색당, 좌파/민사당 및 두 명의 개인이며, 제안서와 헌법소원은 법적으로 허용되므로(기본법 93조 1항 1문), 그 정당성이 입증된다. 신청자는 비용을 상환 받았으며, 판결은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제2부 헌법재판관 8인 중 8인).
2. 신청반대자인 연방하원(투표에 의해 선출)과 연방상원은 후보자 명단 교섭을 허용함으로써 신청자의 선거평등권(기본법 38조 1항)을 위배하였다. 연방의회는 헌법상 해당 의무가 없었다.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은 연방의회의 분열을 막기 위해 독일 전역에 유효한 5%의 약정에 대해 언급하였다. 동서독에 따로 적용되는 5% 봉쇄규정은 헌법의 기본원칙에 어긋난 것이다.
3. 입법주체가 5%의 봉쇄규정(연방선거법 6조 6항)을 허용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인식한 경우, 해당 상황을 양찰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입법주체는 기본적으로 본 약정 조항을 포기할 수 있으며, 약정 비율을 낮추거나 혹은 대체적인 다른 조치를 취할 자유가 보장된다.
4. 본 제한 조항은 선거의 평등성에 부합되어야 한다. 부합 여부는 추상적인 기준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독일 전역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선거에서는 각 선거지역에 따른 5%의 봉쇄규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구 동독지역에서만 한정되었던 정당의 경우 연방의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비례선거에서 23.75%의 득표율을 얻어야 한다(비고: 연방의회 인쇄물 11/7652). 서쪽지역 유권자 수는 동쪽지역보다 3.5배 이상이 많은 수준이다. 만약 5%의 봉쇄규정이 독일 전지역에서 유효하게 된다면, 동쪽지역 정당들의 30%(특히 소규모 정당) 정도는 연방의회 진출에서 소외될 것이다. 만약 본 제한 조항을 1.2% 수준으로 낮춘다면, 동독지역에 한정되었던 정당의 경우 전체 유권자 표의 5% 수준만 획득하면 된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서독지역에 한정되었던 정당들은 동독지역에서 전체 유권자 표의 1.6% 수준 밖에 얻지 못할 것이다. 본 제한 약정을 전(全)독일에 걸쳐 1.2%로 낮추더라도 불균형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동서독에 대해 각각 5%의 봉쇄규정을 따로 적용시키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5. 헌법재판소 제2부는 구 동독에 대한 후보자 명단 교섭도 제안을 하였다. 즉 다수의 정당들이 하나의 공동 후보자 명단을 가지고 선거에 임할 수 있다(동독에서 허용됨 - 비고: 법률공보 I, 60, 960 p.). 선거 개표시에 여러 정당의 표를 합산하는 식의 후보자 명단 교섭은 허용되지 않는다.
6. 입법 주체는 단기적으로 신규 선거법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출처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82, 322 <http://www.servat.unibe.ch/dfr/bv082322.html>(2011.08.09).



문서
번호 63 독일선거법 개정 및 정당법 개정을 위한 열 번째 법 초안
1990년 10월 2일

담당자 / 기관 독일연방의회, 제 11차 회기.

내용

본 법안은 1990년 10월 5일자 초안에 따라 의결되었다.

제 12차 연방의회 선거를 위한 연방선거법을 1990년 9월 29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맞추어 조정하였다.

1. 선거구(1990년 10월 3일 이전의 상태에 따른 두 개의 독일지역으로 구분)에 따라 분리 적용되는 제한약정 확정 및 동독지역을 근간으로 하는 정당 및 정치 단체들의 후보자 명단 교섭 허용.
2. 정당 선거비용 국고보조금에 관한 규정을 조정.
3. 연방선거법 53조 개정.
4. 후보자 명단 교섭시 정당법 18~21조 적용.

출처 독일연방의회 2011 베를린, URL-<http://dip.bundestag.de/btd/11/080/1108023.pdf>
(2011.07.28).

담당자 / 기관 민사당, 노조, NATO, 구 동독, 코메콘, 독일연방군, 연방정부, 연방하원, 서유럽연합.

내용

1. 구 동독지역의 경제 및 사회적 쇠락, 정치 단절, 민주주의 붕괴, 정치적 거대 권력의 양상이 현재 당면한 문제로서 거론되었다.
 2. 민사당은 전(全)독일지역에 활동하기로 결의하였다. 사회주의 이름으로 자행된 오관, 실수, 범죄에 당면하여 민사당은 스스로의 전통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기권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 I. 현 시점의 세계
1. 자본주의와 부권사회가 세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1980년대의 국민운동은 그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개발도상국들은 약탈당하고 있고, 전쟁이 곳곳에 발발했으며, 환경은 파괴되고, 젊은이들은 차별받고 있다.
 2. 노조차원의 투쟁이 필요한 상태다.
 3. 구 동독의 산업, 농업, 학문, 문화는 파괴되었다. 구 동독지역의 주민들은 제한된 기본권을 갖는 인간이 되었다. 연대감 상실은 극단적인 인종차별주의를 확산시키고 있다.
 4. 독일 연방군이 NATO지역 이외에서도 주둔하고 있으며, 망명권 및 임금협상 자치권이 약화되고 있다.
- II. 사회주의적 시도의 실패
1. 1945년 이후 독일에서 있었던 파시즘을 반대하고, 평화를 위해 노력한 것은 옳았다. 서독 자본주의는 파시즘에 의해 훼손되었다.
 2. 동독에서는 실업이 사라지고, 빈곤이 극복되었으며, 포괄적인 사회보장 시스템을 갖추고, 교육, 보건 및 문화 영역에서 기회 균등이 보장되며,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권리를 도입하려 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주의적 시도는 주민 대다수를 포괄하지는 못했다.
 3. 동독은 자본주의 국가들의 위협을 받았고, 코메콘 내의 업무 분담은 비효율적이었다. 동독은 소비에트연합이 무너지면서 함께 붕괴되었다. 스탈린주의는 사회주의를 왜곡시켰다.
 4. 동독에서의 계획과 시장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었다. 동독에도 부권사회가 있었지만 권력 분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학문, 문화, 언론의 자유는 없었다. 환경보호에 대한 노력도 없었다.



III. 사회적 혁신

사회주의는 착취와 억압에 대항하는 움직임이며, 평화, 평등, 연대, 해방, 정의 및 환경보호를 추구한다.

출처_ 3차 전당대회, 1차 회의 결의안

담당자 / 기관 우베 엔스 호이어, 그레고어 기지(독일연방하원 의원) 및 연방하원의 민사당/좌파 당원.

내용

1. 민사당은 “빌헬름 2세의 제국(바이마르 제국)을 재건하여 계승하려는 어떠한 정치적 세력”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2. 독일국민은 현재 1948/1949년과는 달리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었다. 그러나 1949년 제정된 독일 기본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이유에서 기본법 제 146조에 의거하여 독일 국민은 헌법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연방하원과 연방상원에 의해 각각 다수결로 의결되어야 함).
3. 투표는 1994년 10월 16일 제 13회 연방하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다.
4. 민사당의 헌법 초안은 매우 야심적이었다. 이는 최대한의 민주주의, 평등, 정의를 지향했다. 그러나 이 초안은 실용적이지 못했다. 특히 국가 개입주의와 페미니즘의 이데올로기 및 독단으로 가득했다. 민사당의 초안은 국가의 권한과 의무를 너무 포괄적으로 보았으며, 그 상태로는 정당성도 유지될 수 없고, 시스템의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발전도 어려웠다.
5. 전문: 전문에서는 신(神)과의 연관성이 누락되었다. 그리고 독일 정치의 평화로운 이행을 위한 의무는 독일기본법을 통해 명시되었다. 또한 대표민주주의, 반파시즘, 개발원조, 남녀 평등, 동서독의 평등한 생활수준 및 외국인들과의 상호협력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다.
6.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한다는 1조 1항은 문자 그대로 기본법에 이양된다. 새 헌법 1조는 그 대신 연방국가와 국가지역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 수호에 대한 것은 새 헌법 12조에서 명기된다.
7. 외국인은 5년 체류 후 귀화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는다(3조).
8. 독일의 국가 문장은 “보습검”을 상징하며, 국가는 “환희의 송가”다(4조).
9. 8조에서는 침략전쟁 도발은 헌법에 위배되며, 방위산업은 국유화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대량살상무기도 금지된다.
10. 기본법에 명시된 생존권에 형 감량 및 의학적/학문적 시도에 대한 보호조항이 추가된다(13조).
11. 자유로운 개성 표출 권리와 관련해서는 특히 여성들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과 낙태에 대한 결정권이 보장된다(제14조). 제16조에 따르면 국가는 모든 사회영역에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여성 참여비율을 보장해야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도 필요하다. 아울러 여성과 남성에게 차별없는 동등한 임금 지급을 보장한다.
12. 사적인 영역 보호를 위한 새로운 조항도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누구에게나 자기 정보를 열람하거나, 삭제토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15조).

출처 독일 연방의회, 12차 선거기간, 인쇄물 12/6570

문서
번호 66

민사당의 구 자산에 관한 비교
1995년 7월 18일

담당자 / 기관_ 고등행정법원, 민사당, 특별자산 및 연방재정자산 관리이사회, 구 동독 정당 및 대중단체 자산 검토위원회, 연방 출판, 컨설팅 및 무역 유한회사, VULKAN 부동산 자산 유한회사.

내용_

비교 결과 지금까지 신탁관리를 받고 있는 다양한 자산이 사회주의통일당의 구 자산으로부터 민사당으로 귀속되었다. 여기에는 다양한 부동산부터 예술품들까지 포함된다. 민사당은 해당 예술작품들을 연구 또는 전시를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기증할 의무가 있다. 법치국가적 기본원칙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민사당의 통화자산 복구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과거 이것이 의무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이유로 들어 정당에 대한 청구를 하고, 이러한 청구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게 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 백만 마르크가 지급된다.

상호 간에 이러한 청구 포기에 대해 합의한다. 그 밖에도 민사당은 본 비교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모든 자산가치 복구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포기한다. 마지막으로 계약 당사자의 세법상 의무와 법적권리 및 위약금에 대해서도 확정한다.

참고: 사회주의통일당 정당 자산에 관한 다른 문건, 5.1권 “구조변화: 정당, 신 연방주, 새로운 지역, 새로운 수도”, II장: 정당 자산.

출처_ 베를린 고등행정법원, 1995 URL-http://die-linke.de/fileadmin/download/finanzen/950718_vergleich_altvermoegen_pds.pdf(2011.07.21).

내용

표: 동서독 공화당 및 민사당 유권자의 사회조직적 구성 비교

| | 공화당 및 민사당 유권자 구성(특성에 따라) | | | | | |
|-------------|--------------------------|-----|----|-----|-----|----|
| | 서독 | | | 동독 | | |
| | 민사당 | 공화당 | 전체 | 민사당 | 공화당 | 전체 |
| 성별 | | | | | | |
| 남성 | 67 | 68 | 50 | 54 | 87 | 50 |
| 여성 | 33 | 32 | 50 | 46 | 13 | 50 |
| 연령 | | | | | | |
| 18-24 | 18 | 13 | 11 | 11 | 27 | 10 |
| 25-34 | 30 | 26 | 22 | 20 | 33 | 21 |
| 34-44 | 18 | 18 | 18 | 20 | 22 | 19 |
| 45-59 | 21 | 21 | 25 | 26 | 16 | 26 |
| 60+ | 13 | 22 | 25 | 23 | 3 | 24 |
| 가족관계 | | | | | | |
| 미혼 | 61 | 32 | 28 | 23 | 60 | 22 |
| 기혼 | 38 | 56 | 57 | 64 | 33 | 63 |
| 이혼 | 11 | 12 | 15 | 13 | 7 | 15 |
| 교육수준 | | | | | | |
| 저 | 23 | 65 | 44 | 17 | 15 | 26 |
| 중 | 26 | 27 | 29 | 42 | 66 | 47 |
| 고 | 51 | 8 | 27 | 40 | 18 | 27 |
| 직업활동 | | | | | | |
| 하지않음 | 41 | 39 | 45 | 44 | 26 | 43 |
| 학생 | 15 | 2 | 6 | 5 | 6 | 4 |
| 연금생활자 | 13 | 21 | 24 | 25 | 5 | 27 |
| 실업자 | 8 | 7 | 3 | 11 | 14 | 9 |
| 전업주부 | 2 | 8 | 11 | 1 | 1 | 2 |
| 군복무자 | 1 | 0 | 0 | 0 | 0 | 0 |
| 기타 | 2 | 1 | 1 | 2 | 1 | 1 |
| 직업활동중 | 59 | 61 | 55 | 56 | 74 | 57 |
| 노동자 | 11 | 27 | 11 | 13 | 41 | 15 |
| 회사원 | 31 | 23 | 29 | 33 | 20 | 31 |
| 공무원 | 5 | 2 | 6 | 2 | 1 | 2 |
| 자영업자 | 6 | 6 | 6 | 5 | 10 | 6 |
| 농업 | 1 | 2 | 1 | 0 | 0 | 1 |
| 기타 | 3 | 2 | 2 | 3 | 3 | 2 |

| | 공화당 및 민사당 유권자 구성(특성에 따라) | | | | | |
|--------------------|--------------------------|-----|----|-----|-----|----|
| | 서독 | | | 동독 | | |
| | 민사당 | 공화당 | 전체 | 민사당 | 공화당 | 전체 |
| 수입 | | | | | | |
| 1,799 마르크 이하 | 18 | 11 | 11 | 14 | 14 | 16 |
| 1,800~2,499 마르크 | 17 | 17 | 14 | 21 | 23 | 21 |
| 2,500~3,499 마르크 | 21 | 26 | 23 | 26 | 26 | 27 |
| 3,500~4,499 마르크 | 19 | 19 | 20 | 22 | 17 | 20 |
| 4,500~5,499 마르크 | 12 | 14 | 14 | 11 | 12 | 10 |
| 5,500 마르크 이상 | 14 | 12 | 18 | 6 | 9 | 7 |
| 지역주민수 | | | | | | |
| 5,000명 이하 | 9 | 20 | 16 | 24 | 35 | 32 |
| 5천~2만 명 | 16 | 28 | 27 | 15 | 15 | 16 |
| 2만~5만 명 | 13 | 15 | 17 | 15 | 11 | 16 |
| 5만~10만 명 | 8 | 9 | 9 | 8 | 5 | 7 |
| 10만~50만 명 | 19 | 14 | 16 | 20 | 15 | 18 |
| 50만 명 이상 | 35 | 14 | 15 | 19 | 19 | 12 |
| 종교 | | | | | | |
| 개신교 | 24 | 33 | 41 | 7 | 19 | 26 |
| 천주교 | 16 | 40 | 41 | 1 | 3 | 6 |
| 기타 | 1 | 1 | 2 | 0 | 0 | 1 |
| 무교 | 58 | 26 | 16 | 92 | 78 | 68 |
| 노조가입여부 | | | | | | |
| 예, 자체노조 | 23 | 21 | 15 | 18 | 14 | 15 |
| 예, 타노조 | 6 | 10 | 9 | 11 | 5 | 9 |
| 예, 둘다 | 7 | 4 | 3 | 7 | 5 | 5 |
| 아니오 | 64 | 66 | 73 | 64 | 77 | 72 |

데이터베이스: FORSA 연구소 전화 인터뷰 축적분, 예외: 지역 주민수, 이 항목은 축적된 정치 바로미터를 근거로 함.

표 5: 동서독 공화당 및 민사당 유권자의 의견 비교

| | 공화당 및 민사당 유권자 구성(특성에 따라) | | | | | |
|------------------------------|--------------------------|-----|----|-----|-----|----|
| | 서독 | | | 동독 | | |
| | 민사당 | 공화당 | 전체 | 민사당 | 공화당 | 전체 |
| 일반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생각 | | | | | | |
| 좋다 | 21 | 12 | 19 | 2 | 4 | 5 |
| 부분적으로 좋다 | 51 | 45 | 60 | 33 | 38 | 51 |
| 나쁘다 | 29 | 43 | 21 | 66 | 59 | 44 |
| 1년 후 일반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 | | | | | | |
| 개선될 것이다 | 22 | 23 | 36 | 17 | 19 | 32 |
| 비슷할 것이다 | 47 | 29 | 41 | 56 | 50 | 53 |
| 나빠질 것이다 | 31 | 48 | 24 | 27 | 31 | 15 |
| 자기 경제상황에 대한 생각 | | | | | | |
| 좋다 | 49 | 45 | 57 | 28 | 28 | 42 |
| 부분적으로 좋다 | 39 | 41 | 35 | 53 | 49 | 47 |
| 나쁘다 | 12 | 14 | 8 | 18 | 22 | 10 |
| 1년 후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 | | | | | | |
| 개선될 것이다 | 17 | 21 | 21 | 15 | 28 | 22 |
| 비슷할 것이다 | 63 | 54 | 64 | 63 | 54 | 67 |
| 나빠질 것이다 | 20 | 25 | 15 | 22 | 18 | 11 |
| 향후 독일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 | | | | | | |
| 개선될 것이다 | 16 | 10 | 22 | 22 | 23 | 37 |
| 악화될 것이다 | 65 | 75 | 51 | 50 | 50 | 32 |
| 비슷할 것이다 | 19 | 15 | 28 | 28 | 27 | 30 |
| 향후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전망 | | | | | | |
| 개선될 것이다 | 26 | 15 | 22 | 22 | 34 | 28 |
| 악화될 것이다 | 25 | 35 | 17 | 25 | 23 | 15 |
| 비슷할 것이다 | 50 | 50 | 62 | 53 | 42 | 56 |
| 현재 독일은 발전하고 있는지 여부 | | | | | | |
| 그렇다 | 36 | 26 | 46 | 21 | 25 | 41 |
| 아니다 | 64 | 74 | 54 | 79 | 75 | 59 |
| 독일통일에 대한 생각 | | | | | | |
| 생각했던 것보다 좋다 | 4 | 7 | 13 | 5 | 11 | 15 |
| 생각했던 대로다 | 55 | 28 | 42 | 36 | 25 | 38 |
|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다 | 41 | 65 | 45 | 59 | 65 | 47 |

| 공화당 및 민사당 유권자 구성(특성에 따라) | | | | | | |
|---------------------------------|----|----|----|----|----|----|
| 독일통일에 대한 개인적인 기대의 충족여부 | | | | | | |
| 그렇다 | - | - | - | 29 | 42 | 56 |
| 아니다 | - | - | - | 71 | 58 | 44 |
| 독일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 | | | | | | |
| 그렇다 | 27 | 38 | 65 | 14 | 20 | 40 |
| 아니다 | 73 | 62 | 35 | 86 | 80 | 60 |
| 독일 지도부에 적합한 인물들이 속해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 | | | | | |
| 그렇다 | 4 | 16 | 36 | 5 | 9 | 25 |
| 아니다 | 96 | 84 | 64 | 95 | 91 | 75 |
| 사회 상태 | | | | | | |
| 모두 괜찮다 | 2 | 1 | 5 | 1 | 1 | 3 |
| 문제점이 있다 | 29 | 31 | 57 | 38 | 31 | 57 |
| 심각한 위기다 | 56 | 36 | 30 | 48 | 49 | 34 |
| 재앙 수준이다 | 13 | 31 | 9 | 13 | 20 | 6 |
| 정치적 관심 | | | | | | |
| 매우 강함 | 43 | 15 | 11 | 23 | 13 | 11 |
| 강함 | 40 | 31 | 35 | 39 | 29 | 30 |
| 보통 | 15 | 43 | 43 | 31 | 46 | 45 |
| 약함 | 2 | 9 | 8 | 6 | 9 | 11 |
| 매우 약함 | 0 | 3 | 3 | 1 | 4 | 3 |
| 사회주의 이념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 | | | | | | |
| 매우 많다 | - | 0 | 4 | 26 | - | 8 |
| 많다 | - | 8 | 17 | 47 | - | 24 |
| 보통이다 | - | 25 | 33 | 22 | - | 38 |
| 적다 | - | 26 | 20 | 3 | - | 15 |
| 매우 적다 | - | 41 | 27 | 2 | - | 16 |
| 서독의 정치질서 이양이 옳은지 여부 | | | | | | |
| 그렇다 | - | - | - | 43 | 76 | 76 |
| 아니다 | - | - | - | 57 | 24 | 24 |
| 민사당은 믿을만한 새로운 시작을 했는지 여부 | | | | | | |
| 그렇다 | 65 | 16 | 11 | 87 | 18 | 40 |
| 아니다 | 35 | 84 | 89 | 13 | 82 | 60 |

| 공화당 및 민사당 유권자 구성(특성에 따라) | | | | | | |
|--------------------------|----|----|----|----|----|----|
| 리콜(Recall) 1994 | | | | | | |
| 기민/기사당 | 6 | 12 | 40 | 4 | 26 | 43 |
| 사민당 | 13 | 9 | 35 | 8 | 3 | 27 |
| 자민당 | 1 | 1 | 3 | 0 | 1 | 2 |
| 녹색당 | 10 | 2 | 9 | 1 | 3 | 5 |
| 민사당 | 56 | 1 | 0 | 80 | 1 | 10 |
| 공화당 | 1 | 61 | 1 | 0 | 42 | 0 |
| 투표하지 않음 | 9 | 12 | 10 | 4 | 20 | 11 |
| 유권자가 아님 | 3 | 2 | 2 | 2 | 4 | 2 |

출처_ 아르츠하이머, 카이/클라인, 마르크스 1996. 동서독 공화당 및 민사당 유권자들. 제국적인 비교, URL-<http://www.kai-arzheimer.com/pds-rep/reppds.html>(2011.07.06)

내용

그래프: 일주일 단위로 살펴본 동독 지지율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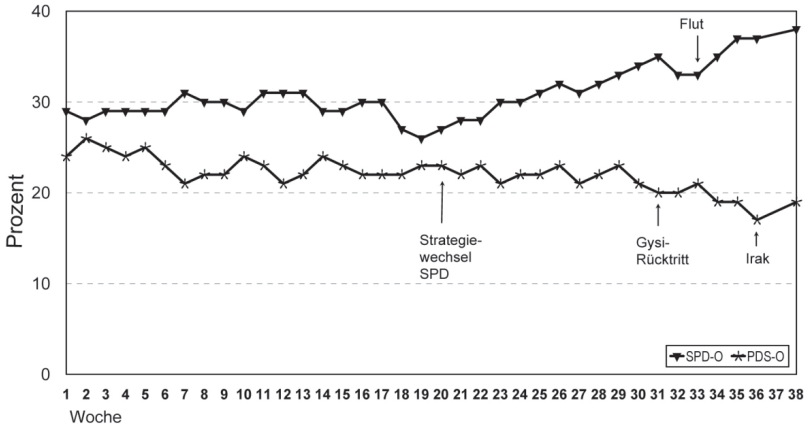


표: 정당 별 선거 결과(퍼센트)와 의석수

| 정당 | 득표 | | 의석수 | | | |
|-------------------------|-------|-------|-----|-----|----|-----|
| | 제1투표 | 제2투표 | 직접 | 리스트 | 초과 | 총계 |
| 사민당 | 41.9 | 38.5 | 171 | 76 | 4 | 251 |
| 기민/기사당 | 41.1 | 38.5 | 125 | 122 | 1 | 248 |
| 녹색당 | 5.6 | 8.6 | 1 | 54 | | 55 |
| 자민당 | 5.8 | 7.4 | | 47 | | 47 |
| 민사당 | 4.3 | 4.0 | 2 | | | 2 |
| Schill정당 (공격적 법치국가당) | 0.3 | 0.8 | | | | |
| 공화당 | 0.1 | 0.6 | | | | |
| 민족민주당 | 0.2 | 0.4 | | | | |
| 기타 | 0.7 | 1.2 | | | | |
| 총계 | 100.0 | 100.0 | 299 | 299 | 5 | 603 |

절대다수(“총리다수”) 302표, 사민당+녹색당 306표, 기민/기사당+자민당 295표, 민사당 2표.

표: 1990-2002년 연방의회선거 제2투표 결과: 동-서-비교

| | 기민/기사당 | | 사민당 | | 자민당 | | 녹색당 | | 민사당 | | REX(극우파) | |
|------|--------|------|------|------|------|------|-----|-----|-----|------|----------|-----|
| | 서 | 동 | 서 | 동 | 서 | 동 | 서 | 동 | 서 | 동 | 서 | 동 |
| 1990 | 44.3 | 21.8 | 35.7 | 24.3 | 10.6 | 12.9 | 4.8 | 6.3 | 0.3 | 11.1 | 2.6 | 1.6 |
| 1994 | 42.1 | 38.5 | 37.5 | 31.5 | 7.7 | 3.5 | 7.9 | 4.3 | 1.0 | 19.8 | 2.0 | 1.2 |
| 1998 | 37.1 | 27.3 | 42.3 | 35.1 | 7.0 | 3.3 | 7.3 | 4.1 | 1.2 | 21.6 | 2.8 | 5.0 |
| 2002 | 40.8 | 28.3 | 38.3 | 39.7 | 7.6 | 6.4 | 9.4 | 4.7 | 1.1 | 16.9 | 0.9 | 1.7 |

1. 서베를린을 포함한 서독, 동베를린을 포함한 동독.
2. 동독에서는 기민당 단독.
3. 1990년: 공화당, 국민당, DDD(독일직접민주주의당). 1994년: 공화당. 1998년: DVU(독일국민연합), 국민당, 공화당. 2002년: 국민당, 공화당, "schill당"은 극우당으로 간주되지 않음. 독일전역에서 0.8%, 서쪽 0.7% 동쪽 1.2% 득표.

표: 1990-2002년 연방의회선거 제2투표 결과 및 평균치

| 연도 | 기민/기사당 | 사민당 | 자민당 | 녹색당 | 민사당 |
|------|--------|------|------|-----|-----|
| 1990 | 43.8 | 33.5 | 11.0 | 5.0 | 2.4 |
| 1994 | 41.4 | 36.4 | 6.9 | 7.3 | 4.4 |
| 1998 | 35.2 | 40.9 | 6.3 | 6.7 | 5.1 |
| 2002 | 38.5 | 38.5 | 7.4 | 8.6 | 4.0 |
| 평균치 | 43.7 | 37.6 | 8.6 | 6.1 | 4.0 |

실러 플로리안이 작성한 표. 2001(아래 출처 참조)

표: 주별 2002 연방의회선거 제2투표 결과 및 이전 선거 대비(%)

| | 사민당 | | 기민/기사당 | | 녹색당 | | 자민당 | | 민사당 | |
|-------------|------|------|--------|------|------|------|------|------|------|------|
| | 2002 | 대비 | 2002 | 대비 | 2002 | 대비 | 2002 | 대비 | 2002 | 대비 |
|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 42.9 | -2.6 | 36.0 | +0.3 | 9.4 | +2.9 | 8.0 | +0.5 | 1.3 | -0.2 |
| 함부르크 | 42.0 | -3.7 | 28.1 | -1.9 | 16.2 | +5.4 | 6.8 | +0.4 | 2.1 | -0.2 |
| 니더작센 | 47.8 | -1.6 | 34.5 | +0.4 | 7.3 | +1.4 | 7.1 | +0.7 | 1.0 | 0 |
| 브레멘 | 48.6 | -1.6 | 24.6 | -0.9 | 15.0 | +3.7 | 6.7 | +0.8 | 2.2 | -0.2 |
|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 43.0 | -3.9 | 35.1 | +1.3 | 8.9 | +2.0 | 9.3 | +2.1 | 1.2 | 0 |
| 헤센 | 39.7 | -1.8 | 37.1 | +2.4 | 10.7 | +2.5 | 8.2 | +0.4 | 1.3 | -0.1 |
| 라이프트팔츠 | 38.2 | -3.1 | 40.2 | +1.1 | 7.9 | +1.8 | 9.3 | +2.2 | 1.0 | 0 |

| | 사민당 | | 기민/기사당 | | 녹색당 | | 자민당 | | 민사당 | |
|--------------|------|------|--------|-------|------|------|------|------|------|------|
| | 2002 | 대비 | 2002 | 대비 | 2002 | 대비 | 2002 | 대비 | 2002 | 대비 |
| 바덴 뷔르템베르크 | 33.5 | -2.1 | 42.8 | +5.1 | 11.4 | +2.1 | 7.8 | -1.0 | 0.9 | 0 |
| 바이에른 | 26.1 | -8.3 | 58.6 | +10.9 | 7.6 | +1.7 | 4.5 | -0.6 | 0.7 | 0 |
| 자르부뤼켄 | 46.0 | -6.5 | 35.0 | +3.1 | 7.6 | +2.1 | 6.4 | +1.7 | 1.4 | +0.4 |
| 베를린 | 36.6 | -1.2 | 25.9 | +2.2 | 14.6 | +3.3 | 6.6 | +1.8 | 11.4 | -2.1 |
| 브란덴부르크 | 46.4 | +2.9 | 22.3 | +1.5 | 4.5 | +0.9 | 5.8 | +3.0 | 17.2 | -3.1 |
|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 41.7 | +6.3 | 30.3 | +1.0 | 3.5 | +0.6 | 5.4 | +3.2 | 16.3 | -7.3 |
| 작센-안할트 | 43.2 | +5.1 | 29.0 | +1.8 | 3.4 | +0.1 | 7.6 | +3.5 | 14.4 | -6.3 |
| 작센 | 33.3 | +4.2 | 33.6 | +0.9 | 4.6 | +0.2 | 7.3 | +3.6 | 16.2 | -3.8 |
| 튀링겐 | 39.9 | +5.4 | 29.4 | +0.5 | 4.3 | +0.4 | 5.9 | +2.5 | 17.0 | -4.3 |
| 독일연방공화국 | 38.5 | -2.4 | 38.5 | +3.3 | 8.6 | +1.9 | 7.4 | +1.1 | 4.0 | -1.1 |

표: 사회 계층별 서독 2002년 연방의회선거 제2투표 결과(%)

| | 사민당 | 기민/기사당 | 녹색당 | 자민당 | 민사당 |
|----------------|-----|--------|-----|-----|-----|
| 연령 | | | | | |
| 18-29세 | 37 | 36 | 11 | 9 | 2 |
| 30-44세 | 41 | 35 | 12 | 8 | 1 |
| 45-59세 | 38 | 42 | 10 | 8 | 1 |
| 60세 이상 | 36 | 50 | 5 | 6 | 1 |
| 직업활동 유무 | | | | | |
| 직업활동중 | 38 | 39 | 10 | 9 | 1 |
| 연금생활자 | 38 | 48 | 5 | 6 | 1 |
| 직업훈련중 | 39 | 30 | 17 | 10 | 2 |
| 실업자 | 45 | 30 | 10 | 7 | 3 |
| 직업군 | | | | | |
| 노동자 | 45 | 39 | 5 | 6 | 1 |
| 회사원 | 41 | 37 | 11 | 8 | 1 |
| 공무원 | 32 | 43 | 16 | 6 | 1 |
| 자영업자 | 21 | 52 | 11 | 13 | 1 |
| 농업 | 13 | 76 | 3 | 5 | 1 |
| 노조가입 여부 | | | | | |
| 가입함 | 52 | 28 | 10 | 6 | 2 |
| 가입안함 | 35 | 43 | 10 | 8 | 1 |

| | 사민당 | 기민/기사당 | 녹색당 | 자민당 | 민사당 |
|---------------|------|--------|-----|-----|-----|
| 노동자+노조 | | | | | |
| 노조원 | 56 | 29 | 5 | 6 | 1 |
| 노조원 아님 | 40 | 44 | 4 | 7 | 1 |
| 회사원+노조 | | | | | |
| 노조원 | 58 | 21 | 12 | 5 | 2 |
| 노조원 아님 | 38 | 40 | 11 | 8 | 1 |
| 총계 | 38.3 | 40.8 | 9.4 | 7.6 | 1.1 |

출처_ 만하임 선거 연구단(선거당일 설문, 투표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표: 사회 계층별 동독 2002년 연방의회선거 제2투표 결과(%)

| | 사민당 | 기민/기사당 | 녹색당 | 자민당 | 민사당 |
|----------------|------|--------|-----|-----|------|
| 연령 | | | | | |
| 18-29세 | 39 | 24 | 6 | 12 | 12 |
| 30-44세 | 35 | 30 | 7 | 7 | 16 |
| 45-59세 | 39 | 30 | 3 | 5 | 19 |
| 60세 이상 | 47 | 27 | 3 | 4 | 18 |
| 직업활동 유무 | | | | | |
| 직업활동중 | 37 | 31 | 5 | 8 | 16 |
| 연금생활자 | 46 | 27 | 3 | 3 | 19 |
| 직업훈련중 | 38 | 21 | 10 | 11 | 16 |
| 실업자 | 37 | 22 | 6 | 6 | 21 |
| 직업군 | | | | | |
| 노동자 | 40 | 30 | 3 | 7 | 15 |
| 회사원 | 41 | 26 | 6 | 6 | 19 |
| 공무원 | 37 | 25 | 4 | 5 | 24 |
| 자영업자 | 22 | 44 | 8 | 10 | 13 |
| 농업 | 35 | 40 | 2 | 7 | 13 |
| 노조가입 여부 | | | | | |
| 가입함 | 46 | 21 | 4 | 5 | 20 |
| 가입안함 | 38 | 30 | 5 | 7 | 16 |
| 노동자+노조 | | | | | |
| 노조원 | 45 | 26 | 3 | 4 | 16 |
| 노조원 아님 | 39 | 31 | 3 | 7 | 15 |
| 회사원+노조 | | | | | |
| 노조원 | 49 | 15 | 5 | 4 | 24 |
| 노조원 아님 | 39 | 28 | 6 | 6 | 18 |
| 총 계 | 39.7 | 28.3 | 4.8 | 6.4 | 16.8 |

출처_ 만하임 선거 연구단(선거당일 설문, 투표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표: 1998-2002년 연방의회선거 유권자 이동양상

| 교 환 | 유권자 이동계좌(차액) | | | | |
|----------------------------|--------------|------------|-----------|-----------|-----------|
| | 기민/기사당 | 사민당 | 녹색당 | 자민당 | 민사당 |
| 기민/기사당 | - | -1,120,000 | 0 | -20,000 | -50,000 |
| 사민당 | 1,120,000 | - | 500,000 | 340,000 | -290,000 |
| 녹색당 | 0 | -500,000 | - | -60,000 | 0 |
| 자민당 | 20,000 | -340,000 | 60,000 | - | -20,000 |
| 민사당 | 50,000 | 290,000 | 0 | 20,000 | - |
| 기타 | 310,000 | 130,000 | 60,000 | 100,000 | 20,000 |
| 총계 | 1,500,000 | -1,540,000 | 620,000 | 380,000 | -340,000 |
| 투표하지 않은 사람 | 190,000 | -60,000 | -60,000 | 10,000 | -260,000 |
| 처음으로 투표한 사람 / 사망한 사람 | -540,000 | -180,000 | 190,000 | 30,000 | -40,000 |
| 이동한 사람 | 20,000 | 90,000 | 30,000 | 20,000 | -10,000 |
| 유권자 이동 총계 | 1,170,000 | -1,690,000 | 780,000 | 440,000 | -650,000 |
| 고정유권자 | 12,690,000 | 13,470,000 | 1,960,000 | 1,270,000 | 1,220,000 |
| 2002 득표수 | 18,470,000 | 18,480,000 | 4,080,000 | 3,520,000 | 1,890,000 |
| 재선거인(%) ^{a)} | 68.7 | 72.9 | 48.0 | 36.1 | 64.6 |

출처: ARD/Infratest dimap 선거보고서

a) 2002 선거인 표에 대한 고정유권자 비율 또는 “정지쿼터”(자체 정산)

표: 유권자 그룹별 결정적 이슈 (%)

| | 전체 | 사민당 | 기민/기사당 | 녹색당 | 자민당 | 민사당 |
|----------------------|----|-----|--------|-----|-----|-----|
| 독일전체지역 | | | | | | |
| 경제정책 | 38 | 28 | 53 | 15 | 51 | 17 |
| 외국인정책 | 16 | 12 | 19 | 17 | 14 | 12 |
| 노동시장정책 | 31 | 24 | 42 | 11 | 34 | 28 |
| 국내안전,범죄 | 13 | 12 | 16 | 4 | 10 | 10 |
| 환경정책 | 15 | 18 | 4 | 64 | 5 | 10 |
| 세금정책 | 16 | 11 | 21 | 5 | 30 | 8 |
| 사회정의 | 30 | 42 | 15 | 39 | 18 | 51 |
| 교육정책 | 14 | 13 | 14 | 14 | 21 | 19 |
| 대외정책 | 18 | 24 | 12 | 29 | 9 | 21 |
| 구연방주(서베를린 포함) | | | | | | |
| 경제정책 | 39 | 28 | 53 | 15 | 53 | 20 |
| 외국인정책 | 17 | 13 | 19 | 18 | 14 | 26 |
| 노동시장정책 | 30 | 23 | 41 | 11 | 33 | 28 |
| 국내안전,범죄 | 14 | 13 | 17 | 4 | 10 | 8 |
| 환경정책 | 17 | 20 | 5 | 65 | 5 | 17 |
| 세금정책 | 17 | 12 | 22 | 5 | 31 | 17 |
| 사회정의 | 29 | 41 | 15 | 40 | 17 | 60 |
| 교육정책 | 15 | 13 | 15 | 14 | 22 | 19 |
| 대외정책 | 18 | 24 | 12 | 29 | 9 | 25 |
| 신연방주(동베를린 포함) | | | | | | |
| 경제정책 | 33 | 27 | 53 | 19 | 46 | 16 |
| 외국인정책 | 12 | 9 | 15 | 12 | 12 | 8 |
| 노동시장정책 | 31 | 25 | 42 | 13 | 39 | 28 |
| 국내안전, 범죄 | 11 | 10 | 12 | 6 | 9 | 10 |
| 환경정책 | 10 | 12 | 3 | 59 | 4 | 7 |
| 세금정책 | 11 | 8 | 16 | 3 | 24 | 5 |
| 사회정의 | 38 | 45 | 18 | 35 | 22 | 61 |
| 교육정책 | 13 | 12 | 10 | 11 | 19 | 19 |
| 대외정책 | 17 | 24 | 7 | 25 | 6 | 20 |

출처: ARD/Infratest dimap 선거보고서. 데이터는 공식적인 결과에 따라 통계 분석한 것임. 다수 항목 선택 가능

출처: 노이게바우어, 게로/슈퇴스 리하르트 2002. 2005년 연방의회선거 분석, 베를린: 오토 슈타머 센터 실무자.

담당자 / 기관_ 8차 전당대회 두 번째 회의 의결사항

내용_

전문에서는 민사당을 시대에 부합되는 사회주의 정당으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본 정당의 목적을 사회변혁을 이룸으로써 인간이 자기결정적이고, 연대적인 공생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자유, 평등, 연대라는 기본가치는 사회 민주주의를 강화함으로써 달성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핵심문제는 신자유주의인데, 이는 신자유주의가 비연대적이고 탈민주주의를 그 본질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정보통신기술은 본문 제 4장에 언급된 글로벌한 사회문제에 맞서기 위해 세계화를 비판하는 사회구조와 다른 사회구조가 서로 연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EU도 앞으로는 경쟁지역으로서 지금의 위치에서 벗어나 세계사회의 집단적인 안전을 최고 목표로 지향하는 국가공동체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정당의 국내정치 목표는 아래와 같다.

1. 국민들의 개별적, 집단적 권리 확충/자치구의 민주화/경제민주주의/민주주의적 세계질서 확립.
2. 공동 안보/분쟁의 해결 및 민간 차원에서의 예방/제국적이고 호전적인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항하는 광범위한 연대 구성/포괄적인 탈군사화 및 비무장 추구.
3. 사회적, 환경적 규제/노조 차원의 요구 지지/공적 투자/환경지향적인 기술정책/세금 정당성 확립/농업경제 안정.
4. 환경 및 사회 문제에 대한 공동 해결책/ 삶의 방식 변화/ 환경을 생각하는 지역경제 순환/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 지속적인 교통기술 발전.
5. 대등한 임금협상/주당, 평생 노동시간 단축/영리노동과 비영리노동 전환시 사회적 안전 보장/ 남녀평등/내수시장 안정화/공적부양을 받는 고용/새로운 형태의 완전고용.
6. 사회국가와 사회주의 기반을 갖추도록 연금시스템을 개혁/고용인 분담금을 가치창출적인 측면으로 연계/2급 의료계 사유화 반대/요구 수준에 부합되는 기초생계 보장 도입.
7. 교육, 문화, 정보참여에 있어 사회적 불평등 반대/교육 시스템에 대한 공적재정 지원, 사유화 반대/시기적절한 고등교육기관 개혁/국가적 문화부양.
8. 신규 연방주들을 사회-환경 혁신의 모델 지역으로 개발/더욱 효과적인 경제부양/임금, 연금, 노동시간과 관련하여 계속되고 있는 동독인들에 대한 차별대우 반대/EU의 동쪽확장 정책을 기회로 활용.

출처_ Kutzmutz, Rolf(발행) 2005. 좌파 민사당 정책안, 베를린: 좌파당 민사당 또는 좌파 민사당 2003. 좌파당 민사당의 정책안: <http://archiv2007.sozialisten.de/partei/dokumente/programm/index.htm> (2011.07.21)

담당자 / 기관_ 좌파당 민사당, 구 동독 연방주들, 독일연방군, 지방자치단체, 미국, EU, NATO.

내용_

I. 모든 노동에 대해 사회적 기본권을 혁신하고 보장

1. 존엄한 노동: 사회보장금 축소 중단, 노조 강화, 노동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청소년 일자리에 대한 청원, 사회보험 납입금의 인계, 직업 교육 비용에 대한 지원, 풀타임 고용에 대해 월 1,400유로(세전) 수준의 최소 임금 보장, 주당 최장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 사회법 제 Ⅲ권에 명시된 반파업 조항 삭제, 국제자본 흐름에 대한 관리감독, 국제외환거래에 대한 세금, 탈세와의 전쟁.
2. 사회적 보장: 기초생계 보장, 동서독지역에서 주거비용을 포함해서 실업수당 II를 최소 월 420유로 수준으로 인상,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 개선, 연금은 최소 월 800유로 수준을 보장, 민영 의료보험 철폐, 지방에도 의료기관 설치, 주택 임대료 제한, 도시 재건 프로그램의 지원.

II. 모두에게 수준높은 교육 제공

1. 사회적, 민주적 교육개혁: 공동학교, 종일학교, 대학등록금 폐지, 상환없는 직업교육 지원.
2. 연방정부와 각 연방주 정부: 교육부문은 민영화 불가, 국내총생산 대비 교육분야 연방 지출을 5%에서 6%로 상향 조정,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청원, 문화 지원을 기본법 테두리 내에서 국가목표로 삼음.
3. 어린이 빈곤에 대한: 무상 탁아시설, 교육을 위한 청원, 실업수당/사회보조금에 대해서는 자녀수당 징수 불가, 자녀수당 인상, 모든 자녀들에 대한 종일 케어, 이민자 자녀 통합.

III. 새로운 독일의 위한 출발-사회 구조가 빈약한 동독 또는 서독 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1. 많은 사람들이 동독지역을 떠나고 있음, 많은 동독출신들이 2류 취급을 받고 있음.
2. 경제적, 사회적 상황 안정화: 연방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강화, 구 동독주들에 대해 저과세, 지식기반 생산, 교통연결, 학교입지 및 의료지원 강화, 관료주의 철폐, 서독지역에 대해서도 자녀의 케어 강화.
3. 혁신과 교육에 의한 미래: 클러스터 형성, 유럽지역의 동서협력을 위한 매개로서의 동독 부각, 중소기업 지원 강화.
4. 동독인들에 대한 영향력 강화.

IV. 환경을 보전하고 미래를 설계

1. 대기보호, 에너지 및 교통변혁 시작: 배출가스 감소, 재생가능한 에너지 지원, 핵 에너지 거부, 대중교통이용 증대.
2. 생태학적 다양성 획득: 자연림과 이끼 보호, 재자연화, 각 보호지역 간의 연계, 인위적인 인프라 시설물 면적 축소, 토양 복원.

3. 친환경적인 경작: 친환경적인 경작 및 연구, 농림업 지원, 광물 비료와 식물 보호제에 대한 사용 억제, 동물 보호, 유전자 변형 기술 거부, 생명체와 유전자에 대한 특허금지, 가격덤프 금지.

V. 반대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더 큰 민주주의를 실현

1. 보다 직접적인 민주주의: 연방차원의 국민투표, 고정 주거지가 있는 외국인의 선거권 보장, 16세 이상 선거권 보장, 연방의회, 연방주, 지방자치단체 강화, 명예직 강화.

2. 공공안보와 기본권을 보장: 반차별법, 동성부부, 경찰과 비밀경찰의 분리, 국내문제에 독일군 투입금지, 마약중독자들이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교화.

3. 극우주의와의 투쟁: 계속적인 억제와 교화 노력.

4. 이주자 동등대우: 망명 신청자의 경우 근무지 거주 의무가 없음, 추방을 위해 구류할 때에도 더 나은 환경을 제공, 극도의 고령일 경우 체류할 권리 보장, 독일문화를 강요하지 않음, 이민자에게 동등한 임금 지급, 소수민족 지원, 이중국적, 독일에서 출생한 경우 독일국적 취득.

5. 남녀평등과 여성지원: 기술직에 대해 직업교육 지원, 여성과 아이에 대한 기본적인 보장, 낙태권.

VI. 위에서 아래로의 재분배: 연대감 있는 세제 확립

1. 600억 유로를 초과하여 세수를 올린 경우: 특히 지역자치단체, 교육, 혁신, 투자, 사회 안보를 위해 사용.

2. 저임금에 대해서는 적게 과세, 고임금에 대해서는 많이 과세.

3. 30만 유로 이상부터 재산세 부과: 상속, 증여 및 수익이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중과세 부과와 세제 상의 특전 제한.

4. 증권거래 및 금융투기에 대해 과세.

5. 부가가치세를 16%로 고정, 수공업제품 및 의약품은 7%.

VII. 평화로운 삶, 평화 추구 및 세계화 설계

1. 독일 및 유럽은 미국과 대등한 균형을 이루는 세력임.

2. 국방의무는 없음, 독일군의 규모를 10만 명으로 축소,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음.

3. EU와 NATO 개입군 해산.

4. 비무장 및 무기수출 감독을 위한 유럽기관 설치.

5. 재난구호를 위한 상시군 설치.

출처_ 9차 전당대회 두 번째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

담당자 / 기관_ 내무부장관 볼프강 쇼이블레, 내무부, 연방헌법수호청.

내용_

2006년 이후 연방헌법수호청은 좌파당 민사당을 주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해당 정당의 창당문건에서 의회주의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정당은 극단적인(좌파적) 구조를 지지하고, 이를 복수 정당주의라는 개념 하에서 정당화하며, 향후 이러한 형태의 연합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 같은 연합 관계 및 정당에 소속된 청년 단체에 대해 보다 자세히 기술하고자 한다.

본 정당의 선거 결과 및 구성원 변천과정에 대한 간단한 분석이 제공된다. 아울러 좌파당 민사당이 당 외부에서 극좌파주의자들과 맺고 있는 관계 및 이들의 국제적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분석된다.

출처_ 연방내무부, 2006, 연방안전기획부 보고서 2006, 베를린: 연방내무부, URL-http://www.verfassungsschutz.de/download/SAVE/vsbericht_2006.pdf (2011.07.21).

내용

표: 당선 유력후보에 대한 평가 및 후보 평가에 근거한 투표 결정

| | 서독 | | | 동독 | | |
|--------|----|-----------|-----|----|-----|-----------|
| | 만족 | 불만족 | N | 만족 | 불만족 | N |
| 후보자 평가 | | | | | | |
| 라퐁텐 | 18 | 82 | 725 | 34 | 66 | 303 |
| 기지 | 20 | 80 | 692 | 54 | 46 | 315 |
| 좌파당 투표 | | Cramers V | | | | Cramers V |
| 라퐁텐 | 37 | 1 | ,53 | 49 | 8 | ,47 |
| 기지 | 28 | 1 | ,43 | 44 | 5 | ,43 |

데이터 단위는 퍼센티지(%). 동서지역이 아닌 인물에 따른 통계임.

해석방법: 예를 들어, 질문대상이 된 서독인들 중 18%가 라퐁텐에게 만족하고, 82%는 불만족이라고 대답했다. 라퐁텐에게 만족한다고 대답한 서독인들 중 37%가 좌파당에 표를 던졌고, 불만족이라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는 1%만이 좌파당에 표를 주었다.

표: 여러 정치 영역에 대한 관할 배분 및 선거 결정

| | 서독 | | | | 동독 | | | |
|--------|-----|-----|------|-----------|-----------|-----|------|-----|
| | 좌파당 | 無정당 | 다른정당 | N | 좌파당 | 無정당 | 다른정당 | N |
| 관할지정 | | | | | | | | |
| 일자리 | 3 | 20 | 77 | 748 | 7 | 29 | 65 | 304 |
| 경제입지 | 2 | 12 | 86 | 735 | 3 | 17 | 80 | 299 |
| 세금정책 | 3 | 14 | 83 | 717 | 9 | 13 | 78 | 275 |
| 노후제도 | 3 | 24 | 73 | 713 | 70 | 27 | 63 | 311 |
| 미래문제 | 2 | 21 | 77 | 713 | 8 | 33 | 60 | 302 |
| 사회정의 | 8 | 12 | 80 | 740 | 29 | 12 | 58 | 314 |
| 좌파당 투표 | | | | Cramers V | Cramers V | | | |
| 일자리 | 95 | 12 | 2 | ,68 | 80 | 36 | 13 | ,47 |
| 경제입지 | 78 | 12 | 5 | ,38 | 88 | 41 | 19 | ,35 |
| 세금정책 | 88 | 13 | 3 | ,59 | 65 | 39 | 17 | ,35 |
| 노후제도 | 77 | 12 | 3 | ,50 | 72 | 44 | 12 | ,48 |
| 미래문제 | 100 | 15 | 2 | ,66 | 90 | 30 | 12 | ,53 |
| 사회정의 | 65 | 6 | 1 | ,69 | 64 | 17 | 8 | ,59 |

데이터 단위는 퍼센티지(%). 동서지역이 아닌 인물에 따른 통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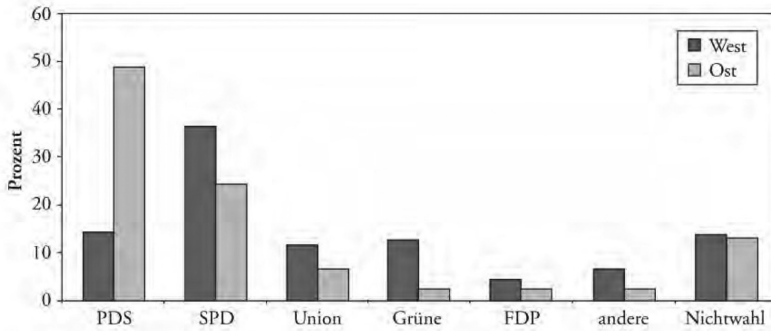
해석방법: 예를 들어, 질문 대상이 된 서독인들 중 3%가 좌파당에게, 77%가 다른 정당에게 일자리를 보장하고 창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고 답했다. 20%는 아무에게도 주지 않겠다고 했다. 이 항목에서 좌파당을 신뢰한 서독인들 중 95%가 좌파당에게 표를 던졌으며, 아무 정당에게도 주지 않겠다고 대답한 서독인들 중 12%가 좌파당에게 표를 주었다.

표: 사회정치적 구조에 따른 민사당 득표율

| | 1998 | | 2002 | | 2005 | |
|-----------------------|------|-----|------|-----|------|-----|
| | 서 | 동 | 서 | 동 | 서 | 동 |
| 민사당 득표율 (지난 선거에서) | 99 | 92 | 96 | 84 | 50 | 70 |
| 사민당 득표율 | 4 | 0 | 13 | 14 | 32 | 40 |
| 기민/기사당 득표율 | -3 | -49 | -38 | -57 | -56 | -68 |
| 녹색당 득표율 | 40 | 52 | 6 | 44 | 5 | 4 |
| 자민당 득표율 | -8 | -45 | -6 | -54 | -30 | -51 |
| 극우주의당 득표율 | -2 | 15 | 39 | 51 | -9 | -15 |
| 기권 | 5 | -5 | 54 | -49 | 12 | -8 |
| 인구밀집도 | 55 | 71 | 73 | 72 | 26 | 35 |
| 사회보장 의무대상 피고용인 | 14 | 38 | 45 | 36 | 7 | -4 |
| 농림업 피고용인 % | -15 | -50 | -35 | -52 | -24 | -16 |
| 제조업 피고용인 % | -29 | -62 | -69 | -49 | -23 | -21 |
| 상거래 및 교통 관련 피고용인 % | 12 | 31 | 25 | 2 | 4 | -1 |
| 기타 서비스업 피고용인 % | 30 | 65 | 70 | 54 | 26 | 22 |
| 외국인 비율 | 15 | 60 | 56 | 70 | 15 | 21 |
| 실업률 | 31 | -36 | 59 | -24 | 39 | 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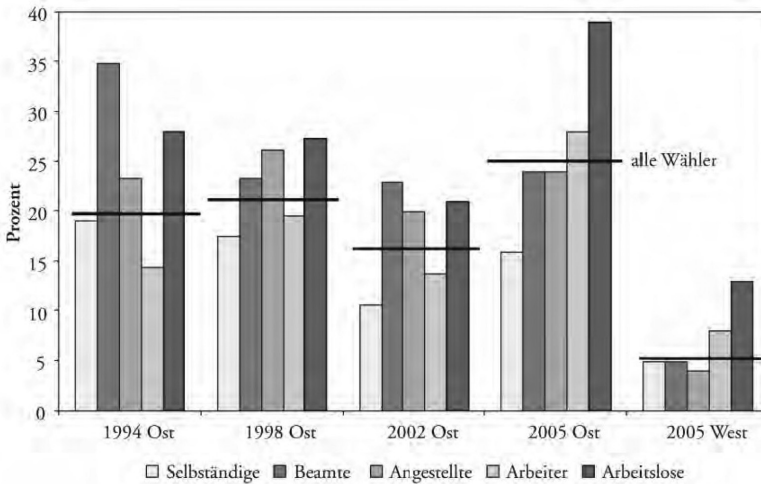
득표율은 유권자수에 기초하여 비율화(%) 하였으며, 데이터는 유권자수로 통계치를 계산하였다. 2002년과 2005년 선거에서 선거구 76과 84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왜냐하면, 이들 선거구는 서베를린에 속하는지 동베를린에 속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프: 2002년 대비 2005년 좌파당 유권자의 선거 결정



출처: Infratest dimap(주식 9)에 기초한 자체 통계, 33-50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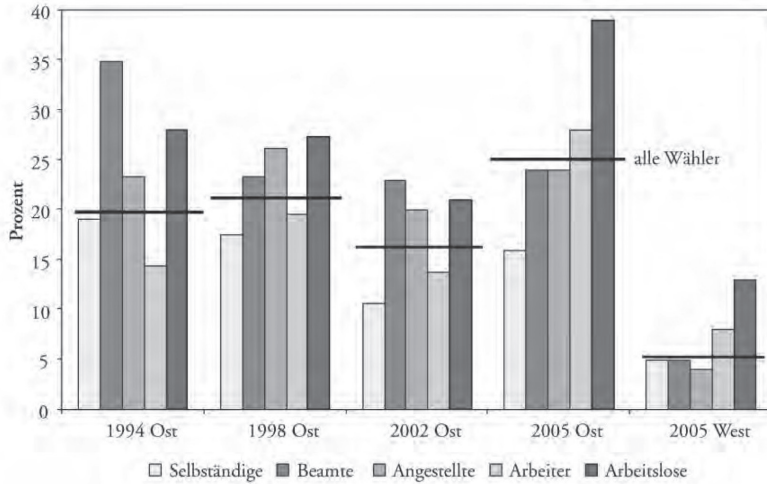
그래프: 직업활동 유무에 따른 좌파정당 지지 확실성 변화 양상, 1994-2005.



데이터는 백분율(%) 단위, 수평으로 그은 검은 선은 전체 유권자 투표율을 나타냄.

출처: Infratest dimap(1), -1994, 1998, 2002년 통계치는 DFG 프로젝트 “통일독일의 정치적 견해, 정치참여 및 유권자의 태도”(ZA No. 3064, 3861)에 기초한 자체 통계. 오스카 W 가브리엘/위르겐 W 팔터/한스 라팅거(발행), 함께 속해 있게 되면, 함께 성장하게 되는가? 통일독일 정치적 견해의 안정과 변화, 바덴바덴 2005년 참고.

그래프: 교육 정도에 따른 좌파정당 지지 확실성 변화 양상, 1994-2005.



데이터는 백분율(%) 단위, 수평으로 그은 검은 선은 전체 유권자 투표율을 나타냄

출처_ Infratest dimap(주식 9), 1994, 1998, 2002년 통계치는 DFG 프로젝트 “통일독일의 정치적 견해, 정치참여 및 유권자의 태도”(ZA No. 3064, 3861)에 기초한 자체 통계. 오스카 W 가브리엘/위르겐 W 팔터/한스 라팅거(발행), 함께 속해 있게 되면, 함께 성장하게 되는가? 통일독일 정치적 견해의 안정과 변화, 바덴바덴 2005년 참고.

출처_ 쉐, 하랄드/팔터, 위르겐 W. 2005. 좌파당과 유권자. 정치와 시간역사 51-52/2005 33-40 페이지.

표: 당 내 여성당원 비중(2004년12월)

| 정당 | 여성비율(%) |
|---------|---------|
| 좌파당 민사당 | 45.8 |
| 녹색당 | 37.0 |
| 사민당 | 30.2 |
| 기민당 | 25.2 |
| 기사당 | 17.9 |
| 자민당 | 23.4 |

쉴러 플러리안이 작성한 표(2011 좌파당 민사당 통계를 참고),

URL-<http://archiv2007.sozialisten.de/partei/daten/index.htm>(2011.07.06).

표: 민사당의 연령 구조

| 연령 | % |
|--------|------|
| 20세 이하 | 0.5 |
| 20-25 | 1.3 |
| 25-30 | 1.5 |
| 30-40 | 3.5 |
| 40-50 | 9.4 |
| 50-60 | 13.4 |
| 60-65 | 6.8 |
| 65세 이상 | 63.6 |

실러 플로리안이 작성한 표(2011 좌파당 민사당 통계를 참고),

URL - [http://archiv2007.sozialisten.de/partei/daten/index.htm\(2011.07.06\)](http://archiv2007.sozialisten.de/partei/daten/index.htm(2011.07.06)).

표: 유럽의회, 연방의회, 주의회 원내교섭단체 내 민사당 의석(2006년 2월)

| 기관/연방주 | 비율 |
|--------------|-------|
| 유럽의회 | 4/7 |
| 연방의회 | 26/53 |
| 베를린 | 16/23 |
| 브란덴부르크 | 15/29 |
|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 7/12 |
| 작센 | 15/31 |
| 작센 안할트 | 13/25 |
| 튀링겐 | 14/28 |

실러 플로리안이 작성한 표(2011 좌파당 민사당 통계를 참고),

URL - [http://archiv2007.sozialisten.de/partei/daten/index.htm\(2011.07.06\)](http://archiv2007.sozialisten.de/partei/daten/index.htm(2011.07.06)).

표: 민사당 당원수(2006년 12월 31일 기준)

| 서 | | 동 | |
|-------------|------|--------------|-------|
| 연방주 | 당원수 | 연방주 | 당원수 |
| 바덴 뷔르템베르크 | 681 | 베를린 | 8911 |
| 바이에른 | 691 | 브란덴부르크 | 9710 |
| 브레멘 | 195 |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 6423 |
| 함부르크 | 480 | 작센 | 14066 |
| 헤센 | 757 | 작센-안할트 | 6420 |
| 니더작센 | 1058 | 튀링겐 | 7387 |
|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 1913 | | |
| 라인란트팔츠 | 454 | | |
| 자르란트 | 528 | | |
|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 438 | | |
| 총계 | 7257 | 총계 | 60338 |

실러 플로리안이 작성한 표(2011 좌파당 민사당 통계를 참고),

URL - <http://archiv2007.sozialisten.de/partei/daten/index.htm>(2011.07.06).

담당자 / 기관_ 좌파당 민사당, “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선거대안(WASG)”당, 구 동독, 구 서독, EU, 미국, 경찰, 독일 연방군, 자치단체, NATO.

내용_

I. 새로운 정치를 위한 공동 협력

1. 부와 기회는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자연환경은 훼손되고 있음.
2. “요구하면 다 들어주는” 행태에 반대, 부권주의 및 인종주의에 대한.
3. 민주주의, 자유, 평등, 정의, 국제주의, 연대, 평화, 자연보호, 해방에 찬성.
4. 통일이라는 전환 과정을 통해 민주적 사회주의로 하여금 자본주의를 극복하게 하고자 함.
5. 좌파당 민사당은 전통적으로 노동자 계몽/해방운동 및 반파시즘을 추구.
6. 구 동독과 구 서독에서 좌파 세력들과 함께 비판적이고 연대적인 토론 진행에 찬성, 일 반화/편협함 및 반공산주의적 선입견 반대.
7. 독재/스탈린주의 반대.

II. 새로운 세계에 대한 필요성 공감

1. 신자유주의는 비연대적이고, 자본주의는 탈민주화적임.
2. 생산성, 교육수준 및 능력은 향상되었지만, 일자리는 없어지고 소득은 줄어듦, 여성들과 외국인들은 차별받고 있음.
3. EU는 계급투쟁의 장이 되고, 미국은 제국주의적 침략전쟁을 합법적이라고 주장함.

III. 자본주의 극복

1. 민주화, 사회적인 노동 및 사회적인 경제, 경제민주주의, 연대적인 안보시스템, 국제평화질서.
2. 모든 사람들의 생활터전을 안정화시키는 노동, 재산격차 줄이기, 연간 최소 4백억 유로 이상으로 공공투자 촉진, 노동단축, 완전한 사회보장, 직업실습생 착취 금지, 기업, 유가증권, 부동산, 비행기 연료에 대한 세금인상, 재산세 재도입.
3. 경제보다 우선하여 민주적인 정치를 정착.
4. 무조건적인 수익만을 지향하면 삶의 근본이 망가지게 됨.
5. 외부요인에 의한 강제 정치, 핵 에너지, 대중교통의 민영화, 민간 건강보험, 결혼에 특권 부여, 대학 등록금, 공공행정분야의 인력감축 반대.
6. 사회보장 시스템의 자체적 관리 강화, 60세부터 연금 지급, 노령인구에게 파트타임 잡 제공, 노인 부양시설 환경 개선, 모든 청소년들에게 실습 기회 부여, 건강센터, 낙태, 전 일 자녀케어, 공동학교, 학교 이외의 교육제공, 대학의 자치, 무료 소프트웨어.
7. 경찰/독일군, 경찰/비밀경찰, 국가/교회의 지속적인 분리.
8. 지역자치단체 강화, 시민자치 도입.

9. 망명권 부활.
 10. 구 동독지역에 대한 좌파당 민사당의 특별 책임.
 11. 자녀케어, 현대적 교육시스템, 해방, 문화시설 및 종합병원.
 12. 구 동독에서 가치있는 삶의 여건 마련, 새로운 지역정치, 투자 증진, 경제발전을 위한 미래산업분야 지지.
 13. 독일군은 국내외 사안에 개입해서는 안됨, NATO 철폐, 유럽에 미군주둔 반대.
 14. 개발원조 비용을 국내총생산 대비 0.7% 수준으로 인상.
 15. 유엔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에 대한 개혁 요구.
 16. EU를 고용, 사회, 환경 및 평화연합으로 변경.
- IV. 노선변화 지지
1.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의견 대립.
 2.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동맹 구축.
 3. 모든 주의회와 연방의회 의원들은 수입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
 4. 좌파당 민사당의 정부참여는 정당 원칙과 조화를 이루어야만 가능.
- V. 후속 의견
1. 경제 민주주의를 위하여 어떠한 가능성과 어떠한 수단이 존재하는가?
 2. 시민사회, 시장규제, 사회국가 및 국제기구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3. 완전고용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기초생계 보장 또는 기본 수입은 어떻게 되는가?
 4. 여성의 경제적인 억압에 어떻게 대항해야 하는가?
 5. 어떻게 하면 공공자산을 확충할 수 있는가?
 6. 사회적, 개별적 시민권은 어떻게 대변되는가?
 7. 국민의 요구와 가치지향(계급 투쟁)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출처 “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선거대안(WASG)”당과 좌파당 민주사회당의 전당대회 의결 사항.

문서
번호 74

좌파당의 연방법령
2007년 3월 24일

담당자 / 기관 “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선거대안(WASG)”당과 좌파당 민사당의 전당대회
2007년 3월 24/25일.

내용

전문/

1. 이름, 소재지, 목적과 활동지역.

새로 창당된 정당은 독일 및 세계노동운동과 평화운동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 정당은 반파시즘, 새로운 사회운동, 여성주의, 환경운동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민주적 사회주의자로서의 정체성을 밝힌다.

2. 정당의 기반

누구나 14세 이상이면 담당구역 이사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당원이 될 수 있다. 정당 구성원들은 해당 신청에 대해 거부권을 갖는다. 탈퇴, 면직 또는 사망을 이유로 할 때 당원 자격은 소멸된다. 면직은 절차에 따른 중재판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어서 당원, 게스트 당원 및 의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언급한다. 평등권과 남녀평등 및 민주주의 원칙이 유효하다.

3 정당 편성

정당은 연방주 단위로 각각 하나의 주협회로 분할된다. 정당의 기관은 전당대회, 당 수뇌부 및 연방위원회로 구성된다. 이들의 구성과 업무방식은 아래와 같이 규정된다.

4 일반적인 정당 절차규정

정당기관들은 공개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모든 당원과 기관은 제청권을 갖는다. 다양한 투표 및 중재 절차와 선거구성 양식은 정해져 있다.

출처 좌파 민주사회당 2011 베를린 URL-<http://archiv2007.sozialisten.de/partei/dokumente/index.htm> (2011.07.19).

담당자 / 기관_ “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선거대안(WASG)” 당과 좌파당 민사당의 전당대회
2007년 3월 24/25일.

내용_

1조 기본사항: 정당 재정 업무의 근간은 독일 연방공화국이 명시한 법규에 따른다. 정당 수뇌부는 이를 준수할 의무와 일년에 한번 결산할 의무가 있다.

2조 분담금 규칙: 정당의 재정은 당원의 수입을 등급별로 분류하여 책정한 월 분담금으로 충당된다. 이 분담금에는 추가적으로 당원 자발적으로 그 비중을 정할 수 있는 유럽 좌파 재정을 위한 분담금도 포함된다. 분담금 의무를 다하였는지 당 수뇌부는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3조 정당 기부: 기부금 모금은 수뇌부의 업무이다. 수령, 기록, 공개는 정당법 규정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4조 의식 분담금: 의식을 가진 당원은 당원 분담금에 추가적으로 특별 분담금을 내야 한다. 의식 분담금 액수는 의식에 따라 당 수뇌부와 의원들에 의해 그 수준이 정해진다.

5조 자가조달 및 당 내 재정 조정: 정당의 정치적 업무는 자가조달 원칙에 따라 수행된다. 당 수뇌부는 국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연방주협회는 자기 책임 하에 재정 조정에 대해 의결한다.

6조 선거전 재정 조달: 연간 국가자금으로 선거전 기금이 형성된다.

7조 재정 계획: 당 차원에서 재무 담당자가 평균치를 계산하여 재정 계획을 수립한다. 당 수뇌부의 정치적 업무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결과에 대해서도 의결 전에 미리 해당 재무 담당자와 함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8조 재정 자금 증명과 공개: 모든 분류 절차에 대해서 정당법 조항에 따라 재정보고서 및 해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9조 연방주협회 및 지역 협회의 재정 규정: 연방법령을 기초로 자체 재정 규정 혹은 추가 재정 규정을 만들 수 있다.

10조 최종 결정 및 임시 규정: 연방재정 규칙은 정당 형성과 함께 효력을 갖는다. 회계 원칙은 연방 재무 담당자에 의해 연방 재무기관과 연계하여 마련된다.

출처_ 좌파 민주사회당 2011 베를린 URL=<http://archiv2007.sozialisten.de/partei/dokumente/index.htm> (2011.07.19).



문서
번호 76 좌파당의 선거규칙
2007년 6월 16일

담당자 / 기관_ 정당 좌파의 창당전당대회.

내용_

선거규칙은 하기의 양식, 절차 및 결정을 규정한다.

- 1조 유효범위
- 2조 선거기본원칙
- 3조 선거통지
- 4조 선거위원회
- 5조 당직과 의석 선거
- 6조 동일한 당직 및 동일한 의석에 대한 선거
- 7조 선거 제청
- 8조 투표
- 9조 개표와 무효표
- 10조 필요한 다수
- 11조 득표수가 같을 때 선거와 절차의 순서
- 12조 후속 선거와 결선투표
- 13조 선거 승인, 선거 프로토콜 및 보궐 선거
- 14조 선거반복
- 15조 선거불복

출처_ 좌파 민주사회당 2011 베를린 URL-<http://archiv2007.sozialisten.de/partei/dokumente/index.htm> (2011.07.19).

담당자 / 기관_ 할리나 바브치니악, 좌파, 연방 하원, 구 동독, 구 서독, 독일군.

내용_

1. 60주년 기념, 라이프치히 변혁 20주년 기념 기본법 컨퍼런스.
2. 많은 사람들이 60년 전부터(서독), 또 일부 사람들은 20년 전부터(동독) 기본법과 함께 하고 있으며, 기본법은 민주적 사회주의를 위한 훌륭한 기반을 마련해 왔음.
3. 좌파는 연방의회에 진출한 정당들 가운데 기본법을 위한 자체행사를 개최한 첫 번째 정당임.

할리나 바브치니악, 좌파 부대표

“기본법은 민주적 사회주의에 개방되어 있다”

1. 기본법은 구 동독 헌법보다도 먼저 민주적 사회주의의 도입을 주창했다. 구 서독에서도 통일 전에 이러한 시도가 가능할 뿐 없었다.
2. 장벽 붕괴 20주년 행사 때문에 정작 기본법 60주년은 부각되지 못했다.
3. 다른 정당들과는 달리 좌파는 기본법이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4. 기본법은 예를 들어 1956년 국방의 의무를 다시 도입하고, 이에 따라 독일 연방군을 창설함으로써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퇴보된 점이 있다.

문서
번호 78

정치변화의 원동력이 되자
2010년 10월 25일

담당자 / 기관 게지네 뢰취, 클라우스 에른스트, 그레고어 기지-좌파의 과업에 대해.

내용

독일의 정치상황 변화:

1. 연방정부는 금융시장 규제를 거부했다.
2. 위기로 인해 발생한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3. 사회보장제도의 변화는 임금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4. 기존 비주류 단체와 소수의 존재감이 강해졌다.
5. 독일 연방군은 개입군의 자격으로 활동하게 된다.

정당민주주의로부터의 탈파: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어차피 정치 참여 의사를 포기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여론 형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변화는 좌파의 과업:

좌파의 정치적 압력이 없다면 다른 정당들은 아젠다식 정치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정치변화에 대한 원동력:

1. 연방정부에 대한 비판과 반대 제안.
2. 현 정치적 대립 속에서의 입장 정립
3. 독일정치의 기반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감.

출처 좌파, 연방정부 2011 베를린 URL=[http://dokumente.linksfraktion.de/inhalt/20101025-motor-fuer-politikwechsel.pdf\(2011.07.29\)](http://dokumente.linksfraktion.de/inhalt/20101025-motor-fuer-politikwechsel.pdf(2011.07.29)).

문서
번호 79

사통당-민사당의 향후 과제



문서
번호 80

민사당 연혁

17년 간의 연혁 요약정리

사회주의통일당부터 “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선거대안(WASG)”당과의 통합까지(1989-2007)

출처 슈테판 리히터, O.D. 민사당의 연혁, 17년 간의 연혁 요약정리, 베를린 URL-http://archiv2007.sozialisten.de/partei/geschichte/view_html?zid=35814&bs=1&n=0(2011.07.21).
오토프리드 아르놀트/프랑크 슈만/에트빈 슈베르트너. 1995 시작을 기점으로-삼화로 설명하는 민주사회당의 역사, 1989년부터 1994년까지, 베를린: 디츠 출판사.

문서
번호 81

좌파당의 전당대회 결의안. 1989년부터 2007년까지의 민사당



문서 번호 82 좌파당 강령 홍보물 “민영화 대신 재공영화를”
2008년 5월 8일

담당자 / 기관_ 좌파 강령 홍보물.

내용_

민영화(더 비싸지고, 더 나빠졌으며, 반사회적으로 변화됨):

공공자산 민영화가 확산됨으로써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에서 소외되고, 피고용인들은 압력을 받고 있다.

경험에서 배움:

시민대상 설문조사에 의하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민영화에 반대하고 있다.

민영화 대신 공영화:

공영기업 만이 사회정의와 사회연대를 보장해 준다.

공영경제:

재공영화는 각 지역에 특화된 공공자산의 배분을 의미한다.

재공영화=민주화:

공공의 손에 삶의 관리를 맡기면, 시민들의 민주적인 환경이 보다 잘 조성될 수 있다.

출처_ 좌파당 민사당 2011 베를린, URL-<http://archiv2007.sozialisten.de/partei/dokumente/index.htm>(2011.07.19).

담당자 / 기관_ 좌파 강령 홍보물.

내용_

공공자산이 상품이 되면, 신자유주의적 재분배 정책과 대기업, 은행, 투자펀드의 민영화 공세의 영향으로 인해 해고 사태, 임금과 사회보장 축소, 품질 저하 및 안전기준 하락이 확산된다.

빈곤과 소외:

삶의 공공관리 영역(의료, 교육, 연금, 주거, 수도 및 전기 공급 등)은 개개인의 구매력과 관련이 깊다.

민주주의 축소:

좌파는 이를 민주적인 방식으로 제어하고, 스스로 그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도록 어느 정도 한계선을 확정함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그 결정권을 주고자 한다.

사회권에 대한 공격:

정당은 노조권 강화, 공공서비스 급부의 축소,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확충을 지지한다.

민영화는 절도 행위:

경제 핵심분야는 공공자산으로 바뀌어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EU-탈 규제화의 원동력:

유럽 내수시장 내에서 민영화에 의한 덤핑경쟁을 반대하고 이를 확산 및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출처_ 좌파당 민사당. 베를린 URL-<http://archiv2007.sozialisten.de/partei/dokumente/index.htm>(2011.07.19).



문서
번호 84

좌파의 평균연령 및 분담금 수입 그래프 2010

출처_ 슈퍼젤지 30호, 2011년 7월 25일, 15p.

발간등록번호

11-1250000-000107-01

